

발간등록번호
34-9761031-140038-14



2013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집



www.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2013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선거연구원(김도윤 책임연구원, 김현태, 박명호, 이두호 공동연구원)에
의뢰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목 차

PART I 2013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

제1장 서론	9
제2장 2013 한국의 정치상황과 정당	13
제3장 2013 정책연구소의 연간활동실적 분석.....	17
1. 정책연구소의 기본현황 분석 / 17	
2.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분석 / 24	
제4장 2013 연구·개발한 정책 등의 심층 분석.....	44
1. 정당의 가치·이념과의 상합성 분석 / 44	
2. 정책과제의 활용·용도 분석 / 50	
제5장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쟁점 및 과제.....	52
1. 조직 및 재정 안정성 확보 / 52	
2. 정책연구기능의 강화 / 59	
제6장 결론.....	71
부록.....	76
참고문헌	83

PART II 2013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서

제1장 여의도연구원(새누리당)	87
제2장 민주정책연구원(민주통합당).....	203
제3장 진보정책연구원(통합진보당)	343
제4장 진보정의연구소(진보정의당).....	405

표 목 차

〈표 3-1〉 정책연구소의 수입과 지출상황 : 2013년	18
〈표 3-2〉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현황 : 2013년	20
〈표 3-3〉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수 변화 비교 : 2009~2013년	21
〈표 3-4〉 정책연구소 지출액 및 정책개발비 현황 : 2013년	22
〈표 3-5〉 정책연구소별 총 지출액 대비 정책개발비 비중 : 2009~2013년	23
〈표 3-6〉 정책연구소별 활동형태별 분류 분석 : 2013년	26
〈표 3-7〉 활동형태별 실적 비교 : 2009~2013년	26
〈표 3-8〉 분야별 정책 연구·정책개발 활동 실적 : 2013년	28
〈표 3-9〉 분야별 정책의 연구·정책개발 실적 비교 : 2009~2013년	29
〈표 3-10〉 연구·정책개발의 추진기간별 분류 : 2013년	30
〈표 3-11〉 연구소별 6개월 이상 추진 과제 : 2013년	31
〈표 3-12〉 정책연구소 연구 주체 분석 : 2013년	32
〈표 3-13〉 연구 주체별 추이 : 2009~2013년	32
〈표 3-14〉 토론회 등 개최실적 종류 분석 : 2013년	33
〈표 3-15〉 토론회 등 개최실적 종류별 비교 : 2009~2013년	34
〈표 3-16〉 토론회 주제 분석 : 2013년	35
〈표 3-17〉 간담회 주제 분석 : 2013년	36
〈표 3-18〉 교육·연수 대상별 분석(%) : 2013년	37
〈표 3-19〉 교육연수활동 대상별 비교 분석 : 2009~2013년	38
〈표 3-20〉 연구소별 정책홍보 방법 분석 : 2013년	38
〈표 3-21〉 연구소별 정책홍보 방법 비교 : 2009~2013년	39
〈표 3-22〉 연구소별 간행물 등 자료발간 실적 분석 : 2013년	40
〈표 3-23〉 간행물 등 자료발간 실적 분석 : 2009~2013년	41
〈표 4-1〉 정치이념 영역별 분류 기준	47
〈표 4-2〉 정책연구소의 연구·개발 정책의 정치이념 지향성 분석 : 2013년	48

〈표 4-3〉 정책연구소의 토론회의 정치이념 지향성 분석 : 2013년	49
〈표 4-4〉 정책연구소의 연구·개발 정책의 활용처 분석 : 2013년	50
〈표 5-1〉 연구소의 조직 강화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2013년	53
〈표 5-2〉 연구소의 연구 인력(박사학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2013년.....	54
〈표 5-3〉 연구소의 예산확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2013년	56
〈표 5-4〉 정책개발의 능률성 분석 : 2013년	60
〈표 5-5〉 연구소의 정책기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2013년.....	61
〈표 5-6〉 정책연구소 정책 활동의 정치이념 지향성 분석 : 2013년.....	62
〈표 5-7〉 정책연구소 정책 활동의 영역별 내역 : 2013년	62
〈표 5-8〉 정책연구소의 과제 수행기간 상황 비교 : 2009~2013년.....	63
〈표 5-9〉 연구소에 대한 국민통제 강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2013년	65
〈표 5-10〉 연구소의 종합싱크탱크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2013년.....	67
〈표 5-11〉 정책연구소의 과제 수행주체 상황 비교 : 2009~2013년	68
〈표 5-12〉 정책연구소의 교육실시 상황 비교 : 2009~2013년	69

2013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집

그림목차

〈그림 3-1〉 정책연구소 연구원 수의 변화 추이 : 2009~2013년	21
〈그림 3-2〉 박사급 연구원 수의 변화 추이 : 2009~2013년	22
〈그림 3-3〉 지출총액의 규모 변화 추이 : 2009~2013년.....	23
〈그림 3-4〉 활동형태별 실적 비율 : 2013년	24
〈그림 3-5〉 활동형태별 실적 비율 변화 추이(%) : 2009~2013년	27



PART_

I

2013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제1장 서론

한국정당의 정책연구소는 2004년 정당법¹⁾에 의하여 제도화되어 창설된 이후 2014년 현재 10년이 경과하였다. 그동안 한국 정당들은 역사는 짧지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치의 핵심적 주체로서 자리를 잡는 등 오늘날 없어서는 아니 될 존재이다. 이러한 한국 정당은 최근 정치적 무관심 증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확장에 따른 정당의 경쟁력 약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도 공직선거에 참여하여 정책을 제시하는 등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익을 표출, 집약시키는 등 정치시스템의 주역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정당은 때로는 고비용 저효율의 상징이요,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비판 등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등해결, 정권교체 등 한국 정치의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박수갈채를 받기도 하는 등 한국 정당들은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한국유력 정당들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온 차별성 없는 정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최근에는 가치와 이념, 정책의 분화가 어느 정도 나타남으로써 종전의 반민주 대민주라는 정당경쟁체제가 이제는 보수 대 진보라는 경쟁체제로 서서히 정착육하고 있어 정책연구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정당의 경쟁이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정책에 의한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정치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이다. 정당의 정책정당화의 기반은 정책연구소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연구소는 민주화 이후 2000년대를 전후로 한국정치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돈 선거와 정치부패, 정당의 이합집산과 파벌화, 국고보조금의 방만한 집행 등 그동안 고질적인 적폐를 해소하고 정책경쟁에 의한 정치시스템 구축, 정당의 책임성 강화,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집행 등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설계되었다. 한국에서도 독일이나 미국과 같이 100년 정당의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정책연구소가 도입된 것이다. 물론 정책연구소가 법으로 제도화되기 이전에도 여의도연구소(민주자유당), 국가전략연구소(민주당) 등이 정당 내에 존재하여 현재와 같은 정책연구소의 역할을 일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개정건의(2003. 8. 27)에 정책정당으로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정당의 정책연구기관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학계 등에서 논의된 정책연구소 법정화와 관련하여 정책연구소의 신설을 포함한 정당법중개정법률안(2004. 3. 2 제안)이 마련되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이었다.'

정한 범위에서는 수행해 왔지만, 현행의 법정화된 정책연구소에 비할 바는 아니다.

지금까지 10년을 맞이한 정책연구소는 많지 아니한 예산과 전문 연구 인력의 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매년 당해 정당이 지향해야 할 중장기 과제와 이슈화된 단기적 과제에 대한 연구물을 생산함으로써 정당의 정책정당화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연구소’라는 명칭 대신 ‘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연구소의 영향력 증가에 따른 위상 제고는 물론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의 확대를 가져왔고, 그동안의 연구 실적과 데이터의 축적으로 정당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정책연구소가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연구 성과가 질적·양적 측면에서 미흡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 정책과제보다는 정치 또는 선거공학적 과제에 매달린다거나 연구 인력을 정당에 파견 또는 당 사무처 등의 다른 보직을 겸직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연구소의 연구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등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정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독립기관화 되어 있지만 모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에 치중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도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여 운영되므로 정당의 하부기관이나 조직으로 존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서현진 2013, 102).

본 연구는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제출한 2013년도 활동실적 보고서를 대상으로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 및 연구 활동의 성과 등을 분석하고 정책연구소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기본적인 조직과 인력, 예산 및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 2013년도 각 정책연구소가 연구 또는 개발한 정책과제와 토론회의 내용 등에 대하여도 분석을 시도하여 어떠한 연구 활동 등이 있었는지 또는 어떠한 용도에 그 연구결과가 사용되었는지도 추적해 봄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2013년도에는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4개가 존재하였다.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 민주통합당의 민주정책연구원, 통합진보당의 진보정책연구원, 진보정의당의 진보정의연구소이다. 2013년 현재의 정당체제는 국회의석 기준으로 2012년도와 같이 4당 체제이다.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이어야 배분 대상이 되고, 정당법상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정책연구소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며, 이들은 매년 전년도 활동실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제출한 연간 활동실적 보고서를 대상으로 한다.

정책연구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3년도 보고서에는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이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보고서에 나타난 사항을 기

본으로 하되, 그 밖에 2013년의 정치상황, 언론보도 내용, 국회 입법실적 등도 연구 범위에 포함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현황으로 사무소, 인력, 활동경비 등을 분석하고, 연구소의 활동실적으로서 연구 및 개발 실적, 토론회 개최실적, 교육 및 연수 활동, 정책홍보 활동, 간행물 등 자료발간 실적 등이 기본적인 연구 범위이다. 2013년의 정치상황과 국회의 법안 발의 사항도 연구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큰 틀에서 정책연구소를 살펴봄으로써 전체의 정치시스템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연구내용으로 한다.

제2장에서 ‘2013년 주요 정책의제와 정책연구소’라는 제목으로 정당과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풀어야 과제들이 주로 어떠한 영역에서 발생되었는지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나중에 정책연구소의 실적 분석에서도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함에 있다. 주로 2013년 정책연구소의 주요 정책의제로 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전체적으로 거시적 시각에서 조감해보고 여당과 야당에게 필요했던 정책의 연구 및 개발 방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제3장에서는 ‘2013년 정책연구소의 연간활동실적 분석’ 결과를 수록한다. 주로 정책연구소가 의무적으로 제출한 실적 부분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즉 기본현황으로 조직, 인력, 예산과, 활동실적으로 연구·개발, 자료 발간, 홍보·교육, 연수실적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 부분은 정책연구소의 실적분석에 관한 역대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제4장에서는 ‘2013년 연구, 개발한 정책 등의 심층 분석’을 한다. 주로 정책과제와 토론회가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과 부합하는지와 연구한 실적을 누가 활용하였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곳에서는 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가 정당이념과의 상합성이 있는지, 다양성 및 활용성 등은 어떤지를 살펴본다. 사실 연구가 연구로서만 끝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성격과 정부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채택되는 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보고서의 핵심인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쟁점 및 과제’를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 부분도 다른 해의 정책연구소에 관한 개선의견 제시 부분과 다를 바 없으나, 본 보고서는 정책연구소의 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의견도 보고서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를 함에 있어서 2013년도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만을 대상으로 문헌과 내용분석에 머물지 아니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정도의 시계열 비교분석,

정책연구소의 관계자에 대하여 설문조사(부록 1)를 통한 대면 인터뷰 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도록 다각적인 분석과 시도를 하여 충실한 연구결과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 실적을 대상으로 분석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분석결과를 가지고 정책연구소가 갖고 있는 쟁점과 과제들은 무엇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분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까지도 포함한다.

평가와 관련하여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관련해서는 조직의 안정성(제도화 수준), 체제의 능력(업무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현행 정책연구소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상합성과 다양성, 능률성(투입 대비 산출비) 등을 기준으로 정책연구소가 보고한 내용을 분석하여 어느 정도나 당해 정당이 지향하는 바를 다루고 있는지와 능률성 등이 있었는지를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평가부분에서는 정책연구소의 요약된 보고서를 기초로 분석함에 따라 분석 자료가 갖는 내재적 한계를 피할 수 없으며, 평가방법과 실시에 있어서도 정량분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닌 정성분석에 의한 방법으로는 평가방법과 연구자에 따라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밝혀둔다. 따라서 좀 더 소상하고 질 높은 평가를 위해서는 정책연구소의 자체평가와 함께 정책연구소 스스로 전문 외부평가기관을 통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목표달성도 즉 효과성 등을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장 2013년 주요 정책의제와 정책연구소

2013년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는 첫 해로서 정당의 정책연구소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 정책연구소는 통상적으로 공직선거가 있기 전에 정책의제의 발굴과 연구 등 정책개발 등으로 매우 바쁘게 움직이다가 공직선거 직·전후에는 그 움직임이 매우 축소되어 정책연구소의 전문가들이 공직선거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외형적으로 정책연구소는 그 활동이 뚜렷하게 약해진다. 그렇지만 공직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다시 정책 활동이 강화되는데, 2013년도 예외는 아니다.

2013년도에 정책연구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정책의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거시적 관점에서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조직 개편과 안정문제이다. 이는 새 정부의 등장에 따라 새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의 추구, 정책공약의 집행을 위하여 새로운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의 개편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비롯하여 인사 등의 문제가 아울러져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정책연구소의 중요한 정책의제라고 할 수 있다.²⁾

특히, 여당의 정책연구소는 미리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문제점이 최소화 또는 없도록 하는 선도적이면서 공식적인 연구가 요구된다.³⁾ 정부조직 개편 안에 대한 대안 마련, 개편 안에 따른 문제점 등을 사전에 짚어봄으로써 새 정부의 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야 하므로 야당과의 협의도 필요하고 국민적 요구도 참고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

이러한 일들이 여당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의 정책연구소도 정부조직 개편 등에 관한 대안이나 문제점 등을 연구하여 이를 국회입법 활동 등에 반영하여야

2) 박근혜 당선자는 2012. 12. 27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 소장을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는 하는 등 정권인수를 위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식적으로는 2013. 1. 6~2. 22까지 정권인수를 위한 활동을 하였으며, 2013. 2. 25 박근혜대통령이 취임하였다. 행정체제는 종전 15부2처18청을 17부3처17청으로 2개부서가 확대되고 명칭 등이 변경되었다. 미래 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를 부활하였다.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수산부가 농림축산부로,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변경되었다.

3) 새 정부 초기에는 수많은 아이디어 등이 제기되는데, 이것들이 사적인 수준이나 통로에서 보다는 정책연구소와 정당 등에서 이를 논의하고 정책의제화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다. 그 결과 다양한 문제제기와 함께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도 살펴볼 수 있어 새로운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선거공약(정책)의 구체화를 위한 활동이다. 새로운 정권의 집권초기에는 집권당은 정권인수단계를 거쳐 대통령선거의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이의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시기이다.⁴⁾

어느 정부이든지 대부분의 집권초기에는 선거에의 승리 즉, 정치권력의 획득과 국민의 지지를 이유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국회와 야당, 국민의 생각이 다르고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 특히 예산문제 등으로 공직선거시 제시했던 정책을 일부 변경할 수밖에 없게 된다.⁵⁾

따라서 2013년도에는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 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국정목표 또는 국정기조와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 즉 입법정책 활동, 야당과의 정책협의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선거공약의 변경 등에 대하여는 사전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기관 중의 하나가 정책연구소이다.

야당과 그 정책연구소도 자당이 주장하였던 선거공약에 관하여 국회 등을 통하여, 또는 정부정책 통제를 통하여 어느 정도 반영 또는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에 못지않게 공직선거에서 제시하였던 선거공약에 대하여 재점검과 이의 실현을 위한 대안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여·야간의 정책 이해 및 사회갈등에 대한 선도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소의 정책 활동이 요구된다.

대통령선거 이후 첫해인 2013년도에는 여·야간의 정책의 차이를 좁히고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여당이 정책을 추진하려면 여·야당 공히 상대방의 정책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의 대척점이 국회에서 나타나지만 사전에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검토한다면 쉽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합의의 정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정당이

4)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선거에서의 선거공약을 대통령직인수과정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국정목표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등 5개로 정하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등 총 140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한 후에 집권 전에 제시했던 5대 국정목표 즉,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이라는 국정목표를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으로 하여 4대 국정기조로 변경하였다(국무조정실 2013). 박근혜정부의 2013년 직무수행에 관한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부처가 수립한 계획의 이행도는 높으나 의도한 성과를 달성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국정기조별로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이 비교적 우수하다"고 정부는 발표하였다(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조정실, 2014, 5).

5) 이와 관련하여 2013년에는 경제민주화정책을 총괄했던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김종인이 탈당했으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정책과 관련하여 장관직을 사직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에 부합하는 정책의제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다른 정당이 지향하는 정책 등에 대하여도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에서 발생한 각종 갈등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각 정책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좀 더 객관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갈등을 체제 위협요소로만 보면 아니 된다. 건전한 공동체발전을 위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보고 이에 사전 또는 적극 대응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소가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2013년도는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등의 문제가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양상이었다.⁶⁾

넷째, 합의의 정치가 되도록 뒷받침하여야 한다. 정치는 상대적이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여·야간 상대방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동반자적 관계가 성립한다.

2013년도는 여·야 정당 간의 관계가 합의 정치가 부족한 해였다. 정책연구소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합의의 정치가 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었다고 본다. 실제로는 여·야간 합의의 정치가 아닌 정치의 수사화(rhetoric) 내지는 적대적 정치관계(adversarial politics)였다.⁷⁾

정치체제(political system)가 원활히 운용되어야 합의의 정치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 협의 등이 잘 되어야 한다. 더구나 토론과 협의를 근간으로 하는 의사결정이 정치시스템을 지배하여야 민주적인 정치체제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국회뿐만 아니라 정당과 정부에서도 필요하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정책에 의한 경쟁과 정책에 의한 책임정치의 실현이야말로 참다운 한국 정치의 발전방향이다.⁸⁾

위와 같이 2013년도는 대체적으로 정책연구소가 하여야 할 일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 정부 조직 개편과 안정문제, 선거공약(정책)의 구체화를 위한 활동, 여·야간의 정책 이해 및 사회갈등에 대한 선도적인 대응, 합의의 정치가 되도록 뒷받침해야 함을 들었다.

이러한 정치현실에서 정당과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

6) 이점과 관련하여 한국일보(2013. 12. 26)가 '2013 국내외 10대 뉴스'로 1. 첫 여성대통령, 소통부재논란, 2. 국가기관 대선개입공방 '꺼지지 않는 불씨', 3.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vs 사초실종, 4. 김정은, 장성택 제거한 총구는 어디로, 5. 교학사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로 역사전쟁, 6. 철도 최장기 파업, 극단 치단은 초강경 모드, 7. 원전비리, 고압충격 밀양 송전탑 갈등은 진행형 등을 선정하였는바, 정책연구소가 집중했어야 할 정책의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7) 같은 의견으로 고원은 여·야간의 관계를 "적대성 정치"로 표현하면서 "대선 직후 야권의 지지기반과 대오가 급속히 흩어짐으로써 적대성의 정치가 잘 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주장한다(고원 2014, 4-5).

8) 보수꼴통, 종북 등 수사 정치는 정책 정치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단기적으로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제시하였던 공약의 실천을 위해서 이에 대하여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는 물론 정부의 정책수행에 대한 평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하고, 철도문제 등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해결 및 대안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임기 내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하겠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높게 나온다고 안심할 사항은 아니다.⁹⁾

반면에 야당의 경우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는 물론이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여당에 못지않게 정책대안의 제시에 매진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대안정당으로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한국갤럽에 의하면, 2013년도 박근혜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잘하고 있다'고 답한 국민들이 꾸준히 50%를 상회하고 '잘못하고 있다'가 20% 내지 30%대에서 머물고 있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하여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한국갤럽 2013, 2). 이와 관련 정치학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의 조사(조선일보 2014, 2, 24)에서는 '잘했다(42.0%)'는 평가보다 '잘못했다(48.0%)'는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정운영에서 긍정적인 면은 대북·안보문제(48.4%), 외교·국제문제(42.0%)에서 높고, 부정적인 면은 독선·독단적(43.6%), 소통부족(41.2%), 인사실패(41.2%), 국정원 사건 대처(3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민위한 정책'과 '복지정책 확대'는 긍정적인 면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제3장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 분석

1. 정책연구소의 기본현황 분석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을 분석하기에 앞서 정책연구소의 조직, 재정상태 및 연구 인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연구소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얼마만큼의 재정 및 인적자원이 투입되어 얼마만큼의 실적이 산출되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가. 정책연구소 조직

정책연구소의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 대상인 4개 정책연구소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조사한 결과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정책연구원에서만 조직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정관이나 조직 및 운영의 실태 등은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여의도연구원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으로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당 대표최고위원이 겸임한다. 또한 자문기구와 자문위원을 두고, 외부인사와 내부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인사위원회가 있다. 연구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되,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임명 한다. 연구원의 조직은 연구원장 밑에 부원장(3명), 2개 센터장 2명(청년정책연구센터, 통일연구센터)이 있고, 3실 1팀(미래기획실·정책연구실·여론조사실과 행정지원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연구원장의 자문단으로 고문과 자문위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연구실은 정치외교팀, 경제팀, 사회·문화팀을, 미래기획실은 미래기획실과 청년정책연구센터를 두고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9인 내지 15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당 대표가 된다. 또한 연구원은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연구원장은 연구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당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연구원의 조직은 원장 밑에 부원장(4명)과 5개 실(연구기획실, 정세전략실, 정책연구실, 민중아카데미실, 운영지원실)로 조직되어 있다.

진보정책연구원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연구원장은 이사회가 임명하며, 연구원장 밑에 부원장과 정책기획실과 정책연구실을 두고 있다.

진보정의연구소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4인 이상 9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또한 자문위원단을 두고 있다. 연구소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연구소의 조직은 연구소장 밑에 부소장과 연구기획실을 두며, 연구기획실 밑에 기획실, 정책위원실, 전문위원실과 사무국을 두고 있다.

정책연구소의 조직 규모는 당해 정당의 세에 비례하여 조직, 예산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조직 등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연구 활동 실적에서도 비례적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나. 재정상태

정책연구소의 2013년의 재정 상태를 보면 아래 <표 3-1>과 같이 총 수입액은 183억 86백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158억 13백만 원이다. 수입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¹⁰⁾을 포함한 정당지원금으로 90.4%인 166억 17백만 원, 전년도 이월금 등이 17억 69백만 원이다. 지출 내역은 정책개발비가 61.2%인 96억 78백만 원이고, 인건비가 31억 64백만 원(20.0%), 사무실유지비 25억 77백만 원(16.3%), 기타 3억 94백만 원(2.5%)이다.

<표 3-1> 정책연구소의 수입과 지출상황 : 2013년

	수입(백만 원)					지출				
	계	정당지원금			기타	계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정책 개발비	기타
		계	보조금	보조금 외						
계	18,386	16,617	11,372	4,424	1,769	15,813	3,164	2,577	9,678	394
여의도연구원 (새누리당)	10,659	10,192	6,019	4,172	467	9,804	122	1,492	8,190	
민주정책연구원 (민주통합당)	5,752	4,991	4,741	250	761	4306	2,687	769	850	
진보정책연구원 (통합진보당)	1,081	821	821	-	260	896	306	122	309	159
진보정의연구소 (진보정의당)	894	613	612	1	281	807	49	194	329	241

* 「수입의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과 기타 수입이며, 「지출의 기타」는 조직 활동비, 기타 비용 등 임.

10) 「정치자금법」 제27조(보고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경상보조금 중 30/100 이상을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하여 설치된 정책연구소에 배분한 것임.

정당의 지원금은 보조금과 보조금 외로 구분된다. 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보조금 배분비율¹¹⁾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고, 소속 정당은 그 보조금의 30/10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속 정당이 받는 경상보조금의 규모에 따라 정당 보조금의 규모에 차이가 있다.

정당지원금을 정책연구소별로 보면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의도연구원은 101억 92백만원(보조금 60억 19백만원, 보조금 외 41억 71백만원)으로 수입 총액 대비 95.6%를, 민주정책연구원은 49억 91백만원(보조금 47억 41백만원, 보조금 외 2억 50백만원)으로 86.8%를, 진보정책연구원은 8억 21백만원(보조금 8억 21백만원)으로 75.9%를, 진보정의연구소는 6억 13백만원(보조금 6억 12백만원, 보조금 외 1백만원)으로 68.5%를 소속 정당으로부터 받았다.

또한 소속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외 지원금은 여의도연구원이 전체 수입액의 40.9%를 지원받은 반면, 민주정책연구원은 5%를, 진보정의연구소는 0.1%를, 진보정책연구원은 전혀 지원을 받지 않았다. 특히, 민주정책연구원의 경우 중앙당의 보조금 외 지원금이 여의도연구원의 6% 수준이 그치고 있어 정책연구소에 대한 중앙당의 인식과 기능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인건비는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에 관한 규칙」 [별표 1] 수입·지출과목 해소표에 의거 인건비 항목에서는 사무직원에 대한 급여 등을, 정책개발부서 연구원의 인건비 등은 정책개발비에서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여의도연구원과 진보정의연구소는 각각 1명의 사무직원을 채용하고 있어 이들의 급여 등을 인건비 항목에 계상하였으나, 민주정책연구원과 진보정책연구원은 연구원 외에 별도의 사무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아 인건비 항목에서 지출한 급여 등은 과목해소를 잘못 적용하여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정 변경에 따른 과목해소를 제대로 적용하여 보정한 2013년도 정책연구소

11) 국고보조금 배분 방법(정치자금법 제27조)

1. 총액의 50%에서 균등하게 배분 : 동일정당의 소속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2. 총액의 5%씩 지급 :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국회의석수 5석 이상의 정당
3. 총액의 2%씩 지급
 -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했는데 국회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인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한 정당
 -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으로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0.5% 이상을 득표한 정당
 -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2% 이상을 득표한 정당
4. 잔여분 : 잔여분 중 50%는 지급당시 국회의석수 비율에 따라 50%는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득표율에 따라 배분

의 재산 및 수입·지출 총괄표는 부록 2에 수록하였다.

다. 연구 인력 및 인건비 현황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은 아래 <표 3-2>와 같이 총 156명으로 전문 연구직인 석·박사는 76명(49.4%), 일반 연구원 78명(50.6%)과 사무직원 2명이다.

연구 인력을 정책연구소별로 보면, 여의도연구원은 84명, 민주정책연구원은 51명, 진보정책연구원은 8명, 진보정의연구소는 13명이다. 특히, 연구의 핵심적 전문 인력인 석·박사의 수는 여의도연구원이 44명, 민주정책연구원은 20명, 진보정책연구원은 5명, 진보정의연구소는 7명으로 연구소간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석·박사 수에 있어서 민주정책연구원은 여의도연구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여의도연구원은 객원 연구위원을 별도 운영하고 있어 각종 정책개발 및 연구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2>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현황 : 2013년

	총계	연구원(명)				직원(명)		
		박사	석사	기타	합계	자체 고용	외부 파견	합계
합계	156	34 (22.1%)	42 (27.3%)	78 (50.6%)	154 (100%)	2	-	2
여의도연구원	84	21 (23.9)	23 (31.8)	39 (44.3)	83 (100)	1	-	1
민주정책연구원	51	8 (15.7)	12 (23.5)	31 (60.8)	51 (100)	-	-	-
진보정책연구원	8	3 (37.5)	2 (25.0)	3 (37.5)	8 (100)	-	-	-
진보정의연구소	13	2 (16.6)	5 (41.7)	5 (41.7)	12 (100)	1	-	1

또한 아래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의 연구원 수¹²⁾의 변화 추이를 보면, 여의도연구원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2012년에는 2011년 대비 석·박사가 28명이 증원된 반면, 민주정책연구원은 오히려 9명을, 진보정책연구원은 3명을 감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변화 비교 중 2009년 이후 실적은 2013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책연구소의 실적(현재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정책연구소의 실적은 제외)을

12) 정책연구소의 사무직원 (2명)을 제외한 연구 인력을 말함.

비교한 것이다. 이하 이 장에서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실적 변화 비교에 적용하였다.

〈표 3-3〉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수 변화 비교 : 2009~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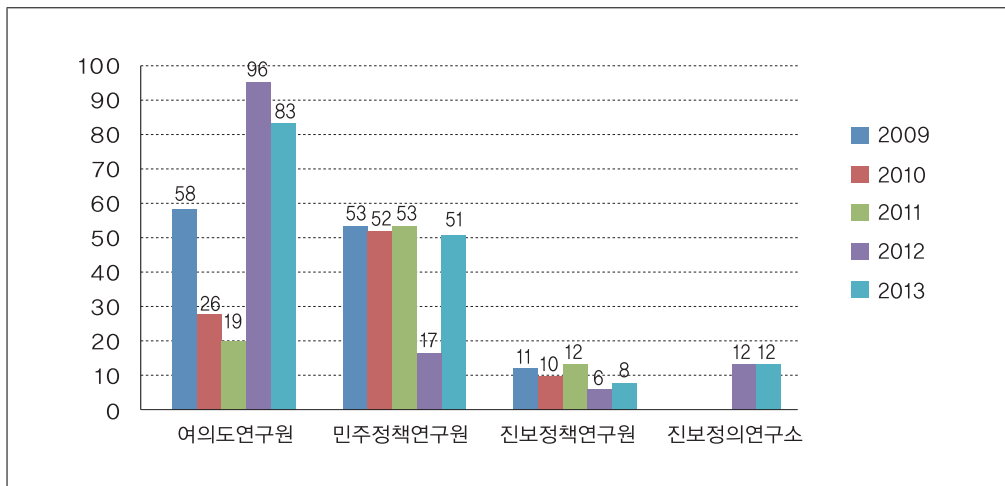
	2009			2010			2011			2012			2013		
	박사	석사	기타	박사	석사	기타	박사	석사	기타	박사	석사	기타	박사	석사	기타
연구원계	122			88			84 (59)			131 (33)			154		
소계	28	32	62	26	26	36	17	21	46	30	32	69	34	42	78
여의도연구원	10	16	32	9	8	9	7	4	8 (44)	20	19	57 (1)	21	23	39
민주정책연구원	17	12	24	15	14	23	7	13	33 (3)	5	6	6 (19)	8	12	31
진보정책연구원	1	4	6	2	4	4	3	4	5 (12)	1	3	2 (1)	3	2	3
진보정의연구소										4	4	4 (12)	2	5	5

※ 1. 진보정책연구원(통합진보당)의 실적 중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실적은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운영한 「새세상연구소」의 실적임(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2. 2011년 및 2012년의 () 내는 연구원이 아닌 일반 직원 및 국회직 파견자 등임(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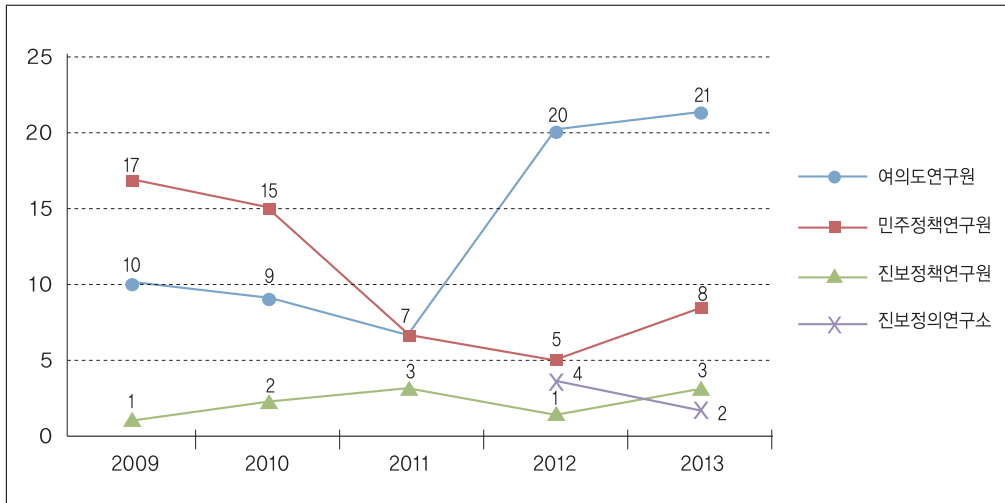
아래 〈그림 3-1〉은 2009년 ~ 2013년까지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수의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각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의 수는 당해 정당의 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연구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변화에 따라 그 수의 증감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한다.

〈그림 3-1〉 정책연구소 연구원 수의 변화 추이 : 2009~2013년



아래 <그림 3-2>는 2009년 ~ 2013년까지 정책연구소의 박사급 연구원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전문가인 박사학위소자의 수는 연구소의 정책 개발 및 연구능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그림 3-2> 박사급 연구원 수의 변화 추이 : 2009~2013년



라. 정책개발비 현황

아래 <표 3-4>는 2013년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비 현황이다. 정책개발비는 정책연구소에서 각종 정책의 연구·개발,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간담회·세미나 등 개최, 각종 보고서 등 자료발간, 홍보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2013년의 정책개발비는 총 96억 78백만원으로 지출총액 158억 13백만원의 61.2%에 해당한다.

정책연구소별로 보면 여의도연구원은 81억 90백만원, 민주정책연구원은 8억 50백만원, 진보정책연구원은 3억 9백만원, 진보정의연구소는 3억 29백만원을 지출하였다.

<표 3-4> 정책연구소 지출액 및 정책개발비 현황 : 2013년

	계(백만원)	여의도 연구원	민주정책 연구원	진보정 책연구원	진보정의 연구소
지출총액	15,813	9,804	4,306	896	807
정책개발비	9,678 (61.2%)	8,190 (85.3)	850 (19.7)	309 (34.5)	329 (40.8)

아래 <표 3-5>는 최근 5년간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비 지출액을 지출 총액과 비교한 것이다. 정책개발비는 2009년과 2010년에 비해 2011년과 2012년은 약 40%가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는 2012년에 비해 약 4배 정도가 급증하였다. 특히, 선거가 없는 해인 2013년의 정책개발비가 2012년에 비해 무려 4.2배나 증가하였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2012년까지는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급여 등은 인건비 항목에서 지출하였지만, 2013년부터 정책의 연구·개발 등 정책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급여 등은 정책개발비에서 지출하도록 과목해소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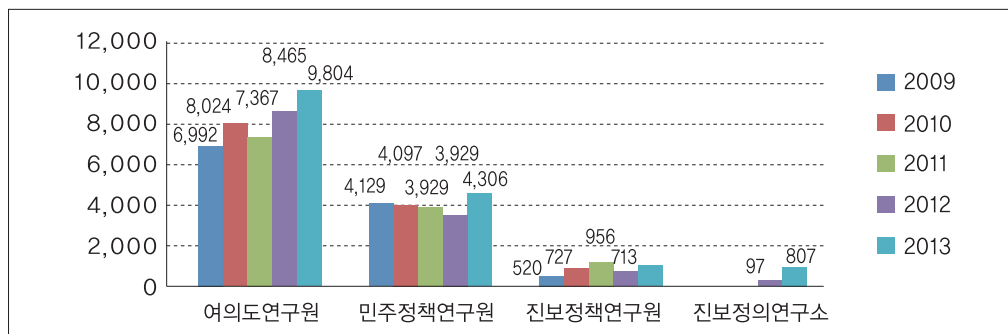
따라서 정책개발비의 변화 비교는 의미가 거의 없고 오히려 지출총액의 변화추이가 의미가 있다.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다른 정책연구소에 비하여 지출규모가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정책연구소별 총 지출액 대비 정책개발비 비중 : 2009~2013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출 총액	정책 개발비	지출 총액	정책 개발비	지출 총액	정책 개발비	지출 총액	정책 개발비	지출 총액	정책 개발비
계 (백만원)	11,641	3,686 (31.7%)	12,848	3,961 (30.1%)	12,252	2,713 (17.7%)	12,847	2,309 (18.0%)	15,813	9,678 (61.2%)
여의도 연구원	6,992	2,111 (30.2)	8,024	2,502 (31.2)	7,367	1,569 (21.3)	8,465	1,259 (13.6)	9,804	8,190 (83.5)
민주정책 연구원	4,129	1,336 (32.4)	4,097	1,273 (31.1)	3,929	940 (23.9)	3,572	940 (32.4)	4,306	850 (19.7)
진보정책 연구원	520	239 (46.1)	727	186 (25.6)	956	204 (21.3)	713	106 (15.0)	896	309 (34.5)
진보정의 연구소		-		-		-	97	4 (4.3)	807	329 (40.8)

<그림 3-3>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정책개발비가 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 3-3> 지출총액의 규모 변화 추이 : 2009~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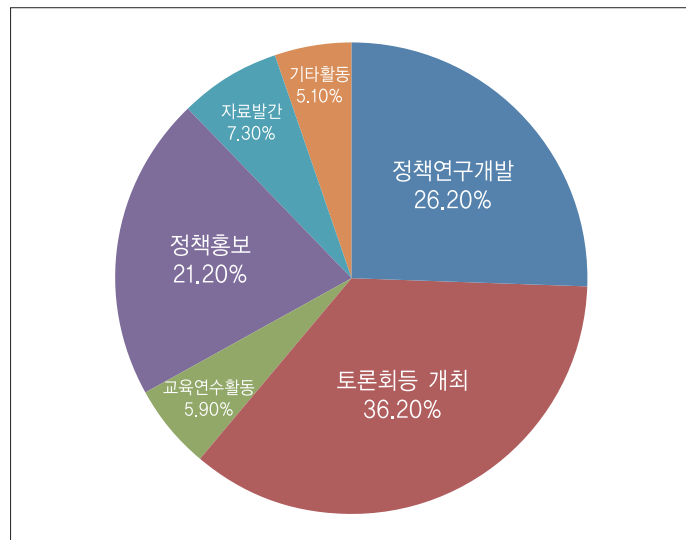
2.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분석

가. 정책연구소의 활동 행태

정책연구소가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분석에서는 정책연구소의 정기보고서에서 나타난 활동실적을 6개 영역인 정책 연구·개발, 토론회 등 개최, 교육·연수활동, 정책홍보, 간행물 등 자료발간, 기타 활동으로 나누어 어느 영역에서 얼마만큼의 활동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연구소의 활동 형태를 보면, 정책이나 현안 사항 등에 대한 토론회 등의 개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였으며, 그 다음은 정책의 연구·개발, 정책홍보, 간행물 등 자료발간, 교육·연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연수 활동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 2-4>는 활동형태별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4>
활동형태별 실적 비율
: 2013년**



2013년에 정책연구소는 6개 영역에서 총 1,100회의 활동을 하였다. 영역별로 보면 정책 연구·개발 288회, 토론회 등 개최 400회, 교육·연수 43회, 정책홍보 233회, 간행물 등 자료발간 80회 그리고 기타 활동¹³⁾ 56회로 아래 <표 3-6>과 같다.

13) 기타 활동은 연구원 내부 활동, 연구원이 세미나 등에 토론자 등으로 참여, 정책네트워크 회의 참여, 중앙당 파견, 연구 과제 공모, 외국 자료 번역 등이다.

정책연구소별로 보면, 여의도연구원이 455회로 가장 많은 활동을 하였으며, 진보정책연구원 297회, 민주정책연구원 249회, 진보정의연구소 99회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앞의 <표 3-6> 정책연구소 지출액 및 정책개발비 현황'과 연계하여 보면, 여의도연구원이나 민주정책연구원 보다 상대적으로 연구 인력과 정책개발비 규모가 작은 진보정책연구원과 진보정의연구소의 실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적은 질적 측면과 효과성을 제외하고 단순히 정책개발비 규모나 연구 인력의 활용 측면에서 비교할 때 투입 대비 산출 즉, 능률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정책연구소별로 어느 영역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는지를 보면, 여의도연구원은 토론회 등 개최 197회(43.3%), 정책홍보 104회(22.9%)에, 민주정책연구원은 정책 연구·개발 119회(47.8%), 토론회 등 개최 67회(26.9%)에, 진보정책연구원은 정책홍보 103회(34.7%), 토론회 등 개최 87회(29.3%)에, 진보정의연구소는 토론회 등 개최 49회(49.6%), 정책 연구·개발 38회(38.4%)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연수 영역에 있어서는 모든 정책연구소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정책연구소가 토론회 등 개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책연구소가 이미 연구·개발한 정책과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하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의 연구·개발실적을 보면, 민주정책연구원이 119건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여의도연구원은 88건, 진보정책연구원 43건, 진보정의연구소 38건으로 정책개발비와 연구 인력이 가장 많은 여의도연구원에 비해 진보정책연구원이 더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연구소의 보고서상에 나타난 연구 성과를 보면, 법 개정안으로 1건이 발의되었고, 대부분 중앙당의 정책수립이나 입법과정에 참고 자료로 제공, 이슈브리핑 발간 자료로 활용되었다.

정책연구소의 교육·연수활동은 진보정책연구원을 제외하고는 5 ~ 8회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대학생 등 젊은 층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책연구소가 그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정책연구소가 처한 인력·예산·시설·기능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구체적인 사항은 제5장에서 '민주시민 교육' 부분 참조).

〈표 3-6〉 정책연구소별 활동형태별 분류 분석 : 2013년

	총계	여의도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	진보정의연구소
계	1,100 (100%)	455 (100%)	249 (100%)	297 (100%)	99 (100%)
정책연구·개발	288 (26.2)	88 (19.3)	119 (47.8)	43 (14.5)	38 (38.4)
토론회등 개최	400 (36.2)	197 (43.3)	67 (26.9)	87 (29.3)	49 (49.6)
교육·연수활동	43 (3.9)	5 (1.1)	8 (3.2)	26 (8.7)	4 (4.0)
정책홍보	233 (21.2)	104 (22.9)	24 (9.6)	103 (34.7)	2 (2.0)
간행물 등 자료발간	80 (7.3)	45 (9.9)	12 (4.8)	19 (6.4)	4 (4.0)
기타 활동	56 (5.1)	16 (3.5)	19 (7.7)	19 (6.4)	2 (2.0)

아래 〈표 3-7〉은 최근 5년간 정책연구소의 활동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정책연구소의 활동은 2010년이 1,718회로 가장 활발하였고, 2012년은 727회로 저조하였으며, 2013년도에 다시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은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선거 참여 및 정책개발비의 감소로 자체 연구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지며, 2013년의 경우 정책개발비가 2012년도에 비해 약 4배 정도 증가하여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표 3-7〉 활동형태별 실적 비교 : 2009~2013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151 (100%)	1,718 (100%)	1,148 (100%)	727 (100%)	1,100 (100%)
정책연구·정책개발	204 (17.7)	174 (10.1)	230 (20.1)	238 (32.7)	288 (26.2)
토론회등 개최	557 (48.4)	1,266 (72.7)	582 (50.7)	153 (21.0)	400 (36.2)
교육·연수	63 (5.5)	73 (4.2)	66 (5.7)	41 (5.7)	43 (3.9)
정책홍보	167 (14.5)	111 (6.5)	163 (14.2)	146 (20.1)	233 (21.2)
간행물 등 자료발간	87 (7.6)	61 (3.6)	66 (5.7)	46 (6.3)	80 (7.3)

기타 활동	73 (6.3)	33 (2.9)	41 (3.6)	103 (14.2)	56 (5.2)
-------	-------------	-------------	-------------	---------------	-------------

영역별 활동실적 추이를 보면, 토론회 등 개최 실적이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2012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았으며, 교육·연수실적이 가장 적었다. 토론회 등 개최 실적은 2010년에 전체 활동 실적의 72.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21.0%로 감소하였고 2013년에 36.2%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정책의 연구·개발실적은 2011년부터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연구 인력의 증가 또는 감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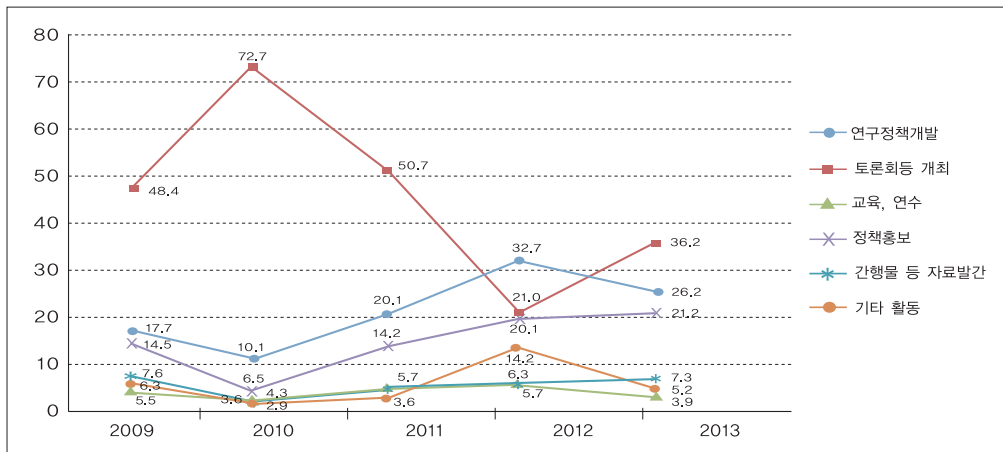
교육·연수실적은 2009년부터 계속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2013년은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로 가장 낮다.

정책홍보 실적은 2010년과 2012년에는 전년도보다 감소한 반면, 2011년과 2013년에는 거의 50%가 증가하였으며, 간행물 등 발간 실적은 2010년과 2011년에 증가하였다가 2012년도에는 감소, 2013년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연구소의 활동은 연구 인원과 정책개발비의 증감 그리고 전국 단위의 선거 실시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0년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해이고, 2011년은 2012년의 양대 선거를 준비하는 해이기 때문에 정책연구소의 활동이 활발한 반면, 2012년은 직접 선거에 참여함에 따라 활동이 저조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아래 <그림 3-5>는 2009년부터 2013까지 각 정책연구소의 영역별 활동 실적을 비교가 용이하도록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5> 활동행태별 실적 비율 변화 추이(%) : 2009~2013년



나. 정책의 연구·개발 활동

아래 <표 3-8>은 정책연구소가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의 연구·개발을 하였는가를 파악·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의 연구·개발실적은 2013년에 정책연구소가 활동한 총 실적 1,100건 중 288건으로 전체의 26.2%를 차지하고 있다.

정책연구소별 실적을 보면, 민주정책연구원 119건, 여의도연구원은 88건, 진보정책연구원 43건, 진보정의연구소 38건순이며, 이를 경제/민생, 외교/안보, 사회/복지, 정치/행정, 교육/문화, 기타로 분류¹⁴⁾ 하면, 정치/행정이 96건(33.3%)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 53건(18.4%), 경제/민생 45건(15.6%), 외교/안보 37건(12.9%), 교육/문화 18건(6.3%), 기타/종합이 39건(13.5%) 순으로 나타났다.

여의도연구원은 정치/행정 및 경제/민생 분야에, 민주정책연구원은 정치/행정 및 사회/복지 분야에, 진보정책연구원과 진보정의연구소는 정치/행정 및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분야별 정책 연구·개발 활동 실적 : 2013년

	총계	여의도 연구원	민주정책 연구원	진보정책 연구원	진보정의 연구소
합계 (건)	288 (100%)	88 (100)	119 (100)	43 (100)	38 (100)
경제/민생	45 (15.6)	18 (20.5)	14 (11.8)	8 (18.6)	5 (13.2)
외교/안보	37 (12.9)	15 (17.0)	12 (10.1)	5 (11.6)	5 (13.2)
사회/복지	53 (18.4)	8 (9.1)	17 (14.3)	16 (37.2)	12 (31.6)
정치/행정	96 (33.3)	21 (23.9)	48 (40.3)	13 (30.2)	14 (36.8)
교육/문화	18 (6.3)	15 (17.0)	1 (0.8)	-	2 (5.2)
기타/종합	39 (13.5)	11 (12.5)	27 (22.7)	1 (2.3)	

※ 기타/종합은 국정감사관련 자료 등 여러 분야가 혼재되어 있는 것임.

14) 2011년과 같이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변동에 따른 것임.

또한 실적이 저조한 분야를 보면, 여의도연구원은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다른 정책 연구소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고, 민주정책연구원은 교육/문화 분야의 실적이 1건이며, 진보정책연구원 및 진보정의연구소는 외교/안보 분야와 경제/민생 분야에서 있어서 여의도연구원이나 민주정책연구원에 비하여 1/3 수준이고, 교육/문화 분야에 대하여는 실적이 단 1건도 없거나 2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기초연금제 등 복지 분야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여의도연구원은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다른 정책연구소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쳐 집권 정당의 정책연구소로서 역할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아래 <표 3-9>는 최근 5년간 분야별 정책의 연구·개발 활동이 어느 분야에서 활발하였고, 어느 분야가 미흡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정책의 연구·개발 실적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과 2012년에 증가한 것은 2012년의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선거공약의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의 추진 실적도 정치/행정과 경제/민생 분야가 제일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외교/안보 분야와 교육/문화 분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2011년부터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에 쟁점으로 제기된 무상급식에서부터 2012년의 대통령선거 공약인 기초연금 등에 이르기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표 3-9> 분야별 정책의 연구·개발 실적 비교 : 2009~2013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192 (100%)	174 (100%)	230 (100%)	238 (100%)	288 (100%)
경제/민생	41 (21.4)	30 (17.2)	48 (20.9)	79 (33.2)	45 (15.6)
외교/안보	43 (22.4)	41 (23.6)	44 (19.1)	38 (16.0)	37 (12.9)
사회/복지	16 (8.3)	13 (7.5)	44 (19.1)	32 (13.5)	53 (18.4)
정치/행정	73 (38.0)	64 (36.8)	79 (34.3)	71 (29.8)	96 (33.3)
교육/문화	18 (9.4)	19 (10.9)	13 (5.7)	12 (5.0)	18 (6.3)
기타/종합	1 (0.5)	7 (4.0)	2 (0.9)	6 (2.5)	39 (13.5)

또한 추진기간별로 보면 아래 <표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288건 중 67.4%에 해당하는 194건이 1개월 이하에,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89건(30.9%)이, 6개월 이상은 5건(1.7%)에 불과하다.

〈표 3-10〉 연구·정책개발의 추진기간별 분류 : 2013년

	계	여의도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	진보정의연구소
계	288 (100%)	88 (30.6%)	119 (41.3%)	43 (14.9%)	38 (13.2%)
1개월이하	194 (67.4)	64 (72.8)	101 (84.9)	20 (46.5)	9 (23.7)
2개월이하	56 (19.4)	15 (17.0)	11 (9.2)	13 (30.2)	17 (44.7)
3개월이하	19 (6.6)	3 (3.4)	3 (2.6)	5 (11.6)	8 (21.1)
4개월이하	13 (4.5)	4 (4.5)	2 (1.7)	4 (9.3)	3 (7.9)
5개월이하	1 (0.4)	-	1 (0.8)	-	-
6개월이하	-	-	-	-	-
6개월~12개월	5 (1.7)	2 (2.3)	1 (0.8)	1 (0.4)	1 (2.6)
12개월이상	-	-	-	-	-

추진기간별로 보면, 여의도연구원은 총 88건 중 1개월 이하 64건(72.8%),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22건(27.9%), 6개월 이상 2건(2.3%)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은 총 119건 중 1개월 이하 101건(84.9%),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15건(14.3%), 6개월 이상 1건(0.8%)이다. 진보정책연구원은 총 43건 중 1개월 이하 20건(46.5%),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22건(51.1%), 6개월 이상 1건(0.4%)이며, 진보정의연구소는 전체 38건 중 1개월 이하 9건(23.7%),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28건(73.7%), 6개월 이상 1건(2.6%)이다.

이는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장기적 목표보다는 현안이나 이슈 중심의 단기적 과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초의 정책연구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6개월 이상에 걸쳐 추진한 과제도 국가 정책과 관련된 사안보다는 아래 <표 3-11>에서와 같이 정당의 내부적인 것이나, 특정 분야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3-11〉 연구소별 6개월 이상 추진 과제 : 2013년

연구소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제
여의도 연구원	9개월 (2013.01.15. ~ 10.15)	안전행정	여의도연구원 혁신 관련 법률·당규·정관·내규 개정안
	9개월 (2013.01.15. ~ 10.15)	안전행정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당규 개정 관련 자료집
민주정책 연구원	7개월 13일 (2013.05.03.~12.14)	정 치	여론 대응을 위한 정치의제의 생애주기 파악
진보정책 연구원	12개월 (2013.01.01 ~ 12.31)	기획재정	주간 경제동향(매월)
진보정의 연구소	12개월 (2013.01.01 ~ 12.31)	평화통일	평화·통일 정책이슈 브리핑 작성

또한 정책의 연구·개발 추진실적을 연구원 수와 연계하여 보면, 연구원 총 154명(사무직원은 제외)이 1인당 1년에 평균 2건 미만이며, 여의도연구원은 연구원 1인당 연간 1건, 민주정책연구원은 2.3건, 진보정책연구원은 5.4건, 진보정의연구소는 3.2건이다.¹⁵⁾

아래 <표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정책연구소의 정책의 연구·개발을 자체인력으로 81.6%를 추진한 반면, 외부와 공동추진은 10.1%, 외부전문가 참여는 7.6%로 나타났다.

정책연구소별로 보면, 민주정책연구원과 진보정책연구원은 자체 연구 인력만으로 각각 92.4%, 95.3%를 추진한 반면, 여의도연구원은 외부와 공동이 28.4%, 진보정의연구소는 외부 전문가 참여비율이 42.1%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주정책연구원(51명)과 진보정책연구원(8명)은 상대적으로 자체 연구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외부와 연계한 정책의 연구·개발에 미흡하여 정책연구소의 싱크 탱크화 및 네트워크 활용 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 진다.

15) 정책연구소 연구원의 활동 영역이 연구·정책개발 뿐 아니라 토론회 개최, 홍보 등 다른 많은 분야에 참여하고 있지만,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연구·정책개발로 한정하여 산출한 것이다.

〈표 3-12〉 정책연구소 연구 주체 분석 : 2013년

	계	여의도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	진보정의연구소
계	288 (100)	88 (100%)	119 (100%)	43 (100%)	38 (100%)
자 체	235 (81.6)	63 (71.6)	110 (92.4)	41 (95.3)	21 (55.3)
외부전문가	22 (7.6)	-	4 (3.4)	2 (4.7)	16 (42.1)
외부공동	31 (10.8)	25 (28.4)	5 (4.2)	-	1 (2.6)

아래 〈표 3-13〉은 최근 5년간 연구 주체별 추이를 분석한 것으로 연구소 자체 인력으로 추진한 실적은 2010년 2011년은 감소하다가 2012년부터 다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정책연구원의 전문 인력인 석·박사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과 연계해 보면 일반적으로 자체연구는 80%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구원의 인력적인 측면에서는 외부 전문가 등의 연구율을 더 높여 정책연구소의 연구활동을 보다 폭 넓게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3-13〉 연구 주체별 추이 : 2009~2013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04 (100%)	174 (100%)	230 (100%)	238 (100%)	288 (100%)
자 체	176 (86.3)	122 (70.1)	155 (67.4)	197 (82.8)	235 (81.6)
문헌조사	-	30 (17.2)	44 (19.1)	-	-
외부전문가	17 (8.3)	14 (8.1)	12 (5.2)	21 (8.8)	22 (7.6)
외부공동	11 (5.4)	8 (4.6)	19 (8.3)	20 (8.4)	31 (10.8)

다. 토론회 개최 등 분석

토론회 등 개최 실적은 총 400회로 여론조사 135회(여의도연구원 131회, 민주정책연구원 1회, 진보정책연구원 3회)를 제외하면 265회를 개최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토론회 106회(26.5%), 포럼 71회(17.7%), 간담회 42회(10.5%), 세미나 32회(8.0%) 순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3-14〉는 2013년에 정책연구소가 토론회 등을 개최한 실적이다.

〈표 3-14〉 토론회 등 개최실적 종류 분석 : 2013년

	계	여의도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	진보정의연구소
계	400 (100%)	197 (100%)	67 (100%)	87 (100%)	49 (100%)
토론회	106 (26.5)	59 (30.0)	22 (32.8)	6 (6.9)	19 (38.8)
간담회	42 (10.5)	-	22 (32.8)	16 (18.4)	4 (8.2)
포럼	71 (17.7)	-	20 (29.9)	37 (42.5)	14 (28.6)
세미나	32 (8.0)	5 (2.5)	1 (1.5)	23 (26.4)	3 (6.1)
강연회	9 (2.3)	-	1 (1.5)	-	8 (16.3)
심포지엄	2 (0.5)	2 (1.0)	-	-	-
공청회	1 (0.2)	-	-	-	1 (2.0)
국제회의	2 (0.5)	-	-	2 (2.3)	-
여론조사	135 (33.8)	131 (66.5)	1 (1.5)	3 (3.5)	-

정책연구소별로 보면, 여의도연구원은 토론회와 여론조사 위주로 실시한 반면, 민주정책연구원은 토론회, 간담회, 포럼을, 진보정책연구원은 포럼과 세미나, 진보정의연구소는 토론회와 포럼 위주로 개최하였다.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었던 관계로 여의도연구원은 '전국 대학생에 대한 실태조사¹⁶⁾를 면접조사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일반 국민대상으로는 정치·경제·통일 등에 관한 사항 등을 ARS 조사방법 등으로 실시하였으며, 진보정책연구원은 재·보궐선거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토론회는 총 106회로 여의도연구원이 59회, 민주정책연구원이 22회, 진보정의연구소는 19회, 진보정책연구원은 6회를 개최하였으며, 간담회는 총 42회로 민주정책연구원이 22회, 진보정책연구원은 16회, 진보정의연구소는 4회 개최하였다.

포럼은 총 71회로 진보정책연구원이 37회, 민주정책연구원이 20회, 진보정의연구소는 14회를 개최하였으며, 여의도연구원은 개최하지 않았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 분야가 40회, 정치 분야 17회, 복지 분야 7회, 기타 7회 순으로 개최하였다. 특히, 진보정책

16) 대학생들의 거주 등 생활, 취업 및 등록금 문제, 정치·통일 문제 등을 면접조사로 실시

연구원은 28회 걸쳐 세계 및 한국경제 분석 등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총 32회로 정치 분야 26회, 복지문제 6회를 개최하였는데, 여의도연구원은 대학생 등 청년실태조사 및 정책니즈 파악을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진보정책연구원은 정당해산과 관련한 세미나 23회를 개최하였다.

강연회는 총 9회로 민주정의연구소가 8회, 민주정책연구원이 1회를 개최하였고, 공청회는 진보정의연구소가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 제정을 위해 개최하였으며, 심포지엄은 여의도연구원이 2회, 국제회의는 진보정책연구원이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및 국제평화역량의 체계화 연대방안을 주제로 2회 개최하였다.

아래 <표 3-15>은 최근 5년간 정책연구소의 토론회 등 개최 실적을 종류별로 비교한 것이다. 2009년부터 여론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2010년에는 전체 활동실적의 88.6%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2012년도 역시 85.2%를 실시하였다.

<표 3-15> 토론회 등 개최실적 종류별 비교 : 2009~2013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557 (100%)	1,266 (100%)	582 (100%)	964 (100%)	400 (100%)
토론회	55 (9.9)	42 (3.3)	59 (10.1)	39 (4.0)	106 (26.5)
간담회	156 (28.0)	87 (6.9)	85 (14.6)	36 (3.7)	42 (10.5)
포럼	12 (2.1)	1 (0.1)	36 (6.2)	55 (5.7)	71 (17.7)
세미나	4 (0.7)	2 (0.2)	12 (2.1)	12 (1.2)	32 (8.0)
심포지움					2 (0.5)
국제회의					2 (0.5)
학술회의	4 (0.7)	-	-	-	
정책설명회	4 (0.7)	12 (0.9)	17 (2.9)	-	-
강연회	2 (0.4)	-	-	-	9 (2.3)
공청회	1 (0.2)	-	1 (0.2)	-	1 (0.2)

여론조사	319 (57.3)	1,122 (88.6)	372 (63.9)	822 (85.2)	135 (33.8)
기타	-	-	-	3 (0.3)	

아래 <표 3-16>은 2013년 정책연구소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표 3-16> 토론회 주제 분석 : 2013년

	계	여의도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	진보정의연구소
계	106 (100%)	59 (100%)	22 (100%)	6 (100%)	19 (100%)
정치/행정	26 (24.5)	8 (13.6)	9 (40.9)	4 (66.7)	5 (26.3)
경제/민생	20 (18.9)	15 (25.4)	5 (22.7)	-	-
외교/안보	26 (24.5)	16 (27.2)	7 (31.8)	2 (33.3)	1 (5.3)
교육/문화	2 (1.9)	2 (3.4)	-	-	-
사회/복지	25 (23.6)	11 (18.6)	1 (4.6)	-	13 (68.4)
환경	1 (0.9)	1 (1.7)	-	-	-
기타	6 (5.7)	6 (10.1)	-	-	-

토론회의 주제는 외교/안보가 27회로 가장 많고, 정치/행정 26회, 사회/복지 25회, 경제/민생 20회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문화 및 환경에 대한 것은 각각 2회, 1회에 불과하다.

이를 정책연구소별로 보면, 여의도연구원은 외교/안보(16회), 경제/민생(15회), 사회/복지(11회), 정치/행정(8회) 분야에, 민주정책연구원은 정치/행정(9회), 외교/안보(7회) 분야에, 진보정책연구원은 정치/행정(4회), 외교/안보(2회) 분야에, 진보정의연구소는 사회/복지(13회), 정치/행정(5회)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정의연구소를 제외한 정책연구소가 공통적으로 외교/안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북핵문제, 일본과의 관계, 대외 무역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환경 문제에 대하여는 모든 정책연구소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도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터 제기된 무상급식, 2012년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문제가 사회적으로 꾸준히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정책연구원은 1회에 그치고 진보정책연구원은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3-17>은 정책연구소가 2013년에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간담회는 총 42회로 민주정책연구원이 22회, 진보정책연구원은 16회, 진보정의연구소는 4회 개최하였으며, 여의도연구원은 개최하지 않았다.

〈표 3-17〉 간담회 주제 분석 : 2013년

	계	여의도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	진보정의연구소
계	42 (100%)	-	22 (100%)	16 (100%)	4 (100%)
정치/행정	31 (73.8)	-	15 (68.2)	16 (100.0)	-
경제/민생	1 (2.4)	-	1 (4.5)	-	-
외교/안보	3 (7.1)	-	1 (4.5)	-	2 (50.0)
교육/문화	-	-	-	-	-
사회/복지	5 (11.9)	-	3 (13.6)	-	2 (50.0)
환경	1 (2.4)	-	1 (4.5)	-	-
기타	1 (2.4)	-	1 (4.5)	-	-

간담회의 주제는 정치/행정 분야가 31회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 분야 5회, 외교/안보 분야 3회 순으로 개최되었다. 특히, 진보정책연구원은 2013년도 정책당대회 정치토론문 초안을 가지고 16개 시·도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간담회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교육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외부인사와의 간담회는 정책형성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정책연구소와 외부와의 의사소통의 일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교육·연수 활동 실적

아래 <표 3-18>은 2013년도 정책연구소가 실시한 교육·연수실적과 대상별로 비교·분석한 것이다. 교육·연수실적은 총 43회로 정책연구소의 2013년 활동실적 총 1098회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8> 교육·연수 대상별 분석(%) : 2013년

	총계	여의도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	진보정의연구소
계	43 (100%)	5 (100%)	8 (100%)	26 (100%)	4 (100%)
최고지도자	-	-	-	-	-
의원	-	-	-	-	-
정당실무자	18 (41.9)		1 (12.5)	16 (61.5)	1 (25.0)
당원	14 (32.5)	2 (40.0)	5 (62.5)	7 (26.9)	-
대학생/일반국민	-	-	-	-	-
기타	11 (25.6)	3 (60.0)	2 (25.0)	3 (11.6)	3 (75.0)

정책연구소별로 실적을 비교해 보면, 진보정책연구원이 26회로 가장 많이 실시하였으며, 민주정책연구원 8회, 여의도연구원 5회, 진보정의연구소가 4회를 실시하였다.

대상별로는 정당실무자 18회, 당원 14회, 기타 11회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기타는 정책연구원 워크숍 5회(여의도연구원 1회, 진보정책연구원 2회, 진보정책연구원 2회)이며, 정책연구소 외 기관 주관 6회¹⁷ 등이다.

또한 여의도연구원은 사이버 교육과 청년정치아카데미 각 1회를,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대상의 지방자치아카데미 5회와 중앙당직자 직무교육 1회를, 진보정책연구원은 중앙 및 지방당직자와 시·도당 간부교육 16회, 당원협의회 7회를, 진보정의연구소는 청년정치캠프 1회를 실시하였다.

아래 <표 3-19>은 최근 5년간 교육·연수실태를 비교한 것이다. 교육·연수는 5년 동안 평균 65.4회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이 82회로 가장 많았으며, 2013년은 43회 가장 저조했다. 특히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실시되었으나, 2013년에는 실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집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4회(여의도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 진보정의연구소), 국무총리실 주관 1회(민주정책연구원 - 정당은 해외연수), 아테나워재단 주관 시민교육 1회(여의도연구원) 등이다.

중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 국민들에 대한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인다.

〈표 3-19〉 교육연수활동 대상별 비교 분석 : 2009~2013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63 (100%)	73 (100%)	66 (100%)	82 (100%)	43 (100%)
최고지도자	16 (25.4)	-	-	-	-
의원	-	8 (11.0)	1 (1.5)	-	-
정당실무자	4 (6.4)	33 (45.2)	13 (19.7)	14 (17.1)	15 (34.9)
당원	-	9 (12.3)	17 (25.8)	10 (12.2)	22 (51.2)
대학생	30 (47.6)	21 (28.8)	27 (40.9)	6 (9.1)	-
일반국민	6 (9.5)	2 (2.7)	6 (9.1)	11 (13.4)	-
기타	7 (11.1)	-	2 (3.0)	41 (50.0)	6 (13.9)

마. 정책연구소의 정책홍보 활동

2013년의 정책연구소 홍보실적은 아래 〈표 3-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33회를 실시하였다. 홍보방법은 사이트게재, e-뉴스레터 게재 및 배부, 인터넷동영상 제작, 책자배포, 기타로 나타났으며, 사이트게재가 209회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정책연구소별로는 여의도연구원이 104회, 진보정책연구원이 103회를 실시한 반면, 민주정책연구원은 24회, 진보정의연구소는 2회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민주정책연구원의 실적은 여의도연구원과 진보정책연구원의 약 20% 수준에 불과하다.

〈표 3-20〉 연구소별 정책홍보 방법 분석 : 2013년

	총계	여의도 연구원	민주정책 연구원	진보정책 연구원	진보정의 연구소
계	233 (100%)	104 (100%)	24 (100%)	103 (100%)	2 (100%)
사이트게재	209 (89.7)	91 (87.5)	17 (70.8)	101 (98.1)	-

e-뉴스레터	13 (5.6)	9 (8.6)	4 (16.7)	-	-
인터넷 동영상	7 (3.0)	1 (1.0)	2 (8.3)	2 (1.9)	2 (100)
책자배포	1 (0.4)	-	1 (4.2)	-	-
기타	3 (1.3)	3 (2.9)	-	-	-

아래 <표 3-21>은 최근 5년간 정책연구소가 홍보한 실적을 비교한 것이다. 2013년의 홍보 실적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2013년 보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종전에 활용하였던 보도자료 제공(기자 등에게 e-mail로 제공한 것으로 및 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실적은 없으며, 사이트게재는 2012년의 경우 전체의 13.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2013년도에는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1> 연구소별 정책홍보 방법 비교 : 2009~2013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67 (100%)	111 (100%)	163 (100%)	146 (100%)	233 (100%)
사이트게재	90 (53.9)	33 (29.8)	99 (60.7)	20 (13.7)	209 (89.7)
e-뉴스레터	42 (25.1)	39 (35.1)	45 (27.6)	16 (11.0)	13 (5.6)
사이트게재+보도자료		13 (11.7)	7 (4.3)	104 (71.2)	-
보도자료	35 (21.0)	16 (14.4)	5 (3.1)	2 (1.4)	-
방송		9 (8.1)	2 (1.2)	1 (0.7)	-
인터넷동영상	-	-	-	1 (0.7)	7 (3.0)
책자 배포	-	-	-	2 (1.4)	1 (0.4)
기타	-	1 (0.9)	5 (3.1)	-	3 (1.3)

바. 정책연구소의 간행물 등 발간

아래 <표 3-22>는 정책연구소가 2013년에 발간한 간행물 등 실적이다. 총 80건을 발간하였는바, 정책연구소별로 보면, 여의도연구원이 45건, 민주정책연구원 12건, 진보정책연구원 19건, 진보정의연구소 2건 순이다. 이를 자료별로 보면, 토론회 자료 37건(46.3%), 자료집 10건(12.5%), 포럼자료 6건(7.5%), 당월 교육교재 6건(7.5%), 정책자료집 5건(6.3) 순으로 나타났다.

여의도연구원은 토론회 자료 34건(75.6%), 정책자료집 5건(11.1%) 등이며, 민주정책연구소는 포럼자료집 6건(50.0%), 논문 3건(25.0%), 토론회 자료 2건(16.7%), 진보정책연구원은 자료집 10건(52.7%), 교육교재 6건(31.7%), 진보정의연구소는 자료집 3건(75.0%), 소식지 1건(25.0%)이다.

<표 3-22> 연구소별 간행물 등 자료발간 실적 분석 : 2013년

	누계	여의도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	진보정의연구소
계	80 (100%)	45 (100%)	12 (100%)	19 (100%)	4 (100%)
연구논문	3 (3.8)	-	3 (25.0)	-	-
토론회자료	37 (46.3)	34 (75.6)	2 (16.7)	1 (5.2)	-
심포지엄자료	1 (1.2)	-	-	1 (5.2)	-
포럼자료	6 (7.5)	-	6 (50.0)	-	-
정책자료집	5 (6.3)	5 (11.1)	-	-	-
교육자료집	3 (3.8)	-	-	-	3(75.0)
자료집	10 (12.5)	-	-	10 (52.7)	-
백서	1 (1.2)	1 (2.2)	-	-	-
연구보고서	1 (1.2)	-	1 (8.3)	-	-
이슈브리프	3 (3.8)	3 (6.7)	-	-	-
교육교재	6 (7.5)	-	-	6 (31.7)	-

소책자	1 (1.2)	-	-	1 (5.2)	-
소식지	1 (1.2)	-	-	-	1(25.0)
리플릿	2 (2.5)	2 (4.4)	-	-	-

자료발간 실적을 토론회 등 개최 실적과 비교해 보면, 여론조사를 제외한 토론회 등을 265회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등 관련 자료발간 실적은 불과 5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발간 실적이 부진한 것은 정책연구소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별도의 자료집으로는 발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3-23>은 최근 5년간 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자료를 비교한 것으로 2009년이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2년이 46건으로 가장 적었다. 연구논문의 경우 2011년이 29건으로 가장 많고, 2013년은 3건에 불과하다.

<표 3-23> 간행물 등 자료발간 실적분석 : 2009~2013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87 (100%)	61 (100%)	66 (100%)	46 (100%)	80 (100%)
연구논문	6 (6.9)	9 (14.9)	29 (43.9)	15 (32.6)	3 (3.8)
연구분석	-	-	-	1 (2.2)	-
토론회자료	58 (66.7)	26 (42.6)	20 (30.3)	6 (13.0)	37 (46.2)
세미나자료	-	2 (3.3)	-	3 (6.5)	-
심포지엄자료	-	-	-	-	1 (1.2)
간담회자료	2 (2.3)	-	-	1 (2.2)	-
교육연수자료	-	1 (1.6)	1 (1.5)	-	-
포럼자료	8 (9.2)	-	-	-	6 (7.5)
기념식자료	1 (1.1)	-	-	-	-
강의자료	4 (4.6)	1 (1.6)	-	-	-

정책자료집	2 (2.3)	-	-	5 (10.9)	5 (6.2)
교육자료집	-	3 (4.9)	1 (1.5)	3 (6.5)	3 (3.8)
자료집	2 (2.3)	10 (16.4)	11 (16.7)	6 (13.0)	10 (12.7)
동영상	-	8 (15.7)	-	-	-
추모집	2 (2.3)	-	-	-	-
백서	1 (1.1)	-	1 (1.5)	1 (2.2)	1 (1.2)
계간지	-	-	3 (4.6)	2 (4.3)	-
번역도서	-	-	-	3 (6.5)	-
연구보고서	-	-	-	-	1 (1.2)
이슈브리프	-	-	-	-	3 (3.8)
교육교재	-	-	-	-	6 (7.5)
소책자	-	-	-	-	1 (1.2)
소식지	1 (1.1)	-	-	-	1 (1.2)
리플릿	-	1 (1.6)	-	-	2 (2.5)

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자료내역을 분석해 보면 토론회 자료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정책자료집은 5년간 총 10건, 연구보고서 1건에 그치고 있으나, 자료집 발간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홈페이지게재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 기타 활동 상황

정책연구소별로 기타 활동 상황을 보면, 주로 정책연구소의 간부 활동, 조직 강화·유지활동 등으로 이루어졌다.

여도의연구소는 외부 기관이 개최하는 토론회 등에 부원장 및 연구 위원이 발제자·토론자로 참여, 외국(미국, 대만, 중국)의 싱크탱크와 상호 인적 교류 및 자료 교환, 연구원 내부 행사 등이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방자치아카데미 교재 제작, 정기국회 입법과제 작성,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참여 및 중앙당 및 국회 특별위원회 파견,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 연구용역 과제 공모, 연구원 웹사이트 개편 등 내부 활동이다.

진보정책연구원은 국제평화대회 개최, 파워리더 초청 간담회, 외신기자 간담회, 자료번역(국내·외 통합진보당 관련 자료 및 이석기 의원 관련 자료) 등이다.

민주정의연구소는 민주정의당의 홈페이지에 월간 분야별 이슈&정책분석 중 동아시아와 남북관계 부분 작성, 당원에게 권하고 싶은 도서를 게재하였다.

제4장

2013년도 연구·개발한 정책 등의 심층 분석

정책연구소는 당해 정당이 견고한 가치와 이념, 철학을 근간으로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원기구이다. 정책연구소는 학문적 연구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수립이나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일종의 싱크탱크로서 정당이 나아갈 방향성을 정립·제시함과 아울러 새로운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는 핵심기관인 것이다. 정책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각 정당의 이념 및 정강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의 체계화 및 구체화로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에 부합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당해 정당이 주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은 연구소가 행한 연구 활동과 정책 개발결과가 정당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채택되고 나아가 입법이나 정부정책으로 수용·집행되어야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경우 집권당은 입법화 및 정부 정책으로, 야당은 여당의 안에 대한 대안의 제시 등으로 선순환 함으로써 정책에 의한 책임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부수립 후 우리나라의 정당정치가 시작되면서 형성된 민주 대 반민주의 정당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40여년간 지속되어 왔다. 1987년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는 동안 점차 보수 대 진보의 경쟁양상으로 변모해 가면서 정당의 정책연구·개발 기능의 중요성이 한층 증대되었다. 정당정치는 건전한 정책대결로 책임정치를 구현해 나가는 길만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정당의 존립기반을 튼튼하게 유지·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새로운 질적 분석으로서 정책연구소가 연구한 정책과제 등에 대하여 당해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 등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고, 정책연구소가 연구·개발한 정책안들이 실제적으로 정부의 정책화 또는 국회의 입법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등 그 쓰임새 또는 사용처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연구소가 행한 활동실적의 질적 평가를 다룬다.

1. 정당의 가치·이념과의 상합성 분석

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연구·개발 실적 등이 당해 정당의 이념 또는 가치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이를 측정 또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정당이 천명하는 강령이나 정강정책, 당헌 등의 내용분석과 정당 소속 국회의원 또는 대표자 등의 발언과 태도에 관한 조사결과에 관한 연구자료 또는 언론보도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정당의 이념적 지향성을 정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책연구소의 정책과제 등의 방향성을 분석하는 척도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합성’을 ‘정당의 가치와 이념과의 일치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연구소의 연구결과가 당해 정당의 이념 지향성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본다.

가. 정당의 이념적 지향성

현대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하여 정책을 제시하고 공직선거에 참여하여 정치권력을 획득하고자 노력한다. 정당의 존재가치는 개인의 행복,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 등을 목적으로 모인 정치단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정당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주의, 주장과 정책을 가진다. 궁극의 목적은 같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 등에서는 차별성이 존재하는데 정당 간에 이러한 차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정당이 지향하는 이념, 가치와 철학이다. 같은 사안이나 사물을 보더라도 다른 해석을 하거나 다른 해결책을 내세우는 것은 이러한 이념적 지향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의 우리나라의 정당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각 정당 간에 차별성이 존재한다. 종전에 한국에서 존재하였던 정당들에게서 이러한 점을 찾기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민주화이후 점차적으로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프레임이 형성·발전됨으로써 정당간의 차별성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강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구분 등은 보는 시각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아니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당의 이념적 지향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사용하여 구분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함에 있어 보수주의는 ‘반공, 성장, 권위, 물질주의’를 진보주의는 ‘평화통일, 분배, 자유, 탈물질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구분(강원택 2005, 193-217)하거나, ‘선별주의, 최소보장, 자본주의, 개인주의’를 보수의 개념으로 ‘보편주의, 최적보장, 사회민주주의, 이타주의’를 진보의 개념으로 사용하여 구분(임순미 2011, 261)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과 질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친기업, 성장, 개발, 보수’ 등의 어휘를 사용하거나 천명하면 보수주의로 ‘개인의 자유와 권

리, 사회민주주의, 경제민주화, 분배, 소수자 권리, 환경, 진보' 등의 어휘를 사용하거나 천명하면 진보주의로 개념화하여 사용하고자 한다.¹⁸⁾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각 정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분석하면 새누리당¹⁹⁾의 경우는 보수 정당임이 명확하고, 민주당²⁰⁾은 명확하게 진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진보 성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통합진보당²¹⁾과 정의당²²⁾은 명확하게 진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진보 정당임이 명백하다.

한편, 대통령후보, 국회의원 등 정치지도자들에 관한 이념성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각 정당의 이념성을 구분할 수 있다. 2012년 조사²³⁾에서 새누리당의 주요 인사들의 이념성은 보수 쪽에, 민주통합당 인사들은 중도에 가까운 진보 쪽에,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보다는 더 진보 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19대 국회의원의 이념성향 조사(중앙일보 2012. 7. 23)와 당원조사(2007년)(강원택 2008, 114) 등에서도 새누리당은 보수정당으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한국갤럽 2012).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은 보수 정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정의당은 상호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보 정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정당의 이념성은 객관적 인식과 주관적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만을 비교할 때는 민주통합당은 보수 쪽에 가까운 정당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의 이념성이란 일률적으로 획을 가를 수는 없는 상대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18) 이와 관련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로 “한미관계와 대북지원 등 외교안보정책과 한미FTA협정, 종합부동산세, 집회와 시위, 사형제” 등에서 이념성향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연구가 있다(이내영 2011, 280).

19) 새누리당은 ‘보수적 가치’라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보수정당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자율과 책임’ 등의 용어가 자주 보이고 있고 있다.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성장과 복지, 공정한 시장경제, 분권과 창의’ 등의 비교적 중도적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회안전망, 평생맞춤형 복지체계, 사회적 불균형과 격차 해소’ 등의 진보적 의미를 어휘도 보이지만 보수적인 의미의 어휘를 더 강조하고 있다(새누리당 강령과 기본정책 참조).

20)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합당한 이전의 민주당(2013년. 5 이전에는 민주통합당)은 ‘정의와 연대가치, 사람과 노동의 가치,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등의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진보적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기업의 창의적 경제활동의 존중과 지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국민정당’을 표방함으로써 중도적 색채도 띄고 있어 진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는 통합진보당과 정의당과는 차별화된다(민주당 강령과 기본정책 참조).

21) 통합진보당은 ‘세계 진보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의 계승, 자본주의 폐해 극복, 자주, 평등, 자유, 복지, 생태, 인권, 소수자 권리, 연대, 대안사회 지향’이라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명확하게 진보 정당임을 표명하고 있다(통합진보당 강령과 기본정책 참조).

22) 정의당은 통합진보당과 유사하게 ‘세계 진보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의 계승,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대변, 소수자 배려’ 등의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진보정당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정의당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임을 표방하여 통합진보당과는 차별성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정의당 강령과 기본정책 참조).

23) 2012. 4. 중앙일보·SBS·EAI·한국리서치의 1666명 대상 2차 패널조사 자료(매우 진보 0, 중도 5, 매우 보수 10)에 의하면 김문수(5.6), 정몽준(6.7), 박근혜(7.1), 새누리당(7.2) 순으로 더 보수적으로, 중도에 가까운 손학규(4.9), 민주통합당(4.4), 안철수(4.3), 김두관(4.3), 문재인(4.1) 순으로 더 진보적으로, 통합진보당(3.4)이 가장 진보라고 조사된 바 있다(중앙일보, 2012. 4. 18).

나. 정책과제 등의 상합성 분석

2013년도 각 정당이 수행한 연구·개발한 정책과제들은 총 288건이었다. 이들 과제들은 매 과제마다 제목, 연구 목적, 주요 내용 등을 요약하여 정기보고서에 수록하여 보고되고 있다. 비록 과제의 내용들이 요약되었지만, 무엇을 다루었는지는 요약내용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요약내용과 그에 사용된 어휘를 발췌한 후 이를 정치이념 영역별로 분류기준에 적용함으로써 주로 어떤 영역의 과제를 다루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주로 시장경제에 관한 사항, 법치주의 등을 다룬 것은 보수로, 사회적 약자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 정책과제는 진보로 분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분류기준으로 사용한 내역은 다음 <표 4-1>과 같다.²⁴⁾

<표 4-1> 정치이념 영역별 분류 기준

구분	보수	진보	중립
기준	시장경제, 법치주의	사회적약자, 진보	가치중립적 사항
주요 주제어	대북체제 정책에 관한 사항 (핵역지력, 안보태세 등) 친기업적 사항 (창조경제, 글로벌 경제, 투자활성화 등) 법질서에 관한 사항 (법질서 준수 등)	경제 민주화 관련 사항 (중소기업, 소상공인, 공정한 시장, 금융소비자, 동반성장, 을살리기, 공정한 과세, 양극화, 소득불평등, 서민금융 등) 사회복지 관련 사항 (사회안전망, 사회복지 전달체계, 기초연금, 노인복지 등) 사회적 약자에 관한 사항 (여성, 아동, 노약자, 장애인, 비정규직, 정리해고 문제 등) 환경에 관한 사항 평화통일에 관한 사항	대북정책에 관한 사항 (대북정책 검토) 일반정치에 관한 사항 (정치제도, 정치대응 전략, 리더십, 의회활동, 선거 등) 정부 등에 관한 사항 (조직, 예산, 홍보 등)

위의 기준에 의하여 각 정당들이 2013년에 연구한 정책과제들에 대하여 그 성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2>와 같다.

24) 본 분석에서 활용한 정치이념 영역별 분류기준은 각 연구소에서 제출한 연구·개발 과제의 요약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내용, 어휘 분석을 통한 개념분류이기 때문에 내재적 한계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시각, 관점에 따라 실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음.

〈표 4-2〉 정책연구소의 연구·개발 정책의 정치이념 지향성 분석 : 2013년

구 분	연구개발 건수	정치이념 지향성(%)		
		보수	진보	중립
계	288(100%)	38(13.2)	137(47.6)	113(39.2)
여의도연구원	88(100%)	28(31.8)	23(26.1)	37(42.0)
민주정책연구원	119(100%)	10(8.4)	47(39.5)	62(52.1)
진보정책연구원	43(100%)		36(83.7)	7(16.3)
진보정의연구소	38(100%)		31(81.6)	7(18.4)

※ 1. 정치이념 지향성은 연구과제의 제목, 활용목적, 주요내용을 대상으로 검토하여 분류하였음.
 2. 중립은 가치중립적인 것으로서 이념지향성이 없는 과제임.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총 88건의 정책과제 중에서 28건은 보수적인 내용, 23건은 진보적인 내용, 37건은 중립적인 내용을 다룬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의도연구원의 연구실적 과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보수적 이념과의 상합성은 31.8%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진보적인 내용도 26.1%라는 적지 않은 비율로 연구하여 상대적 균형감을 유지하는 정책연구소로 평가된다. 여의도연구원은 새누리당이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사항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분배나 사회적 약자 등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총 119건의 정책과제 중에서 진보적인 사항은 47건으로 보수적인 사항 10건 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다루었으며, 그 비율도 39.5%나 되어 진보 정당의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이념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민주정책연구원도 민주통합당이 진보정당임으로 진보적인 사항을 다룬 것이 아니라 여의도연구원보다는 약하지만, 보수적인 사항도 다루어 균형점을 갖고 일하는 정책연구소로 평가된다.

진보정책연구원은 총 43건의 정책과제 중에서 83.7%인 36건을 진보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명확하게 통합진보당의 이념과 부합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진보정의연구소도 총 38건 중에서 81.6%인 31건이나 진보적인 사안을 다룸으로써 정의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일치하는 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의 정책연구소는 보수적인 사안보다는 진보적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처방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으

로 판단된다.²⁵⁾

위의 표에서 보면 중립적인 사안도 총 111건으로 전체 38.8%를 차지하고 있는바 주로 동향보고, 브리핑, 선거제도 연구, 연구소 관련 사항 등이 대부분이었다.

다음 <표 4-3>은 각 정당들이 2013년에 개최한 토론회에 관하여 위의 <표 4-1>의 기준에 의하여 성격을 분석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사안 8.3%, 진보적인 사안 58.5%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사안을 토론주제를 더 많이 다루었으며, 정책과제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4-3> 정책연구소의 토론회의 정치이념 지향성 분석 : 2013년

구 분	토론회 개최 건수	정치이념 지향성(%)		
		보수	진보	중립
계	265(100%)	22(8.3)	155(58.5)	88(33.2)
여의도연구원	66(100%)	19(28.8)	15(22.7)	32(48.5)
민주정책연구원	66(100%)	3(4.5)	28(42.4)	35(53.0)
진보정책연구원	84(100%)		66(78.6)	18(21.4)
진보정의연구소	49(100%)		46(93.9)	3(6.1)

※ 1. 정치이념 지향성은 토론회 제목, 토론내용을 대상으로 검토하여 분류하였음.
2. 중립은 가치중립적인 것으로서 이념지향성이 없는 과제임.

여의도연구원은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보수적 성격을 가진 주제와 내용을 28.8%, 진보적인 것을 22.7%를 다룸으로써 보수 정당으로서 균형성을 가지고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정책연구원의 경우에도 그 성격에 맞게 보수적인 것은 4.5%, 진보적인 것은 42.4%를 다루어 정책과제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진보정책연구원은 전체의 78.6%인 66건을 진보적인 사항을 다루어 정책과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진보정당임을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다.

진보정의연구소도 전체의 93.9%의 비율로 진보적인 사항을 다루어 진보성향을 나타냈으며, 앞의 정책과제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정책 아젠다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10위까지의 아젠다 중에서 경제와 복지, 일자리, 소득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 공교육 신뢰 회복, 사회안전망, 복지국가 구현, 지역간 균형발전 등 대부분 진보적인 정책과제이거나 이에 가까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한국정당학회 2012, 53-77).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정책연구소가 당해정당이 지향하는 이념과 부합하는 활동을 하였고, 그 상합성 정도는 진보성향을 가질수록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여의도연구원은 진보적인 사항도 다룸으로써 다양성 측면에서는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정책과제의 활용용도 분석

정책과제는 정당에서 요구하든 아니면 국회의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든 필요에 의하여 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하고 개발한다. 이러한 정책과제의 활용용도를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정책연구소의 연구실적을 가늠하고 평가할 수 있다.

2013년 정책연구소가 연구·개발한 정책의 활용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4>와 같다.²⁶⁾

<표 4-4> 정책연구소의 연구·개발 정책의 활용처 분석 : 2013년

구 분	연구개발 건수	활 용(%)		
		당해 정당	국회의원	연구소 자체
계	288 (100%)	249 (86.4%)	16/11 (5.6%)	23 (8.0%)
여의도연구원	88 (100%)	81 (92.0)	3/1 (3.4)	4 (4.5)
민주정책연구원	119 (100%)	94 (79.0)	7/4 (5.9)	18 (15.1)
진보정책연구원	43 (100%)	41 (95.3)	1/1 (2.3)	1 (2.3)
진보정의연구소	38 (100%)	33 (86.8)	5/5 (13.2)	

※ 1. 정당과 자체보고용은 정당용으로, 당정용은 정당용으로만 분류하였음.

2. 국회의원에게 제공된 총수/입법정책용으로 제공된 수

여의도연구원은 연구·개발한 정책과제의 92%인 81건을 제공하여 새누리당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하였다. 국회의원에게는 총 3건을 제공하고 그 중에서 1건만이 입법정책용으로 활용되었다. 새누리당의 경우는 2013년 현재 집권당이기에 때문에 당정협의용으로 많은 수가 활용되었는데, 조사결과 그 수는 총 58건(전체 88건의 65.9%)으로 파악되

26) 정책의 활용처는 정책연구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정기보고서에 기록된 것을 기초로 분석한 자료임.

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전체의 79%인 94건을 민주통합당에 제공하였으며, 국회의원에게는 7건을 제공하고 입법정책용으로는 4건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보정책연구원도 전체의 95.3%인 41건을 통합진보당에 제공하였으며, 국회의원에게는 입법정책용으로 1건의 제공이 있었는데 다른 연구소에 비하여 정당에의 제공비율이 가장 높아 충실도 측면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진보정의연구소도 전체 86.8%인 33건을 정의당에 제공하였으며, 5건의 입법정책용 제공이 있었다. 진보정의연구소의 경우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정책과제의 건수가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는 활용도가 높았다고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2013년도에 각 정책연구소가 연구·개발한 정책과제는 총 288건이었는데, 전체의 86.8%에 해당하는 249건이 당해 정당에서 활용하도록 제공됨으로써 소속 정당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자료 중에서 입법정책용으로 활용하도록 제공한 것은 전체의 3.8%(11건)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국회의원의 경우는 국회의원에게 배치된 보좌관 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지원하는 기구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책의 질적 분석 측면에서 보면 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한 정책과제들이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정책 등으로 활용되거나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어야만 그 가치가 있는데, 현재의 정책연구소는 이러한 면에서는 낮은 평가를 피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2013년도 국회의 의원입법 결과를 보면 정책연구소에서 제공한 1건의 정책과제가 입법정책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입법에의 기여도는 단기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2013년도 한하여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해석과 판단에 유의하지 아니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제5장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쟁점 및 과제

정책연구소의 본래의 기능은 “당해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 철학과 이에 합당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당해 정당에 제시하는 기능”이다(한국선거학회 2012, 58). 이러한 기능 수행에 충실하여야만 정책연구소 설립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현실적으로 오늘날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창설된 이후 조직이나 재정문제,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발전과 더불어 10여년의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²⁷⁾

정책연구소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발전 대안들은 현재의 정책연구소가 제대로 충분한 정책의 연구와 개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즉, 정상적인 정책연구 기구로서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진단과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정책연구소의 바람직한 발전목표는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 철학에 따른 정책의 연구와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직화와 기능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연구소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 측면에서는 조직의 제도화,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고, 기능 측면에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적실성과 확장성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쟁점과 과제들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조직 및 재정 안정성 확보

가. 조직의 제도화

27) 그동안 정책연구소에 대하여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 제기와 함께 그 대안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하여 정당, 국회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관심을 갖게 되어 국회 의원입법까지도 발의되는 등 정책연구소의 발전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관련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위한 연구 인력의 안정적 확보 등에 대하여 논의가 있어왔다.

첫째, 독립성과 자율성은 상호 연계되는 개념으로서 독립성은 당해 정당으로부터 인사와 활동에 있어서 독립되어 행하여지고 있느냐의 문제이고 자율성은 정책연구소가 외부의 간섭 또는 관여 없이 스스로 의사 결정하고 그 의사를 집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과 관련해서는 연구소장의 겸직문제, 당해 정당과의 인사교류, 파견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자 과제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당의 정책연구소 관계자에게 설문조사와 함께 인터뷰 방식으로 의견을 조사하였다. 다음 <표 5-1>은 연구소의 조직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소 관계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5-1> 연구소의 조직 강화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2013년

구 분		여의도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	진보정의연구소
조직의 독립(찬/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국회의원의 연구소 장겸직	장점	위상강화, 소통	방향, 결과 공유	입법현장과 연계	정당 자율판단사항
	단점	조직안정저해, 업무집중 곤란	단기 현안 치중	비상근으로 체계적 지휘 곤란	
연구소와 정당과의 인사교류 (찬/반)		반대 (독립인사 시행)	관리직은 찬성 (전문가는 반대)	원칙적 반대 (전문가는 가능)	찬성(제한적)
연구소 인력의 정당파견		필요 (전문가 참여)	필요	필요	필요

현행 정책연구소는 당해 정당의 독립된 기구가 아니라 하부조직(subsystem)이나 내부조직(internal organization)으로 취급받는다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즉 대부분 현역 의원이 책임자로 되어 있고, 기능 측면에서도 단기과제 또는 정치·선거공학적 과제를 전략적으로 집중 수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비판의 초점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없다는데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연구소의 태동이 정당의 가치와 이념 등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임무를 가진 기구였다는 점에서 과연 정당의 별개 기구로 존재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즉 당해정당과 연계되지 않고는 같은 방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독립성과 자율성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혀 다른 조직으로 존재하여 당해 정당과 갈등을 유발하거나 다른 길을 간다면 그러한 기구는 존재가치가 없게 된다. 따라서 당해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정책연구

소의 책임자로 있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당해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에서 정당이 내정한 인사를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흠은 없다.

다만, 정당들이 정책연구소를 당해 정당의 내부기구의 하나로 보고 인사를 하거나 운용하는 것이 문제이다. 즉 정당이 정책연구소의 인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내부기구화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정책연구소의 전문 인력을 당사부처의 부서원으로 겸직 발령 내거나 또는 파견하는 등 정책연구소의 전문화에 반하게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해도 제한적으로 운용하지 않으면, 정당연구소의 전문성, 계속성은 위협 받게 될 우려가 있다.²⁸ “정책연구소는 성격상 민법상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하나이다(한국선거학회 2012, 56).” 따라서 정책연구소는 법적으로는 독립된 기구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정당의 내부기구로 두지 아니하고 민법상 독립된 기구로 둔 이유는 우리나라 정당이 100년 정당을 지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우리나라는 정책연구소의 발전모형은 독일정당의 굳건한 후원조직인 독일식 정당재단을 지향하여 설계되고 제도화하는 것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김현태 2002, 120).

결과적으로 조직의 독립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연구소가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의 연구소장 겸직, 정당과의 인사교류와 파견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연구소별로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었다.

둘째,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인력에 관한 문제이다. 어느 정도가 적정 인력인지는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전문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아래의 <표 5-2>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정책연구소의 박사학위 소지자인 전문가의 수는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당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표 5-2〉 연구소의 연구 인력(박사학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2013년

구 분	여의도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	진보정의연구소
적정인원(희망 수)	25	15	16	30
현재 인원	21/84	10/51	3/8	2/13

28) 이점과 관련하여 전문 연구인력을 당관료 또는 정치지도자로 충원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오히려 이러한 충원방법은 전문가를 정치지도자 등으로 충원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

전공분야	정치학7, 행정학5, 정책학2, 사회학3, 경제학3, 박사수료1	정치학3, 법학1, 경제학1, 사회복지학1 박사수료4	정치경제학1, 사회복지학1, 통계학1 (박사과정2)	정치학2
채용형태	공채	공채	공채	공채

※ 박사/직원수는 2014년 6월말 기준임.

정책연구소는 최소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영역에서 연구를 통할하여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1명 이상의 전문가가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정책연구소가 최소한의 연구 및 개발임무를 수행하려면 최소한 4명 이상의 전문가는 필요하다고 본다. 부족한 전문가는 자문위원, 객원연구원 등을 활용하여 정책연구소의 연구수행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정책연구소의 관계자 의견에 의하면 연구원은 최소한 15명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연구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이 수는 국회상임위원회의 수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이다. 현재의 전문 인력 중 박사학위 소지자와 비교하면 여의도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많이 부족함을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다.

한편, 정책연구소의 지속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에 대한 직업적 안정성이 요구된다. 이는 정책연구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채용과 인사에 있어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급료와 고용 보장이 요구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책연구소는 정당에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당해 정당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하고, 인사 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되 공직선거 등의 대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정당의 유사직류와의 교류 또는 파견이 가능하도록 각 정당과 정책연구소가 자율적으로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재원 확보

현재 정책연구소는 국고보조금 등을 기본적인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즉 정치자금법(제28조제2항)에서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보면 총 113억 원 이상을 4개 정당이 정책연구에 사용

했어야 했다.²⁹⁾ 정책연구소별 예산확보에 관한 설문 조사결과는 다음 <표 5-3>과 같다.

<표 5-3> 연구소의 예산확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2013년

구 분		여의도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	진보정의연구소
예산규모	적정예산	106억원 이상	57억원(현 규모)	20억원 이상	35억원 이상
	현재의 수입액	106억 59백만원	57억 52백만원	10억 81백만원	8억 94백만원
예산확보 방안	기금제도	○	○		
	후원회제	○		○(정당후원회)	○
	출연금제	○	○		
	기타	수익사업			보조금제도 개선

※ 진보정의연구소의 보조금제도 개선 : 균등지원제(50%)와 의석 차등제(50%) 병행

위의 표에서 보면 정책연구소 예산규모는 희망하는 규모에 비하여 소수 정당에게는 너무나 적은 편이고, 민주정책연구원은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연구원은 예산 규모면에서는 다른 연구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지만 질 좋고 더 많은 연구를 위해서는 현재의 예산액보다는 더 많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정책연구원 같이 큰 정당의 경우 예산의 규모가 적은 편은 아니다.³⁰⁾ 물론 정책연구소가 예산이 많다고 하여 그 연구소가 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연구·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당의 보조금중 정책연구소에 지급하는 비율을 현행 30% 보다 더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실제적으로 정당은 많은 정치자금을 소요로 하고 있고 그 재원은 국고보조금, 당비, 기탁금 등에 의하여 충당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당 현실은 정당 자체만으로도 소요되는 정치자

29) 2013년 기준 총 378억원이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었는데, 정책연구소에 사용해야하는 금액은 그 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이어야 하므로 113억원 이상이 된다.

30)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은 2012년 수입액이 \$86,084,630(한화 약 860억 원), 지출은 \$81,748,321 이었다. <http://www.charitynavigator.org/index.cfm?bay=search.summary&orgid=3819> 참조.

참여연대 산하 참여사회연구소는 2014년 기준 수입 6,547만원에 불과하고, 희망제작소는 2013년 기준 40여억원, 국가미래연구원은 2013년 기준 수입 5.4억원으로 공시되었다.

<자료 출처>

참여사회연구소 :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Research&category=458458&document_srl=1135023 <검색일 2014. 6. 10>

희망제작소 : <http://www.makehope.org/category/introduction/yearly/> <검색일 2014. 6. 10>

국가미래연구원 : <http://www.ifs.or.kr/design/contents10.asp?code=1014&top=1&left=6> <검색일 2014. 6. 10>

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당비를 내는 당원의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정당 후원 회제도도 폐지되었기 때문에 정당으로서는 현실적으로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정상 적인 재원조달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보조금의 정책연구소에 지급비율 인 현행 30%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재원확보수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동안 재원확보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방안으로는 보조금의 직접교부제, 정치발전 기금제도, 후원금제도, 출연금제도, 회원모집에 따른 회비 징수제도, 간행물 판매 등이 있다. 이중에서 간행물 판매는 일반적인 단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 에 부가되는 활동으로서 지급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제도화가 불필요한 사항이 다. 여기서는 보조금 직접교부, 별도 기금설치, 후원금, 출연금제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정당보조금의 직접교부제도이다. 이 사항은 종전부터 제기된 정책연구소의 오랜 과제의 하나이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 33) 국회에 관련 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사항이다.³¹⁾

현행 정당보조금은 정당에 매분기에 지급한다. 따라서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정당이 보조금을 수령한 시기보다 더 늦게 당해 정당으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을 수밖에 없다(최 초는 3월말, 최종은 12월말에나 가능). 더구나 정책연구소가 정당으로부터 정당보조금 을 교부받으려면, 현실적으로 소요예산을 신청하고 동 신청에 따라 당해 정당에서 이를 심사한 후 교부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상의 정당보조금 30%이상 사용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소에 대한 재정통제가 실시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 연구소의 자율성은 제로에 가깝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당보조금을 따로 정책연구소에 교부하는 제도를 시급히 채택하고, 이에 대 한 통제는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통제와 똑같은 방법의 회계보고제도와 공개 제도 등으로 투명성과 합법성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정책연구소가 자체적 으로 장·단기 연구계획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발전기금(가칭)제도'의 신설방안이다. 이것은 현재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국 가 등이 수입으로 하고 있는 기탁금(공직선거법 제57조, 제265조의2), 과태료(같은 법 제261조 등)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국가 또는 국민들의 출연금 등을 더하여 이를 정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동 방안의 최대의 장점은 재원확보가 쉽고 재원사용의 정당성이 있다는 점이다. 정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 재원을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연구 및 개발 등에

31) 2013. 3. 14 강기정 의원 등이 이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1904065)'을 발의하였으며, 동 법안에 의하 면 정당보조금과는 따로 떼어 일괄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하여 경제발전과 규모 등의 역량에 맞게 정치 강국으로서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금의 규모나 실현가능성에서 현실적인 안이라고 판단된다.³² 동 제도는 공직선거법과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정치발전지원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면 가능하다.

셋째, 후원금(회)제도이다. 이것은 정당법 등에서 정책연구소 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야만 가능하다. 정책연구소에 대한 기금제도 외에 후원회제도 등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 철학에 동조하지만 입당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도 정치적 의사를 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것의 대표적인 제도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표할 수 있는 후원회제도이다. 동 제도에 대하여는 진보정책연구원과 진보정의연구소에서 선호하는 제도이고, 진보정책연구원은 정당후원회를 두어 여기서 일 정액을 연구소에 배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넷째 출연금제도이다. 이것은 현행 정책연구소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에 대하여 출연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에 따른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정책연구소도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외부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당과 유관한 기관이므로 이의 출연이 안 되는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운용하고 있다(구체적인 것은 한국선거학회 2012, 57참조). 이 문제는 정책연구소의 자율성인 운용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즉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경쟁력을 가지고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익법인으로서 외부의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하면 그만큼 정책연구소는 재원확보가 쉽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출연금제도와 후원회제도가 현실적으로 특정 정당 특히 여당에 집중될 수도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 34).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이의 제도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소액다수에 의한 출연 또는 후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출연 또는 후원금의 상한(예시: 연간 1인당 10만원)을 정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한 독점적 후원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책연구소의 재원확보와 관련하여 양극화 또는 비대칭성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차이로 인하여 정책연구소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차이가 발생한다. 현실적으로 군소정당으로서는 적은 규모의 재원으로 정책연구

32) 2009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검토안에 의하면 반환된 공직선거 기탁금만으로도 매년 40억원 규모의 재원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 6).

소를 운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보조금으로 최저금액 보장제를 도입하여 소수정당의 정책개발을 육성하자는 견해(김형준·김도중 2011, 28) 등이 있는데 정당간의 경쟁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경쟁 과정과 결과의 왜곡 등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러한 자원 확보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외의 후원금 제도 등을 신설하여 이를 해소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다른 모금방법 없이 현행 제도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다양성 차원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이의 검토가 요구된다.

2. 정책연구기능의 강화

가. 정책연구소의 능률성 평가

정책연구소의 예산지출과 관련하여 정책개발비의 비중이 적고, 인건비의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었다. 특히 정책개발비의 비중은 2012년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0%이하로 파악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에서 더욱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3-5 참조).

그러나, 정책개발비의 비중만을 가지고 정책연구소가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정책연구소에 전문가들이 많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급료 등의 지급비율이 높아져 실제적으로는 상근자에 대한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책개발이라는 것이 주로 문제의 제기, 자료수집 및 분석, 대안의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론조사 등 조사비, 현장출장비, 회의비, 인쇄비, 홍보비 등으로 구성되고, 외부용역을 주는 경우에는 전체의 비용이 정책개발비로 책정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인건비와 정책개발비라는 2분법적 지출규모 분석 방법으로는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기능 수행여부를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다. 일률적으로 인건비가 많고, 정책개발비는 적다는 지적은 의미가 없다. 각 정책연구소의 의견도 인건비 지출에 대하여는 정책개발비용에 포함된 비용 또는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등 긍정적이며 현실적으로 연구비 지급금액이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아래 표 5-6 참조).

다만, 전문가보다는 행정수행을 하는 보조 인력이 많아 이들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책연구소의 목표달성도는 정책의 연구와 개발의 실적을 가지고 측정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행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각 정책연구소가 2013년에 설정한 정책 연구와 개발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입과 산출비를 의미하는 능률성에 대하여는 각 연구소 간의 상호 비교는 가능하다. 아래 <표 5-4>는 2013년 정책개발의 능률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인력 1인당 지출한 금액과 1인당 실적, 실적 1건당 소요된 비용을 분석한 것이다.

<표 5-4> 정책개발의 능률성 분석 : 2013년

구 분	기본자료			연구인력 1인당		실적 1건당 비용 (백만원)
	지출액(가) (백만원)	연구인력 (나)	실적(다) (건수)	비용 (백만원)	실적	
여의도연구원	8,190	39	88	210	2.3	93
민주정책연구원	850	31	119	27	3.8	7
진보정책연구원	309	3	43	103	14.3	7
진보정의연구소	329	5	38	69	7.6	9

※ 산출 : 연구 인력(석·박사) 1인당 비용=가/나, 1인당 실적=다/나, 실적 1건당 비용=가/다

위의 표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연구소별로 비용 1원을 투입(input)하여 나온 산출 결과(output)를 비교(다/가)하면 민주정책연구원(0.14), 진보정책연구원(0.13), 진보정의연구소(0.11), 여의도연구원(0.01) 순으로 나타났다. 여의도연구원이 능률성 측면에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정책개발 실적 1건당 투입비용이 많으므로 질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양질일 것이라는 판단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나. 정책 활동의 질 수준 : 기여도

정책연구소에서 정책 활동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이다. 양질의 정책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정책연구소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책연구소로서는 질 높은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다음 <표 5-5>는 연구소의 정책기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표 5-5〉 연구소의 정책기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2013년

구 분	여의도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	진보정의연구소
정책연구소의 기여도	높음	높음	높음	높음
초단기, 단기과제 집중	바람직하지 않음	현실적 필요	현실적 필요	현실적 필요
연구소의 공직후보자 여론조사 실시(찬/반)	찬성(본연 임무)	찬성(기본 임무)	반대(정당 업무)	찬성(본연 임무)
높은 인건비 지출비용	정책개발비용임. (문제 없음)	구조적 문제 (사무원제한규정)	투자로 인식	투자로 인식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 방안	현안연구 강화, 국회의원의 참여 제도화	여야정상설협의체 필요, 정부자료 접근 제도화	연구소와 입법보좌관과의 정책네트워크 체계화	의회와 국민 친화적 아젠다 설정 및 실천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연구소의 기여도에 대하여는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어 그 존재가치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단기 과제에의 집중은 대부분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공직선거 후보자 지지도를 알아보는 여론조사에 대하여는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정책의 생산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활동의 다양성 확보, 중장기적 과제 수행, 정치·선거 공학적 검토·연구에의 치중하는 문제의 해소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정책연구소에서 정책 활동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보수와 진보 측면에서의 다양성과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의 각 영역의 과제들을 폭 넓게 다루느냐의 문제이다.

아래의 〈표 5-6〉은 제4장에서 분석한 정책연구소 정책 활동(정책과제 연구와 토론회 개최)의 정치이념 지향성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현행 정책연구소는 전체적으로는 보수와 진보 두 측면(시각이 아니라 영역을 말함)에서 다양성은 보이고 있으나, 보수 10.9% 진보 53.0%로 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물론 대부분의 사회 문제 등이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보수적인 면에 대한 연구 및 정책 활동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은 균형적 시각 형성과 문제 해결방안의 강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표 5-6〉 정책연구소 정책 활동의 정치이념 지향성 분석 : 2013년

구 분	건수	정치이념 지향성(%)		
		보수	진보	중립
계	551(100%)	60(10.9%)	292(53.0%)	199(36.1%)
정책과제	286	38(13.3)	137(47.9)	111(38.8)
토론회	265	22(8.3)	155(58.5)	88(33.2)

※ 이 표는 〈표 4-1〉와 〈표 4-2〉를 통합한 것임.

따라서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이점을 고려하여 정책활동의 다양성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는 법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당해 정책연구소에서 정책 활동의 방향설정에 유의하여 당해 정당의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정교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반대 방향의 가치와 이념, 영역에 대하여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연구소의 자발적 노력 외에도 정책연구소간 합동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 프로젝트 공동연구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자 하다.

정책연구소가 하는 일이 정치·사회·경제·문화의 각 영역에 고루 분산되어 있는냐의 문제도 정책연구소의 정책 활동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특정 영역의 과제만을 다룬다면 전체적으로 균형점을 상실하고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 5-7〉은 정책연구소의 정책 활동(정책과제 연구와 토론회 등)의 각각의 영역별 주제 등을 구분한 것이다. 표에서 보이듯이 환경에 대하여는 관심이 적었으며, 교육 분야에도 관심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점은 제2장에서 제시한 2013년도 한국 정치에서 요구된 정책의제들이 주로 '정부 조직 개편과 안정, 선거공약(정책)의 구체화를 위한 활동, 여야간의 정책 이해 및 사회갈등에 대한 선도적 대응, 합의의 정치 뒷받침' 등의 정치 현안에 집중하여 이들과는 거리가 먼 과제들에 대하여는 관심이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5-7〉 정책연구소 정책 활동의 영역별 내역 : 2013년

	합계	정책과제	토론회 등 내역					
			토론회	간담회	포럼	세미나	심포지엄	국제회의
계	543	288	106	42	71	32	2	2

정치/행정	198	96	26	31	17	26	2	
경제/민생	106	45	20	1	40			
외교/안보	68	37	26	3				2
사회/복지	96	53	25	5	7	6		
교육/문화	20	18	2					
환경	2		1	1				
기타	53	39	6	1	7			

※ 이 표는 <표 3-10>와 <표 3-18> 등의 자료를 재편집한 것임.

결과적으로 각 영역의 문제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다. 다만, 우선순위에 따라 다루어야 할 문제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문제도 결국은 법과 제도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당해 정책연구소가 균형감을 갖고 다루어야 할 과제 하나이다.

둘째, 단기과제에의 치중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다음의 <표 5-8>에서 확인된다. 중장기적 과제에 비하여 단기적 과제수행이 월등히 높다.³³⁾

〈표 5-8〉 정책연구소의 과제 수행기간 상황 비교 : 2009~2013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여의도연구원	68(62/6)	27(27/-)	65(50/15)	80(77/3)	88(79/9)
민주정책연구원	109(94/15)	75(63/12)	68(53/15)	91(77/14)	119(112/7)
진보정책연구원	27(/)	72(48/24)	97(76/21)	67(16/51)	43(33/10)
진보정의연구소	-	-	-	-	38(26/12)

※ 1. 단위 : 건수, 단기/중장기

2. 범위 : 단기 : 1-2개월, 중기 : 3월-5월, 장기 6월 이상으로 분류

정책연구소가 단기적 과제에 매달리는 경우에는 정당의 장기적 전략목표와는 거리가 먼 현안이나 이슈에 대한 검토를 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원래의 정책연구소의 설립취지와는 멀지만 현실적으로 각 정책연구소는 단기과제에 집중하는 점에 대하여

33) 6월 이상 장기과제 수행실적은 2011년 민주정책연구원 1건(연구소 법규정비), 2013년 여의도연구원 2건(연구소 법규정비), 민주정책연구원 1건(여론대응을 위한 정치의제의 생애주기 파악), 진보정책연구원 1건(주간 경제동향, 매월), 진보정의연구소 1건(평화, 통일 정책이슈 브리핑 작성)으로 나타는 바, 실질적으로 정책개발을 위한 사업추진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정책연구소의 임무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점과 관련하여 정책연구소는 균형 있는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다행이다.

셋째, 정책연구소의 과제수행의 질적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 또는 선거공학적 과제에 치중하느냐 아니면 입법화가 가능한 사안을 수행했느냐이다.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수행한 과제 중에서 입법화가 된 건수는 1건이었다.

이러한 입법화하지 아니한 과제는 대부분 단기과제이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정보제공, 정치공학 또는 선거공학적 검토 연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검토연구 중에 정보 제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정당 내부에서 하여야할 일을 정책연구소가 하는 대신하는 업무대체에 불과하다. 물론 여론조사 등의 분석은 연구와 개발의 기초자료 획득을 위해서라도 또는 선거공학적으로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재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정책에 관한 입장 정리 등이 아닌 정당의 대응전략을 검토한다던지 하는 것은 정당에서 하여야할 일이라고 판단된다.

더구나 여론조사의 경우 정책개발과 관련한 여론조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공직선거후보자 또는 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도 등을 알아보는 여론조사의 실시는 정책연구소의 업무라기보다는 정당의 업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진보정책연구원도 같은 의견).

결과적으로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정책연구소에서 제안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분야의 연구 강화, 정책연구개발 과정에 국회의원의 참여 제도화(여의도연구원),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민주정책연구원), 연구소와 입법보좌관 정책 네트워크화(진보정책연구원), 국회와 국민 친화적 아젠다 설정 및 실천(진보정의연구소) 등의 방안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다. 정책개발에 관한 국민통제

정책연구소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현행의 정기보고제도의 보완 또는 개선³⁴⁾, 정책연구소의 실적 공개제도 확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내에 평가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정책연구소에 대하여 국민통제

34) 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을 다음과 같다(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 37-39 참조).

첫째, 정책연구소가 보고해야 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보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있지 않다.

둘째, 보고의 수준이 연구소 단위에 한정되어 있으며, 개인 혹은 연구원 특성(전임, 공동, 보조 등) 단위의 보고 항목이 없다.

셋째, 연구/개발 실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넷째, 주요 활동실적의 보고서에는 평가의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대안들이다.

아래 <표 5-9>는 연구소에 대한 국민통제 강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표 5-9> 연구소에 대한 국민통제 강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2013년

구분	여의도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	진보정의연구소
정책과제 결과물 공개제도	찬성(시행중)	찬성(조건부)	찬성(시행중)	찬성(시행중)
정책과제 수행 실적제	찬성(시행중)	찬성(조건부)	찬성(시행중)	찬성(시행중)
자체평가 및 이사회 보고제도	찬성(시행중)	찬성(시행중)	찬성(시행중)	찬성(시행중)
선거위 등에 평가위원회 설치	찬성 (학계 참여 병행)	반대	찬성 (당원, 국민 보고회 병행)	반대

각 연구소는 나름대로 연구결과물, 성과에 대한 공개 및 통제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현행의 정책연구소의 정기보고제도(정당법 제35조제3항)는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에 대한 정기보고와 그 성격을 같이한다. 따라서 그 보고내용은 간단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평가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는 견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 40-45)가 있으나, 이는 통제를 위한 통제가 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정기보고제도는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운용하되, 정책연구소의 자체공개제도를 엄격히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책연구소의 실적 공개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정당법상 정책연구소는 매년 정기보고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개하고 있다.³⁵⁾

정책연구소의 정기보고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개는 현행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정책연구소가 하는 공개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고에 의하여

35) 정당법상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정당법 제53조제3항),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고받은 연간 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정당법 제53조제4항). 결과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연간실적을 기초로 정책연구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공개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지원된 비용으로 과제를 수행하였으면 그 결과물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보조금의 사용과 관련한 과정과 그 결과는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의도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과 진보정의연구소와 같이 매년마다 자체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면서 그 연구결과물 즉 결과보고서까지도 공개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전부 공개가 어렵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일정 금액(예시, 500만원 또는 1천만원 등) 이상의 연구결과는 반드시 공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

셋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내에 평가위원회 등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구를 설치하여 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자는 견해가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 35).³⁶⁾ 이는 현행의 정기보고에 기초한 분석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서 주장되는 개선방안이다.

정책연구소의 실적 평가를 위하여 이와 같이 다른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새로운 기구의 설립이 쉽지 아니하고, 그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과 정당관련 기관들에 평가는 위법하고 부정하지 아니하는 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의 정기보고에 기한 학자들의 분석 작업도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정치적 평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정당이나 정책연구소의 잘잘못을 가려내기 위한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국민통제 강화방안은 한편으로는 정책연구소의 연구와 개발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정당 또는 정책연구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국민통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정당의 자율적 운영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라. 종합싱크탱크 기능

한국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당해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 철학을 중심으로 종합 싱크탱크(think tank) 기능을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의 정책연구소는 예산 및 전문성 등에 있어서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없지 아니하다.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정책연구원

36) 이에 의하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정책연구소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차등적으로 연동시켜 정책연구소의 활동과 성과를 높여주는 방안이다.

외에는 규모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부록 3 참조).³⁷⁾ 이와 관련 한국 정책연구소는 주로 “싱크탱크로서의 정책선도 기능 부재, 외부 정책연구소와의 네트워크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형준 2013, 3-4).

아래 <표 5-10>은 연구소의 종합싱크탱크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표 5-10> 연구소의 종합싱크탱크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2013년

구 분	여의도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	진보정의연구소
MOU 체결/공동연구	○	○	○(네트워크)	○(연구소간)
용역사업	○		○	
객원연구원제도	○		○	
자문위원제도	○	○	○	

위와 같이 정책연구소의 싱크탱크화의 방안으로는 협약체결(MOU), 공동연구나 용역사업, 객원연구원제도(여의도연구원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제도) 등 공동연구를 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여의도연구원이 이점에서는 가장 앞서고 있다.

위의 표에서 보면 각 정책연구소는 공동연구에 대하여는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다.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종합적인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우선 유사한 연구기구와의 연계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의 중심에 정책연구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보수적인 연구기관의 싱크탱크 역할을 여의도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고 산재되어 있는 각종 연구소를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네트워크화). 물론 중도 또는 진보적인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도 이러한 연계조직화는 가능할 것이다. 중립적인 연구기관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 여러 정책연구소와 같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싱크탱크화하여 여러 연구기관과 협약 체결 및 용역사업의 전개 등의 방법으로 연동시킬 수 있다면 단독으로 연구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싱크탱크화의 일환으로 제안된 용역연구사업의 발주는 정책연구소의 과제 수행에 있어서 자체 연구수행능력과 관련이 깊다. 실제적으로 연구 인력의 부족 또는 관련 전문가

37) 2014년 「100대 한국의 싱크탱크」에는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정책연구원 만이 포함되었으며, 정치·사회부분에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은 7위,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은 23위,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은 42위로 발표되었다(한국경제매거진, 제945호(2014년 01월 06일).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01&nkey=2014011000945000161&mode=sub_view).

의 부족 때문에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의 자체연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책연구소의 자체연구 실적은 다음 <표 5-11>과 같다.

〈표 5-11〉 정책연구소의 과제수행 주제 상황 비교 : 2009~2013년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여의도연구원	68(59/9)	27(26/1)	65(52/13)	80(71/9)	88(63/25)
민주정책연구원	109(92/17)	75(19/56)	68(56/12)	91(59/32)	119(110/9)
진보정책연구원	27(25/2)	72(70/2)	97(91/6)	67(67/-)	43(41/2)
진보정의연구소	-	-	-	-	38(21/17)

※ 자체연구 건수/외부전문가, 외부공동연구는 외부전문가 연구로 포함하여 분류함.

위의 표에서와 같이 자체연구 비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정책연구소에 전문가가 많다고보다는 단기과제 또는 정치공학적인 과제 수행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중장기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외부전문가(외부용역)의 건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당에 있어서 가치와 이념의 분화는 그 역사가 길지 않다. 2011년 8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를 전후로 그동안 막연하게 제시되었던 복지개념을 일반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로 2원화함으로써 명확하게 되었는바, 종전의 민주 대 반민주의 개념에서 성장과 분배, 선택적 복지와 일반적 복지 등의 개념으로 정치적 주의주의의 함의가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종전의 정치구도가 아닌 가치와 이념, 철학의 차이에 따른 정치구도 하에서는 정책연구소의 싱크탱크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된다. 이러한 차이에 따른 정책의 연구와 개발이 정당의 성패, 국민지지 획득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마. 정책연구소의 기능 확대 : 민주시민교육 기능

현행 정책연구소의 본연의 임무인 당해 정당이 추진하여야 할 정책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외에 독일의 정당재단과 같이 시민교육, 즉 정치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 36).

우리나라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생활 속의 민주주의 확산 등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수원에

서 실시하는 등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민주시민교육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에 선거연수원을 확대·개편하고 임무를 부여하자는 입법의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³⁸⁾

실제적으로 주요 정당 및 정책연구소들은 예비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정치아카데미를 운용하면서 당원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종전과 같이 거대한 정당연수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선거 임박하면 각종 정치적 아카데미를 중앙당은 물론 시·도당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가치중립적인 민주시민교육은 아니더라도 정치교육의 일환으로서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다음 <표 5-12>는 정책연구소의 교육실시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서 여기서 당원을 대상으로 한 당원교육 외에 대학생 등 당원이 아닌 자에 대한 교육은 일방적이긴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의 하나로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12> 정책연구소의 교육실시 상황 비교 : 2009~2013년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여의도연구원	7(1/6)	12(5/7)	17(3/14)	13(-/13)	5(2/3)
민주정책연구원	48(19/29)	58(42/16)	20(18/2)	1(1/-)	8(6/2)
진보정책연구원	8(-/8)	3(3/-)	29(10/19)	27(17/10)	26(23/3)
진보정의연구소	-	-	-	-	4(1/3)

※ 당원 : 최고지도자/의원/정당실무자/일반 당원, 당원 외 : 대학생/일반 국민/기타

실제적으로 정책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 당원에게는 당정체성 등 필요한 사항을 교육시키고 비당원에게는 정보제공이나 입후보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하다 하겠다. 어쨌든 정책연구소의 민주시민교육기능 수행에 대하여는 각 연구소가 적극 찬성하거나 이미 제도화하고 있다.³⁹⁾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대적 정치관계에 의하는 경우 여야 상호 간에 동반자가 아닌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상 우리나라의 정치는 암울할 뿐이며, 특히 민주시민교육이 요구되는 계기이기도 하다.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나

38) 2013. 5. 20. 국회의원 황영철 등은 의원입법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주내용으로 하는 「선거정치교육지원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39)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3. 10. 2 개정 새누리당 당규)에 '헌법적 가치구현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시민교육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만 동반자적 관계가 회복된다. 민주시민교육의 핵심도 이러한 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현재의 기능에 부가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위와 같이 그 교육의 범위와 내용을 독일의 정당재단처럼 과연 객관적 입장에서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따른다. 과연 정당이나 정책연구소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지가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 기능도 정책연구소의 기능으로 인정하되, 적어도 선거연수원의 지원 아래 실시하는 방안(강사 출강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동추진 등)을 강구하여야 논쟁의 여지가 없게 될 것이다.

제6장 결론

한국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이들 정책연구소는 당해 정당에의 기여도에 대하여 스스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정책에 의한 책임정치의 토대 마련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정책 연구와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실적을 거두어야 한다.

한국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조직과 예산, 기능 등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고, 정당의 부침에 따라 정책연구소의 소멸과 창설 등이 거듭되기도 하지만, 유력한 정당들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책연구소도 그동안의 경험과 자료축적으로 싱크탱크화의 발전가능성을 높이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책연구소에 대하여 지적되어온 문제점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연구 인력 등 조직적 측면, 예산, 기능적 측면, 실적 평가적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2011, 2012, 2013).

첫째, 조직적 측면에서는 주로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독립성과 자율성은 정당과 정책연구소간의 관계에서, 전문성은 박사학위소지자 등 전문가의 규모와 충원에서 비롯된 문제 제기였다.

둘째, 예산적 측면에서 정책연구라는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재정의 독립성이 긴요하고 적은 규모라는 것을 지적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보호 수단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기능 또는 역할 측면에서도 단기 과제 또는 정치 공학적 과제에 치중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하여는 그 실적이 빈약함이 지적되었고, 현재의 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민주 시민교육 등 기능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2013년도 정책연구소의 연간활동 실적 분석에서도 위와 같은 사항은 반복되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문제 제기는 유사하다. 앞으로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분석 연구에서는 그동안 시도되지 아니하였던 2013년도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정리하여 정당 또는 정책연구소가 어떠한 방향의 역할을 했어야 했는지를 가늠해 보았고,

질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소가 수행한 과제 등을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분류하고, 그 용도를 알아봄으로써 당해 정당의 이념과의 상합성, 다양성 분석 및 입법화의 유무 등을 알아보는 시도를 한바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의 정책연구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운영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책연구소가 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시도를 하였다는 점(조진만 2013, 27)에서 의미가 있지만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본 연구는 조직적 측면에서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위한 연구 인력의 안정적 확보 등에 대한 논의와 관련, 독립성과 자율성에는 일정부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당들이 정책연구소를 당해 정당의 내부기구의 하나로 보고 인사를 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 문제는 정당과 정책연구소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는 점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인력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영역에서 연구를 관리하고 통제하기에 충분한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연구소와 정당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는데, 정책연구소의 의견은 국회상임위원회의 수에 맞게 최소 15명 이상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우리나라 정책연구소의 발전모형에 대한 규모를 설정하는데 유익한 기준으로 삼을 만 하다하겠다.

정책연구소의 재원확보와 관련해서는 현재 입법화 과정에 있는 정당보조금의 직접 교부제도가 빨리 채택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연구소의 예산은 많은 편이 아니며 예산이 충분히 있어야 연구와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예산의 확보가 긴급하므로 정치발전기금제도 신설, 후원금(회)제도, 출연금제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 정책연구소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정치발전기금제도는 정치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로써 채택하여 보직 하다. 출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법 운용의 방향만 바꾸면 가능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요구되고, 후원금제도나 출연금제도는 소액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출연 또는 후원금의 상한(예시: 연간 1인당 10만원)을 정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한 독점적 출연 또는 후원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민주적 참여를 보장함과 아울러 재정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정책연구소의 정책연구기능의 강화를 위한 과제와 대안으로는 다음사항을 제시하였다.

우선 질적인 면을 무시하고 능률성 분석 결과 비용 1원으로 얼마의 산출이 있었는지를 단순 비교해보니 민주정책연구원(0.14), 진보정책연구원(0.13), 진보정의연구소(0.11), 여의도연구원(0.01) 순으로 나타나, 앞으로 정책연구소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연간 활동하는데 참고해야 할 것을 나타냈다.

또한, 우리나라 정책연구소는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어느 영역의 사안을 많이 다루었는지를 과제의 요약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진보 영역의 사안을 많이 다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정책연구소의 정책 활동의 다양성 측면에서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연구소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균형적 시각과 연구는 정책 형성과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다른 정당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양성 측면의 접근은 우리나라 정당발전, 정치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요구된다. 아울러 정책연구소가 정치·사회·경제·문화의 각 영역을 형평성 있게 연구·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이 점도 특정 영역의 과제만을 다루지 않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정책연구소도 이러한 점에 공감하고 공동연구와 공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정책연구소의 과제수행 실적에서는 우리나라 정책연구소는 주로 초단기 또는 단기 과제 수행에 치중하고, 중장기적 과제 수행은 빈약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정책연구소의 과제수행의 질적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 또는 선거공학적 과제에 치중하느냐 아니면 입법화가 가능한 사안을 수행했느냐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책연구소는 입법화된 과제의 수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분석결과로 제시하였다. 입법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과제는 대부분 단기과제이고 정보제공 외에 주로 정치공학 또는 선거공학적 검토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정책연구소는 활동방향 설정에 유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렇지만 정책연구소의 의견은 현실적으로 정책연구소가 초단기 또는 단기 과제와 공식선거관련 후보자지도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관하여 적극 나설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해야 할 과제나 임무로 인식하고 있어 언론이나 학자들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정기보고제도, 실적 공개제도, 평가기구 설치방안 등 정책연구소의 결과에 대한 국민통제 방안과 관련하여 이는 자율성과 관련이 깊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기존의 제도를 대폭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현행 공개제도 중에서 정책연구소에서 하는 공개제도를 지금보다는 대폭 강화하여 결과자료를 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채택할 필요성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각 정책연구소들은 나름대

로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고 하고 있었다. 반면에 제3의 평가기구 설치방안에 대하여는 당해 정책연구소의 자율성과 배치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한국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당해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싱크탱크로서의 발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현재의 정책연구소는 한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정당에 있어서 종전의 민주 대 반민주의 개념에서 성장과 분배, 선택적 복지와 일반적 복지 등의 개념으로 정치적 주의·주장 및 경쟁의 함의가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연구소의 싱크탱크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각 정책연구소도 싱크탱크화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연구, 네트워크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정책연구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독일의 정당재단과 같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모든 정책연구소가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와 내용을 객관적 입장에서 전개하도록 선거연수원의 지원 아래 실시하는 방안(강사 출강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동추진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각 정책연구소는 100년 정당을 만들기 위한 정책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정책선도 기능 강화, 국민과의 소통(여의도연구원), 국민의 생각 공유, 실질적 연구, 국민과 국가 우선(민주정책연구원), 당의 이념·가치, 국가비전 대안적 연구, 당원교육, 강력한 대중정당의 토대 마련(진보정책연구원), 정당이 국민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대 시민 교육프로그램 실천, 정책 및 연구 개발 능력 고양(진보정의연구소)'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하는 의견으로 '정책연구소 재정문제 타개를 위한 마스터플랜 제시, 선진 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 개발도상국 정당들과의 교류협력 증진, 시민정치교육 법제화 공동노력(여의도연구원), 선거·인구·사회 통계 개방, 여·야 연구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각종 정책, 법개정 협의시)(민주정책연구원), 연구소의 재정적 독립 지원,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선관위 지원 방안 모색, 연구소간 합동프로그램(외국 연구소 방문 등)의 경우 협찬 추진(진보정책연구원), 정치제도 개선(소선거구제 시정), 국고보조금의 최저배분 등 보장(진보정의연구소)'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3년은 여·야간의 관계가 대치정국이었던 시기로 앞으로는 동반자적 관계를 회복하여 합의의 정치(consensus politics)를 지향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집권당으로서

공직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의 실현에 집중하여야 하며,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의 권력행사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 및 정책 대안의 제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각 정책연구소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정책연구소에 대한 설문조사

(2013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관련)

선거연구원

[조직관련]

1. 학계 등에서 정당과 정책연구소는 서로 독립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 이유 :
 - 반대 이유
2. 연구소장을 국회의원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점 :
 - 단점
 - 단점이 있다면 그 대안은?
3. 연구소의 인력과 정당사무처 인력간의 교차인사(겸직 포함) 발령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공직선거시 연구소의 인력을 정당사무처 또는 선거대책본부 등에 파견 보내는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정책연구소의 박사님들의 전공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① 정치학 ② 법학 ③ 행정학 ④ 정책학
 - ⑤ 사회학 ⑥ 경제학 ⑦ 경영학 ⑧ 사회복지학
 - ⑨ 공학 ⑩ 의학 ⑪ 기타 ()
6. 연구소의 박사급 이상의 전문 인력은 몇 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 정도, 이유는?
7. 연구소의 전문 연구인력(박사학위 소지자) 채용은 어떻게 하나요?
 - 공채 :
 - 추천

[재원확보와 관련]

8. 현재 기준, 귀 연구소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학계 등에서 제안한 다음의 연구소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출연금 제도(민법상 비영리법인에의 출연)
- 1인 기부한도 10만원 제한 후원금(회)제도 :
- 기타 방안

[정책연구소의 기능강화와 관련]

10. 현행의 정책연구소가 정당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의 연구, 개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 정책연구소가 중장기과제에 대하여는 소홀하고 정당의 정치공학 또는 선거공학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는 등 초단기 또는 단기과제에 집중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연구소가 공직선거후보자 또는 정당지지도를 알아보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이유 :
- 반대이유 :

13. 언론 등에서 연구소에서 인건비를 많이 쓴다는 비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 연구소가 연구, 개발한 정책 과제의 결과물을 정부정책 또는 입법정책으로 반영한 실적이 낮다는 비판과 관련하여 반영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5. 연구소의 연구 및 정책개발 활동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국민통제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과제 결과물 공개제도 :
- 정책과제 수행 실명제 :
- 연구소 자체평가 및 이사회 보고제도 :
- 선관위 등에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제도 :

16. 현행 연구소가 종합싱크탱크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MOU 체결 공동연구
- 용역사업 전개
- 객원연구원제도
- 자문위원제도

17. 정책연구소가 하는 교육 중에서 당원과 당원이외의 자에게 하는 교육의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 당원 :
 - 당원이외의 자 :
18. 연구소의 기능 확대와 관련 민주시민교육 기능(당원교육 제외)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 100년 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연구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20. 정책연구소의 발전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에 하고 싶은 의견은?

부록 2

2013년도 정책연구소별 재산 및 수입·지출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총계	여의도 연구원	민주정책 연구원	진보정책 연구원	진보정의 연구소		
재 산	토지	-	-	-	-	-		
	건물	-	-	-	-	-		
	주식또는 유가증권	-	-	-	-	-		
	비품	828	708	76	27	17		
	현금및 예금	2,573	855	1,446	185	87		
	그밖의 재산	3,053	2,659	156	184	54		
	합 계	6,454	4,222	1,678	396	158		
수 입	전년도 이월		1,484	464	721	220	79	
	당비		-	-	-	-	-	
	기탁금(중앙당에 한함)		-	-	-	-	-	
	차입금		-	-	-	-	-	
	기관지발행사업수입		-	-	-	-	-	
	지원금	보조금	상급당부	12,193	6,019	4,741	821	612
			하급당부	-	-	-	-	-
			계	11,372	6,019	4,741	-	612
		보조금 외	상급당부	4,424	4,172	250	-	1
			하급당부	-	-	-	-	-
			계	4,424	4,172	250	-	1
	소 계		16,617	10,192	4,991	821	613	
	그밖의 수입		284	3	40	40	201	
	합 계		18,386	10,659	5,752	1,081	894	

지출	선거비용	선거비용	-	-	-	-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기본비용	인건비	3,164	122	2,687	306	49	
			사무소설치운영비	2,577 (207)	1,492 (207)	769	122	194	
		정치활동비	정책개발비	9,678 (6,640)	8,190 (6,189)	850 (202)	309	329 (249)	
			조직활동비	236	-	-	159	77	
			여성정치발전비	-	-	-	-	-	
			그밖의비용	134	-	-	-	134	
		지원금	보조금	상급당부	7	-	-	-	7
				하급당부	-	-	-	-	-
				계	7	-	-	-	7
			보조금외	상급당부	23	-	-	-	23
				하급당부	-	-	-	-	-
				계	23	-	-	-	23
				합계	15,813	9,804	4,306	896	807
			잔액	2,573	855	1,446	185	87	

※ ()의 금액은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객원연구위원 운영비, 4대 보험료,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각종 제수당 및 후생복리비, 4대 보험료)임.

부록 3

2014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분야	순위	연구소명	분야	순위	연구소명
정치 사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경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교육개발원		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	한국행정연구원		3	국립산림과학원
	4	한국학중앙연구원		4	삼성지구환경연구소
	5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5	국립수산과학원
	6	희망제작소		6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7	동북아역사재단		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8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9	한국법제연구원		9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제 산업	1	한국개발연구원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삼성경제연구원
	13	국가미래연구원		3	한국금융연구원
	14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	서울시 서울연구원		5	산업연구원
	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17	역사문제연구소		7	LG 경제연구원
	1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	한국미래발전연구원		9	자본시장연구원
		한반도선진화재단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1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11	국회 예산정책처
	22	복지국가소사이어티		12	현대경제연구원
	23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13	포스코경영연구소
	24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14	에너지경제연구원
	25	미래전략연구원		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외교 안보	1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 산업	16	국제금융센터
	2	통일연구원		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세종연구소		18	한국경제연구원
	4	한국국방연구원		19	국토연구원
	5	동아시아연구원		20	하나금융경영연구소
	6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1	서울대 경제연구소
	7	아산정책연구원		22	한국산업개발연구원
	8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3	SK경영경제연구소
	9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24	경실연 경제정의연구소
	10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5	보험개발원
	11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6	GS&J 인스티튜트
	12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27	경제개혁연구소
	13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		28	한국기업지배구조원
	14	제주평화연구원		29	IBK경제연구소
	15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여성	1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정책연구원	

※ 출처 : 한국경제매거진 (<http://www.hankyung.com/>)에서 검색하여 편집



참고문헌

- 강원택, 2005, “한국의 이념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제2호(통권7호), 193-217.
- —, 2008. “한국 정당의 당원 연구: 이념적 정체성과 당내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42집 2호, 109-128
- 고 원, 2014. “박근혜 정부 1년, ‘교착적 균형’의 국정운영 : 권위적 리더십과 적대성의 정치동학”, 경제정의실천민주연합, 박근혜정부 1년 평가토론회토론문,
- 국무조정실, 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추진계획』
- 김현태. 2002.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 방안(국회를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48호, 109-126.
- 김형준, 2013,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의 혁신방안에 관한 고찰”, 여의도연구소, 『정당 싱크탱크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자료집. 3-13
- 김형준·김도중. 2011.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 운영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현 대정치 연구』 제4권1호, 5-36.
- 서현진, 2013. “한국 정당연구소의 정치교육기능에 대한 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집제3호, 102-128
- 이내영, 2011.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원인: 국민들의 양극화인가, 정치엘리트들의 양극화인가?”, 『한국정당학회보』 10권 2호, 5-36.
- 임순미, 2011, “무상급식논쟁을 통해본 보수의 담론·진보의 담론(신문 미디어의 프레이밍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제2호, 251-279.
-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조정실, 2014, 『2013년도 국정과제 평가결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3. 정당법 개정의견
- —, 2009. 『정치발전기금 설립(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검토안)
- —, 2010, 『2009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 과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2011, 『2010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 과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2012, 『201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 과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2013, 『201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 과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진만. 2013, “정당 정책연구소 운영 성과 분석 및 선진화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한국정
당학회, 『정책정당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과제』 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2-35.
- 한국선거학회, “2012. 정당의 정책정당화 및 민주적 운영 등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2012년
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한국정당학회. 2012. “제18대 대통령선거 매니페스토 아젠다 개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용
역 보고서』
- 강기정의, 201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1904065)』 국회.
- 황영철외, 2013, 『선거정치교육지원법률안(1905011)』 국회.
- 조선일보, 2014. 2. 24
- 중앙일보, 2012. 4. 18, 2012. 7. 23
- 한국갤럽, 2012, “유권자의 정치적 이념성향과 대선지지후보”, 데일리정치지표 인사이트
NO.3.
- , 2013,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1988-2013”,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98호.
- 한국경제매거진, 2014, 제945호.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
news?popup=0&nid=01&c1=1001&nkey=2014011000945000161
&mode=sub_view](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01&nkey=2014011000945000161&mode=sub_view)
- 한국일보, 2013. 12. 26

[인터넷 검색]

- <http://www.charitynavigator.org/index.cfm?bay=search.summary&orgid=3819>
(헤리티지재단 재정상황) <검색일 2014. 6. 10>
-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Research&category=458458
&document_srl=1135023](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Research&category=458458&document_srl=1135023)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검색일 2014. 6. 10>
- <http://www.makehope.org/category/introduction/yearly/> (희망제작소) <검색일
2014. 6. 10>
- <http://www.ifs.or.kr/design/contents10.asp?code=1014&top=1&left=6> (국가
미래연구원) <검색일 2014. 6. 10>

PART_ II

2013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2013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서

- 제1장 -

여 의 도 연구 원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연간 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기계회관 신관3층			√		

「주」 1. 「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나. 인력

연구원수	직원수	비고
박사급 : 21명	자체고용 : 1명	
석사급 : 23명	외부파견 :	
기 타 : 39명		
합 계 : 83명	합 계 : 1명	

「주」 연구원과 직원 수는 월평균 숫자를 기재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상)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10,192,330,170	2,685,741	464,358,851	10,659,374,762	9,804,087,604	855,287,158	

「주」 정책연구소 회계보고 내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 주요 활동실적

가. 연구·개발실적(88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량	비 고
1.15-3.1	안전행정	선진국 싱크탱크 벤치마킹을 통한 여의도 연구원 혁신방안	자체	44p	
1.15-10.15	안전행정	여의도연구원 혁신관련 법률/당규/정관/내규 개정안	자체	128p	
1.15-10.15	안전행정	당규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자료집	자체	165p	
2.5-3.5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안전행정	2012년 대선 홍보 시스템 평가 및 SNS 활용 방안	자체	14p	
3.14-3.18	외교통일	대북제재 이후 남북관계 진단과 대책	자체	4p	
3.26-4.1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안전행정	모바일 메신저 이용 현황 분석 및 활용 방안	자체	4p	
4.1-4.15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2013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 분석	자체	6p	
4.1-5.1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창조경제의 구현	자체	70p	
4.12-5.27	산업통상자원	공정한 시장경제와 중소기업 육성	외부 공동	32p	
4.20-5.30	안전행정	정부 3.0 : 쟁점과 과제	자체	55p	
4.23-6.7	환경노동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과제	외부 공동	44p	
4.29-5.29	안전행정	정당정책연구소 혁신의 방향성과 쟁점	자체	7p	
4.30-5.30	여성가족	저출산 극복 및 여성경제활동 확대	외부 공동	46p	
5.1-5.15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온라인 뉴스 유통 현황과 발전방향	자체	11p	
5.1-5.16	법제사법	선거구획정위 및 공천제도 개선	자체	3p	정치쇄신평위 참고자료
5.1-5.16	법제사법	원내정당화 관련 검토의견	자체	4p	정치쇄신평위 참고자료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량	비 고
5.1-5.16	안전행정	선거운동기간제도 폐지 관련 검토의견	자체	3p	정치쇄신평위 참고자료
5.1-5.16	안전행정	정치자금법 관련 검토의견	자체	5p	정치쇄신평위 참고자료
5.1-5.16	안전행정	유권자맞춤형 온라인 선거운동	자체	3p	정치쇄신평위 참고자료
5.1-5.16	법제사법	선거제도 개편 관련 검토의견	자체	5p	정치쇄신평위 참고자료
5.1-5.16	교육문화 체육관광	민주시민교육 관련 검토의견	자체	4p	정치쇄신평위 참고자료
5.1-5.16	안전행정	정당연구소 혁신 관련 검토	자체	4p	정치쇄신평위 참고자료
5.2-5.31	보건복지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외부 공동	37p	
5.15-6.5	기획재정 /보건복지	기업의 사회공헌지출의 효율성 강화방안	외부 공동	6p	
5.20-6.7	산업통산자원	원전안전성 제고를 위한 원전 안전점검단 설립방안	자체	4p	
5.26-6.9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변화와 정치 커뮤니케이션	자체	3p	
5.27-7.26	기획재정	중장기 수출보험 일원화계획의 문제점	자체	8p	
6.1-7.2	안전행정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당정책연구소 당헌당규정관 비교	자체	8p	
6.1-7.15	환경노동	통상임금 : 쟁점과 과제	자체	12p	
6.15-7.31	법제사법	검찰개혁과 향후 과제	자체	16p	
6.15-7.31	정보	국가정보원 개혁방안	자체	13p	
6.17-7.15	교육문화 체육관광	재정지원대학 평가지표 개선방안	자체	5p	
6.19-6.28	보건복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연금 방안 검토	외부 공동	15p	
6.25-7.3	외교통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남북관계 개선방향	자체	5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량	비 고
6.26-7.25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 전략	외부 공동	49p	
6.27-7.26	기획재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 추진과정	자체	14p	
6.28-7.12	산업통상자원	전력위기의 원인과 그 대안	자체	7p	
6.28-7.18	산업통상자원	원전비리의 구조적 원인과 그 대응방안	외부 공동	8p	
7.1-7.30	정무/기획재정	글로벌 불안정성 긴급 진단	자체	9p	
7.1-8.26	기획재정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	자체	10p	
7.3-7.17	외교통일	한중정상회담 이후 한중관계, 쟁점과 대책	자체	5p	
7.15-10.22	여성가족/ 환경노동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제고방안	외부 공동	61p	
7.18-8.18	안전행정	정책지식생태계, 싱크 탱크, 그리고 정당 싱크 탱크	자체	10p	기조 발제문
8.1-9.15	국토교통	현안 주택문제와 정책적 대응	자체	8p	
8.10-8.30	국토교통	8.28 주택정책의 보완 가능성 검토	자체	3p	
8.26-9.9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노동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육성방안'에 대한 검토	자체	10p	
8.29-9.10	외교통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평가 및 정책 제언	자체	7p	
8.29-9.13	교육문화체육관 광/안전행정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도입 취지와 실행방식	외부 공동	7p	
9.1-9.30	산업통상자원	TPP와 新통상전략	자체	76p	
9.1-10.31	정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 감독 체계 개 선방안 연구	자체	22p	
9.3-9.15	외교통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우리의 대응	자체	6p	
9.4-9.18	교육문화 체육관광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	자체	6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량	비 고
9.6-9.30	교육문화 체육관광	한국사 교과서 8종 비교	자체	27p	
9.9-9.30	교육문화 체육관광	교학사 역사교과서 '한국사'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검토	자체	22p	
9.9-11.15	교육문화 체육관광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해법	자체	53p	
9.10-9.16	외교통일	금강산관광 재개회담 관련 대책	자체	9p	
9.12-12.20	기획재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보완방안	자체	21p	
9.16-9.27	외교통일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에 대한 우리 법 원 판결	자체	80p	
9.16-12.31	환경노동	숙련인력 양성방안	외부 공동	120p	
9.16-12.31	여성가족/보건복지	저출산 극복방안	외부 공동	130p	
9.26-10.25	보건복지	'기초연금' 관련 쟁점에 대한 대응 설명	자체	9p	
10.1-10.30	정무	저신용 서민금융의 현황과 개선방안	자체	108p	
10.4-10.30	교육문화 체육관광	고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 분석	외부 공동	80p	
10.12-11.12	안전행정/외교통일	브루킹스연구소 출장보고서	자체	19p	
10.15-11.2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국정감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외부 공동	90p	
10.15-12.23	국회운영	리더십과 국정 의 효율적 운영	외부 공동	135p	
10.18-11.2	교육문화 체육관광	전교조 '법의노조' 관련 검토	자체	4p	
10.21- 10.29	외교통일	한러정상회담 관련 현황 및 과제	자체	66p	
10.25-11.15	외교통일 /안전행정	우드로윌슨 센터 출장보고서	자체	15p	
10.25- 12.23	국토교통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수용성 연구 - 충청권을 중심으로 -	외부 공동	71p	
10.25- 12.23	안전행정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	외부 공동	101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량	비 고
10.29-11.14	외교통일	북한 '경제개발구' 계획, 평가 및 대책	자체	6p	
10.30-11.6	외교통일	북·중 접경지역 정책 동향	자체	5p	
10.30-12.31	안전행정	한국 보수이념의 진화와 미래	외부 공동	115p	
11.5-12.26	국토교통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외부 공동	29p	
11.11-12.3	외교통일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반도	자체	16p	
11.15-12.15	정무/산업통상 자원	2014년 경제 전망과 정책 시사점	자체	105p	
11.16-12.16	농림축산식품해 양수산	귀농귀촌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자체	5p	
11.21-12.20	산업통상자원	전력수요 절감방안	외부 공동	7p	
11.23-12.23	법제사법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사법신뢰,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자체	6p	
11.26-12.13	기획재정	협동조합 운영실태와 그 시사점	외부 공동	4p	
11.26-2.6	국토교통	새로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	외부 공동	63p	
12.1-12.31	미래창조과학방 송통신	창조경제 추진 현황과 보완 대책	외부 공동	27p	
12.1-12.31	보건복지	건강보험 부담청구 실태와 방지방안	외부 공동	5p	
13.12.2 -14.5.30	국토교통	지역정책협의회 운영 및 지역발전 정책 개발	외부 공동	미정	계속 사업
12.2-12.18	외교통일	최근 중국정세평가 및 2014년도 전망	자체	44p	
12.3-12.16	외교통일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정세 전망	자체	11p	
12.19-12.31	외교통일	최근 한미관계와 2014년도 미국정세전망	자체	56p	

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88부.

나. 토론회 등 개최(토론회 66회 및 여론조사 131회)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토론회	1.29	여의도연구원	세계의 싱크탱크에게 길을 묻는다	선진국 싱크탱크 벤치마킹을 통한 정당정책연구소 혁신 방안 도출을 위해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심포지엄	2.21	국회의원회관	정당 싱크탱크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당 싱크탱크 선진화를 사회 공론화하고 사회각계 여론 수렴을 위해 심포지엄 개최	
토론회	2.27	여의도연구원	대선 결과의 함의	사회경제적 함의와 시사점 분석	
토론회	3.14	여의도연구원	대북제재와 남북관계	북핵불용과 비핵화 원칙 유지, 독자적 미사일 전력의 조기戰力化 통한 對北 억지력 강화	
토론회	4.11	여의도연구원	창조경제의 구현	창조경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보안 방안을 제시	국정과제 실현방안 간담회
토론회	4.18	여의도연구원	중소기업육성	중소기업육성 국정과제 전문가초청 간담회 개최	국정과제 실현방안 간담회
토론회	4.23	여의도연구원	고용률 70%	고용률 70% 달성 국정과제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국정과제 실현방안 간담회
토론회	4.23	여의도연구원	사이버보안	한국 사이버보안기술 국제수준비교	
토론회	4.24	여의도연구원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방안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국정과제 실현방안 간담회
토론회	4.25	여의도연구원	전문인재양성과 평생학습체제 구축	'전문인재 양성'과 '평생학습체제 구축' 방안 토론회를 위해 관련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국정과제 실현방안 간담회
토론회	4.29	여의도연구원	정부 3.0 : 쟁점과 과제	정부 3.0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보안 방안을 제시	국정과제 실현방안 간담회
토론회	4.29	여의도연구원	북핵문제와 우리의 대책	철저한 대북제재 필요 및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시급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토론회	4.30	여의도연구원	저출산 극복 및 여성경제활동 확대	저출산 극복 및 여성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과제 모색	국정과제 실현방안 간담회
토론회	5.2	여의도연구원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기초수급자에서 탈수급자가 되기 위한 복지체계 구축의 실현방안 모색	국정과제 실현방안 간담회
토론회	5.2	여의도연구원	국정평가 및 정책대안 모색	정책이슈 분석 및 대책 수립	
토론회	5.7	여의도연구원	사회 4대악 척결	'사회4대악 척결' 방안 토론을 위해 관련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국정과제 실현방안 간담회
토론회	5.15	여의도연구원	기업의 사회공헌지출의 효율성 강화방안	기업의 사회공헌과 정부의 복지 지출의 중복 방지	
토론회	6.19	여의도연구원	국민행복연금위의 기초연금 도입방안	기초연금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토론회	6.21	여의도연구원	통상임금 : 쟁점과 과제	통상임금 문제의 해법관련 공감대 모색	
토론회	6.25	여의도연구원	인터넷 독과점 현상 개선	인터넷독과점현상 개선을 위한 실무간담회	
토론회	6.25	여의도연구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대화	한반도를 하나의 시야에 넣고 남북관계 설정을 정무적 관점에서 판단	
토론회	6.28	여의도연구원	원전비리의 구조적 원인과 그 대응방안	원전비리의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	
토론회	7.2	여의도연구원	글로벌 불안정성 긴급 진단	잠재적 국내외 위험요인들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모색	
토론회	7.3	여의도연구원	한중정상회담 이후 한중관계	한중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 양국간 국방분야 협력의 보완 필요	
토론회	7.10	여의도연구원	현장조사 전문가 간담회	지역정책 연구를 위한 현장조사의 기법과 형식	
토론회	7.11	여의도연구원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을 위한 정책간담회	인터넷 독과점 현상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 모색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토론회	8.6	여의도연구원	기초공천	기초공천 폐지 공약 이행 점검	
토론회	8.7	여의도연구원	여론동향과 향후 국정운영 방향	국민의 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	8.23	여의도연구원	전세난	전세난 원인과 대책	
토론회	8.29	여의도연구원	주택문제	현안 주택문제 진단과 정책적 대응 방안 정책간담회	
토론회	8.29	여의도연구원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도입 취지와 실행방식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한국 도입 가능성	
토론회	8.29	여의도연구원	개성공단 실무회담 평가 및 남북관계 전망	남북관계의 정상성 정착 견지에서 일관된 對北 태도 견지	
토론회	9.5	여의도연구원	포털 뉴스의 공정과 상생을 위한 간담회	포털 뉴스 유통 현황 파악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심포지엄	9.9	국회의원회관	정책정당으로 가는 길 : “정당정책연구소에 바란다”	정당 정책연구소 혁신을 위해 여의도 연구원과 민주정책연구소가 사상 최초로 공동 개최	
토론회	9.10	여의도연구원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대책	금강산관광사업에 북한이 남북경제 협력법제를 완전 배제한 데 대한 문제 제기 필요	
토론회	9.12	여의도연구원	빅데이터 시대의 국민 공감 마케팅 방안	미국 오바마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안 모색	
토론회	9.17	여의도연구원	TPP와 新통상전략	TPP 가입시 장단점들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강구	
토론회	9.24	여의도연구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순환보직 제도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관련 전문가 정책세미나 개최	
토론회	9.25	여의도연구원	세종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공무원의 세종시 2단계 이전을 계기로 관련 전문가 초청, 세종시 발전 방안에 관한 정책세미나 개최	
토론회	9.27	여의도연구원	일제강제징용피해자 관련	최근 일제강제징용자 피해보상에 대한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치적 시각과 법적적 시각의 쟁점분석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토론회	10.1	여의도연구원	고교 한국사 교과서 논란 에 대한 검토	8종의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의 실제적 사실을 분석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점 진단과 대책 방안 모색	
토론회	10.29	여의도연구원	한러정상회담관련 현황 및 과제	푸틴대통령의 방한에 따른 한-러 관계의 종합적 검토	
토론회	10.30	여의도연구원	저신용 서민금융의 현황 과 개선방안	양적완화 축소 본격시행 이전에 충격경감 대책 강구	
토론회	11.13	여의도연구원	북한 '경제개발구' 창설계 획의 의의 및 전망	북한의 변화 추동을 위해 북한 스스로 제시한 경제개발구 계획의 활용 필요	
토론회	11.14	여의도연구원	전월세문제	전월세시장 진단 및 정책과제 세미나	
토론회	11.15	여의도연구원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 용 현황 및 과제	활용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책을 강구	
토론회	11.19	여의도연구원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 점검 및 향후 과제	박근혜정부 기간동안 반드시 실현 되어야 할 교육정책과제 모색	
세미나	11.20	동아대학교	대학생 취업 관련 정책 제 안대회	청년 실태 조사 및 정책 니즈 파악	부산/울 산/경남
토론회	11.21	여의도연구원	전력수요 절감방안	전력수요 절감을 통한 전력예비율 제고 방안	
세미나	11.27	충남대학교	대학생 생활 및 여가 관련 정책 제안대회	청년 실태 조사 및 정책 니즈 파악	대전/충청
세미나	11.30	경북대학교	대학생 주거 및 등록금 관련 정책 제안대회	청년 실태 조사 및 정책 니즈 파악	대구/경북
토론회	12.1	여의도연구원	건강보험 부담청구 실태 와 방지방안	부담청구방지 방안에 대한 검토	
세미나	12.2	여의도연구원	대학생 생활, 여가, 주거, 등록금, 취업, 정치 및 통일 의식 관련 정책 제안대회	청년 실태 조사 및 정책 니즈 파악	서울 /경기 /인천 /강원
토론회	12.2	여의도연구원	문화융성과 창조문화 산업	문화 기술과 창조 산업의 융합 방향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세미나	12.7	전남대학교	대학생 정치 및 통일 의식 관련 정책 제안대회	청년 실태 조사 및 정책 니즈 파악	광주/호남
토론회	12.10	여의도연구원	국방태세 점검	북한의 남침전략 분석	
토론회	12.10	여의도연구원	귀농귀촌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 하는데 따른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 전문가 초청, 정책 세미나 개최	
토론회	12.12	여의도연구원	2014년 경제 전망과 정책 시사점	2014년 경제를 전망하고 잠재적 위험 등 대책 수립	
토론회	12.13	여의도연구원	최근 북한정세 평가 및 2014년 북한 전망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북한정세의 격 변을 전망하고, 대책 모색	
토론회	12.16	여의도연구원	창조경제 추진 현황과 보완 대책	창조경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과제 도출	
토론회	12.18	여의도연구원	최근 중국정세 평가 및 2014년도 전망	박근혜정부의 대중정책에 대한 평가 와 2014년도 한중관계 및 중국국내 정치의 전망	
토론회	12.18	여의도연구원	도시재생 - 예술적 조망	예술과 결합한 도시재생사업 방향	
토론회	12.19	여의도연구원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사법신뢰, 어떻게 제고 할 것인가?	시국사건에서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은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청 정책세미나 개최	
토론회	12.20	여의도연구원	청소년 활동의 현황 과 과제	청소년 활동의 현황 점검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12.24	여의도연구원	최근 한미관계와 2014년도 미국 정세전망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용인을 계기로 한미관계의 검토 및 2014년도 한미관계 전망	
토론회	12.27	여의도연구원	선진국의 정치·정당 ·선거	독일 정당의 비전과 정책 연구 및 시사점 분석	
실태조사	10.30 -11.10	전국	2013년 전국 대학생 실태조사	대학생의 생활, 취업, 등록금, 거주, 정치, 통일 분야의 면접조사 실시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여론조사	1월	여의도연구원	ARS 조사	대중교통 법안 등	2회
	2월	여의도연구원	ARS 조사	임시국회 이슈 등	2회
	3월	여의도연구원	ARS 조사	정부조직 법안 등	3회
	4월	여의도연구원	ARS 조사	재보궐선거 관련 이슈 등	35회
	5월	여의도연구원	ARS 조사	국정운영 평가 등	6회
	6월	여의도연구원	ARS 조사	임시국회 이슈 등	8회
	7월	여의도연구원	ARS 조사	국정운영 평가 등	9회
	8월	여의도연구원	ARS 조사	대통령 취임 6개월 평가 등	9회
	9월	여의도연구원	ARS 조사	국정감사 이슈 등	6회
여론조사	10월	여의도연구원	ARS 조사 CATI 조사	재보궐선거 관련 이슈 등	27회
	11월	여의도연구원	ARS 조사 CATI 조사 서면 조사	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 등	12회
	12월	여의도연구원	ARS 조사 CATI 조사	대통령 당선 1주년 평가 등	11회

다. 교육·연수활동(5회)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새누리당 사이버연수원 동영상 강연	4.15	-	'보수정당의 정체성과 보수혁신 방안' 강연	권영진 부원장
아데나워재단 시민교육	4.24	서울	시민교육의 최신 트렌드와 교수법 소개	김원표, 이홍균 연구위원
새누리당 청년정치아카데미 특강	5.15	새누리당 대전시당	'대한민국 정당사 및 보수와 진보의 이해' 강연	권영진 부원장
중앙선관위 주최 정당정책연구소 관계자 워크숍	11.14-11.15	충남 태안	선거 매니페스토 실천방안에 대 한 정당정책 연구소 관계자간 교류	김원표, 도건우 연구위원
여의도연구원 임직원 워크숍	11.15-11.16	충남 태안	여의도연구원 5대 비전 실천방안 논의	

라. 정책홍보(96회)

일 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 요 내 용	비 고
1.23	인터넷	사이트 게재	여의도연구원, 서울-타이페이 국제포럼 대만 대표단 접견	대외홍보
2.15	인터넷	사이트 게재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 연탄 배달 봉사 활동	대외홍보
2.21	인터넷	사이트 게재	심포지엄 '정당 싱크탱크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
2.27	인터넷	e-뉴스레터	정당 싱크탱크 선진화 방안 심포지엄, 연탄배달 봉사활동 외	뉴스레터 제 134호
4.1	인터넷	사이트 게재	'여의도연구원 혁신방안' 발표	대외홍보
4.1	인터넷	사이트 게재	여의도연구원, 퇴임 임직원 5명 감사패 수여	대외홍보
4.17	인터넷	사이트 게재	권영진 부원장, '새누리당 무엇이 달라졌나' 동영상 강연	교육/연수
4.23	인터넷	사이트 게재	한국의 사이버보안 기술 수준 진단 토론회	토론회
4.26	인터넷	e-뉴스레터	권영진 부원장 새누리당 사이버연구원 초청 강연, 한국의 사이버보안기술 토론회 외	뉴스레터 제 135호
5.15	인터넷	사이트 게재	권영진 부원장, 대전 새누리 청년정치 아카데미 특강	교육/연수
5.21	인터넷	사이트 게재	이병기 여의도연구원 고문, 주일대사 임명	대외홍보
5.22	인터넷	사이트 게재	이주영 의원,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임명	대외홍보
5.23	인터넷	사이트 게재	이주영 여의도연구원장 임명장 수여식 및 임직원 상견례	대외홍보
5.29	인터넷	사이트 게재	여의도연구원 김원표 연구위원, '정책정당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로 참여	토론회
5.30	인터넷	e-뉴스레터	정책정당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권영진 부원장 대전 청년 정치아카데미 특강 외	뉴스레터 제 136호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 요 내 용	비 고
6.10	인터넷	사이트 게재	심윤조 부원장, 통일한국의 자산, 탈북 청소년 학력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토론회
6.14	인터넷	사이트 게재	여의도연구원 이종인 연구위원, '소비자권익보호기금 설치 토론회' 토론자로 참여	토론회
6.19	인터넷	사이트 게재	정책토론회 '기초연금 도입안과 최근 논의동향'	토론회
6.21	인터넷	사이트 게재	민관 협업을 통한 복지지원 조달 방안 토론회	토론회
6.21	인터넷	사이트 게재	'통상임금 : 쟁점과 과제' 토론회	토론회
6.25	인터넷	사이트 게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대화' 토론회	토론회
6.26	인터넷	사이트 게재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 여의도연구원 방문	대외홍보
6.28	인터넷	e-뉴스레터	원전비리와 전력위기 대응방안 토론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대화 토론회 외	뉴스레터 제 137호
7.2	인터넷	사이트 게재	글로벌 불안정성 긴급 진단 토론회	토론회
7.3	인터넷	사이트 게재	한·중정상회담 이후 한·중관계 토론회	토론회
7.11	인터넷	사이트 게재	'인터넷산업 : 공정과 상생' 정책토론회	토론회
7.15	인쇄물	우편 발송 등	저출산 극복 및 여성경제활동 확대	국정과제 실현방안
7.15	인쇄물	우편 발송 등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국정과제 실현방안
7.30	인터넷	e-뉴스레터	정책토론회 '인터넷산업 : 공정과 상생', 글로벌 불안정성 긴급 진단 토론회	뉴스레터 제 138호
8.6	인터넷	사이트 게재	지방선거 대책 전문가 토론회	토론회
8.7	인터넷	사이트 게재	지방선거 대책 2차 토론회	토론회
8.19	인터넷	사이트 게재	[칼럼] '금융소비자보호원' 출발부터 예산 독립해야	언론 기고
8.23	인터넷	사이트 게재	토론회 '전세난!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일 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 요 내 용	비 고
8.29	인터넷	사이트 게재	개성공단 실무회담 평가 및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	토론회
8.29	인터넷	사이트 게재	토론회 '최근 주택시장과 전세문제'	토론회
8.29	인터넷	사이트 게재	토론회 '독일 시민정치교육의 취지와 성과'	토론회
8.30	인터넷	e-뉴스레터	최근 주택시장과 전세문제 관련 토론회, 개성공단 실무회담 평가 및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	뉴스레터 제 139호
9.2	인터넷	사이트 게재	[보고서] 통상임금 : 쟁점과 과제	보고서 발간
9.5	인터넷	사이트 게재	포털 뉴스의 공정과 상생을 위한 토론회	토론회
9.5	인터넷	사이트 게재	[이슈브리프] 현안 주택문제 진단과 정책 과제	보고서 발간
9.6	인터넷	사이트 게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보완방안 토론회	토론회
9.9	인터넷	사이트 게재	여의도연구원 · 민주정책연구원 공동세미나 "정책정당연구소에 바란다"	세미나
9.11	인터넷	사이트 게재	[칼럼] 8·28 전월세 대책	언론 기고
9.11	인터넷	사이트 게재	[보고서] 글로벌 불안정성 긴급 진단 : 잠재적 위험의 사전적 관리	보고서 발간
9.25	인터넷	사이트 게재	토론회 '세종특별자치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토론회
9.27	인터넷	사이트 게재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결: 쟁점과 대책' 토론회	토론회
9.27	인터넷	사이트 게재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토론회	토론회
10.2	인터넷	사이트 게재	여의도연구원,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 상임전국위 통해 만장일치로 의결	대외홍보
10.7	인터넷	사이트 게재	청년정책연구센터 1기 대학생 인턴연구원 워크숍	교육/연수
10.10	인터넷	사이트 게재	여의도연구원 개원식	대외홍보
10.22	인쇄물	우편발송 등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제고방안	
10.25	인터넷	사이트 게재	[보고서] 기초연금 도입방안	보고서 발간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 요 내 용	비 고
10.25	인터넷	사이트 게재	2013년 여의도연구원 정책 고문·자문위원 위촉식	정책교류
10.25	인터넷	사이트 게재	[보고서] TPP와 新통상전략	보고서 발간
10.25	인터넷	사이트 게재	[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보고서 발간
10.25	인터넷	사이트 게재	[보고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보고서 발간
10.25	인터넷	사이트 게재	[보고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보고서 발간
10.29	인터넷	사이트 게재	'한-러 정상회담관련 현황 및 과제' 토론회	토론회
10.30	인터넷	사이트 게재	저신용 서민금융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토론회
10.30	인터넷	e-뉴스레터	여의도연구원 개원식, 정책 고문, 자문위원회 위촉식 외	웹진 창간호
11.4	인터넷	사이트 게재	[이슈브리프] 금융감독 체계를 둘러싼 주요 논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 발간
11.5	인터넷	사이트 게재	토론회 '정부·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 현황과 전망'	토론회
11.11	인터넷	사이트 게재	청년정책연구센터 개소식	대외홍보
11.12	인터넷	사이트 게재	여의도연구원, 이사회 열고 이사 6인과 상임고문 1명 임명	대외홍보
11.12	인터넷	사이트 게재	[보고서] 정부·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간
11.13	인터넷	사이트 게재	토론회 '북한의 경제개발구 창설계획의 의미와 전망'	토론회
11.14	인터넷	사이트 게재	토론회 '전·월세 시장진단 및 정책적과제'	토론회
11.18	인터넷	사이트 게재	토론회 '문화융성과 창조문화산업 : 성장과 방향'	토론회
11.19	인터넷	사이트 게재	토론회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 점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일 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 요 내 용	비 고
11.21	인터넷	사이트 게재	전력수요 절감방안 토론회	토론회
11.25	인터넷	사이트 게재	[정책리포트]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의문과 설명	보고서 발간
11.25	인터넷	사이트 게재	[보고서] 북한 경제개발구 창설계획의 의미 및 전망	보고서 발간
11.26	인터넷	사이트 게재	토론회 '협동조합 운영실태와 시사점'	토론회
11.26	인터넷	사이트 게재	토론회 '귀농귀촌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토론회
11.27	인터넷	사이트 게재	[보고서] 저신용 서민금융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11.27	인터넷	사이트 게재	청년정책연구센터 타운미팅-충청 지역	교육/연수
11.29	인터넷	e-뉴스레터	청년정책연구센터 개소식, 제 65차 이사회 개최 외	웹진 11월호
12.2	인터넷	사이트 게재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회 정치 분과 간담회	정책교류
12.3	인터넷	사이트 게재	청년정책연구센터 타운미팅 - 경북·경남 지역	교육/연수
12.3	인터넷	사이트 게재	여의도연구원, 중국 싱크탱크와의 교류협력 위해 중국 방문	정책교류
12.3	인터넷	사이트 게재	[정책리포트]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해법	보고서 발간
12.3	인터넷	사이트 게재	[보고서] 전·월세 시장진단 및 정책적 과제	보고서 발간
12.3	인터넷	사이트 게재	[보고서] 문화융성과 창조문화산업	보고서 발간
12.3	인터넷	사이트 게재	[보고서]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 점검 및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
12.12	인터넷	사이트 게재	토론회 '2014년 경제 전망과 대책'	토론회
12.12	인터넷	사이트 게재	건강보험 재정누수 실태와 방지방안 토론회	토론회
12.13	인터넷	사이트 게재	토론회 '최근 북한정세 평가 및 2014년 북한 전망'	토론회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 요 내 용	비 고
12.13	인터넷	사이트 게재	[보고서] 귀농귀촌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보고서 발간
12.18	인터넷	사이트 게재	토론회 '도시재생과 문화예술'	토론회
12.20	인터넷	사이트 게재	토론회 '청소년 활동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12.24	인터넷	사이트 게재	토론회 '최근 한미관계와 2014년도 미국 정세전망'	토론회
12.24	인터넷	사이트 게재	여의도연구원 정책고문단 간담회	정책교류
12.25	인터넷	사이트 게재	[연구백서] 2013년 전국대학생 실태백서	보고서 발간
12.27	인터넷	사이트 게재	독일의 정치, 정당, 선거	토론회
12.30	인터넷	e-뉴스레터	여의도연구원 중국 싱크 탱크와의 교류협력 위해 중국 방문, 청년정책연구센터 타운 미팅 외	웹진 12월호
12.3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보고서] 2014년 경제 전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 발간
12.3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보고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사법신뢰,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보고서 발간
12.31	인터넷	사이트 게재	[이슈브리프] 재정준칙,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보고서 발간
1월~ 12월	인터넷	블로그/트위 터/페이스북	여의도연구원 활동 소식 홍보 (세미나 개최, 보고서 발간, 정책교류, 청년교육 등)	-
1월~ 12월	인터넷	사이트 게재	여연정책소통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질의응답 코너) - 중소기업 복지시설, 시골의료 현실 개선, 결혼 비용 문제 등	5건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45건)

발간 일자	종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고
2.27	토론회 자료집	빅데이터 시대의 정치와 선거	자체발간	2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5.2	토론회 자료집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과제	자체발간	2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5.27	토론회 자료집	창조경제의 구현	자체발간	3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국정과제 실현방안 간담회
5.27	토론회 자료집	공정한 시장경제와 중소기업 육성	자체발간	3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국정과제 실현방안 간담회
5.27	토론회 자료집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과제	자체발간	3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국정과제 실현방안 간담회
5.27	토론회 자료집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자체발간	3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국정과제 실현방안 간담회
5.27	토론회 자료집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자체발간	3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국정과제 실현방안 간담회
5.27	토론회 자료집	정부 3.0 : 쟁점과 과제	자체발간	3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국정과제 실현방안 간담회
5.27	토론회 자료집	저출산 극복 및 여성경제활동 확대	자체발간	3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국정과제 실현방안 간담회
5.27	토론회 자료집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자체발간	3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국정과제 실현방안 간담회

발간 일자	종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고
5.27	토론회 자료집	사회 4대악 척결	자체발간	3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국정과제 실현방안 간담회
6.25	토론회 자료집	통상임금 : 쟁점과 과제	자체발간	15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8.29	토론회 자료집	개성공단 실무회담 평가 및 남북관계 전망	자체발간	5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해당 상임위) 배포	
9.2	정책리포트	통상임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자체발간	15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9.9	이슈브리프	현안주택문제 진단과 정책과제	자체발간	600부, 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9.10	토론회 자료집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대책	자체발간	5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해당 상임위) 배포	
9.11	토론회 자료집	글로벌 불안정성 긴급 진단	자체발간	15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9.12	토론회 자료집	선진국의 정치·정당·선거	자체발간	2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10.7	브로슈어	국민행복을 디자인합니다. 혁신하는 여의도연구원	자체발간	1000부(12p, B5), 연구원 개원식 배포	국문
10.7	브로슈어	The Innovating Youido Institute: We design people's happiness	자체발간	500부(12p, B5), 해외 싱크탱크 방문 배포	영문
11.4	이슈브리프	금융감독체계를 둘러싼 주요 논점과 개선방향	자체발간	6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발간 일자	종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고
11.2	정책리포트	기초연금관련 쟁점에 대한 대응 설명	자체발간	23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11.15	정책리포트	한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해법	자체발간	285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10.25	토론회 자료집	TPP와 신통상 전략	자체발간	2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10.25	토론회 자료집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자체발간	2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10.25	토론회 자료집	세종특별자치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자체발간	2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10.29	토론회 자료집	북한 '경제개발구' 창설 계획의 의의 및 전망	자체발간	3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10.31	토론회 자료집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방안	자체발간	2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11.8	토론회 자료집	정부-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자체발간	225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11.14	토론회 자료집	한러 정상회담관련 현황과 과제	자체발간	2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11.21	정책리포트	전력수요 절감방안	자체발간	15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해당 상임위) 배포	
11.22	정책리포트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 제고 방안	자체발간	3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발간 일자	종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고
11.22	토론회 자료집	북한의 경제개발구 창설계획의 의미 및 전망	자체발간	2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11.22	토론회 자료집	저신용 서민금융의 현황과 개선방안	자체발간	2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11.29	토론회 자료집	전월세 시장진단 및 정책적 과제	자체발간	2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11.29	토론회 자료집	문화융성과 창조문화산업	자체발간	2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11.29	토론회 자료집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 진단 및 향후과제	자체발간	2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12.13	토론회 자료집	귀농귀촌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자체발간	2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12.13	토론회 자료집	최근 북한정세 평가 및 2014년 북한 전망	자체발간	5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해당 상임위) 배포	
12.13	토론회 자료집	최근 북한정세 평가 및 2014년 북한 전망	자체발간	2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12.16	백서	2013년 전국대학생 실태 백서	자체발간	1,500부, 온·오프라인 배포	
12.20	토론회 자료집	청소년 활동의 현황과 과제	자체발간	2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12.27	이슈브리프	재정준칙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자체발간	5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발간 일자	종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12.27	토론회 자료집	2014년 경제 전망과 정책 시사점	자체발간	2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12.27	토론회 자료집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사법 신뢰, 어떻게 재고할 것인가	자체발간	200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정부 부처, 관련 연구기관 배포	

바. 그 밖의 주요활동(16건)

일 자 (기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1.4-2.23	금융 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경제1/교육/고용복지분과 전문위원 파견	
3.26	한반도 선진화재단	'통일의 길, 북한의 정상국가화' 공동세미나	지정토론자로 참여	정낙근 선임연구위원
3.27	여의도 연구원	여연-대만 싱크탱크 상호교류	대만 (재)국가정책연구기금회(NPF) 여연 방문·간담회	
5.29	국회 도서관	'정책정당 실현을 위한 정책 연구소의 역할과 과제' 공동 세미나	지정토론자로 참여	김원표 연구위원
6.14	국회 도서관	'소비자권익기금 설치' 국회 토론회	지정토론자로 참여	이종인 연구위원
8.18	고양 일산	제2회 대한민국 정책컨벤션 & 페스티벌, 싱크탱크세션, 정책지식생태계 라운드 토론회	기조발제자로 참여	김원표 연구위원
9.9	국회 의원회관	정책정당으로 가는길 '정당정책연구소에 바란다' 공동세미나	지정토론자로 참여	권영진 부원장

일 자 (기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10.1-12.10	여의도 연구원	정책네트워크	통일·외교 분야 정책연구기관(장) 정책네트워크 회의	
10.1-12.27	여의도 연구원	정책네트워크	경제·사회 분야 정책연구기관(장) 정책네트워크 회의	
10.10	여의도 연구원	여의도연구원 개원식	개원행사 준비 및 진행	
10.25	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자문위원 위촉식	2013년도 여의도연구원 정책고문 /자문위원 위촉	
11.4-11.8	미국 워싱턴	미국 싱크탱크 방문 및 세미나	헤리티지재단, 브루킹스연구소 등을 방문하고, 인적 교류와 자료 교환에 합의	
11.11	여의도 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 개소식	개소행사 준비 및 진행	
11.14-11.15	충남 태안	정당정책연구소 관계자 워크숍 (주최: 중앙선관위)	연구원 대표로 참석	김원표, 도건우 연구위원
12.3-12.5	중국 북경	중국 싱크탱크 방문 및 세미나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산하 당대세계연구중심 등 4개 싱크탱크를 방문하고, 인적 교류와 자료 교환에 합의	
12.27	여의도 연구원	통일연구센터 개소식	개소행사 준비 및 진행	

주제_ 선진국 싱크탱크 벤치마킹을 통한 여의도연구원 혁신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1월 15일 ~ 3월 1일(2개월 15일)
-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선진국 주요 싱크탱크 벤치마킹을 통한 여의도연구원 혁신방안 도출

▶ 연구내용

- 여의도연구원 현황 진단
- 선진국의 정당친화적 연구소(독일 정당재단과 미국이 정책연구소 등) 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포인트 도출
- 여의도연구원 혁신 방향 정립 및 실천계획 수립
-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혁신을 위한 역할분담 계획 수립

▶ 연구성과

- 여의도연구원 혁신을 위한 방향 정립 및 로드맵 역할

주제_ 여의도연구원 혁신 관련 법률·당규·정관·내규 개정안

- ▣ 연구기간 : 2013년 1월 15일 ~ 10월 15일(9개월)
-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여의도연구원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관련 법률, 새누리당 당규, 여의도연구원 정관 및 내규를 총망라하여 검토하고 개정안 마련

▶ 연구내용

- 법률: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 당규: '정책연구소설립및운영에관한규정' 개정안
- 정관: 여의도연구원 정관 개정안
- 내규: 여의도연구원 인사규정, 인사위원회 규칙, 직제규정 개정안

▶ 연구성과

-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국회에서 김광림의원 등 15명 개정안 발의
- 당규: 새누리당 제1차 상임전국위(2013. 10. 2.)에서 개정 완료
- 정관: 여의도연구원 제64차 이사회(2013. 10. 8)에서 개정 완료
- 내규: 여의도연구원 제64차 이사회(2013. 10. 8)에서 개정 완료

주제_ 당규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자료집

- ▣ 연구기간 : 2013년 1월 15일 ~ 10월 15일(9개월)
-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여의도연구원 혁신 방안” 채택 및 당규 ‘정책연구소설립및운영에관한 규정’ 개정 경과를 새누리당 최고위 및 상임전국위 논의 및 의결과정을 중심으로 종합 정리한 기록물

▶ 연구내용

- 여의도연구원 혁신방안: 새누리당 제73차, 제76차 최고위원회의
- 당규 개정: 새누리당 제119차, 제122차, 제123차, 제124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차 상임전국위원회의

▶ 연구성과

- 여의도연구원 혁신과정을 자료화하여 역사적 기록으로 보존

주제_ 2012년 대선 홍보 시스템 평가 및 SNS 활용 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2월 5일 ~ 3월 5일(1개월)
-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안전행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2년 대선에서 대국민 홍보 시스템을 평가를 통해 변화하는 뉴미디어에 따른 SNS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 연구내용

-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되는 페이스북, 정보 확산에 활용되는 트위터 등 SNS 활용이 높아지고 있음
- 각 매체별 맞춤형 홍보 전략 수립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강화 방안 마련

▶ 연구성과

- 당 홍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됨

주제_ 대북제재 이후 남북관계 진단과 대책

- ▣ 연구기간 : 2013년 3월 14일 ~ 3월 18일(5일)
-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북제재 결의 2094호 이후 가능한 북한의 도발유형을 전망하면서 대북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한 대책 및 당의 역할에 대한 연구

▶ 연구내용

- 원전, 국가주요시설, 요인 테러 등 도발 책임 규명이 어려운 후방테러의 가능성이 높으며, 군사적 제재가 어려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추가 핵실험 가능성
- 현 수준의 안보리 대북제재로는 효과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재수준의 대폭 강화가 필요하며, 유엔체제 밖의 독자적인 제재요소의 반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북핵 불용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독자적 미사일 전력의 조기 戰力化를 통한 對北 억지력 강화 및 KOR-US NPR(핵대비태세보고서)의 공동 작성이 필요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모바일 메신저 이용 현황 분석 및 활용 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3월 26일 ~ 4월 1일(7일)
-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안전행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최근 급격하게 사용량이 늘어난 모바일 메신저 이용 현황을 분석을 통해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 연구내용

- 모바일 메신저 중 카카오톡은 국내외 가입자 8천명, 일일 메시지 이용건수 최대 48억건에 이르는 등 이용 현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방안 마련

▶ 연구성과

- 당 홍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됨

주제_ 2013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 분석

- ▣ 연구기간 : 2013년 4월 1일 ~ 4월15(15일)
-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변화하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 변화에 따른 SNS 홍보 시스템 구축

▶ 연구내용

- 4.24 재보선에서 도입된 '통합선거인명부'로 인해 부재자 신고 없이 전국투표소에서 19~20일 오전 6시~오후 4시까지(총 20시간) 투표 가능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서의 홍보 시스템이 필요함
- 모바일 홈페이지, SNS 어플리케이션 활용 등을 통해 정보 제공 및 홍보 방안을 연구를 통해 대국민 홍보 강화방안 마련

▶ 연구성과

- 당의 SNS 홍보 시스템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됨

주제_ 창조경제의 구현

- ▣ 연구기간 : 2013년 4월 1일 ~ 5월 1일(1개월)
-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주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보완 방안을 강구

▶ 연구내용 (보완 방안 제시)

- 거버넌스 : 기재부 (거시 부문), 미래부 (미시 부문), 국조실 (조정)
- 플랫폼 (시스템 범용) 기술 개발에 주력
-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과 지원 대폭 강화
- 국가 R&D 사업 : 선택과 집중, 상호 연계 강화
- 과학기술 출연 : 목표중심 집단연구 체제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공정한 시장경제와 중소기업 육성

- ▣ 연구기간 : 2013년 4월 12일 ~ 5월 27일(1개월 15일)
- ▣ 연구분야 : 산업통상자원
- ▣ 연구방법 : 외부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새정부의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공정한 시장경제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및 정책방안 도출

▶ 연구내용

- 중소기업정책은 새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요소
- 한국경제의 현실 진단 및 예상
- 향후 10년 중소기업의 비전: 창조경제의 중심은 사람, 중소기업, 글로벌화
- 현행 ‘고용유지’ 조건을 ‘고용창출’로 개정하고, 한도공제(300억)를 상향조정하거나 전액 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국정과제 실현방안” 제하의 통합보고서에 포함하여 제공

주제_ 정부 3.0 쟁점과 과제

- ▣ 연구기간 : 2013년 4월 20일 ~ 5월 30일(1개월 10일)
-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 3.0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보완 방안을 강구

▶ 연구내용

- 정보화 예산을 증액, 스마트 공공서비스를 선도과제로 추진
- 정부 3.0 관련 정확한 실태파악 및 사업의 정교화 선결과제
- 시급성, 국민생활 편의를 기준으로 정부 3.0 우선순위 설정
- 부처 간 협업 및 정보공유 활성화 수단으로 기존모델 활용
- 정보공개 및 공유와 개인정보보호 간 상충, 조화롭게 해결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과제

- ▣ 연구기간 : 2013년 4월 23일 ~ 6월 7일(1개월 15일)
-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 연구방법 : 외부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정부의 국정 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방안 및 구체적 아이디어 제시

▶ 연구내용

- 우리나라 고용의 특성 및 고용여건 종합
- 고용률70% 달성을 위한 과제를 노동의 수요와 공급 및 노동시장 측면에서 각각 제시
- 수요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전통 서비스업 외에도 교육, 의료, 법률 분야에서도 조금 더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만들어가야 함. 더불어 중소기업의 생산성도 높여야 함.
- 공급 측면에서는 청년취업, 여성취업도 문제이지만, 고령층 취업 촉진 방안이 급선무임. 정년연장은 바람직하지만 임금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함. 청년취업을 위해서는 산업수요 중심의 교육체계로 전환되어야 함.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국정과제 실현방안” 제하의 통합보고서에 포함하여 제공

주제_ 정당정책연구소 혁신의 방향성과 쟁점

- ▣ 연구기간 : 2013년 4월 29일 ~ 5월 29일(1개월)
-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여의도연구원 사례를 중심으로 정당정책연구소 혁신의 방향성과 과제 연구

▶ 연구내용

- 여의도연구원 혁신 사례 분석
- 선진국 싱크탱크와 우리나라 정당정책연구소 비교 분석
- 정당정책연구소 혁신 과제 분석

▶ 연구성과

- “정당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과제”(중앙선관위, 5. 29) 발표 자료

주제_ 저출산 극복 및 여성경제활동 확대

- ▣ 연구기간 : 2013년 4월 30일 ~ 5월 30일(1개월)
- ▣ 연구분야 : 여성가족
- ▣ 연구방법 : 외부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2년 1.3으로 다소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저출산을 극복을 위한 실현과제 제시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은 지난 10여년 이상 47~48%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

▶ 연구내용

-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틈새 보육의 내실화, 일·가정 양립의 가능화, 근로시간 저축제 확산, 유연근무제 정착,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등 다양한 정책이 동시에 실현되어야 할 것
-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은 청년, 고령자 등과 같은 동일집단이 아니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여성내부의 인적자본, 정책욕구, 장애요인, 생애주기 등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취업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온라인 뉴스 유통 현황과 발전 방향

- ▣ 연구기간 : 2013년 5월 1일 ~ 5월 15일(15일)
-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온라인 뉴스 유통 현황 분석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발전 방향 모색
- ▶ 연구내용
 - 현재 온라인 뉴스가 유통되는 과정 등 상세한 현황 분석 및 신문법 내 뉴스 서비스에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 사항 분석
 - 관련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법제도적 발전 방향 모색
-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 수립 참고 자료로 활용 됨

주제_ 선거구획정위 및 공천제도 개선

- ▣ 연구기간 : 2013년 5월 1일 ~ 5월 15일(15일)
- ▣ 연구분야 : 법제사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그 동안 꾸준한 논의가 있었던 선거구획정위 문제와 공천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검토
- ▶ 연구 내용
 - 선거구획정위 상설화 추진 검토
 -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문제에 대한 검토
- ▶ 연구성과
 - 새누리당 정치쇄신평위(위원장 박재창) 참고자료로 제공

주제_ 원내정당화 관련 검토의견

- ▣ 연구기간 : 2013년 5월 1일 ~ 5월 15일(15일)
- ▣ 연구분야 : 법제사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정치개혁의 과제로 논의되어 온 원내정당화 문제에 대한 실현방안을 검토
- ▶ 연구 내용
 - 원내 정당화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검토
 - 원내 정당화 실현을 위해 해야 할 과제 제시
- ▶ 연구성과
 - 새누리당 정치쇄신평위(위원장 박재창) 참고자료로 제공

주제_ 선거운동기간 폐지 관련 검토의견

- ▣ 연구기간 : 2013년 5월 1일 ~ 5월 15일(15일)
-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온라인 선거운동 활성화에 따른 선거운동기간 폐지에 대해 검토
- ▶ 연구 내용
 - 선거운동 기간 폐지의 장단점 분석
 - 상시선거운동을 위해서는 공천과 선거 방법의 변화는 물론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 등 필요한 고제 제시
- ▶ 연구성과
 - 새누리당 정치쇄신평위(위원장 박재창) 참고자료로 제공

주제_ 정치자금법 관련 검토의견

- ▣ 연구기간 : 2013년 5월 1일 ~ 5월 15일(15일)
-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방안 검토

▶ 연구 내용

- 소액다수 후원금 제도 활성화,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중앙당·시도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 허용 등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한 검토

▶ 연구성과

-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 박재창) 참고자료로 제공

주제_ 유권자맞춤형 온라인 선거운동

- ▣ 연구기간 : 2013년 5월 1일 ~ 5월 15일(15일)
-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시대 변화에 부응한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 검토
- ▶ 연구 내용
 - SNS, 빅데이터 등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의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
 - 정치적,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논의
- ▶ 연구성과
 - 새누리당 정치쇄신평위(위원장 박재창) 참고자료로 제공

주제_ 선거제도 개편 관련 검토의견

- ▣ 연구기간 : 2013년 5월 1일 ~ 5월 16일(16일)
- ▣ 연구분야 : 법제사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방향 정립 및 개편대안 도출
- ▶ 연구내용
 - 선거제도 개편 논의 경과 분석
 - 선거제도 개편 관련 주요 정파의 입장 분석
 -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주요 검토대안
- ▶ 연구성과
 - 새누리당 정치쇄신타워(위원장 박재창) 참고자료로 제공

주제_ 민주시민교육 관련 검토의견

- ▣ 연구기간 : 2013년 5월 1일 ~ 5월 16일(16일)
- ▣ 연구분야 : 교육문화체육관광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민주시민교육 실시방안 연구
- ▶ 연구내용
 - 민주시민교육 관련 논의 현황 분석
 - 독일 민주시민교육 사례 분석
 - 민주시민교육 관련 제정파의 입장 분석
 - 향후 민주시민교육 실시 방안
- ▶ 연구성과
 - 새누리당 정치쇄신평위(위원장 박재창) 참고자료로 제공

주제_ 정당연구소 혁신 관련 검토의견

- ▣ 연구기간 : 2013년 5월 1일 ~ 5월 16일(16일)
-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바람직한 정당연구소 혁신 방향 및 방안 도출
- ▶ 연구내용
 - 정당연구소 혁신 관련 논의 현황 분석
 - 선진국의 정당친화적 싱크탱크 분석
 - 정당연구소 혁신 방안
- ▶ 연구성과
 -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 박재창) 참고자료로 제공

주제_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 ▣ 연구기간 : 2013년 5월 2일 ~ 5월 31일(1개월)
-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 연구방법 : 외부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의 국정과제 실현방안 전문가 토론회
-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수급을 위한 지원방식 전환의 의미와 그 실현방안 제시

▶ 연구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급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유리하게 설계
-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가 탈수급 곧 자립을 촉진하는 급여체계가 아니라는 것, 탈수급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와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연계 부족 등
-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의 탈수급 의지·자활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를 현재 수급자 기준에 포함되면, 일괄적인 통합급여를 제공하던 것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기업의 사회공헌지출의 효율성 강화 방안

▣ 연구기간 : 2013년 5월 15일 ~ 6월 5일(21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 환경노동,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기업의 사회공헌규모는 점점 증가, 그러나 정부의 지원과 중복지원 되는 부분이 발견됨
- 복지 효율성을 위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사회공헌지출을 재조정하여야 함.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

▶ 연구내용

- 기업은 소득의 10%까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 허용 등 기업의 사회공헌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규모 점차 증가
- 그러나 기업의 복지지원은 정부의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시정하여, 복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수혜자의 복지 체감도 제고 등 복지 공정성에 도달하여야 할 필요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원전안전성 제고를 위한 원전 안전점검단 설립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5월 20일 ~ 6월 7일(19일)
- ▣ 연구분야 : 산업통산자원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아주 작은 실수로도 매우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전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제어 케이블 사태에서 재확인되고 있는 것과 같이, 현재 국내 원전의 안전성은 매우 미흡한 상태.

▶ 연구내용

-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 증폭하고 있음. 이는 원전의 국내 추가 건설 및 원전 추가 수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
- 원전 안전점검단을 신설, 점검단에 원전 안전성과 연관된 모든 것에 대한 수사·불시 점검 권한을 부여. 원전 비리를 차단함으로써 원전 안전성 제고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미디어 환경 변화와 정치 커뮤니케이션

- ▣ 연구기간 : 2013년 5월 26일 ~ 6월 9일(15일)
-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뉴미디어 시스템을 통해 과거 미디어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

▶ 연구내용

- 모바일 중심의 실시간, 양방향 소통의 용이성, 뉴미디어를 통한 국민 참여 기능 확대 등 뉴미디어의 변화는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음
- 그러나 정치 커뮤니케이션은 전화, 홈페이지 글 게재 등 기본 소통 방식을 고수하고 단방향 메시지 전달에 그치고 있음
-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연구성과

- 홍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됨

주제_ 중장기 수출보험 일원화 계획의 문제점

- ▣ 연구기간 : 2013년 5월 27일 ~ 7월 26일(2개월)
-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중장기 수출보험 일원화 계획이 진행 중, 이 경우 중소기업 수출지원 금융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에 대한 검토
-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 수출금융을 담당해왔고, 두 기관이 일원화 계획에서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되는지 사전에 검토

▶ 연구내용

- 일원화 계획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가 맡아왔던 13조원(13년 계획)의 중소기업 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여지
- 또한 이 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장기 수출금융지원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여지
- BIS 비율 8%를 유지하여야 하는 직접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과 BIS비율과 무관한 간접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의 레버리지 효과의 차이에 대한 분석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당정책연구소 관련 당헌.당규.정관 비교

- ▣ 연구기간 : 2013년 6월 1일 ~ 7월 2일(1개월)
-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당정책연구소 관련 제도 비교를 통해 여의도연구원 혁신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연구내용

- 정당정책연구소 관련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당헌 및 당규 비교
- 여의도연구원과 민주당정책연구소의 정관 비교

▶ 연구성과

-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보고 자료
- 여의도연구원 혁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통상임금 쟁점과 과제

- ▣ 연구기간 : 2013년 6월 1일 ~ 7월 15일(1개월 15일)
-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전문가들의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모색
- ▶ 연구내용
 - 통상임금의 개념 추상적이고 복잡해서 구체적 현장 적용 난이
 - 각종 급여산출 기준으로 명확성·안정성·예측가측성 미흡
 - 강행규정 위반 판결時 소급 적용으로 분열과 갈등 심화
 -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양극화 심화, 고용 불안정성 증대
 - 법리를 변경·확대하면 파급효과 막대하지만, 소정절차 미흡
 - 통상임금의 근본적인 문제는 장기간 왜곡되어 온 임금체계
 - 소송보다 협의를 통해서 임금구조를 조정할 필요성에 공감
-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검찰개혁과 향후 과제

- ▣ 연구기간 : 2013년 6월 15일 ~ 7월 31일(1개월 15일)
- ▣ 연구분야 : 법제사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 연구
- ▶ 연구내용
 - 현황분석
 - 검찰개혁 관련 제정파의 입장분석
 - 상설특검제 도입 관련 여야당 입장 분석
 - 검찰 자체개혁에 대한 평가
 - 검찰개혁 방안
- ▶ 연구성과
 -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정책참고 자료로 활용

주제_ 국가정보원 개혁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6월 15일 ~ 7월 31일(1개월 15일)
- ▣ 연구분야 : 정보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바람직한 국가정보원 개혁방안 연구
- ▶ 연구내용
 - 현황분석
 -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제정파의 입장 분석
 - 국정원 개혁방안과 개혁과제
- ▶ 연구성과
 -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정책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재정지원대학 평가지표 개선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6월 17일 ~ 7월 15일(1개월)
- ▣ 연구분야 : 교육문화체육관광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하는 대학평가지표에는 문제가 많고 이에 대학종사자들의 불만 또한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
- ▶ 연구내용
 - 대학상대평가를 일정기준을 통과하면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
 - 취업률에 의한 대학평가를 학문계열별 취업률로 전환
 - 등록금 부담 절반 도입에 따른 등록금 인하 부담 완화 방안
 - 법인 전입금 전입여부로 대학평가는 부당하고 교육비 환원율을 평가지표에 포함하도록
-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방안 검토

- ▣ 연구기간 : 2013년 6월 19일 ~ 6월 28일(10일)
-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인수위, 국민행복연금위, 청와대 등 각각 서로 다른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도입안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도입안을 도출하려는 목적에서 연구 수행

▶ 연구내용

- 노인빈곤율과 국민연금 수령자와 수령액은 기초연금 도입의 필요성을 지지
-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비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비교
- 인수위, 국민행복연금위, 청와대의 기초연금 도입방안 비교
- 기초연금 지급 범위(100% 또는 70%)와 재정부담 등을 중심으로 비교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관계 개선방향

- ▣ 연구기간 : 2013년 6월 25일 ~ 7월 3일(9일)
-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내외 안보환경 및 북한의 행보를 평가하고,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대북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제언

▶ 연구내용

- 북한문제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외교적 고립과 김정은정권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북한에게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노선으로 평가되어 북한의 회생가능성이 갈수록 희박
- 정부와 당은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시야에 넣고 남북대화를 비롯한 남북관계 설정을 정무적 관점에서 판단 필요
- 특히, 북한과 대화없이 원칙만 주장할 경우 야당과 국민의 인내가 어디까지일까에 대한 정치현실적 고민이 필요한바, 남북관계의 순발력 있는 접근이 필요함.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 전략

- ▣ 연구기간 : 2013년 6월 26일 ~ 7월 25일(1개월)
-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 ▣ 연구방법 : 외부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최근 인터넷 포털 시장의 독점화 심화 및 그에 따른 중소기업과의 상생의 어려움 및 불공정 문제가 사회적 쟁점화 되고 있음. 이에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해법을 제시함

▶ 연구내용

- 네이버 등 포털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남용, 포털광고의 소비자 오인, 자사 콘텐츠를 우대하는 폐쇄적 서비스 운영, 창업생태계 파괴, 포털의 뉴스유통 및 편집의 편향성 등 인터넷산업의 5대 쟁점별 현황, 문제점 및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 (광고와 검색정보를 사이트상의 배경색 및 위치 차별 등을 통해 명확히 구분, 강력한 사후적 제재(블로그 폐쇄 등) 및 사전적방지 조치 필요 등)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 추진과정

- ▣ 연구기간 : 2013년 6월 27일 ~ 7월 26일(1개월)
-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임금격차 등은 양극화, 고용율 저하 등의 원인으로 오래 지적되어 온 문제
- 박근혜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보완점 제시

▶ 연구내용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왜곡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 검토
-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검토
- 경제민주화 추진 과정에서 대기업의 신규투자 축소 등으로 경제민주화의 속도와 수위 조절이 발생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전력위기의 원인과 그 대안

- ▣ 연구기간 : 2013년 6월 28일 ~ 7월 12일(15일)
- ▣ 연구분야 : 산업통상자원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3년 여름 예상되는 전력위기의 원인을, 전력공급력 부족과 예비율 부족의 두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

▶ 연구내용

- 전력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과거 정부의 환경주의적 에너지정책으로 인한 전력수요예측의 실패
-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전력위기의 원인은 중장기 전력산업 육성 정책의 미흡, 가격현실화 지연으로 수요증가 지속, 민간·공공간 비대칭 규제로 민자발전 과도한 수익발생, 계획된 설비투자 지연 또는 취소로 수급불안정 발생 등
- 그 대안으로는 전력수급계획 재정비(전력저수지, 에너지 베타믹스 등), 전력산업 구조 개편(전력 가격현실화, 전력공급 현실화 등)을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원전비리의 구조적 원인과 그 대응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6월 28일 ~ 7월 18일(21일)
- ▣ 연구분야 : 산업통상자원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불거진 원전비리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수립

▶ 연구내용

- 시험성적서 위조는 자신의 본래 역할을 망각한 JS전선, 새한TEP, 韓國電力技術에게 직접적 책임
- 그러나 그 근원에는 모든 견제와 균형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슈퍼甲 韓水原이 있음. 그리고 산업자원부도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묵인, 방치한 책임이 있음.
- 지나치게 비대하고 비리가 만연한 韓水原의 현재의 독점적 지위를 분산시키고 다른 기관에 의한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복원시키는 구조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글로벌 불안정성 긴급 진단

- ▣ 연구기간 : 2013년 7월 1일 ~ 7월 30일(1개월)
- ▣ 연구분야 : 정부, 기획재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잠재적인 내외 위험요인들을 점검, 보완대책을 모색

▶ 연구내용

- (美 양적완화의 축소) 미국 경제는 실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양적완화 정책의 축소 및 종료는 불가피
- (日 아베노믹스 실패) 재정위기가 심화되면 엔화 자금의 급격한 회수로 우리나라 외환부문이 불안정화될 가능성
- (中 경제의 불안정화) 버블붕괴 등으로 인한 경착륙 감안, 한중 FTA 범위·속도를 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조절
- (대외 불안정성 심화) 우리나라는 환율의 변동성이 큰 편으로 적기에 외환규제 3종 세트, 기업의 환헤징 지원 등을 강화
- (가계부채 문제 심화) 주택가격 하락으로 부채디플레이션의 심화 가능성에 대비, 하우스푸어의 부담 경감 대책을 보완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

- ▣ 연구기간 : 2013년 7월 1일 ~ 8월 26일(1개월 27일)
-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는 중소기업 성장희망사다리 구축(중소 → 중견 →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가로막는 중소기업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보완방안 제시

▶ 연구내용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하는 순간, 중소기업 지원은 끊기고 대기업에 준하는 규제와 세금 등의 부담을 짊어지게 되어 초기 중견기업은 U자형 구조에 갇히게 됨
- 따라서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지원체계의 일부를 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중견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하는 피터팬 징후군(Peter Pan Syndrome)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정책 제안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제공
(9월 27일 중기청 중견기업 지원 성장사다리 방안 발표)

주제_ 한중정상회담 이후 한중관계: 쟁점과 대책

- ▣ 연구기간 : 2013년 7월 3일 ~ 7월 17일(15일)
-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대통령의 방중을 통한 한중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 연구내용

- 한중정상회담은 '새로운 20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가운데, 양국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특히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한 성공한 회담으로 평가됨.
- 중국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시사하였음.
-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 높은 기대감이 '중국실망론'의 부메랑으로 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관계의 냉정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빠진 양국간 국방분야 협력의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제고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7월 15일 ~ 10월 22일(3개월 8일)
- ▣ 연구분야 : 여성가족, 환경노동
- ▣ 연구방법 : 외부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국 사회에서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 및 제시

▶ 연구내용

- 고용이 안정적인 정규직 형태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 유연 근무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분재택 근무제,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는 여성들이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수단
- 휴가 및 휴직급여 지급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모성보호 급여도 대폭 증가하였으나,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고학력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재교육 제도 도입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정책지식생태계, 싱크탱크 그리고 정당싱크탱크

- ▣ 연구기간 : 2013년 7월 18일 ~ 8월 18일(1개월)
-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정책지식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당 싱크탱크의 역할과 과제 연구
- ▶ 연구내용
 - 우리나라 싱크탱크와 정책지식생태계 분석
 - 정당 싱크탱크와 정책지식생태계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여의도연구원 혁신사례 소개
- ▶ 연구성과
 - 대한민국 정책컨벤션 & 페스티벌, 싱크탱크 세션(거버넌스클럽, 8. 18)에서의
기조발제 자료

주제_ 현안 주택문제와 정책적 대응

- ▣ 연구기간 : 2013년 8월 1일 ~ 9월 15일(1개월 15일)
- ▣ 연구분야 : 국토교통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관련 간담회 등에서 논의된 현 주택시장과 관련 정책을 바탕으로 하여, 현안 주택 문제를 진단하고, 정부의 '8.28전·월세대책'에 대한 평가와 보완 사항 제시

▶ 연구내용

- 현 주택(임대차)시장 진단
- 주택정책의 방향 설정의 필요성
- 8.28전월세대책의 실효성 평가
- 임대차시장은 계절적 요인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8.28대책이 단기 간 내 전월세 시장 정상화에 한계
- 정책 시행의 적절한 타이밍 확보가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정치권, 언론, 국민과의 객관적 정보 공유 및 소통이 뒷받침되어야 함

▶ 연구성과

- 당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이슈브리프' 발간

주제_ 8.28 주택정책의 보완 가능성 검토

- ▣ 연구기간 : 2013년 8월 10일 ~ 8월 30일(20일)
- ▣ 연구분야 : 국토교통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8.28 주택정책은 전반적으로 적절하지만, 보완 가능 부분 존재
- ▶ 연구내용
 - 임대주택 증장기 공급정책 조정 필요
 - * 주민반발로 행복주택 공급일정 차질
 - 주택대출 양적확대 및 질적개선 확충
 - *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구조전환
 - 목돈 안 드는 전세 |과|는 중단 검토
 - * 전세가격의 상승 억제 목표와 상충
 - 전세금보증보험 친시장적 접근
 - * 매매수요 전환 활성화와 상충
-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에 대한 검토

- ▣ 연구기간 : 2013년 8월 26일 ~ 9월 9일(15일)
-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통신, 교육문화체육관광, 환경노동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고용노동부합동, 8.6 발표) 계획 발표. 그러나 이 계획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발견되어, 이 연구에서는 비판적 검토와 보완점 제시

▶ 연구내용

- 창의인재 육성 방안에는 창의인재 육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의 진단과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처방이 서로 불일치. 이 연구에서는 창의인재 육성 방안의 보완점 제시
- 보완점으로는 창의인재 육성의 장애물 제거, 창의인재 비전 제시, 창의인재 교육 담당자 육성방안 제시창의인재 교육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 제시, 창의인재 육성 대상 확대, 숙련인력의 성공모델 케이스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개성공단 실무회담 평가 및 정책 제언

- ▣ 연구기간 : 2013년 8월 29일 ~ 9월 10일(13일)
-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개성공단 중단사태 해결을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평가하면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모색

▶ 연구내용

- 실무회담은 남북관계의 정상성 정착의 견지에서 일관된 對北 태도를 유지한 성공적인 회담이며, 합의사항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진일보한 내용으로 평가됨.
-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3通 문제, 개성공단의 국제화, 투자자산 보호 및 손해배상제도 마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보상 논의,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 등으로 양측간 갈등이 예상됨.
- 우리정부는 합의사항 미이행時 대비책, 국제환경을 활용한 對北 협상력 제고, 해외 韓商 활용, 대북협상 역량 강화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연구성과

- 당·정의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

주제_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도입취지와 실행방식

- ▣ 연구기간 : 2013년 8월 29일 ~ 9월 13일(15일)
- ▣ 연구분야 : 교육문화체육관광, 안전행정
- ▣ 연구방법 : 외부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민주주의 교육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시민정치교육의 내용을 파악하여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타산지석으로

▶ 연구내용

-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1948년 독일연방공화국 건립이래로 헌법에 명시된 국가적 차원의 과제
-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이었던 나치주의의 끔직한 결과와 경험들을 넘어서서 국민들의 민주시민적 사고를 공공히 하기 위한 목적
- 이러한 목표는 초정당적임. 따라서 국가보조의 기본적인 틀에 따라 국가차원의 초정당적인 기구들이 설립됨
- 특히 젊은이들이 민주시민적 사고를 하는 성숙한 국민, 비판적이고 건설적으로 자기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국민으로 성장하는 결실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TPP와 新통상전략

- ▣ 연구기간 : 2013년 9월 1일 ~ 9월 30일(1개월)
- ▣ 연구분야 : 산업통상자원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TPP 가입 시 장단점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

▶ 연구내용

- TPP 참여 결정 이전에 미국의 확실한 지지를 확보할 필요
 - * 한미 FTA의 텍스트를 그대로 인정받고 들어가지 못할 경우 쌀 문제를 포함한 모든 통상문제의 판도라박스가 열릴 우려
 - * TPP 조기 타결이 목표인 미국은 한국 참여 시 지연 효과가 우려되므로 한국의 참여를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을 수 있음.
- 역내 생산/유통망 투자가 적은 관계로 업계 관심이 부족한 실정
- 통상정책과 산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는 통상사업본부를 외교부에서 산자부로 옮겼다는 점 상기할 필요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 연구기간 : 2012년 9월 1일 ~ 10월 31일(2개월)
- ▣ 연구분야 : 정무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동양사태로 재점화된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금융감독체계를 둘러싼 주요 논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개선 방향 제시

▶ 연구내용

-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신설 문제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문제를 포함하여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와 함께 추진되는 것이 타당
- 하지만, 이해집단간 이견 상존 및 정치적 타협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동 사안을 별도로 추진하되, 금융위의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는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 문제 등은 향후 정부조직 개편 논의와 함께 검토·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
- 상기 사안을 담을 법제, 독립기구의 예산과 전문성 확보 및 운영 방안 등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제도안착을 위한 입법 및 제도운영 방안 제시

▶ 연구성과

- 당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이슈브리프(정책리포트)' 발간·배포

주제_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우리의 대응

▣ 연구기간 : 2013년 9월 3일 ~ 9월 15일(12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아베정권이후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이 한일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아베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위한 법적제도 마련에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실체와 내용 및 우리의 대응을 모색

▶ 연구내용

-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헌장 51조에 규정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권리
-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북한의 도발 및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북한에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는 것을 한국이 가장 우려
-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의 진정한 의미와 필요성 및 행사내용에 대해 중국과 한국 및 관계국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함.
-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집단적 자위권의 논리와 내용을 보다 충분히 검토하고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함.

▶ 연구성과

- 당과 정부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내용점검과 대응을 위한 참조

주제_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

- ▣ 연구기간 : 2013년 9월 4일 ~ 9월 18일(15일)
- ▣ 연구분야 : 교육문화체육관광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난 8월28일 교육부는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입 전형을 간소화하는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시안으로 발표하였음. 발표된 시안은 수능에 한국사 도입, A/B형 수능 폐지, 성취평가제 도입 유예 등 참여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내용

- 8.27 발표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은 박근혜정부 교육 정책의 지향점을 공유하며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쟁점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대입전형의 부분적 개선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한 주요 문제점과 보완점을 분석함.

▶ 연구성과

- 공청회 참석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정활동과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전달

주제_ 한국사 교과서 8종 비교

- ▣ 연구기간 : 2013년 9월 6일 ~ 9월 30일(25일)
- ▣ 연구분야 : 교육문화체육관광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역사교과서에 대한 비교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역사교과서마다 특정한 사실만을 부각시키거나 집필자의 주관적 판단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음
- 특히 특정 주제에 각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다르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비교가 필요함

▶ 연구내용

- 이 연구에서는 특정주제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것을 발췌하고 있음
- 총 12주제를 선별하여 각 역사교과서가 서술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페이지를 달아 발췌하였음
- 특히 논쟁이 많은 부분은 주제에 포함시켜 객관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교학사 역사교과서 ‘한국사’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검토

- ▣ 연구기간 : 2013년 9월 9일 ~ 9월 30일(23일)
- ▣ 연구분야 : 교육문화체육관광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언론의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해 비판의 적절성을 분석하고자 함.

▶ 연구내용

- 논란이 된 교학사 교과서 본문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 내용 비교 검토
- 교학사 교과서에서 수정될 필요가 있는 부분,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잘못된 비판, 학계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 등을 분석함

▶ 연구성과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의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실시

주제_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해법

- ▣ 연구기간 : 2013년 9월 9일 ~ 11월 15일(2개월 7일)
- ▣ 연구분야 : 교육문화체육관광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검정을 통과하였으나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의 내용을 주제 별로 비교·분석하여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의 실체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한국사 교과서 문제의 편향성 시비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함.

▶ 연구내용

- 향후 한국사 교과서는, 교육에 있어 교과서가 지닌 의미와 위치를 생각해 볼 때, 그 무엇보다 정확성, 보편성, 공정성을 갖추 수 있도록 집필기준과 검정과정의 강화되어야 함. 특히 역사교육의 경우, 역사적 사실을 최우선으로 하되,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균형 있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 제작 과정이 중립성을 상실함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세우고, 검정 이후에도 발견되는 다수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이는 궁극적으로 교과서의 수준을 제고할 것임.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금강산관광 재개회담 관련 대책

- ▣ 연구기간 : 2013년 9월 10일 ~ 9월 16일(7일)
-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08년 7월 북측의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전면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북측의 조치(입장) 및 협상논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의 대책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음.

▶ 연구내용

- 북측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함으로써 북측의 법·제도의 원상회복(관광특구법→관광지구법)이 중요한 쟁점으로 급부상하였음.
- 북측은 개성공단 재가동,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재개가 이루어지면 남측이 가진 對北 지렛대가 힘을 못쓸 것으로 판단, 밀어붙이기로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 北의 needs를 적극 활용하여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법·제도적 안정성을 위한 환경 조성 촉구와 함께 북이 금강산관광과 관련하여 남북경제협력법제를 완전히 배제한 처사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가 필요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보완방안

▣ 연구기간 : 2013년 9월 12일 ~ 12월 20일(3개월 9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그 목적에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 반대로 맞지 않는 부분도 발견
-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된 이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중소기업의 시장참여가 활발하지 않는 문제점에 집중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보완 방안 모색

▶ 연구내용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후,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국내 시장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 경우 외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운영에 정교화가 필요함
- 적합업종 선정이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협업을 강화하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결

- ▣ 연구기간 : 2013년 9월 9일 ~ 9월 27일(14일)
-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최근 한일관계의 경색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한일간의 갈등요인으로 부상한 일제 강제 징용피해자에 대한 우리 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이 판결에 대한 정치적 관점과 법제적 시각에서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 연구내용

- 일제 강제 징용피해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 (정부측 시각)
- 법제적 시각에서 볼 때,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판결은 매우 타당하여, 일본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보상하여야 함. (법제적 시각)
- 한국정부가 강경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위안부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국민에게 더욱 어필해야함.
- 한일관계의 악화는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및 특히 한국의 경제에 악화를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정치보다는 경제를 우선으로 하는 한일관계를 고려할 필요

▶ 연구성과

- 당과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자 관련 내용점검과 대책을 위한 참조

주제_ 숙련인력 양성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9월 16일 ~ 12월 31일(3개월 15일)
-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 연구방법 : 외부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국 사회의 높은 대학진학율과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미스매치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사회발전의 중요한 장애요인 가운데 하나임
-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숙련인력 육성방안 제시

▶ 연구내용

- 기존 숙련인력 양성제도의 문제점 진단, 특히 숙련인력 기피 원인에 대한 분석
- 외국의 성공적인 숙련인력 양성 사례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제도 선별
- 숙련인력 향상 과정 개설(예를 들어 기능공 → 기능인 → 기능장 → 명장)
-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숙련인력의 성공 모델 제시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저출산 극복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9월 16일 ~ 12월 31일(3개월 15일)
- ▣ 연구분야 : 보건복지, 여성가족
- ▣ 연구방법 : 외부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수준
-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저출산 대책 연구 가운데 저출산의 복합적 원인을 다룬 연구는 없었음

▶ 연구내용

- 저출산 극복은 저출산의 복합적 원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고, 동시에 각각의 원인에 대한 맞춤형 대응 필요
- 이 프로젝트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결혼비용 절감방안, 높은 신혼부부 주택비용, 자녀 보육 문제 해결, 높은 자녀 교육비용, 유연근무제 도입방안 등의 다섯 가지 저출산 원인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이 원인이외에도 다른 저출산의 원인은 이미 연구원에 연구결과가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음)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기초연금’ 관련 쟁점에 대한 대응 설명

- ▣ 연구기간 : 2013년 9월 26일 ~ 10월 25일(1개월)
-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보건복지부에서 9월 26일 기초연금 도입안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제기. 이에 대한 대응 설명이 필요
- ▶ 연구내용
 -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수준인 노인빈곤율 45.1%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초연금 도입의 필요성 설명
 -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한 오해 가운데 특히 6가지의 오해를 선정하여 설명
 - 국민연금 미가입자보다 가입자가 더 이익이고, 미래노인세대에게도 손해가 아니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이유가 있고,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재정 상 기초연금 대상을 축소하였고,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
-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저신용 서민금융의 현황과 개선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1일 ~ 10월 30일(1개월)
- ▣ 연구분야 : 정무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양적완화 이전 취약계층의 충격경감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

▶ 연구내용

- 금융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간 균형 잡힌 접근 필요
 - * 정부의 제1금융권 건전성 규제 강화가 질적 저하의 원인
- 대부업 금리상한의 단계적 인하 : 39% → 35% → 30%
 - * 독점력과 우월적 지위로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 향유
- 서민금융전담은행 설립 등 서민금융자금의 공급을 확충
 - * 미소금융의 재원을 휴면 자산으로 확대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고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 분석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1일 ~ 10월 31일(1개월)
- ▣ 연구분야 : 교육문화체육관광
- ▣ 연구방법 : 외부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최근 새롭게 개정되어 검정을 통과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점차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교과서에 대한 논쟁을 해소하고 교과서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8종의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의 실제적 사실을 분석하고자 함.

▶ 연구내용

-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주제를 중심으로 8종 교과서의 기술 내용 비교 분석

▶ 연구성과

- 당·정의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출장 보고서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12일 ~ 11월 12일(1개월)
- ▣ 연구분야 : 안전행정, 외교통일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여의도연구원 글로벌화 및 해외 싱크탱크와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추진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방문 결과 정리 및 평가

▶ 연구내용

- 브루킹스 연구소 현황 분석
- 브루킹스 연구소 방문 결과 정리 및 분석
- 브루킹스 방문 관련 평가 의견 및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

▶ 연구성과

-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보고 자료
- 브루킹스 연구소 등 해외 싱크탱크와 교류협력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2013년 국정감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15일 ~ 11월 2일(15일)
-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 ▣ 연구방법 : 외부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빅데이터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이슈의 흐름을 분석, 향후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책 연구 및 개발에 참고하고자 함
-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슈와 동 이슈의 발생량, 추세, 확산 등을 분석하여 리스크 관리 및 이슈대응의 자료로 활용

▶ 연구내용

- '국정감사'의 모든 이슈 수집
 - 채널별(뉴스, SNS, 카페, 블로그, 게시판) 문서 발생량, 비중
- '국정감사'의 주요 확산문서 모니터
- '국정감사'의 일일 이슈 점검 및 이슈 추세 모니터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수립 및 정부의 국정운영에 참고

주제_ 리더십과 국정운영의 효율적 운영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15일 ~ 12월 23일(2개월 10일)
- ▣ 연구분야 : 국회운영
- ▣ 연구방법 : 외부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를 일정하게 관리하는 일은 효과적인 국정운영과 리더십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역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국정운영의 문제를 분석하고자 함

▶ 연구내용

-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20년 간 4명의 대통령을 대상으로 역대 대통령의 지지도와 국정 운영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로부터 주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고자 함
- 우선 각 대통령의 5년 간 지지도를 여론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지지도의 등락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사건에 대해 분석, 지지율의 등락이 국정운영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봄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수립 및 정부의 국정운영에 참고

주제_ 전교조 ‘법외 노조’ 관련 검토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18일 ~ 11월 2일(15일)
- ▣ 연구분야 : 교육문화체육관광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고용노동부의 법외 노조 통첩(10.23 한) 이후 전교조 관련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에 대한 당정의 입장 정리가 필요함

▶ 연구내용

- 전교조 ‘법외 노조’ 관련 경과 정리
- 전교조 ‘법외 노조’ 관련 법규 및 판결 분석
- 정치적 대응보다는 정부 운영에 있어 법질서 준수의 정책기조 확립이라는 원칙적 대응이 필요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한러정상회담 관련 현황 및 과제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21일 ~ 10월 29일(18일)
-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푸틴대통령의 방한과 더불어 박근혜대통령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안을 바탕으로 한-러 관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러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검토

▶ 연구내용

- 과거 한-러관계는 정상회담은 빈번히 이루어져 왔으나, 실질적 성과는 전무함.
- 푸틴은 성과주의를 중시하는 대통령인 만큼 실질적 협력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함.
- 한-러대화 포럼을 지속하고, 지속가능한 연락채널의 확보가 절실
- 한-러간 경협사업들이 남북관계에 구속되어 정부간 의제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민간수준의 경제협력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전략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독립적인 극동개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연구성과

- 당과 정부의 러시아 정책에 대한 제언으로 활용

주제_ 우드로윌슨 센터 출장보고서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25일 ~ 11월 15일(20일)
- ▣ 연구분야 : 외교통일, 안전행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세계적 수준의 싱크탱크를 조사, 여의도연구원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연구내용

- 워싱턴의 정책연구소들은 당파성과 이념 편향을 지양하는 추세
 - * 초당적인 성향은 외교안보 등 대외관계 부문에서 더욱 분명
- 미국의 대외정책 결정과 미국내 여론형성에 영향력이 큰 관계로 국회 및 공공외교의 창구로 활용할 가치
- 필요할 경우 소통능력, 전문성 및 연구과제 (proposal) 등 철저하게 준비된 연구자를 대상으로 단기(3-4개월) 파견을 검토할 필요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수용성 연구

- 충청권을 중심으로 -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25일 ~ 12월 23일(2개월)
- ▣ 연구분야 : 국토교통
- ▣ 연구방법 : 외부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추진 상황과 이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이나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지역발전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내용

- 현 정부의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정책'에 대한 충청권 지방 정부와 지역 주민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 지역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비판적으로 검토
- 충청권 단체장의 공약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충청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아이디어 수집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수립 및 정부의 국정운영에 참고

주제_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25일 ~ 12월 23일(2개월)
-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 연구방법 : 외부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감성 정치에 입각한 이미지 선거가 아니라 후보 간 치열한 정책 경쟁이 이뤄져 선거의 본질적 가치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 국민들이 정당의 지방선거후보에 요구하는 정책 사항을 심층·분석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정한 매니페스토 선거가 될 수 있는 방안 모색

▶ 연구 내용

- 일반 국민들의 정치 및 정책 현안에 대한 태도 심층 분석
- 예상 정당 후보들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심층 분석
- 일반 국민의 정책 요구와 정당후보들의 정책 일치도 분석
- 역대 선거 매니페스토 선거 운동에 대한 국민 인식 분석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수립 및 정부의 국정운영에 참고

주제_ 북한 '경제개발구' 창설계획 평가 및 대책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29일 ~ 11월 14일(17일)
-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북한의 '경제개발구' 창설계획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대비의 차원에서 이를 활용하는 우리의 대북정책 입안과 수행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함.

▶ 연구내용

- 북한의 13개 경제개발구는 북·중 경험에 초점을 맞춰 선정한 것으로, 지역특성의 고려가 부족하고 성공 가능성이 약한 계획으로 평가됨.
- 그러나 북한은 경제발전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 바, 경제개발구 계획을 널리 홍보하고 외자유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됨.
-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계획을 비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북한의 변화 추동 및 평화통일 대비 차원에서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경제개발구 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도하고 기여하는 대책 마련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북·중 접경지역 정책 동향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30일 ~ 11월 6일(5일)
-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두만강 유역 방문을 통해 북·중 접경지역 상황과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화를 파악, 당과 정부의 접경지역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중국 4세대 지도부가 공식 입안한 '동북진흥계획'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평가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은 전략적 고도화 및 장기적 각도에서 북중경협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는 중국 동북지방의 가치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인 인식과 함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함.
- 특히,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발전을 지원하고, 제조업 기반의 한국기업 진출을 적극화하며, 동시에 연변을 박근혜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한국 보수이념의 진화와 미래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30일 ~ 12월 31일(2개월)
-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 연구방법 : 외부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국 보수이념의 진화과정을 역사적 관점과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보수이념 진화방향 정립을 위한 시사점 발견

▶ 연구내용

- 이념정향에 대한 기존연구 분석
- 역대 보수 대통령 후보의 이념 성향 진화과정 분석
- 미국과 일본과의 보수이념 진화과정 비교연구

▶ 연구성과

-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이념적 진화방향 정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5일 ~ 12월 26일(1개월 22일)
- ▣ 연구분야 : 국토교통
- ▣ 연구방법 : 외부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역의 민심을 파악하고 현안을 분석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 연구내용

- 지역균형발전 방안 및 실천 과제를 연구하여,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분석하되, 역대 정부의 시기별 특징과 논리를 분석
- 지역균형발전의 국내 현황과 지역 혁신 사례, 창조적 지역경제발전 사례 등을 살펴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시적 접근법을 모색하면서 비전 및 정책수립의 방향을 검토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반도

-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11일 ~ 12월 3일(23일)
-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산하 '당대세계연구중심'과의 공동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중 집권당 싱크탱크의 동북아 안보정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공유하면서 한중관계 발전방향 논의

▶ 연구내용

-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와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 사이에서 미·중간 협력적 경쟁관계의 지향이 예상
- 박근혜정부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아시아 패러독스'의 극복방안으로 제시, 동북아의 미래에 대한 목적과 청사진을 공유
-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간의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달성하고자 함.
- 특히, 한반도 통일은 중국의 안전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며,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고립돼 있는 동북 3성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연구성과

- 싱크탱크의 교류를 통한 黨對黨 관계 및 양국관계의 발전에 기여

주제_ 2014년 경제 전망과 정책 시사점

-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15일 ~ 12월 15일(1개월)
- ▣ 연구분야 : 정부, 산업통상자원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4년 경제를 전망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

▶ 연구내용

- 2014년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강화
- 국내경제는 가계부채 조정이 급속 진행될 경우 회복 제한
- 양적완화의 축소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안정화 가능성에 대비하되, 세계경제의 회복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공세적인 통상 및 산업 정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귀농귀촌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16일 ~ 12월 16일(1개월)
- ▣ 연구분야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연구
- ▶ 연구내용
 - 귀농귀촌 현황
 - 귀농귀촌 정책 현황
 - 귀농귀촌 정책 관련 주요 쟁점
- ▶ 연구성과
 -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보고 자료

주제_ 전력수요 절감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21일 ~ 12월 20일(1개월)
- ▣ 연구분야 : 산업통상자원
- ▣ 연구방법 : 외부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전력예비율이 낮아 매년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계절마다 블랙아웃을 염려하는 일이 반복. 전력예비율을 높이기 위한 과제는 전력공급확대와 전력수요관리
- 이 연구에서는 전력수요 절감방안에 집중하여 전력예비율 상승 추구

▶ 연구내용

- 2013-2014년 겨울 전력공급능력을 파악하여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점검
- 동시에 저비용 고효율의 전력수요관리를 통한 예비율 확대 방안에 집중
- 부하관리(전력수요 피크 시간대 분산) 강화, ICT를 활용한 전력수요절감, LED 보급 확대 방안 등 검토
- BEMS(빌딩)와 FEMS(공장) 등 민간주도의 에너지관리시스템의 확산을 통한 전력수요절감이 종합적 해결책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사법신뢰,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23일 ~ 12월 23일(1개월)
- ▣ 연구분야 : 법제사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시국사건에서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의 대상이 국민참여재판 개선 방안 연구

▶ 연구내용

- 국민참여재판 운영 경과 분석
- 국민참여재판 정치편향성 논란 경과 분석
- 국민참여재판 주요 쟁점 분석
- 국민참여재판 개선방안

▶ 연구성과

-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보고자료

주제_ 협동조합 운영실태와 그 시사점

-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26일 ~ 12월 13일(18일)
-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 연구방법 : 외부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으나 그 운영실적은 매우 미흡.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모색

▶ 연구내용

-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생산자 협동조합과 소비자 협동조합의 연결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협동형 자기고용의 방식에 의한 고용창출 등 많은 사회적 목적에도 달할 수 있음
- 그러나 협동조합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으로 협동조합 사업 부진
- 일부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이나 자활센터 등과 같은 정부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는 협동조합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
- 따라서 협동조합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지속적인 컨설팅 기구를 만들고, 최소한의 운영자금 지원 등이 필요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새로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

-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26일 ~ 2014년 2월 6일(1개월 12일)
- ▣ 연구분야 : 국토교통
- ▣ 연구방법 : 외부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향후 정책 개발 및 정책 방향을 제시, 특히 경기도와 인천은 서울에 대한 소외감이 있으므로, 지역 상황과 현안에 대한 세밀한 분석 수행

▶ 연구내용

- 지역의 새로운 발전전략 모색 및 실천 과제 연구를 통해, 광범위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권역별로 세분화된 발전 플랜 제시
-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글로벌 광역경제권' 구축과 경기도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
- 경기도의 주요 현안 및 과제, 그리고 인천의 주요 현안 및 과제를 분석하고 대응의 방향을 모색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창조경제 추진 현황과 보완 대책

- ▣ 연구기간 : 2013년 12월 1일 ~ 12월 31일(1개월)
-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 ▣ 연구방법 : 외부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창조경제 추진 배경, 정책 추진 현황의 점검 및 향후 과제 검토

▶ 연구내용

- (추진 배경) 고용 없는 성장, 성장잠재력 약화, 모방형 모델의 한계
- (추진 현황) 창조경제의 핵심인 ICT 진흥융합 기본계획 등 지연
- (향후 과제) 법과 제도의 개선 등 정책 추진 기반을 조속히 정비
 - *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을 구체화 하고, 현장과의 괴리를 축소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건강보험 부당청구 실태와 방지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12월 1일 ~ 12월 30일(1개월)
-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 연구방법 : 외부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건강보험 지출 가운데에는 부당청구나 과잉심사·진료에 의한 재정누수가 적지 않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미약
- 이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

▶ 연구내용

- 저출산·고령화, 보장성 강화, 노인 의료비 지출의 증가 등을 감안하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이 중요하고, 그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누수 차단 필수
- 부당청구, 과잉심사·진료, 보험사기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역시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유지를 위해 중요한 방법
- 결론으로 부당청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진자 본인 확인 제도나 부당청구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할 것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지역정책협의회 운영 및 지역발전 정책 개발

- ▣ 연구기간 : 2013년 12월 ~ 2014년 5월(6개월, 계속 사업)
- ▣ 연구분야 : 국토교통
- ▣ 연구방법 : 외부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역의 민심 동향 파악과 지역 현안 분석을 통해 지역발전 비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역정책협의회'를 운영
- 동시에 지역발전 정책 개발을 위하여 지역공약 이행상황 평가, 지역발전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책 아이디어 수집, 지방정부 혁신 방안 등을 위한 전국 순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

▶ 연구내용

- 자치단체의 공약 이행상황 점검과 성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 등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파악
- 지역의 현안과 주민 관심사를 분석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의 연구·개발을 통해 맞춤형 정책 대안 제시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수립 및 정부의 국정운영에 참고

주제_ 최근 중국정세평가 및 2014년도 전망

- ▣ 연구기간 : 2013년 12월 2일 ~ 12월 18일(16일)
-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8기 3중전회의 결과 분석과 2014년도 중국의 정세를 전망하여 한국의 對중정책에 반영

▶ 연구내용

-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에 주역하면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
- 이어도 문제에 대한 영토적 접근 등 감정적 대응 자제. 감정외교(sensibility in diplomacy)의 위험성.
- 중국의 ADIZ 발표 이후 한-미-일 공동 대응에 대한 우려.
특히 미국의 역할 속에서 한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
- 동북공정 사례를 참고하여 반민반관 형태의 회의 기획. 대결을 대화로 바꾸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함.
- 북한의 불확실성에 대한 안보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북한의 개혁드라이브에 대한 사전 대비도 동시에 필요함.

▶ 연구성과

- 당과 정부의 對중 정책에 대한 제언으로 활용

주제_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정세 전망

- ▣ 연구기간 : 2013년 12월 3일 ~ 12월 16일(5일)
-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장성택 숙청으로 북한정세 격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장성택 숙청이 갖는 의미와 그로 인한 북한정세의 변화를 전망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장성택 숙청은 김정은정권에게 內傷을 남긴 사건으로서 김정은의 콤플렉스와 정권의 失政을 덮기 위한 행동으로 평가되며, 권력개편과 세대교체의 1단계 종결을 통해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
- 북한의 격변에 대응하여 안보태세를 강화하되, 북한을 자극하는 언행은 자제하면서 북한 격변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을 점검하고 정책을 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이 필요함.
- 동시에, 북한의 비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고 법적 절차와 국제법의 준수, 그리고 인권 개선 등을 촉구해야 함.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최근 한미관계와 2014년도 미국 정세전망

- ▣ 연구기간 : 2013년 12월 19일 ~ 12월 31일(13일)
-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전략권반환문제 및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에 따른 한미관계의 재점검에 대한 의견이 많음.
- 한미안보 및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향후 우리의 대응을 검토

▶ 연구내용

- 한미관계의 산적한 현안
전략권재연기, 원자력협정, 방위비분담 등 정치적 휘발성이 높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치적 리더십 필요
- 현재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을 채우고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
- 향후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에서 핵 억지력 보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척시킬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 당과 정부의 한미안보 및 對미 정책에 대한 제언으로 활용



2013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서

- 제2장 -

민주정책연구원
(민주통합당)



민주정책연구원 연간 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극동VIP빌딩 6, 7층)			√		

나. 인력

연구원수	직원수	비고
박사급 : 8명	자체고용 : 0명	
석사급 : 12명	외부파견 : 0명	
기 타 : 31명		
합 계 : 51명	합 계 : 0명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4,991,026,303	39,570,912	721,612,590	5,752,209,805	4,306,281,506	1,445,928,299

2. 주요 활동실적

가. 연구·개발실적(총119건)

순번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1	130101~0130	보건복지	기초연금 도입논의의 검토 및 제언	자체	7	별첨 1
2	130102~0115	정치	정치혁신: 평가와 과제	자체	18	별첨 2
3	130102~0118		새로운 출발을 위한 연구원 정상화 방안	자체	11	별첨 3
4	130102~0120	정무	안철수 현상의 분석 및 대응방향	자체	27	별첨 4
5	130102~0128	정치	제18대 대선과 정치혁신, 그리고 민주당의 대응방향	자체	11	별첨 5
6	130105~0204	행정·법사	인사청문회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자체	5	별첨 6
7	130105~0214	정무	국무총리의 역할과 권한 변동의 원인 분석	자체	27	별첨 7
8	130105~0229	정무	훈합대통령제로서 한국권력구조의 특성 및 함의	자체	23	별첨 8
9	130120~0124	정치	민주당 공천제도 당헌당규의 변화	자체	5	별첨 9
10	130120~0214	정무	정당 지도체제의 분석과 리더십 강화	자체	7	별첨 10
11	130126~0128	정치	공천제도 외국사례	자체	5	별첨 11
12	130128~0131	통외교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전략	자체	6	별첨 12
13	130201~0204	정치	당 리더십 강화	자체	7	별첨 13
14	130201~0217	정무	민주정책연구원 혁신 방안	자체	4	별첨 14
15	130201~0610	기획재정	민주당의 경제·민생정책 의제와 비전, 그리고 실천방안	외부 전문가	47	별첨 15
16	130205~0212	정치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의 현대화	자체	7	별첨 16
17	130205~0217	정무	민주당 정책위원회 혁신 방향	자체	3	별첨 17
18	130207~0217	안전행정	민주당 운영 혁신 방안	자체	4	별첨 18
19	130210~0217	안전행정	민주당의 청/대학생 조직 강화	자체	5	별첨 19
20	130213~0313	기획재정	이슈브리핑 2013~06호: 박근혜정부의 성장전략과 민주당의 대응방향	자체	6	별첨 20
21	130215~0219	국방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해법과 민주당의 대응방향	자체	9	별첨 21

순번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22	130220~0420	보건복지	민주통합당의 사회비전과 의제 그리고 실천방안	외부 전문가	27	별첨 22
23	130223~0423		민주정책연구원 혁신방안	자체	16	별첨 23
24	130225~0305	통외교	북한 핵문제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자체	6	별첨 24
25	130301~0510	정치·경제·사회·통외교안보	민주당의 정책비전과 의제	공동	47	별첨 25
26	130325~0328	기획재정	박근혜정부 2013 경제정책 방향 검토	자체	3	별첨 26
27	130401~0409	기획재정	최근 경제상황인식과 거시경제정책 검토	자체	8	별첨 27
28	130401~0513	기획재정	대안적 사회경제모델의 모색: 영미, 독, 스웨덴 모델을 중심으로	자체	8	별첨 28
29	130402~0503	정치	민주당의 혁신전략과 실천방안(비공개)	자체	16	별첨 29
30	130420~0424	기획재정	맥킨지보고서 관련 민주당의 대응방안	자체	3	별첨 30
31	130501~0830	보건복지	한국의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중세 전략 연구: 복지 선진국의 사례를 기초로 '한국형' 조세 개혁방안 모색	외부 전문가	189	별첨 31
32	130501~0831	환경노동	2017 대선대비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세대전략 검토 ~ 경제·고용 상황을 중심으로	외부 용역	168	별첨 32
33	130503~1214	정치	보수진영의 여론형성기능에 대한 민주당의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외부 전문가	117	별첨 33
34	130504~0508	정치	당원생활정책포럼, 대표가 갑니다!	자체	8	별첨 34
35	130510~0527	정무	민주당연구직성과관리시스템		12	별첨 35
36	130510~0529	정치	정책정당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과제	자체	4	별첨 36
37	130520~0620	정무	안철수 신당의 의미와 가능성	자체	30	별첨 37
38	130524~0625	법사	정당정책연구소 관련법 개정의 목적과 주요 내용	자체	5	별첨 38
39	130528~0601	통외교	개성공단 사태 이후 남북관계 : 현황 및 과제	자체	7	별첨 39
40	130601~0709	경제·사회·통외교안보	민주당 분야별 정책추진방향: 대선평가보고서 및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공동	29	별첨 40
41	130603~0611	지식경제 환경노동	박근혜정부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평가와 대응방안	자체연구	7	별첨 41

순번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42	130610~0627		중앙당 현 상황 및 당무 정상화방안	자체	3	별첨 42
43	130615~0716		지역정책플랫폼 구축 및 운영방안	자체	17	별첨 43
44	130619~0719	보건복지	기초연금 개혁방안	자체 연구	8	별첨 44
45	130620~0709		민주정책연구원의 존재감 제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	12	별첨 45
46	130620~0724	정치	정당공천제찬반검토위 활동경과 및 결정요지	자체	18	별첨 46
47	130620~0730	정치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안)	자체	13	별첨 47
48	130620~0825	정치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자 자료	자체	12	별첨 48
49	130624~0702	환경노동	노동분야 입법과제	자체	7	별첨 49
50	130701~0704	정치	영국 노동당 정책전당대회 사례	자체	3	별첨 50
51	130701~0825	기획재정 보건복지 정무교육 문화국토 교통	2013 정기국회/국정감사 의제제안 (민생살리기 6대분야)	자체	34	별첨 51
52	130702~0816	정치	민주당 중기전략-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의제와 액션플랜	자체	7	별첨 52
53	130708~0808	정치	민주당 강령과 정책 그리고 2014 지방선거	자체	10	별첨 53
54	130715~0730		당 운영시스템 정상화방안	자체	7	별첨 54
55	130715~0802	정치	국정원 개혁방향	자체	7	별첨 55
56	130720~0815	정무	정당 리더십의 구축 및 강화방안	자체	6	별첨 56
57	130720~0808	기획재정	소득주도 성장론(토론문)	자체	6	별첨 57
58	130801~0822	교육과학	대학생 정책 선호	자체	9	별첨 58
59	130804~0809	통외교	개성공단 문제의 해법과 우리의 대응방안	자체	8	별첨 59
60	130808~0909	정치	민주당 장기전략 : 2014 지방선거 종합로드맵 (비공개)	자체	10	별첨 60
61	130810~0818		정책지식생태계 활성화- 민주정책연구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자체	7	별첨 61
62	130810~0903	법제사법	의원정수 및 보수의 개혁방안	자체	7	별첨 62
63	130812~0823	환경노동	양질의 시간제 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	자체	7	별첨 63

순번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64	130816~0822	정보	국정원 국정조사 대응 전략	자체	4	별첨 64
65	130816~0915	복지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자체	25	별첨 65
66	130822~0829	지식경제 환경노동	2030 세대를 위한 정책제안~ 자리·노동	자체	11	별첨 66
67	130823~0904	법제사법	통합진보당 해산 제소의 의미와 대응 방안	자체	3	별첨 67
68	130824~0905	통외교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이후 남북경협 추진방향	자체	7	별첨 68
69	130826~0925	정치	민주당의 정책과 전략: What? Why? How? (비공개)	자체	39	별첨 69
70	130901~0930	정무	효과적인 정치적 메시지의 작성 및 전달	자체	9	별첨 70
71	130901~0923	기획재정	이슈브리핑 2013~13호: 최근 세계개편으로 본 중산층 문제와 대응방안	자체	8	별첨 71
72	130904~1004	정치	민주당의 중기전략과 실천과제(비공개)	자체	35	별첨 72
73	130905~0923	정무	한국 정당체제 재편성의 가능성	자체	11	별첨 73
74	130925~1001	통외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의 의미와 대응방안	자체	5	별첨 74
75	130925~1010	보건복지	5060세대를 위한 정책제안	자체	7	별첨 75
76	130928~0101	정무/산업 통상자원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자체	7	별첨 76
77	131001~1007	복지	무상보육 서비스의 재설계방안	자체	8	별첨 77
78	131001~1013	정치	독일 총선 분석: 보수의 혁신	자체	8	별첨 78
79	131001~1204	정무	한국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 분석	자체	23	별첨 79
80	131001~1015	부동산· 조세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기조 ~ 전세 대책을 중심으로	자체	8	별첨 80
81	131001~1023	정치·경제· 사회· 통외교안보	핵심 이슈별 대응전략	공동	27	별첨 81
82	131004~1021	정보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분석	자체	4	별첨 82
83	131004~1028	정무/산업 통상자원	인터넷 포털 자율적규제를 통한 상생방안	자체	7	별첨 83
84	131007~1021	지식경제 환경노동	2014 지선대비 자리·노동분야 핵심아젠다	자체	5	별첨 84
85	131009~1014	보건복지	기초연금 재원 전액국고부담 근거	자체	4	별첨 85

순번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86	131011~1017	보건복지	복지확대에 따른 재원확보대책	자체	3	별첨 86
87	131013~1103	정치	민주당 정강정책과 오늘의 정치·정책현안, 그리고 2014 지방선거	자체	23	별첨 87
88	131014~1030	조세·재정	조세·재정 전략적 검토 ~ 박근혜정부 예산안과 세제개편	자체	6	별첨 88
89	131017~1118		민주당 후보 종합플랜 실행방안	자체	8	별첨 89
90	131020~1028	기획재정	3분기 경제성장률 분석과 향후 전망	자체	4	별첨 90
91	131021~1030	조세·산업정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관련 전략적 대응 검토	자체	8	별첨 91
92	131023~1025	통외교	당 대표 중국 방문 관련 보고서	자체	4	별첨 92
93	131025~1030	상임위전체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관련 전략적 대응 검토	공동	9	별첨 93
94	131028~1108	조세·재정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전략~세제분야	자체	8	별첨 94
95	131101~1106	복지	장애인연금의 기초연금통합 논의와 제언	자체	8	별첨 95
96	131101~1113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자체	8	별첨 96
97	131101~1112	기획재정 고용노동 산업통상 자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민생위기 현황	공동	6	별첨 97
98	131105~1112	정무/산업 통상자원	박근혜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평가	자체	6	별첨 98
99	131111~1121	환경노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자체	7	별첨 99
100	131111~1118	재정·산업 정책	정기국회 법안·예산 전략기조	자체	9	별첨 100
101	131112~1212	보건복지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자체	8	별첨 101
102	131115~1213	경제·사회· 통외교안보	당 지지율 제고를 위한 정책 포지셔닝 검토	자체	31	별첨 102
103	131117~1127	정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단상(斷想)	자체	4	별첨 103
104	131119~1125		민주당의 현재와 미래: What? How?	자체	4	별첨 104

순번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105	131120~1122	산업통상 자원	주요 선진국의 해외기업 리쇼어링에 대한 시사점	자체	9	별첨 105
106	131120~1210	정무	당 상향식공천혁신위원회의 혁신안 검토	자체	10	별첨 106
107	131125~1202	정치	민주당 현역 광역단체장 지선준비 및 대응방안 (비공개)	자체	5	별첨 107
108	131125~1210	정무	국정원 개혁 이후의 정치 이슈 및 대응방안	자체	4	별첨 108
109	131126~1206	정치	이기는 민주당, 어떻게 할 것인가?(비공개)	자체	11	별첨 109
110	131201~1210	정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한 민주당의 방향	자체	5	별첨 110
111	131201~1211	정무	민주당혁신위원회/혁신실행위원회의 혁신안 실행 수준 검토	자체	8	별첨 111
112	131201~1212	보건복지	논쟁 중인 복지정책과 우리당 대응방안		7	별첨 112
113	131201~1230	조세·지방 재정	지방재정 건전화 및 재원확충에 관한 제언	자체 및 간담 회	7	별첨 113
114	131205~1207	통외교	박근혜정부 외교안보정책 평가와 과제	자체	4	별첨 114
115	131205~1209	정무	국회의원 문재인인당 혁신 제안 검토	자체	8	별첨 115
116	131210~1213	상임위 전체	경제민주화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통한 지지도 회복	공동	2	별첨 116
117	131216~1227	통외교	종북 프레임과 민주당의 대응전략	자체	8	별첨 117
118	131217~1223	정치	제18대 대선 이후 민주당 평가와 과제	자체	5	별첨 118
119	131220~1228	복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자체	4	별첨 119

나. 토론회 등 개최 (총67회)

순번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1	간담회	13.01.30	연구원 대회의실	미디어 정책 점검	매체별 영향력 평가	
2	토론회	13.02.15	연구원 회의실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관한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민주당의 입장과 해법 마련	
3	간담회	13.03.07	국회의원회관 524호	2015년 쌀 관세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쌀 관세화 논의경과, 2015년 쌀 관세화 이후 전망과 과제 모색	정책위 공동
4	정책포럼	13.03.14	민주정책 연구원	오바마의 빅데이터 선거전략	오바마의 빅데이터 선거 전략 이해, 한국에의 적용 가능 성 검토	
5	정책포럼 [데이터 포럼]	13.03.14 ~07.16	민주정책 연구원	선거승리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전략 모색	데이터 기반 선거의 검토 및 평가, 한국형 데이터 선거의 과제 모색	
6	정책포럼	13.03.26	민주정책 연구원	빅데이터의 선거에의 적용과 과제	빅데이터의 선거 활용 방안, 선거 활용의 선결과제, 민주당의 과제	
7	정책포럼 [사회경제 정책포럼]	13.03.27 ~07.17	국회의원회관 524호	사회경제정책 쟁점도출 및 대안 모색	2012 총·대선 공약진단, 비교평가, 새로운 과제 재정립/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 검토 및 대안 제시	
8	정책포럼	13.03.27	국회의원회관 524호	보편적 복지 범위 어디까지인가?	보편적 복지 담론 이해, 보편복지범위와 재정전략, 보편복지과제	
9	토론회	13.03.29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당 강령 및 정책 개정'을 위한 통일외교안보분야 전문가간담회	2013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통일외교안보 분야 강령정책 개정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10	정책포럼	13.04.03	국회의원회관 524호	부동산 공공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부동산 대책 경기 활성화인가)	주택과 토지의 공공성 확보 방안, 부동산 대책 검토 및 과제	
11	정책포럼	13.04.09	민주정책 연구원	유권자 투표형태의 변화	유권자의 투표형태 변화, 신유권자층 대한 접근방향 모색	

순번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12	정책포럼	13.04.17	국회의원회관 524호	가계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가계부채와 채무조정제도, 서민금융대책 모색, 국민 행복기금 검토	
13	간담회	13.04.19	민주정책 연구원	민주당,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	2012년 총선 및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활로 모색	
14	정책포럼	13.04.23	민주정책 연구원	GIS로 살펴본 민심의 지형도	GIS를 활용한 국내·외 기업의 마케팅 전략사례 및 총선/대선 비교, GIS를 활용한 데이터 선거의 가능성 검토	
15	간담회	13.04.26	민주정책 연구원	민주당의 전략과 정책의제	신임지도부가 지향해야 할 민주당의 정책과 전략 방향 모색	
16	토론회	13.04.30	국회본청 208 호	엔저쇼크와 대응방안	최근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의한 엔저쇼크 대응방안 모색	
17	정책포럼	13.05.01	국회의원회관 524호	노인빈곤해소와 노후 소득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공적 노후소득보장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국민연금 재구조화와 기초연금 재원대책 모색	
18	정책포럼	13.05.07	민주정책 연구원	공공기관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소셜데이터 분석	비정형 데이터의 소셜미디어 마이닝기법을 활용한 온라인커뮤니케이션 방향 도출	
19	정책포럼	13.05.15	국회의원회관 524호	경제민주화 제대로 되고 있는가?	경제민주화 진행 평가와 양극화해소 방안 모색	
20	정책포럼	13.05.21	민주정책 연구원	트위터 분석을 통해 본 소셜선거의 전개 (2010 지방선거에서 18대 대선까지)	6.2 지방선거부터 18대 대선까지 트위터를 통한 소셜 선거의 흐름을 살펴보고, 향후 소셜 선거의 가능성 예측	
21	토론회	13.05.21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민주당 정책비전과 의제: 경제분야	- 새롭게 출범한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경제·민생정책 비전과 의제 수립	
22	정책포럼	13.05.29	국회의원회관 524호	중소기업·중소상인 어떻게 살릴 것인가?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 (규제 및 제도개선) 및 육성 방안 모색	

순번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23	토론회	13.05.31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민주당의 정책 비전과 의제	민주당 정치관련 정책 혁신	
24	토론회	13.06.03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민주당의 정책비전과 의제: 통일외교안보 분야	민주당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비전 및 주요 의제를 제시	
25	간담회	13.06.11	민주정책 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 시민사회 민간싱크탱크 간담회	시민사회 민간연구소와 상호 협력 및 교류 방안 모색	
26	정책포럼	13.06.12	국회의원회관 524호	공공서비스 일자리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비정규직 일자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방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해결 과제 모색	
27	정책포럼	13.06.18	민주정책 연구원	빅데이터를 통한 기업의 Target Marketing 사례	빅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기업의 구체적인 타겟마케팅 사례분석, 민간 DB 데이터 선거에 활용하는 방안 모색	
28	정책포럼	13.06.26	국회의원회관 524호	복지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조세 재정개혁 방안 모색	
29	토론회	13.07.03	영등포당사 대 회의실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30	정책포럼	13.07.10	국회의원회관 524호	서민 주거불안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세입자(렌트푸어)의 주거권 부장방안,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모색	
31	정책포럼	13.07.16	민주정책 연구원	Digital Marketing Advantage	디지털마케팅을 활용한 데이터분석과 선거 전략 활용 방안 모색	
32	정책포럼	13.07.17	국회의원회관 524호	교육 불평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반값등록금과 대학교구조 개혁 문제 해결 방안 모색	
33	토론회	13.07.22	국회의원회관 524호	사상 초유의 세수 결손, 문제점과 대응방안	- 올해 상반기 사상 초유의 세수결손으로 인한 국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안 모색	
34	간담회	13.08.2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13 상반기 사회경제 정책포럼 결산/정기국회 입법의제 선정을 위한 의원간담회	2013 정기국회 입법 및 정책의제 제안(경제민주화, 갑을관계와 중소기업 보호, 주택과 상가보호, 가계부채와 서민금융, 대학등록금, 국민 기초연금, 복지재정)	정책위 공동

순번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35	간담회	13.08.26	민주정책 연구원	2014 지방선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정책과 전략적 차원	이기는 민주당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전략과 정책 모색, 준비방안 등 논의	
36	토론회	13.08.28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 토론회-“밝혀 봅시다! 국가권력 기구의 실제	민주주의와 국가권력기구-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검찰개혁방안 모색	
37	세미나	13.09.09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책정당으로 가는 길- 정당정책연구소에 바란다	정당 정책연구소의 현황, 과제와 발전 방향 모색	여의도 연구소 공동
38	토론회	13.09.12	연구원 대회의실	2017년 대선대비 정치·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세대전략 검토 - 경제· 고용 상황을 중심으로	2017년 유권자구조 변화 및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세대전략 토론회	연구 용역 공모 과제
39	간담회	13.09.13	민주정책 연구원	국민이념성향과 민주당,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조사·분석할 것인가?	국민이념지형의 변화 분석을 통하여 민주당의 대응방안, 그리고 국민의식 및 정책 지향성 조사방안 모색	
40	간담회	13.09.25	민주정책 연구원	민주당의 중기정책· 전략: What? Why? How?	연구원 차원의 지방선거를 대비한 오늘의 민주당의 현 상황 분석 및 지방선거 준비방안 모색	
41	토론회	13.10.04	민주정책 연구원	인터넷 포털 규제에 따른 상생방안	포털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규제가 선행되는 가운데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감독이 필요	
42	토론회	13.10.04	연구원 대회의실	지방분권, 지방자치	주요정책과제 및 당면현안 점검	
43	간담회	13.10.11	연구원 대회의실	2014년 지선대비 일자리·노동분야 핵심 아젠다	2014년 지방선거 대비 일자리· 노동분야 핵심 아젠다 발굴을 위한 정책간담회	정책 자문단
44	초청강연	13.10.15	민주정책 연구원	좋은 사회 (Good Society)와 좋은 자본주의 (Decent Capitalism) 독일 전문가 초청 강연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미래와 좋은 사회 구축 방안	에버트 재단 공동

순번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45	토론회	13.10.22	국회의원회관 328호	당 대표 중국방문 관련 1차전문가간담회	중국방문 일정을 앞두고 한중관계 주요 현안분석	
46	토론회	13.10.24	국회의원회관 328호	당 대표 중국방문 관련 2차전문가간담회	당대표 방중시 중국측 주요 인사와의 면담 등을 위한 주요 내용 논의	
47	간담회	13.10.29	민주정책 연구원	기초연금 및 4대 중증질환	기초연금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 보장방안	
48	토론회	13.11.01	민주정책 연구원	정책연구실 경제분야 자문회의	자문단 상견례 및 2014 지방선거 관련 의견수렴	
49	토론회	13.11.08	연구원 회의실	박근혜정부 통일외교 안보정책 평가 및 민주당의 대응전략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추진방향을 제시	
50	간담회	13.11.13	민주정책 연구원	민주당 홍보 종합플랜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민주당의 정책과 정치활동에 대한 효율적 홍보방안 모색	
51	간담회	13.11.19	연구원 대회의실	정치전문가 간담회	정책 평가와 대응 방향	
52	토론회	13.11.19	국회의원회관 308호	언론연구용역 발표	사회적 의제 여론화 구조 분석	
53	간담회	13.11.22	연구원 대회의실	상향식공천혁신위원회 혁신안 검토	혁신위의 상향식공천방안에 대한 토론	
54	간담회	13.11.25	민주정책 연구원	민주당 현역 광역단체장의 지방선거 전략간담회	민주당 현역 광역단체장의 지선준비 현황과 전략 로드 맵 모색	
55	토론회	13.11.27	연구원 대회의실	지방자치	지방자치 공약 점검	
56	토론회	13.12.03	국회 당대표실	최근 동북아정세와 우리의 외교안보전략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 분석과 우리의 대응 방안 모색	
57	토론회	13.12.04	민주정책 연구원	2014년 지방선거 대비 소상공인 정책공약 개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및 관련 대안 마련 논의	
58	토론회	13.12.04	연구원 대회의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선거구획정의 기준 검토	

순번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59	토론회	13.12.06	연구원 대회의실	정당 여론조사 지지도	여론조사 지지도 진단 및 대응방향 검토	
60	간담회	13.12.10	연구원 대회의실	여론조사전문가 간담회	여론 동향과 분석	
61	간담회	13.12.11	연구원 대회의실	여론조사전문가 간담회	여론 동향과 분석	
62	간담회	13.12.17	연구원 대회의실	정치전문가 간담회	정책 평가와 대응 방향	
63	간담회	13.12.18	민주정책 연구원	국가발전 종합플랜 마련을 위한 전문가 정책 간담회	국가발전 종합플랜 (국가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제언	
64	간담회	13.12.19	민주정책 연구원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지역단위 전달체계 개선방안	
65	간담회	13.12.23	광주광역시	지역전문가 간담회	정책 평가와 대응 방향	
66	간담회	13.12.24	전북 전주시	지역전문가 간담회	정책 평가와 대응 방향	
67	여론 동향 분석	13.07.22 ~ 13.12.22	연구원 내부	여론동향분석	월간 여론동향 분석	14회

다. 교육·연수활동 (총8회)

순 번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1	2013년 1차정당원 해외연수	13.08.07~ 08.14	노르웨이, 이스라엘	방문국의 산업·경제 현장, 선진정치이해/ 의회·정부 관련기관 방문 및 면담, 세미나 등	국무총리실 주관
2	지방자치아카데미	13.09.09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민주당의 복지정책비전	지방선거출마 예정자대상
3	경기도당 지방자치 아 카데미 강의	13.09.13	경기홍원 연수원	지방자치교육	
4	정당·정책연구소 관계자 워크숍	13.11.14~15	안면도 리솜오션캐슬	중앙선관위원회 워크숍	
5	지방자치아카데미	13.11.21	충북시립 상당도서관	민주당의 복지정책	지방선거출마 예정자대상
6	2013 지방자치 아카데미 교육	13.11.30	인천광역시당	민주당과 새누리당 강령정책 비교, 오늘의 정치 및 정책 현안, 그리고 2014 지방선거	
7	충북도당 지방자치 아카데미 강의	13.12.06	충북교통연수원	지방자치 교육	
8	2013 하반기 당직자 직무교육	13.12.16~ 14.01.17	민주정책연구원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엑세스 등	

라. 정책홍보 (총24회)

순번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1	13.01.03	on-line	당원, 기자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논의를 정리하고 대안 제시	민주당 뉴스레터
2	13.03.06	on-line	당원, 기자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북한 핵문제와 박근혜정부 대북정책 추진방향	
3	13.03.13	on-line	당원, 기자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이슈브리핑: 박근혜정부 성장전략과 민주당의 대응방안	
4	13.07.19	on-line	당원, 기자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민주당 뉴스레터
5	13.07.21	뉴스레터 (27호)	이메일 발송 및 페이지게재	사회경제정책포럼, 이슈브리핑, 연구원소식등	
6	13.08.05	on-line	당원, 기자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국정원 개혁방향	
7	13.08.23	on-line	당원, 기자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	이슈브리핑 10호
8	13.09.01	월간노사 저널	잡지	기초연금의 개혁방안 제시	잡지사의 원고의뢰
9	13.09.06	on-line	당원, 기자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이후 남북경협 추진방향	
10	13.09.06	뉴스레터 (28호)	이메일 발송 및 페이지게재	개원 5주년토론회, 이슈브리핑, 연구원 소식등	
11	13.09.23	on-line	당원, 기자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이슈브리핑: 최근 세제개편으로 본 중산층 문제와 대응방안	
12	13.10.08	on-line	당원, 기자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무상보육 서비스의 재설계방안	이슈브리핑 14호
13	13.10.15	on-line	당원, 기자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독일총선 분석: 보수의 혁신	
14	13.10.24	on-line	당원, 기자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기조- 전월세 대책을 중심으로	
15	13.10.28	on-line	당원, 기자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자율적 규제를 통한 상생방안	이슈브리핑 17호

16	13.10.28	뉴스레터 (29호)	이메일 발송 및 페이지게제	독일전문가 초청강연, 이슈브리핑, 연구원소식 등	
17	13.11.05	홍보동 영상	교육자료	국정원, 국방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의혹 관련 등	첨부파일 별첨27
18	13.11.07	on-line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장애인연금의 기초연금통합 논의와 제언	이슈브리핑 18호
19	13.11.13	on-line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이슈브리핑 19호
20	13.11.21	on-line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이슈브리핑 20호
21	13.11.28	홍보동 영상	교육자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정책, 즉 기초연금, 무상보육, 4대 중증 질환 등의 공약파기 홍보동영상	첨부파일 별첨28
22	13.12.11	on-line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사회보험료의 재원조달력을 확인하여 증세대안제시	민주당 뉴스레터
23	13.12.30	on-line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지방재정 건전화 및 재원확충에 관한 제언	
24	13.12.31	뉴스레터 (30호)	이메일 발송 및 페이지 게제	연말연초 인사편지, 이슈프리핑, 연구원소식 등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 (총12건)

순번	발간 일자	종류	제 목	발간 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1	13.05.21	토론회 자료	민주당 정책비전과 의제: 경제분야	자체 발간	500부/ 의원실, 토론회 참석자 등 배포	
2	13.06.10	연구논문	민주당의 경제·민생정책 의제와 비전, 그리고 실천방안	외부 용역	300부	
3	13.08.28	포럼자료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중소상인	자체 발간	국회의원	2013사회경제정책 포럼 자료집(1)
4	13.08.28	포럼자료	부동산과 주거복지	자체 발간	국회의원	2013사회경제정책 포럼 자료집(2)
5	13.08.28	포럼자료	가계부채와 서민금융	자체 발간	국회의원	2013사회경제정책 포럼 자료집(3)
6	13.08.28	포럼자료	국·기초연금과 복지재정	자체 발간	국회의원	2013사회경제정책 포럼 자료집(5)
7	13.08.28	토론회 자료	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 토론회- “밝혀 봅시다!” 국가권력 기구의 실체	자체 발간	현장배포	
8	13.08.28	연구 제안서	2013 정기국회·국정감사 의제제안 -민생살리기 6대 분야-	자체 발간	국회의원	
9	13.08.28	포럼자료	일자리·비정규직	자체 발간	국회의원	2013사회경제정책 포럼 자료집(4)
10	13.08.28	포럼자료	대학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	자체 발간	국회의원	2013사회경제정책 포럼 자료집(6)
11	13.09.01	연구논문	한국의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중세 전략 연구: 복지 선진국의 사례를 기초로 '한국형' 조세개혁 방안 모색	외부 용역	300	
12	13.11.19	연구논문	2017년 대선대비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세대전략 검토 - 경제·고용상황을 중심으로	외부 용역	10부 [원장단 보고]	

바. 그 밖의 주요활동 (총19건)

순 번	일 자 (기 간)	장 소	활 동 명	주 요 내 용	비 고
1	13.02.01~ 04.03	중앙당	민주당혁신위원회 파견지원	민주당혁신위원회의 활동 지원	
2	13.02.04~ 25	민주정책 연구원	상반기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주제 / 민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민주당 당직자 대상	
3	13.02.04~ 28	민주정책 연구원	상반기 연구용역 과제 공모	외부전문가, 싱크탱크, 시민사회단체 대상	
4	13.02.08~ 05.04	중앙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민주당 강령 초안 및 최종안 작성 : 시대정신, 정치· 경제·사회복지·, 통일외교 등 분야의 정책아젠다 선정	
5	13.06.18~ 08.24	중앙당	기초선거정당공천제찬반 검토위	정당공천제 찬반검토	
6	13.06.18~ 19	서울 콘래드호텔	글로벌 컨퍼런스 '키(K.E.Y) 플랫폼 2013' 참석	2018 글로벌 시나리오, 창의적 자본주의, 사회적투자, 공유경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에너지 등 세계 동향과 전망	머니투데이 창사 14주년 기념
7	13.06.27~ 09.30	에버트재단	내일의 경제(EOT) 운영위원회	사회경제체제 모델 검토, 한국적 상황의 포럼 운영 논의	
8	13.07.29	민주정책 연구원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실무자 간담회		
9	13.08.14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민주정책연구원, 민주당 노동·임금 TF 공동주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	전세계 소득주도 성장에 관한 정책변화와 한국적 함의	
10	13.08.15	민주정책 연구원	내부활동	가을 정기국회 복지노동 입법과제 작성	연구기획 실 공동
11	13.08.17~ 18	일산호수공원 꽃박람회장 2층 프레스룸	2013대한민국정책컨벤션& 페스티벌-싱크탱크토론회	기조연설(변재일 원장) 정책지식생태계라운드 토론회 발제	

순번	일자 (기간)	장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고
12	13.09.06	민주정책 연구원	내부활동	지방자치아카데미 필수교재 제작	
13	13.10.10~ 22	민주정책 연구원	하반기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주제 / 외부전문가, 싱크탱크, 시민사회단체, 민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민주당 당직자 대상	
14	13.10.23	민주정책 연구원	내부활동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한 대응전략	
15	13.11.12~ 25	민주정책 연구원	하반기 연구용역 과제 공모	외부전문가, 싱크탱크, 시민사회단체 대상	
16	13.11.19.~ 12.10	민주정책 연구원	연구원 BI 제작	연구원의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구축	
17	13.11.26.~ 2014.1.17	민주정책 연구원	연구원 웹사이트 개편	국민적 소통공간과 정책자료의 활발한 공유를 위한 디자인 및 사용편의성 제고	
18	13.12.10	민주정책 연구원	국회 정개특위 지원TF	정치개혁과제 검토	
19	13.12.18	민주정책 연구원	내부활동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반면교사	

【별첨 1】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기초연금 도입논의의 검토 및 제언

- ▣ 연구기간 : 2013년 1월 1일 ~ 1월 30일(1개월)
-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p>▶ 연구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현재 논의되는 쟁점들 중 공적부양의 의미 및 재원조달방법, 공적연금의 재구조화 등을 간략히 검토한다. 또한 인수위가 제안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초연금도입방안 중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을 빈곤예방정책인 국민연금과의 관계속에서 재검토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지속가능성'과 '정합성'을 높일 것을 제안
<p>▶ 연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란 중인 기초연금의 현황을 정리하고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둘러싼 논점 및 문제점을 지적- 격차와 불공평의 혼돈이 가져온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방안의 문제점 지적
<p>▶ 연구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논리개발- 사전 기여방식의 국민연금 강화조치 개발- 특수직역의 '이중부담'문제 해소 지적- 국민연금수급자와의 형식적 공평과 실질적 공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민주정책 이슈브리핑(2013-2호)발간

【별첨 2】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정치혁신: 평가와 과제

- ▣ 연구기간 : 2013년 1월 2일 ~ 1월 15일(15일)
- ▣ 연구분야 : 정치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2012년 대선에서 정치혁신 이슈에 대한 평가와 민주당의 과제 검토
- ▶ 연구내용
 - 정치혁신 요구의 배경, 대선에서 정치혁신 이슈에 대한 평가와 민주당의 과제
- ▶ 연구성과
 - 연구원 발표

【별첨 3】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새로운 출발을 위한 연구원 정상화 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1월 2일 ~ 1월 18일(17일)
- ▣ 연구분야 :
- ▣ 연구방법 : 자체(간담회 및 문헌연구)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정당 및 네트워크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 제시, 연구원의 위상 제고▶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원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선거 당시 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성찰, 연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 부재, 중장기적 전략기획 수행 부재 등- 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제시 : 통합네트워크 체계 마련, 연구원의 부서 별 업무 분장 등- 연구원의 위상 제고 방안 및 역할 제시 : 연구원의 독립성 강화, 협업체계 구축 등▶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원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 : 당헌 및 당규 개정 반영- 연구원 내 부처 간 업무 역할의 명확화 및 분담

【별첨 4】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안철수현상’ 분석과 대응 방향

- ▣ 연구기간 : 2013년 1월 2일 ~ 1월 20일(18일)
- ▣ 연구분야 : 정무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안철수 현상의 분석 및 대응방향
- ▶ 연구내용
 - 안철수 현상의 원인 분석
 - 안철수 현상에 대한 대응 과제
- ▶ 연구성과
 - 국회의원들에게 배포
 - 각 언론에 기사화

【별첨 5】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제18대 대선과 정치혁신, 그리고 민주당의 대응방향

- ▣ 연구기간 : 2013년 1월 2일 ~ 1월 28일(27일)
- ▣ 연구분야 : 정치
- ▣ 연구방법 : 자체 공동연구(간담회 및 문헌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8대 대선에 대한 정치적 의미 분석을 통한 정치혁신 방향 제시

▶ 연구내용

- 제18대 대선 결과 분석 및 정치적 의미 분석 : 안철수 현상, 대결구도, 세대별 지지의 차이, 개인지향적 투표 행태의 표출,
- 정치혁신의 필요성, 정치혁신의 방향 및 핵심의제 제안 : 민생을 위한 정치혁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정치혁신, 비용 절감을 위한 정치혁신 등

▶ 연구성과

- 국회 및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논의의 쟁점들 제공 및 활용
- 지도부의 정치활동에의 참고자료 활용

【별첨 6】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인사청문회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 ▣ 연구기간 : 2013년 1월 5일 ~ 2월 4일(1개월)
- ▣ 연구분야 : 행정·법사
-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현행 인사청문회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제시

▶ 연구내용

- 인사청문회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사전검증 활동의 법적 근거의 미비, 부족한 인사청문회 기간, 인사청문 보조기관의 부재 등
- 미국 사례 분석 :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
- 인사청문회의 개선방안 제시 : 차관급 및 공기업 기관장 급까지 확대 시행, '소관 상임위원회'의 일원화, 인사청문기간 확대 등

▶ 연구성과

- 박근혜 정부 하의 인사난맥상 해소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 민주당 국회의원의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의 참고자료 활용

【별첨 7】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국무총리제 특성

- ▣ 연구기간 : 2013년 1월 5일 ~ 2월 14일(1개월 9일)
- ▣ 연구분야 : 정무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국무총리의 역할과 권한 변동의 원인 분석
- ▶ 연구내용
 - 국무총리의 정치적, 제도적, 개인적 자원과 역할/권한 변동
 - 국무총리의 역할/권한의 실질화를 위한 제도 개선
- ▶ 연구성과
 -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의정연구』에 발표

【별첨 8】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한국 권력구조 특성

- ▣ 연구기간 : 2013년 1월 5일 ~ 2월 29일(1개월 24일)
- ▣ 연구분야 : 정무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혼합대통령제로서 한국권력구조의 특성 및 함의
- ▶ 연구내용
 - 한국 권력구조의 특성
 -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 ▶ 연구성과
 -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현대정치연구』에 발표

【별첨 9】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민주당 공천제도 당헌당규의 변화

- ▣ 연구기간 : 2013년 1월 20일 ~ 1월 24일(5일)
- ▣ 연구분야 : 정치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혁신위 공천제도 혁신▶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당의 역대 공천제도 관련 당헌당규의 변화 정리▶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혁신위 회의 자료

【별첨 10】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정당 지도체제 개혁 과제

- ▣ 연구기간 : 2013년 1월 20일 ~ 2월 14일(1개월 4일)
- ▣ 연구분야 : 정무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정당 지도체제의 분석과 리더십 강화
- ▶ 연구내용
 - 지도체제의 분류 및 장단점 분석
 - 당 지도체제 혁신 방안
- ▶ 연구성과
 - 민주당 혁신위원회 제출
 - 제안 내용에 따른 민주당 지도체제 변경 완료

【별첨 11】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공천제도 외국사례

- ▣ 연구기간 : 2013년 1월 26일 ~ 1월 28일(3일)
- ▣ 연구분야 : 정치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혁신위 공천제도 혁신 외국사례 정리▶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영국, 독일의 공천제도▶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혁신위 회의 자료

주제_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전략

- ▣ 연구기간 : 2013년 1월 28일 ~ 1월 31일(3일)
- ▣ 연구분야 : 통일외교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추진되는 데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극대화됨
- 한반도의 현 정세를 면밀히 진단하고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 등을 전망함으로써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 연구내용

- 유엔안보리 결의 2087호 분석
- 북한의 3차 핵실험 전망
- 당 차원의 대응방안
- 새 정부의 과제

▶ 연구성과

-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당 차원에서 전략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

【별첨 13】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당 리더십 강화

- ▣ 연구기간 : 2013년 2월 1일 ~ 2월 4일(5일)
- ▣ 연구분야 : 정치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정치혁신위 당리더십 강화 혁신방안 정리
- ▶ 연구내용
 - 당리더십 강화의 배경과 혁신 및 실행 방안
- ▶ 연구성과
 - 정치혁신위 회의 자료

【별첨 14】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정당 정책연구소 혁신 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2월 1일 ~ 2월 17일(16일)
- ▣ 연구분야 : 정무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민주정책연구원 혁신 방안 도출
- ▶ 연구내용
 - 민주정책연구원 현황 분석 및 혁신 방안
 - 당헌/당규 개정안
- ▶ 연구성과
 - 민주당 혁신위원회 제출
 - 제안 내용에 따른 당헌/당규 개정 완료

【별첨 15】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민주당의 경제·민생정책 의제와 비전, 실천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02월 01일 ~ 06월 10일(130일)
-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선 패배 이후 경제정책 노선과 비전 재정립 필요성 대두
- 대선 공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 노선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비전 및 핵심 정책과제 제시

▶ 연구내용

- 민주당 대선 경제, 민생분야 공약 평가
- 경제정책 노선과 비전의 재정립
 - 1) 진보의 혁신: 민생진보
 - 2) 민생진보의 3대 정책비전
 - 3) 민생진보의 신성장모델
- 핵심정책 과제

▶ 연구성과

- 연구용역보고서로 민주당 경제분야 비전과 정책노선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

【별첨 16】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의 현대화

- ▣ 연구기간 : 2013년 2월 5일 ~ 2월 12일(8일)
- ▣ 연구분야 : 정치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민주당의 혁신을 위한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의 현대화 벤치마킹
- ▶ 연구내용
 -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
- ▶ 연구성과
 - 연구원장 보고

【별첨 17】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정책위원회 혁신 방향

- ▣ 연구기간 : 2013년 2월 5일 ~ 2월 17일(12일)
- ▣ 연구분야 : 정무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당 정책위원회 혁신 방향 도출▶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위원회 현황 분석 및 혁신 방안- 당헌/당규 개정안▶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당 혁신위원회 제출- 제안 내용에 따른 당헌/당규 개정 완료

【별첨 18】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정당 행정 혁신 방향

- ▣ 연구기간 : 2013년 2월 7일 ~ 2월 17일(10일)
-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민주당의 운영 혁신 방안 도출
- ▶ 연구내용
 - 민주당 인사/정보화/평가체제/재정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
 - 당헌/당규 개정안
- ▶ 연구성과
 - 민주당 혁신위원회 제출
 - 제안 내용에 따른 당헌/당규 일부 개정

【별첨 19】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청년/대학생 정당 조직 강화 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2월 10일 ~ 2월 17일(7일)
-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민주당의 청년/대학생 조직 강화 방안
- ▶ 연구내용
 - 민주당 청년/대학생 조직 현황 및 규정/활동 분석
 - 당헌/당규 개정안
- ▶ 연구성과
 - 민주당 혁신위원회 제출
 - 제안 내용에 따른 당헌/당규 일부 개정

【별첨 20】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박근혜 정부의 성장전략과 민주당의 대응방향

- ▣ 연구기간 : 2013년 02월 01일 ~ 02월 28일(1개월)
-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現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정부여당의 경제 민주화 공약 불이행과 양적인 성장 우선론에 대한 문제 제기
- 작금의 구조적인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한 민주당의 성장 방법을 제시

▶ 연구내용

- 현 경제상황 진단
- 보수의 성장론의 문제점
- 민주당의 성장전략
 - 1) 경제민주화의 틀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성장론을 펴야 함
 - 2) 성장률보다는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야 함
 - 3) 소득불평등 해소
 - 4) 사회적 대타협

▶ 연구성과

- 민주당의 성장담론 기초자료로 활용됨
- 이슈브리핑 제6호로 발행되어 당원, 국회의원, 기자 등에게 배포됨

주제_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해법과 민주당의 대응방향

- ▣ 연구기간 : 2013년 2월 15일 ~ 2월 19일(4일)
- ▣ 연구분야 : 국방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해당지역인 강정마을을 넘어 전국적 갈등양상으로 증폭되는 가운데 제10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역할과 대안 제시가 요구됨
- 당 차원에서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함

▶ 연구내용

-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찬반 입장의 논거
- 해군기지 문제 관련 민주당이 처한 상황 분석
- 당의 전략적 대응방향
- 구체적 실천과제

▶ 연구성과

-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 정립을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 등 대응 방향을 당 지도부에 제시

주제_ 민주통합당의 사회비전과 의제 그리고 실천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2월 20일 ~ 4월 20일(2개월)
-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행복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복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함
- 현재 한국의 복지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21세기 앞으로의 한국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고 할 권리”(제10조)를 보장하고,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의 의무(제34조)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함

▶ 연구내용

- 한국은 어떤 복지국가인가를 분석하고 새로운 이념을 제시
- 한국 복지국가의 현실 진단(국제비교)
- 생활보장형 복지국가의 구현 원칙 및 내용

▶ 연구성과

- 민주당의 수권정당이자 정책정당으로서의 위상을 복원 내지는 제고하기 위한 정책보고서로서 활용함으로써 국민적 지지와 관심을 유도
-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물론 당 지도부의 정책활동에 있어서 그 기초 자료로서 활용

주제_ 민주정책연구원 혁신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2월 23일 ~ 4월 23일(2개월)
- ▣ 연구분야 :
- ▣ 연구방법 : 자체(간담회 + 문헌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책연구원의 당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당의 유관 기구들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세·전략과 정책이 연계되는 생산물을 산출할 수 있는 조직·운영체계를 제안

▶ 연구내용

- 민주정책연구원의 그동안의 활동과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 연구원 혁신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역할 제안 : 정책과 전략에 있어서의 알람, 정책정당화의 주춧돌, 시민 및 차세대 지도자 양성기관, 전문가 및 활동가와의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역할 등
- 연구원의 조직체계와 운영방안 모색
-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연구성과

- 연구원의 정상화, 즉 혁신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채택

주제_ 북한 핵문제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 ▣ 연구기간 : 2013년 2월 25일 ~ 3월 5일(10일)
- ▣ 연구분야 : 통일외교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출범초기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난관에 직면한 상황임
- 북핵문제를 포괄적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 역할 등 박근혜정부가 추진해나가야 할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 연구내용

- 북한의 3차 핵실험 특징
-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 반응
- 전략적 고려사항
- 박근혜정부 대북정책 추진방향

▶ 연구성과

-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제시

주제_ 민주당의 정책 비전과 의제

- ▣ 연구기간 : 2013년 03월 01일 ~ 05월 10일(70일)
- ▣ 연구분야 : 정치·경제·사회·통일외교안보
-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5·4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이 가야 할 정책 비전과 의제를 제시
- 대선 패배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정치·경제·사회 통일외교안보 분야별 비전과 실행과제를 제시

▶ 연구내용

- 정치·경제·사회·통일외교안보 분야별 대선공약 평가
- 정치·경제·사회·통일외교안보 분야별 비전 재정립
- 정치·경제·사회·통일외교안보 분야별 정책기조 재정립
- 정치·경제·사회·통일외교안보 분야별 실행과제

▶ 연구성과

- 연구원장 및 당대표 보고

주제_ 2013년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방향 검토

- ▣ 연구기간 : 2013년 03월 15일 ~ 03월 28일(13일)
-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 취임 첫째 향우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2013년 경제 운용계획을 발표
-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난 정부와 유사한 준비 안 된 경제운용계획을 비 판하고 문제점을 지적

▶ 연구내용

- 전반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문제점 지적
- 부실 경제전망 논란
-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방안이 빠져 있음
- 창조경제에 대한 모호한 개념부터 정립함이 우선임
- 경제민주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문제는 추진할 동력이 대통령 주변 어디에도 없음
-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경기불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히든카드를 잇따라 발표했는데 이정도 경제정책 방향을 가지고 현 위기상황을 돌파해 나가겠다는 것은 너무도 안이함을 지적

▶ 연구성과

- 연구원장 및 당 지도부에 보고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최근 경제상황 인식과 거시경제정책 검토

- ▣ 연구기간 : 2013년 04월 01일 ~ 04월 09일(10일)
-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現 경기상황을 보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입장 차이가 커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헛갈려 하고 있음- 경기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추경 문제나 금리 문제 등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정확한 전망과 정책적 고려에 대한 판단 필요▶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외적으로 유로존 위기가 계속되고, 주요국 양적완화에 따른 자본유 출입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지속. 대내적으로 7분기 연속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성장 흐름이 장기화- 現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진단-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ul style="list-style-type: none">1) 추경의 적절성 분석2) 금리인하에 대한 적절성 분석- '아베노믹스'와의 비교▶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위원회 주체 내부토론회 발제문

주제_ 대안적 사회경제모델의 모색 - 영미, 독일, 스웨덴모델을 중심으로 -

- ▣ 연구기간 : 2013년 04월 01일 ~ 05월 13일(13일)
-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미국의 자유시장경제 모델은 발전의 원동력이 됐지만 2000년대에 들어 양극화, 성장침체 등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했음
- 국가발전모델의 세 가지 유형, 즉 영미식 자유시장경제 모델,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스웨덴식 사민주의 모델의 장단점을 분석함

▶ 연구내용

- 국가발전모델의 유형별 분석
 - 1) 영미식 자유시장경제
 - 2)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
 - 3) 스웨덴 모델
- 대안적 사회경제체제의 모색

▶ 연구성과

- 연구원장 보고 및 국가발전모델 논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_ 민주당의 혁신전략과 실천방안(비공개)

- ▣ 연구기간 : 2013년 4월 2일 ~ 5월 3일(1개월 1일)
- ▣ 연구분야 : 정치
- ▣ 연구방법 : 자체(간담회 + 문헌연구)

연구·개발내용
<p>▶ 연구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총선고하 대선 패배 이후, 그리고 5·4 전당대회에서의 신임지도부 출범 시 민주당과 신임지도부가 실천해야 할 전략과 그에 따른 액션플랜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정당,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모색
<p>▶ 연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사회와 정치지형의 변화- 유권자 지형변화와 시사점 : 유권자의 투표행태 변화, 유권자의 정책지향성 변화 등- 민주당 혁신의 전략적 기초와 목표 : 당의 정체성 및 정책지향성 제시, 자성과 자기개혁 강조, 리더십 창출 등- 민주당이 지향해야 할 정당상 : 정책·대안정당, 참여·네트워크정당, 생활 밀착 정당 등- 민주당 혁신을 위한 10대 Action Plan 제안
<p>▶ 연구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임지도주의 민주당 재생을 위한 전략과 액션플랜으로 제시,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맥킨지보고서 관련 민주당의 대응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04월 20일 ~ 04월 24일(4일)
-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국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고, 새로운 성장공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맥킨지 보고서를 분석할 필요
- 이를 통해 현재 담론 수준으로 흩어져 있는 경제성장 방식에 관한 논의를 “민주당의 새로운 경제성장 대안”으로 모아서 제시할 필요

▶ 연구내용

- 맥킨지 보고서 분석
 - 1) 한국경제에 ‘피로증후군’이 만연해 있다고 진단
 - 2) 보고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기한 문제점은 ‘중산층의 재무위기’임
 - 3) 한국에 新성장공식이 필요
- 큰 틀에서 맥킨지 보고서가 제시한대로 한국이 중산층 가구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균형있는 경제성장을 이뤄야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함
- 현재 담론 수준으로 흩어져 있는 경제성장 방식에 관한 논의를 “민주당의 새로운 경제성장 대안”으로 모아서 제시

▶ 연구성과

- 연구원장 보고 및 내부보고서로 활용

주제_ 한국의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 전략 연구

- 복지 선진국의 사례를 기초로 ‘한국형’ 조세개혁 방안 모색 -

- ▣ 연구기간 : 2013년 5월 1일 ~ 8월 30일(4개월)
-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p>▶ 연구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보다 먼저 복지국가를 발전시켜온 선진 복지국가들이 어떻게 복지제도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한국이 향후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복지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성 및 시사점 도출 <p>▶ 연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덴, 영국, 일본 등의 선진 복지국가의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전략 사례 - 산업화 초기와 민주화 이후 조세체계의 특징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 단계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수준과 조세구조의 개편방안(조세수입규모, 일반재정의 직접세와 간접세의 세목과 구조, 조세지출구조 등)과 이를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세전략을 제시 <p>▶ 연구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정책이 복지국가와 결합하는 다양한 절차와 방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최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경제적, 복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조세정책의 조합을 제공

주제_ 2017년 대선대비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세대전략 검토

- 경제·고용상황을 중심으로 -

- ▣ 연구기간 : 2013년 5월 01일 ~ 8월 31일(4개월)
- ▣ 연구분야 : 환경노동분야
- ▣ 연구방법 : 외부용역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7년 정치지형 변화 예측 및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
- 세대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과 세대별 연대전략 가능성과 조건 검토

▶ 연구내용

- 기존 세대논의 분석 및 역대 대선과 세대갈등에 대한 경험적 분석
- 세대별 고용사정과 생활상태 비교분석
- 세대전략 제언

▶ 연구성과

- 2017년 유권자구조 변화 및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세대전략을 모색함으로써 2014년 지방선거와 2017년 대선에 대비한 정책과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별첨 33】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보수진영의 여론형성기능에 대한 민주당의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 ▣ 연구기간 : 2013년 5월 3일 ~ 12월 14일(7개월)
- ▣ 연구분야 : 정치
-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여론 대응을 위한 정치 의제의 생애주기 파악
- ▶ 연구내용
 - 각 매체별 정치 의제의 생애주기 특징 분석 및 파급 유형 도출
- ▶ 연구성과
 - 연구원 및 의원 보고

【별첨 34】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당원생활정책포럼, “대표가 갑니다!”

▣ 연구기간 : 2013년 5월 4일 ~ 5월 8일(5일)

▣ 연구분야 :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당 대표와 당원간의 소통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
- 중앙과 지역사회간, 중앙당과 시·도당간 소통 및 공감 확대를 위한 방안 제시

▶ 연구내용

- 당원생활정책포럼을 통한 생활·민생정책 방향 검토
- 당원과 함께 함과 동시에 시·도당 단위의 이동당사 운영을 통한 민원실 운영방안을 로드맵으로 제안

▶ 연구성과

- 당 대표 및 지도부의 정당활동 참고자료로 활용

【별첨 35】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연구직 성과관리시스템

- ▣ 연구기간 : 2013년 5월 10일 ~ 5월 27일(13일)
- ▣ 연구분야 : 정무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민주당 연구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 연구내용
 - 성과관리시스템의 목적과 개요, 사례
 - 성과관리시스템 내용
- ▶ 연구성과
 - 민주정책연구원장 및 정책위 보고

주제_ 정책정당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과제

- 민주정책연구원의 입장 -

- ▣ 연구기간 : 2013년 5월 10일 ~ 5월 29일(20일)
- ▣ 연구분야 :
- ▣ 연구방법 : 자체(문헌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한 정당 정책연구소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정을 통하여 정당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제언

▶ 연구내용

- 정책정당화와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위상
- '현실'에 근거한 정당 정책연구소의 평가 필요성
- 정당정책연구소의 개혁방향과 실천방안

▶ 연구성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한국정당학회 공동세미나 토론문

【별첨 37】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안철수 신당의 의미와 가능성

- ▣ 연구기간 : 2013년 5월 20일 ~ 6월 20일(1개월)
- ▣ 연구분야 : 정무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안철수 신당의 의미와 가능성 분석
- ▶ 연구내용
 - 안철수 신당의 가능성 분석
 - 안철수 신당 시나리오 분석
- ▶ 연구성과
 - 민주정책연구원장 및 당 지도부 보고

주제_ 정당정책연구소 관련법 개정의 목적과 주요 내용

- ▣ 연구기간 : 2013년 5월 24일 ~ 6월 25일(1개월)
- ▣ 연구분야 : 법
- ▣ 연구방법 : 자체(간담회 및 문헌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당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 역량 및 교육기능 강화, 운영 자율성, 재정 안정성 및 투명성 담보 등을 통한 정당 정책연구소의 위상과 역할 제고

▶ 연구내용

-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 주요 내용 : 정책연구소의 독립채산제 형식으로서의 전환, 법인격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제고 등
- 여의도연구소의 입장 검토 : 시민정치교육 신설 주장, 활동실적 및 연구결과 공개 의무화, 수익사업 신설 의견 등

▶ 연구성과

- 민주당 국회의원의 입법과정에서의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개성공단 사태 이후 남북관계 : 현황 및 과제

- ▣ 연구기간 : 2013년 5월 28일 ~ 6월 1일(4일)
- ▣ 연구분야 : 통일외교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개성공단이 북측의 통행제한 조치에 이은 남측 인력의 전원 철수로 2003년 착공 이후 10년 만에 사실상 잠정폐쇄 조치에 들어감
-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면밀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민주당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함

▶ 연구내용

- 개성공단의 잠정폐쇄 과정 및 남북한 당국 입장
- 개성공단 사업과 남북관계 전망
- 개성공단 사태 관련 당의 전략적 대응기조
- 제언

▶ 연구성과

- 개성공단 사태를 둘러싼

주제_ 민주당 분야별 정책추진 방향 - 대선평가보고서 및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 ▣ 연구기간 : 2013년 06월 01일 ~ 07월 09일(39일)
- ▣ 연구분야 : 경제·사회·통일외교안보
-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민주당정책연구원에서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분야별 연속토론회 『민주당 정책 비전과 의제』 및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주당의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정리

▶ 연구내용

-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당의 정책 기조전환의 필요성 검토
- 민주당 경제정책 추진 방향
- 민주당 사회정책 추진 방향
- 민주당 통일·외교·안보정책 추진 방향

▶ 연구성과

- 연구원장 및 지도부 보고 및 당의 정책기조 관련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_ 박근혜정부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평가와 대응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6월 03일 ~ 6월 11일(7일)
- ▣ 연구분야 : 지식경제, 환경노동분야
-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의 문제점 분석 및 평가
 - 고용률 제고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대안 및 입법과제 제시
- ▶ 연구내용
 -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의 평가
 - 민주당 정책대안 및 입법과제
- ▶ 연구성과
 - 원장단 등 지도부에 보고되어 고용률 제고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별첨 42】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중앙당 현 상황 및 당무 정상화 방안

▣ 연구기간 : 2013년 6월 10일 ~ 6월 27일(18일)

▣ 연구분야 :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역정책관 인사 발령에 따른 갈등의 해소 및 당무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연구내용

- 지역정책관제도의 취지

- 지역정책관제도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검토

- 당무 정상화 방안 제시 : 중앙당 및 연구원의 역할, 당대표·지역정책관 간담회를 통한 대책 논의, 당대표·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한 지역정책관 활동 지원 및 협조 요청

▶ 연구성과

- 당 지도부 및 당 인사위원회(사무총장)의 사무직당직사 인사개편 및 당무정상화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지역정책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방안

▣ 연구기간 : 2013년 6월 15일 ~ 7월 16일(1개월)

▣ 연구분야 :

▣ 연구방법 : 자체(간담회 및 문헌연구)

연구·개발내용
<p>▶ 연구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경쟁능력 강화 및 실천을 통한 '찾아가서 함께하는 민주당의상' 구축 <p>▶ 연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당정협의회 :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및 정책공약 실행 점검·공유 방안 마련 - 민주정치대학원(지방정치과정) : 민주적 자질과 소양, 정책과 직책수행 전문성 교육을 통한 지도자 발굴 및 양성을 위한 과정의 개설형식, 진행방식, 강의내용 등 검토 - 지역생활밀착형 정책 찾기 : 정책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역할과 위상 제고를 위한 생활정책 발굴을 위한 방안 마련 및 검토 - 지역사회정책네트워크 : 지역정책역량 강화 및 지역맞춤형 정책·전략 개발을 위한 방안 마련 - 민주시민커뮤니티센터 : 당의 사회적지지 기반 구축 및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방식 및 활동방식 마련 및 검토 <p>▶ 연구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무의 효율화 및 2014 지방선거 대비 지역정책활동 강화를 위한 활동자료로 활용

주제_ 기초연금 개혁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6월 19일 ~ 7월 19일(1개월)
-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궁극적 목적은 노후빈곤을 구제하기 위함
- 그러나 노후빈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비기능을 가진 국민연금을 이미 도입하여 운영 중으로 조세방식의 기초연금과 보험료방식의 국민연금 간의 정합성을 높여 사회적 혼란을 피하는 것이 목적

▶ 연구내용

- 기초연금 설계의 전제조건은 국민연금제도임을 논리적으로 전개
- 조기노령연금에 유지한 기초연금 문제점 지적
- 최저가입기간(10년)의 연장조치의 필요성 언급
- 보험원리에 맞지 않은 탈퇴일시금제도 폐지 제안
- 납부예외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연금크레딧 제안

▶ 연구성과

- 민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핑(2013-8호)발간

주제_ 민주정책연구원의 존재감 제고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 연구기간 : 2013년 6월 20일 ~ 7월 9일(20일)

▣ 연구분야 :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책정당화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원의 역할 모색
- 정책·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과 전략 및 교육 경쟁력 제고

▶ 연구내용

- 각 부서별 비전 및 플랜 제시
- 핵심 사업 검토 : 정책네트워크 사업(사회경제정책포럼), 정책플랫폼 사업(지역 정책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정책지원사업, 정책간담회, 유권자 지형 분석, 지방 자치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 등
- 수시 사업(단기) 검토 : 월례 정책토론회 개최, 이슈브리핑 발간, 정책간담회 개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
- 운영체계 검토 : 원장단회의 정례화, 실별회의 등

▶ 연구성과

- 대선에서의 역할 부재 비판에 따른 연구원의 제 역할과 존재감 찾기의 기본자료

【별첨 46】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 활동경과 및 결정요지

- ▣ 연구기간 : 2013년 6월 20일 ~ 7월 24일(34일)
- ▣ 연구분야 : 정치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정당공천제찬반검토위 결과 보고
- ▶ 연구내용
 - 정당공천제찬반검토위 활동경과 및 결정요지
- ▶ 연구성과
 - 최고위 보고

【별첨 47】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안)

- ▣ 연구기간 : 2013년 6월 20일 ~ 7월 30일(40일)
- ▣ 연구분야 : 정치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 당론사항 및 검토사항 보고
- ▶ 연구내용
 -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 당로사항 및 보완사항
- ▶ 연구성과
 - 최고위 보고

【별첨 48】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자료

- ▣ 연구기간 : 2013년 6월 20일 ~ 8월 25일(66일)
- ▣ 연구분야 : 정치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쟁점 사항 총정리
- ▶ 연구내용
 -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현황 및 쟁점
- ▶ 연구성과
 - 최고위 보고

【별첨 49】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노동분야 입법과제

- ▣ 연구기간 : 2013년 6월 24일 ~ 7월 2일(7일)
- ▣ 연구분야 : 환경노동분야
-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민주당 주요 노동분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 소속 국회의원 입법활동에 기초자료 제시

▶ 연구내용

- 노동분야 주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노동분야 주요 정책의 해외사례 분석
- 민주당 노동분야 입법과제 제시

▶ 연구성과

- 노동분야 주요 정책들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를 연구하여 소속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에 기초자료로 제시함

【별첨 50】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영국 노동당 정책전당대회 사례

- ▣ 연구기간 : 2013년 7월 1일 ~ 7월 4일(4일)
- ▣ 연구분야 : 정치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민주당 전당원투표 관련 참고 자료
- ▶ 연구내용
 - 영국 노동당의 정책전당대회
- ▶ 연구성과
 - 연구원장 보고

주제_ 2013 정기국회·국정감사 의제 제안 - 민생살리기 6대분야 -

- ▣ 연구기간 : 2013년 7월 1일 ~ 8월 25일(1개월 25일)
- ▣ 연구분야 : 기획재정,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부(금융), 국토교통(부동산)
- ▣ 연구방법 : 자체(정책간담회+문헌연구)

연구·개발내용
<p>▶ 연구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 정기국회 주요 정책·입법의제, 국정감사 주요 이슈 개발 및 제안 <p>▶ 연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의제 및 전략 : 을(乙)살리기 입법의제, 민생살리기 입법의제, 민주주위 살리기 입법의제, 비정규직 실태와 대책,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약속, 이명박 정부 실정과 권력형 3대 비리, 언론공정성위기 등 - 민생살리기 입법 및 정책의제 제안(사회경제포럼에서 제시된 사회경제 현안 중심의 입법의제) : 경제민주화,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 부동산과 주거보기, 가계부채와 주거복지, 대학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 국민·기초연금, 복지재정 등 <p>▶ 연구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국회 민생의제 입법화 및 국정감사 이슈 부각 : 부자감세 철회(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자원 확대(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여세장영업자 세부담 경감 등) - 민생살리기 예산 예산확보 기여 : 주거복지 예산확대(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예산 확대,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증액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주제_ 민주당 중기전략 -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의제와 액션플랜 -

- ▣ 연구기간 : 2013년 7월 2일 ~ 8월 16일(1개월 15일)
- ▣ 연구분야 : 정치
- ▣ 연구방법 : 자체(간담회 및 문헌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3 정기국회 대비 민주당의 기본 기조 및 입법의제의 방향성 제시
- 2013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기본전략과 의제 제안

▶ 연구내용

- 2013 정기국회, “국민소통, 현실공감, 민생국회” 방향성 제시
- 액션플랜의 기본틀 제안
- 정기국회의 입법의제 및 전략
- 국정감사 의제 및 전략

▶ 연구성과

- 민주당 원내 활동을 위한 기본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민주당 강령과 정책, 그리고 2014 지방선거

- ▣ 연구기간 : 2013년 7월 8일 ~ 8월 8일(1개월)
- ▣ 연구분야 : 정치
- ▣ 연구방법 : 자체(간담회 및 문헌연구)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령·정책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가치 및 정책지향성을 분석, 지방선거에서 목표 및 역할 제시▶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정치의 의미와 책임정당으로서 정당의 역할- 정당에서 강령이 지니는 의미 : 특정 정당이 지향하는 국가상 반영, 유권자들의 요구 반영, 선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초자료 등- 지방선거에서 목표 및 역할 : 유권자들의 개인지향적 투표 성향을 반영한 공약, 생활밀착형 정책 제안 등▶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선거 기획단의 전국순회 정책토론회 발제문(경남도당 주최)- 지역사회에서의 출마예정자 교육자료 활용

주제_ 당 운영시스템 정상화 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7월 15일 ~ 7월 30일(16일)
- ▣ 연구분야 :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당 운영시스템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새로운 운영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 연구내용

- 당헌·당규상의 규정 분석
- 당 운영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중앙당 전략기획국의 통합운영에 따른 역할 수행 한계, 전략기획 및 조정회의체계의 혼란, 연구원의 중장기적 정책·전략 생산 및 알람기능의 혼선 등
- 새로운 운영시스템 구축방안 제안 : 정책 및 전략의 개발·생산주기 규정, 중앙당 실국 역할의 명확화, 전략관련 회의체계 개선방안 등

▶ 연구성과

- 당 지도부 및 인사위원회 보고를 통한 당무 정상화 기초자료로 활용

【별첨 55】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국정원 개혁방향

- ▣ 연구기간 : 2013년 7월 15일 ~ 8월 2일(18일)
- ▣ 연구분야 : 정치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국정원 개혁 이슈에 쟁점 정리
- ▶ 연구내용
 - 국정원 개혁의 배경, 쟁점 및 개혁방향
-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 발간

【별첨 56】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정당 리더십 재건 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7월 20일 ~ 8월 15일(25일)
- ▣ 연구분야 : 정무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정당 리더십의 구축 및 강화 방안 도출
- ▶ 연구내용
 - 리더십 현황 분석
 - 정당 리더십의 강화 방안
- ▶ 연구성과
 - 민주정책연구원장 및 당 지도부 보고

주제_ 소득주도 성장론(토론문)

- ▣ 연구기간 : 2013년 07월 20일 ~ 08월 08일(18일)
-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現 시장만능, 양적성장의 부작용인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불가능한 상황
- 따라서 ILO 등에서 제시한 새로운 사회·경제성장 모델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검토

▶ 연구내용

- 소득주도 성장전략은 임금인상과 복지지출 확대, 공정한 과세 등을 통한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내수를 자극해 경제성장을 꾀하는 전략임(케인즈 경제이론 등을 반영한 수요중심 시각이라 할 수 있으며, 소득과 소비가 주요 관심사)
-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함. 소득과 소비도 늘려야 하지만 공급측면에서 평생 교육과 연계된 노동을 공급하고, 산업정책을 통한 기업의 육성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함

▶ 연구성과

- 민주정책연구원, 민주당 노동·임금 TF 주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발표

【별첨 58】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대학생 정책 선호

- ▣ 연구기간 : 2013년 8월 1일 ~ 8월 22일(22일)
- ▣ 연구분야 : 교육과학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대학생을 위한 정책 개발
- ▶ 연구내용
 - 대학생의 정책선호도 조사
 - 대학생 정책 제언
- ▶ 연구성과
 - 민주정책연구원장에게 보고

주제_ 개성공단 문제의 해법과 우리의 대응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8월 4일 ~ 8월 9일(5일)
- ▣ 연구분야 : 통일외교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잠정 폐쇄로 한반도 정세가 예측불허의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바,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를 상황별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당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간 6차회담까지의 쟁점 분석- 8.7 북측 제안 평가- 개성공단 정상화 관련 시나리오별 전망- 당의 대응방향▶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성공단 사태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정상화 논의를 시나리오별로 전망함으로써 당의 대응방향을 제시

【별첨 60】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민주당 장기전략 - 2014 지방선거 종합로드맵(비공개)

- ▣ 연구기간 : 2013년 8월 8일 ~ 9월 9일(1개월)
- ▣ 연구분야 : 정치
- ▣ 연구방법 : 자체(간담회 및 문헌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방선거의 성격과 유권자의 요구 분석을 통한 정책·전략 수립

▶ 연구내용

- 지방선거의 성격 : 경제·민생선거, 중간 평가선거, 정계개편 및 차기 대선 전초 전 등
- 2014 지방선거의 특징적 현상 : 지방정치의 정당정치화 경향 붕괴 또는 약화, 중간평가론 약화 전망, 일여 대 다야의 경쟁구도 전망, 복지정치의 균열의 심화와 다층화 등
- 2014 지방선거의 정치·정책적 지형 : 야권연대와 선거연합에 대한 검토, 지역과 세대, 이념에 기반한 투표행태 약화 및 대응 전략
- 2014 지방선거 정책·전략 수립

▶ 연구성과

- 당 지도부의 지방선거 전략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정책지식생태계 활성화

- 민주정책연구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

▣ 연구기간 : 2013년 8월 10일 ~ 8월 18일(18일)

▣ 연구분야 :

▣ 연구방법 : 자체(간담회 및 문헌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연구원의 역할과 이를 통한 정책지식생태계 활성화 방안 모색

▶ 연구내용

- 정책연구소의 성과와 한계 진단 : '의제 선도'라는 성과와 '정책·전략적 대안 제시 실패'라는 한계
- 정책연구소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 정책연구소 운영과 역할에 대한 성찰에 따른 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의 방향
- 정책지식생태계의 구조와 흐름 분석 : 생산·소비 주체간 긴밀한 상호작용을 위한 정책지식의 유기적 협력시스템 구축 방안 등

▶ 연구성과

- 2013 KOPOCO 정책지식생태계 싱크탱크 세션 발제문 활용(경기 일산)

【별첨 62】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국회의원 정수와 보수의 적절성

- ▣ 연구기간 : 2013년 8월 10일 ~ 9월 3일(22일)
- ▣ 연구분야 : 법제사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의원정수 및 보수의 개혁 방안
- ▶ 연구내용
 - 의원정수 및 보수의 해외 사례 분석 및 비교
 - 의원정수와 의원 보수의 개혁 방안
-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으로 발간

주제_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

- ▣ 연구기간 : 2013년 8월 12일 ~ 8월 23일(12일)
- ▣ 연구분야 : 환경노동분야
-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근혜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 분석-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제 일자리의 필요성- 시간제 일자리의 현황 및 문제점- 주요 국가들의 시간제 근로 현황▶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슈브리핑으로 발간하여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및 전·현직 의원, 당원 및 전문가 그룹에 이메일로 송부하여 민주당의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제고

【별첨 64】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국정원 국정조사 대응 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8월 16일 ~ 8월 22일(7일)
- ▣ 연구분야 : 정보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국정원 국정조사 대응 전략의 도출
- ▶ 연구내용
 - 국정원 댓글 사건의 의미 분석
 - 국정원 국정조사 시나리오 작성 및 대응방안
- ▶ 연구성과
 - 민주정책연구원장 및 당 지도부 보고

주제_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적응

- ▣ 연구기간 : 2013년 8월 16일 ~ 9월 15일(1개월)
- ▣ 연구분야 : 복지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정책 제언
- ▶ 연구내용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유형별 특성과 차이점 분석
 - 다문화가정 학생의 부적응과 적응의 경로파악
- ▶ 연구성과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한국가족복지학회」에 게재

【별첨 66】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2030 세대를 위한 정책 제안 - 일자리·노동 -

- ▣ 연구기간 : 2013년 8월 22일 ~ 8월 29일(7일)
- ▣ 연구분야 : 지식경제, 환경노동분야
-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30 세대가 직면한 일자리·노동 현실과 일자리·노동 수요의 분석
- 2030 세대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과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여 지방선거 공약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내용

- 2030 세대가 직면한 일자리·노동 현실
- 2030 세대의 일자리·노동 수요과 정책적 고려사항
- 2030 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제안

▶ 연구성과

- 원장단 등 지도부에 보고되어 2014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2030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별첨 67】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통합진보당 해산 제소 검토

- ▣ 연구기간 : 2013년 8월 23일 ~ 9월 4일(10일)
- ▣ 연구분야 : 법제사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통합진보당 해산 제소의 의미와 대응 방안 분석
- ▶ 연구내용
 - 정당 해산 제도의 의미
 - 통합진보다 해산 제소에 대한 대응방안
- ▶ 연구성과
 - 민주정책연구원장 및 당 지도부 보고

주제_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이후 남북경협 추진방향

- ▣ 연구기간 : 2013년 8월 24일 ~ 9월 5일(12일)
- ▣ 연구분야 : 통일외교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로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기됨
-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중국 대만간 경제협력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남북 경협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 연구내용

-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배경
- 합의문의 주요내용 분석
- 중국 대만간 경제협력 사례 분석
- 중국 대만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남북 교류협력에 주는 시사점
- 남북 경협 추진방향

▶ 연구성과

- 중국과 대만간 ECFA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방향을 제시

주제_ 민주당의 정책과 전략 - What? Why? How? (대외주의)

- ▣ 연구기간 : 2013년 8월 26일 ~ 9월 25일(1개월)
- ▣ 연구분야 : 정치
- ▣ 연구방법 : 자체(간담회 및 문헌연구) 및 여론조사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민주당의 정책·전략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정책·방향 수립
- ▶ 연구내용
 - 정당체제의 재편성과 대응과제 : 진보당 사태와 민주진보진영의 복원
 -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지지도 분석
 - 민주당 지지층 변동추이 분석
 - 2014 지방선거, 민주당의 전략과 정책
- ▶ 연구성과
 - 당의 전략적, 정책적 방향성과 아젠다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지도부 보고자료)

【별첨 70】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정치적 메시지 효과성 증대 방향

- ▣ 연구기간 : 2013년 9월 1일 ~ 9월 30일(1개월)
- ▣ 연구분야 : 정무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효과적인 정치적 메시지의 작성 및 전달 방안
- ▶ 연구내용
 - 정치적 메시지와 리더십의 관계
 - 정치적 메시지 작성법
- ▶ 연구성과
 - 민주당 경기도당/충북도당 지방자치아카데미 강의 자료로 활용

【별첨 71】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최근 세제개편으로 본 중산층 문제와 대응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09월 01일 ~ 09월 23일(23일)
-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최근 세제개편에서 보듯이 중산층은 지난 2000년대 이후 소득·생활수준의 양극화 과정에서 과세 형평성과 복지혜택 부족에 대한 불만이 장 기간 누적되어 있음
- 경제 내 중산층이 감소하게 되면 내수 기반이 취약해져 경제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사회 불안과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며, 사회 조정비용의 급 증을 가져오게 됨
- 따라서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중산층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 볼 때의 도적인 중산층 육성정책이 필요한 시점

▶ 연구내용

- 우리나라 중산층의 실태 분석
- 중산층에 대한 관심과 중산층의 역할
-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제안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 제13호로 발행되어 당원, 국회의원, 기자 등에게 배포됨

【별첨 72】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민주당의 중기전략과 실천과제(비공개)

- ▣ 연구기간 : 2013년 9월 4일 ~ 10월 4일(1개월)
- ▣ 연구분야 : 정치
- ▣ 연구방법 : 자체(간담회 및 문헌연구), 여론조사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연구원의 중기전략의 핵심과제와 향후 실천방안 제시
- ▶ 연구내용
 - 정당지형 변화 가능성과 함의
 - 이념 이슈와 프레임
 - 박근혜 정부 지지율과 시사점
 - 민주당의 현실과 과제
 - 리더십 부재 및 이념지형 극복을 위한 액션플랜
 - 세대별 접근전략과 정책방향
 - 지역별 구도·지형변화와 대응전략
- ▶ 연구성과
 - 당 지도부 정치활동 참고자료로 활용

【별첨 73】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정당체제 재편성

- ▣ 연구기간 : 2013년 9월 5일 ~ 9월 23일(18일)
- ▣ 연구분야 : 정무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한국 정당체제 재편성의 가능성
- ▶ 연구내용
 - 한국 사회균열과 정당체제의 형성
 - 정당체제의 재편성 가능성 분석
- ▶ 연구성과
 - 민주정책연구원장 및 당 지도부 보고

【별첨 74】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분석

- ▣ 연구기간 : 2013년 9월 25일 ~ 10월 1일(6일)
- ▣ 연구분야 : 통일외교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의 의미와 대응방안 도출
- ▶ 연구내용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의 문제점
 -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
- ▶ 연구성과
 - 민주정책연구원장 및 당 지도부 보고

【별첨 75】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전략

- ▣ 연구기간 : 2013년 9월 25일 ~ 10월 1일(6일)
-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인구고령화를 감안하면, 가계부담의 실질적 책임자인 50대의 '책임의식'에 호소하는 정책개발을 서둘러 세대 연대론에 기초한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전략의 강화가 필요

▶ 연구내용

- 국민연금 연계안이 형성한 세대 간 갈등구조(역차별) 분석
- 빈곤의 악순환 구조를 개선할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전액 수급자 VS 감액수급자/탈락자 사이에 갈등

▶ 연구성과

- 2040세대의 '세대효과'와 50이후의 '연령효과'의 조화 가능성 검토

【별첨 76】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박근혜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9월 28일 ~ 10월 1일(5일)
- ▣ 연구분야 : 정무/산업통상자원
-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9월 25일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의 문제점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 연구내용
 - 투자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
 - 투자활성화 대책의 문제점
 - 대응방안 제시
- ▶ 연구성과
 -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른 대안마련에 활용

【별첨 77】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무상보육의 재설계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1일 ~ 10월 7일(7일)
- ▣ 연구분야 : 복지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무상보육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재설계방안
- ▶ 연구내용
 - 보육제도의 현황 및 해외 사례 분석 및 비교
 - 지속가능한 무상보육을 위한 재설계방안
-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으로 발간

【별첨 78】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독일총선 분석 - 보수의 혁신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1일 ~ 10월 13일(13일)
- ▣ 연구분야 : 정치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독일 총선에서 메르켈의 총선 전략 분석
- ▶ 연구내용
 - 독일 총선 결과 평가와 메르켈의 전략
-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 발간

【별첨 79】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전략적 투표 분석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1일 ~ 12월 4일(2개월 3일)
- ▣ 연구분야 : 정무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 분석▶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 경향과 수준- 전략적 투표의 요인▶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한국정치학회보』에 발표

【별첨 80】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기조

- 전·월세 대책을 중심으로 -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1일 ~ 10월 15일(15일)
- ▣ 연구분야 : 부동산·조세(기재위, 국토위)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現 부동산 시장의 분석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기조 검토
- ▶ 연구내용
 - 현재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現 상황에 맞는 민주당의 정책방향 제시
 - 전월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제시
-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으로 발간

【별첨 81】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핵심 이슈별 대응전략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01일 ~ 10월 23일(23일)
- ▣ 연구분야 : 정치·경제·사회·통일외교안보
-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정원 개혁, 기초연금, 조세재정,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민주당의 정책적인 포지셔닝을 위한 연구

▶ 연구내용

- 국정원 개혁안 대응방안
- 기초연금안에 대한 대응방안
- 조세재정 전략적 대응방안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대응방안

▶ 연구성과

- 정기국회 대비 당 지도부에 보고

【별첨 82】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국정원 개혁안 분석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4일 ~ 10월 21일(17일)
- ▣ 연구분야 : 정보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분석
- ▶ 연구내용
 - 국가정보원 및 각 당의 국정원 개혁안 분석
 - 국정원 개혁방안
- ▶ 연구성과
 - 민주정책연구원장 및 당 지도부 보고

주제_ 인터넷 포털 자율적 규제를 통한 상생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4일 ~ 10월 28일(25일)
- ▣ 연구분야 : 정부/산업통상자원
-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불거진 네이버 사태에 대해서 자율적 규제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 사태의 배경 분석- 인터넷 포털의 상생을 위한 법적규제와 자율적 규제- 인터넷 포털 상생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이슈브리핑으로 등록- 전·현직 의원, 당원 및 전문가 그룹 이메일 송부

주제_ 2014년 지선대비 일자리·노동분야 핵심아젠다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7일 ~ 10월 21일(14일)
- ▣ 연구분야 : 지식경제, 환경노동분야
-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4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민주당의 일자리·노동분야 정책 발굴
- 2014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정책과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내용

- 총선과 대선의 일자리·노동 공약 분석
- 중앙단위 공약과 지역단위 공약
- 민주당 일자리·노동분야 정책과 전략 수립을 위한 제언

▶ 연구성과

- 원장단 등 지도부에 보고되어 2014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일자리·노동분야 핵심 아젠다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_ 기초연금 재원 전액 국고부담 근거 및 국제비교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9일 ~ 10월 14일(5일)
-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p>▶ 연구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실시주체는 지방이지만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예측된 재정수요를 초과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순 지방부담 역시 연평균 23.5%씩 증가하고 있어 보편적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 - 기초연금의 재원의 전액국고화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필요성 대두 <p>▶ 연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이란 명목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캐나다, 호주, 일본 등)들은 지방비 매칭사업이 아니며 전액 국세(캐나다, 호주) 및 국세+보험료(일본)임을 감안하면,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지방정부의 원 부담을 덜어주고 중앙정부의 소득보장사업에 대한 책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기 <p>▶ 연구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같이 급여액의 일정비율을 국고가 직접 부담하는 국가는 덴마크 등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반교부금이나 재원 이양에 의해 일반 재원화 되어 있어 정부 간 재원부담 방식 안정화의 돌파구 마련할 필요

주제_ 복지확대에 따른 재원확보대책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11일 ~ 10월 17일(6일)
-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세입구조의 악화에 따른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축소에 대한 대응
- ▶ 연구내용
 - 부자감세 철회의 정당성
 - 사회복지세 신설의 정당성
 - 사회보장기여금 인상을 통한 증세
- ▶ 연구성과
 - 박근혜 정권의 당초 재원조달 계획이었던 세출구조조정, 지하경제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토록 촉구
 -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조세부담률을 MB정부 이전 수준인 21%로 복원토록 요구

주제_ 민주당 정강정책과 오늘의 정치·정책현안, 그리고 2014 지방선거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13일 ~ 11월 3일(20일)
- ▣ 연구분야 : 정치
- ▣ 연구방법 : 자체연구(간담회 및 문헌연구)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정강정책 및 현안점검에 기초한 2014 지방선거의 정책·전략적 방향성 제안▶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정치의 의미와 책임정당의 역할- 강령의 함의 및 지방선거에서 의미- 책임정당의 역할과 방향성 : 강령 및 정책 제시, 정책 로드맵 제시-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강령·정책 비교 : 기본틀, 가치와 비전, 추구 목표, 현실 정책 방향과 핵심내용 등- 최근 정국의 정치현안 분석 : 국가기관 대선개입, 무상보육, 기초연금, 4대중증 질환 지원, 반값 대학등록금 등▶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부 보고자료 및 2014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아카데미의 교육자료로 활용

【별첨 88】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조세·재정 전략적 검토

- 박근혜정부 예산안과 세제관련 -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14일 ~ 10월 30일(17일)
- ▣ 연구분야 : 조세·재정(기재위)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정부예산의 합리적 편성 여부 검토
- ▶ 연구내용
 - 2014년 정부예산의 합리적 편성여부와 보완점 검토
- ▶ 연구성과
 - 민주정책연구원장 보고
 - 최고위원회 정책자료 사용

주제_ 민주당 홍보 종합플랜 실행방안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17일 ~ 11월 18일(1개월)

▣ 연구분야 :

▣ 연구방법 : 자체(간담회 및 문헌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당원 및 국민과의 소통 방안 및 공간 마련
- 정치·정책활동 홍보 및 소통 강화 플랜 마련

▶ 연구내용

- 홍보에 대한 인식전환과 전략 연구
- 홍보시스템 혁신방안 연구
- 홍보시스템 조직 및 운영체계 편성 등 기획, 생산, 유통 전반에 관한 연구
- 홍보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실천방안 연구

▶ 연구성과

- 중앙당 정치활동 및 원내 정책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위한 실행로드맵으로서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3분기 경제성장률 분석 과 향후 전망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20일 ~ 10월 28일(23일)
-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표상으로 보면 한국 경제는 올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전 분기 대비 1.1% 성장하면서 이전 8분기 동안의 0%대 수렁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임
- 2분기 연속 1%대 성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한 견해 제시

▶ 연구내용

- 2분기 연속 1%대 성장의 의미와 문제점
- 3분기 1.1% 성장률은 2분기와 숫자로 보면 같지만 성장의 원인은 상당히 다른 모습임
- 향후 전망

▶ 연구성과

- 연구원장 보고

【별첨 91】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관련 전략적 대응 검토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21일 ~ 10월 30일(10일)
- ▣ 연구분야 : 조세·재정·산업정책(기재위)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정부가 제출한 경제활성화 법안 내용 검토 및 민주당의 대응 방안
- ▶ 연구내용
 - 경제활성화 법안의 내용 및 실제 효과의 타당성 검토
 - 이와 관련된 민주당의 포지셔닝.
- ▶ 연구성과
 - 민주정책연구원장 보고
 - 최고위원회 정책자료 사용

주제_ 당 대표 방중 관련 보고서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23일 ~ 10월 25일(2일)
- ▣ 연구분야 : 통일외교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당 대표의 중국방문이 예정된 바, 중국측 주요 인사와의 면담 등을 대비하여 한중관계, 동북아 정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제시하기 위함

▶ 연구내용

- 한중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 북한문제 관련 메시지
-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등 동북아 정세 관련 입장

▶ 연구성과

- 당 대표 방중을 앞두고 한중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

【별첨 93】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관련 전략적 대응 검토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21일 ~ 10월 30일(10일)
- ▣ 연구분야 : 상임위 전체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정부가 제출한 경제활성화 법안 내용 검토 및 민주당의 대응 방안
- ▶ 연구내용
 - 경제활성화 법안의 내용 및 실제 효과의 타당성 검토
- ▶ 연구성과
 - 민주정책연구원장 보고
 - 최고위원회 정책자료 사용

주제_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전략 -세제분야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28일 ~ 11월 8일(12일)
- ▣ 연구분야 : 조세·재정(기재위)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안 및 계층 간 갈등양상 검토
 - 민주당의 합리적 계층전략 제시
- ▶ 연구내용
 -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안 내용 분석 및 타당성 검토
 - 세제 개편안을 통하여 발생하는 계층 간의 갈등 분석
 - 발전적 조세·재정 방향성 제시 및 민주당 포지셔닝
- ▶ 연구성과
 - 민주정책연구원장 보고
 - 최고위원회 정책자료 사용

【별첨 95】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장애인연금의 기초연금통합 논의

-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1일 ~ 11월 6일(6일)
- ▣ 연구분야 : 복지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장애인연금의 기초연금통합에 대한 논의 및 제언
- ▶ 연구내용
 - 기초연금으로 통합시 예상되는 문제 분석
 -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장애등급판정 방식, 급여수준 평가 및 제언
-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으로 발간

【별첨 96】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1일 ~ 11월 13일(14일)
- ▣ 연구분야 : 정무/산업통상자원
-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자금 운영방안 제시
- ▶ 연구내용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개요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문제점 분석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 ▶ 연구성과
 - 홈페이지 이슈브리핑으로 등록
 - 전·현직 의원, 당원 및 전문가 그룹 이메일 송부

주제_ 박근혜정부 출범 후 민생위기 현황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01일 ~ 11월 12일(12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환경노동·산업통상자원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의 핵심으로 “중산층 복원”을 내걸었지만 정부 정책은 민생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음
- 경제민주화와 복지관련 정책은 모두 뒷걸음질 치고 있으며 주요 정책과 예산관련 중·서민을 위한 내용은 미비. 비판받았던 MB정부의 친 대기업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
- 따라서 박근혜 정부 민생정책의 실상을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

▶ 연구내용

- 민생정책 추진 실적과 문제점
- 세제개편안 및 국가채무 증가
- 부동산정책
- 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
- 고용시장 악화

▶ 연구성과

- 연구원장 및 당 지도부 보고

【별첨 98】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박근혜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평가

-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5일 ~ 11월 12일(8일)
- ▣ 연구분야 : 정무/산업통상자원
-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 출범 기간 동안 소상공인 경영 상태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 연구내용
 - 박근혜 정부 출범 기간 동안 소상공인 경영 및 애로사항 분석
 - 박근혜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평가
- ▶ 연구성과
 - 박근혜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평가자료로 활용

주제_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11일 ~ 11월 21일(10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분야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p>▶ 연구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공약 평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정책대안 및 입법과제 제시
<p>▶ 연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p>▶ 연구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슈브리핑으로 발간하여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및 전·현직 의원, 당원 및 전문가 그룹에 이메일로 송부하여 민주당의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제고

주제_ 정기국회 법안 및 예산관련 전략기조

-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11일 ~ 11월 18일(7일)
- ▣ 연구분야 : 조세·재정·산업정책(기재위)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정부의 핵심 예산안 및 경제입법 검토와 민주당의 심사전략 제시

▶ 연구내용

- 정기국회 상정된 박근혜정부의 핵심 예산안과 경제입법 검토
- 민주당의 포지셔닝 제시.

▶ 연구성과

- 민주정책연구원장 보고
- 최고위원회 정책자료 사용

주제_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12일 ~ 12월 11일(1개월)
-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국의 사회보장급여로서 사회보험료의 재원조달력에 주목하여 사회보험료 인상을 통한 복지재원 조달력의 우수성을 검토

▶ 연구내용

- 한국 사회보장급여는 사회보험료가 주재원임을 확인
- 사회보험료의 재원조달의 안정성을 확인
- 조세보다 사회보험료의 수급권 보장 능력이 우월함을 주장
- 종전 소득에 연계되어 있는 사회보험료를 통한 복지급여는 중산층 복원정책임을 확인

▶ 연구성과

- 사회보험료 원천징수제도 방안 제시
- 기업간 공정경쟁 원칙을 위해서도 사회보험 적용대상의 공정성 확보 필요성 환기
- 개개인의 민간 보험상품의 구입이 아닌 사회보험료를 활용한 '공동구 매력' 강화 방안 제시(민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핑(2013-12호)발간)

주제_ 당 지지율 제고를 위한 정책 포지셔닝 검토

-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15일 ~ 12월 13일(28일)
- ▣ 연구분야 : 정치·경제·사회·통일외교안보
- ▣ 연구방법 : 공동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당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통일외교안보 각 분야별 핵심 이슈에 대한 정책 포지셔닝 연구

▶ 연구내용

- 정치분야 :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MB실정 청산, 야권연대
- 경제분야 : 부동산정책, 세제 및 예산, 경제민주화에 대한 실효성 제고
- 사회분야 : 보편적 복지 논란, 기초연금안(국민연금과 연계문제), 4대 중증질환 과 3대비급여 우선순위, 무상보육을 둘러싼 논쟁, 고용률 70% 달성
- 통일외교안보 : 종북논란, 북한 인권문제

▶ 연구성과

- 연구원장 및 당 지도부 보고

주제_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斷想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17일 ~ 11월 27일(10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민주주의의 의미 성찰 및 더 좋은 민주주의의 방향 제안

▶ 연구내용

- 국가, 정치사회, 시민사회 간의 관계 분석

- ‘참여’와 ‘민주성’의 의미 분석

- ‘정책’과 ‘효율성’의 의미 분석

- ‘더 좋은 민주주의’의 실천

▶ 연구성과

- 민주당 국회의원(이학영 의원)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토론회 토론자료

주제_ 민주당의 현재와 미래 -What? How?(대외주의)

-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19일 ~ 11월 25일(6일)
- ▣ 연구분야 : 정치
- ▣ 연구방법 : 자체(간담회)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민주당의 내·외적 문제점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한 혁신방향성 도출
- ▶ 연구내용
 - 민주당의 현대 : 지도부의 리더십 부족, 정책 및 전략의 선제적 제시 부족 등의 문제점 분석
 - 민주당의 미래 : 리더십 정상화를 위한 방향성 및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혁신방향 제시
- ▶ 연구성과
 - 당 개혁 및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준비자료 및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주요 선진국의 해외기업 리쇼어링에 대한 시사점

-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20일 ~ 11월 22일(3일)
- ▣ 연구분야 : 정부/산업통상자원
-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최근 선진국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제조업의 재부상에 따른 제조업의 리쇼어링이 가지는 의미 분석

▶ 연구내용

- 리쇼어링의 배경
- 주요 선진국의 리쇼어링 사례
- 리쇼어링에 따른 시사점

▶ 연구성과

- 주요 선진국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쇼어링에 대한 의미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로 활용

【별첨 106】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상향식 공천 개혁안 분석

-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20일 ~ 12월 10일(20일)
- ▣ 연구분야 : 정무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당 상향식공천혁신위원회의 혁신안 검토
- ▶ 연구내용
 - 상향식 공천혁신안의 문항별 장단점과 해외 사례 분석
- ▶ 연구성과
 - 민주당 최고위원회 보고

주제_ 민주당 현역 광역단체 지선준비 및 대응방안 (비공개)

-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25일 ~ 12월 2일(7일)
- ▣ 연구분야 : 정치
- ▣ 연구방법 : 자체(간담회 및 문헌조사)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민주당 광역단체의 선거 지형 및 여론동향, 그리고 중앙당의 역할
- ▶ 연구내용
 - 광역단체별 선거지형 분석
 - 광역단체별 지방선거 준비 현황 분석
 - 중앙당에 대한 광역단체별 요청사항 수렴 및 정리
 - 중앙당 차원의 지원대책 수립
- ▶ 연구성과
 - 2014 지방선거 대비 정책 및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_ 국정원 개혁 이후 정치 이슈

-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25일 ~ 12월 10일(15일)
- ▣ 연구분야 : 정무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국정원 개혁 이후의 정치 이슈 및 대응방안 도출
- ▶ 연구내용
 - 2014년 예상되는 정치 이슈 분석
 - 대응 방안
- ▶ 연구성과
 - 민주정책연구원장 및 당 지도부 보고

주제_ 이기는 민주당, 어떻게 할 것인가? (대외주의)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26일 ~ 11월 6일(10일)
- ▣ 연구분야 : 정치
- ▣ 연구방법 : 자체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의 체계적 준비 및 제안과 당의 정상적 운영체계 제안

▶ 연구내용

-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당 조직 운영 현황 및 개선 방향
- 지방선거기획본부 체제 조직 및 운영체계도(안)
- 지방선거 준비일정

▶ 연구성과

- 2014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당 지도부 참고자료로 활용

【별첨 110】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한 민주당의 방향

- ▣ 연구기간 : 2013년 12월 1일 ~ 12월 10일(10일)
- ▣ 연구분야 : 정치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원칙의 재정립
- ▶ 연구내용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원칙
- ▶ 연구성과
 - 연구원장 보고

【별첨 111】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당 혁신안 실행 과정 검토

- ▣ 연구기간 : 2013년 12월 1일 ~ 12월 11일(11일)
- ▣ 연구분야 : 정무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상반기 민주당혁신위원회/혁신실행위원회의 혁신안 실행 수준 검토
- ▶ 연구내용
 - 민주당 혁신위원회/혁신실행위원회 제안 혁신안의 이행 상황 분석
- ▶ 연구성과
 - 민주정책연구원장에게 보고
 - 민주당 각 부서에 배포되어 혁신안 이행 계획 제출에 활용

【별첨 112】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논쟁중인 정책과 우리당 대응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12월 10일 ~ 12월 13일(4일)
- ▣ 연구분야 : 복지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복지 분야의 논쟁거리를 파악하고 대응방안 도출
- ▶ 연구내용
 - 보편적 복지·무상보육(이훈희), 기초연금·4대 중증질환(정재철) 논쟁 정리
 - 개별 논쟁에 대한 대응방안 도출
- ▶ 연구성과
 - 민주정책연구원장에게 보고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지방재정 건전화 및 재원확충에 관한 제언

- ▣ 연구기간 : 2013년 12월 1일 ~ 12월 30일(1개월)
- ▣ 연구분야 : 조세·재정(기재위)
- ▣ 연구방법 : 자체 및 간담회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 악화 문제점 검토 및 대응방안 검토▶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상황 검토- 이에 대한 대응책 및 발전적 재원 확충방안 제시▶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슈브리핑으로 발간

주제_ 박근혜정부 외교정책 평가 및 과제

- ▣ 연구기간 : 2013년 12월 5일 ~ 12월 7일(2일)
- ▣ 연구분야 : 통일외교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취임이후 외교안보 분야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여온 박근혜정부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문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정세 속에서 외교안보 좌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외교를 협착 하는 현 구도를 타개하고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안보전략을 제시하기 위함

▶ 연구내용

- 박근혜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총론적 평가
- 사안별 주요 문제점
- 외교안보정책 추진방향

▶ 연구성과

- 동북아 정세의 엄중한 상황에서 외교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당대표 말씀자료로 참고

【별첨 115】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1219 끝이 시작이다.’ 제안 내용 분석

- ▣ 연구기간 : 2013년 12월 5일 ~ 12월 9일(6일)
- ▣ 연구분야 : 정무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국회의원 문재인의 당 혁신 제안 검토
- ▶ 연구내용
 - 문재인 의원의 저서 ‘1219 끝이 시작이다.’의 제도개혁 제안 내용 분석
- ▶ 연구성과
 - 민주정책연구원장에게 보고
 - 당 지도부의 혁신안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_ 경제민주화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지지도 회복

- ▣ 연구기간 : 2013년 12월 10일 ~ 12월 13일(3일)
- ▣ 연구분야 : 상임위 전체
- ▣ 연구방법 : 공동연구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경제민주화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이 분석 및 경제민주화 강화를 통한 민주당의 지지도 회복
- ▶ 연구내용
 - 경제민주화 현황
 - 경제민주화에 대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이유 및 대응방안
- ▶ 연구성과
 - 경제민주화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

주제_ 종북 프레임과 민주당의 대응전략

▣ 연구기간 : 2013년 12월 16일 ~ 12월 27일(11일)

▣ 연구분야 : 통일외교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강력하게 작용하였던 종북 프레임은 박근혜 정부 1년동안 모든 정치적 현안들을 매몰시키며 지속되고 있음
-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종북 프레임을 극복 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연구내용

- 종북 프레임과 민주당의 상황 분석
- 정책적 대응방향
- 선거전략 등 전략적 고려사항
- 구체적 액션플랜

▶ 연구성과

-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종북몰이로 민주당이 수세적 상황에 처해있는 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당 지도부에 제시

주제_ 제18대 대선 이후, 민주당 평가 및 과제

- ▣ 연구기간 : 2013년 12월 17일 ~ 12월 23일(7일)
- ▣ 연구분야 : 정치
- ▣ 연구방법 : 자체(간담회 및 문헌연구)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2012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위상과 역할 평가 및 그 해결책 제안
- ▶ 연구내용
 - 대선 이후 민주당으로부터의 민심이반과 현황과 원인 분석
 - 민주당의 오늘의 과제와 역할 : '당당해져야 한다'는 민주당의 전략적 방향 제시
- ▶ 연구성과
 -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활동 및 지방선거 대비 역할과 방향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별첨 119】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12월 20일 ~ 12월 28일(9일)
- ▣ 연구분야 : 복지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도출
- ▶ 연구내용
 - 서비스 통합수준, 급여지원, 행정지원, 민관협력 체계 평가
 - 중앙단위, 지역단위 전달체계 개선방안 도출
- ▶ 연구성과
 - 민주정책연구원장에게 보고

2013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서

- 제3장 -

진보정책연구원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연간 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6 솔표빌딩 10층			√		

나. 인력

연구원수	직원수	비고
박사급 : 3명	자체고용 : 0명	
석사급 : 2명	외부파견 :	
기 타 : 3명		
합 계 : 8명	합 계 : 0명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821,490,000	40,108,505	219,650,214	1,081,248,719	896,365,570	184,883,149	

「주」 정책연구소 회계보고 내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 주요 활동실적

가. 연구·개발실적(43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 량	비고
01.01~01.31	기재위	2013 경제 전망	자체	원고지 10매	
01.01~02.28	법사위	경제민주화와 실천방안	자체	원고지 30매	
01.01~02.28	기재위	부자증세와 부가세, 지하경제 양성화	자체	원고지30매	
01.01~02.28	기재위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	자체	원고지 20매	
03.01~05.31	국토위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자체	원고지20매	
09.01~10.31	기재위	정부 및 지자체 재정 연구	자체	원고지20매	
10.01~10.31	정무위	동양증권 사태와 금산분리	자체	원고지10매	
12.01~12.31	국토위	코레일 민영화 문제와 해결방안	자체	원고지10매	
09.01~12.31	기재위	진보적 조세정책의 원칙과 방도	자체	원고지50매	
01.01~12.31	기재위	주간경제동향	용역	매주 원고지 100매 이상	
10.01~12.31	정무위	정치여론조사 탐색	자체	ppt 30매	
01.01~01.15	정무위	2013년 정치 전망	자체	원고지 20매	
01.01~01.31	정무위	2013년 정치개혁과제	자체	원고지 26매	
03.01~03.31	정무위	전관예우 개선방향	자체	원고지 15매	
03.05~04.20	정무위	사전투표제도 개선방향	자체	원고지 13매	
05.20~07.10	정무위	정당공천제 쟁점 검토	자체	원고지 26매	
10.01~12.31	정무위	민중에게 권력을 주는 제도	자체	원고지 160매	
11.01~11.31	정무위	진보적 민주주의 연혁 연구	자체	원고지 27매	
11.15~12.15	정무위	민중주권 쟁점 연구	자체	원고지 36매	
12.01~12.31	정무위	연방제통일방안의 위헌성 검토	자체	원고지 52매	
01.01~04.30	외통위	박근혜정부 통일외교분야 전망	자체	원고지 30매	
01.01~02.25	외통위	이명박 정부 5년 통일외교 정책 평가	자체	원고지 100매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 량	비고
05.01~07.31	외통위	정강정책 해설	자체	원고지 50매	
08.01~08.31	외통위	남북관계 현안 진단	자체	원고지 30매	
09.01~12.30	외통위	통일경제 관련 대안사회체제	자체	원고지 200매	
02.01~04.29	법사위	성소수자 인권	자체	원고지 13매	
01.01~02.25	여가위	이명박 정부 5년 여성정책 평가	자체	원고지 74매	
01.01~02.25	환노위	이명박 정부 5년 환경정책 평가	용역	원고지 63매	
06.01~07.31	농해수위, 여가위, 환노위	정강정책 해설	자체	원고지 130매	
01.07~01.14 08.10~08.19	여가위	정부 여성정책 평가	자체	원고지 20매	
01.15~01.21 08.18~08.12	여가위	여성의 대표성 연구	자체	원고지 22매	
01.21~07.08	여가위	여성의 노동권 연구	자체	원고지 50매	
03.12~10.11	여가위	보육/아동 정책	자체	원고지 51매	
03.20~06.24	여가위	성폭력 관련 정책 평가 연구	자체	원고지 43매	
09.10~09.30	보복위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 평가	자체	원고지 22매	
09.01~12.30	환노위	기후변화 관련 대안사회체제	자체	원고지 289매	
01.01~02.25	보복위	이명박 정부 5년 의료/복지정책 평가	자체	원고지 100매	
01.01~07.10	보복위	노인연금복지 정책 비판	자체	원고지 55매	
01.31~08.19	보복위	빈곤층 해소를 위한 제도	자체	원고지 34매	
02.01~03.12	보복위	보건의료 정책 평가	자체	원고지 33매	
03.20~04.16	보복위	복지 서비스 노동자의 권리	자체	원고지 21매	
01.03~07.22	보복위	정부의 복지 기본 계획, 정책	자체	원고지 56매	
06.01~07.31	보복위	정강정책 해설	자체	원고지 200매	

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43부.

나. 토론회 등 개최(87회)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토론회	01.15	의원회관	대선 패배와 진보정치의 과제	정권교체의 실패원인과 진보정치의 향후과제	
토론회	01.29	의원회관	신년 기획	2013년 한반도 정세와 대응과제	
토론회	02.08	연구원	통일운동과제	2013년 정세와 자주통일운동의 방향	
토론회	06.29	광주김대중 컨벤션센터	통합진보당의 이념과 지향	진보적 민주주의	
토론회	10.17	의원회관	민주주의	유신선포 41년 박근혜정부와 민주주의	
토론회	11.11	연구원	정당해산	박근혜정부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심판 묻고 답하기(21문 21답 자료 발표)	
간담회	06.02	서울시당	정책설명회	2013 정책당대회 정치토론문 초안	
간담회	06.05	경기도당	정책설명회	2013 정책당대회 정치토론문 초안	
간담회	06.05	인천시당	정책설명회	2013 정책당대회 정치토론문 초안	
간담회	06.07	부산시당	정책설명회	2013 정책당대회 정치토론문 초안	
간담회	06.07	광주시당	정책설명회	2013 정책당대회 정치토론문 초안	
간담회	06.14	울산시당	정책설명회	2013 정책당대회 정치토론문 초안	
간담회	06.14	전남도당	정책설명회	2013 정책당대회 정치토론문 초안	
간담회	06.15	경남도당	정책설명회	2013 정책당대회 정치토론문 초안	
간담회	06.15	전북도당	정책설명회	2013 정책당대회 정치토론문 초안	
간담회	06.16	대구시당	정책설명회	2013 정책당대회 정치토론문 초안	
간담회	06.21	경북도당	정책설명회	2013 정책당대회 정치토론문 초안	
간담회	06.21	대전시당	정책설명회	2013 정책당대회 정치토론문 초안	
간담회	06.22	충남도당	정책설명회	2013 정책당대회 정치토론문 초안	
간담회	06.22	충북도당	정책설명회	2013 정책당대회 정치토론문 초안	
간담회	06.23	강원도당	정책설명회	2013 정책당대회 정치토론문 초안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간담회	11.29	연구원	강령번역	통합진보당 강령 영어 및 일어 번역	
국제 회의	07.25	의원식당	국제연대강화	국제평화역량의 체계적 연대 방안	국제
국제 회의	07.26	여성플라자	국제평화 심포지엄	정전60년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평화심포지움(해외석학 초청)	국제
세미나	10.16	연구원	국제연대 추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연대 호소방안	
세미나	11.15	연구원	국제연대 추진	해외용 탄원서의 기초와 방향	
세미나	12.10	연구원	국제연대 추진	국제정당 선언문 기초와 방향	
세미나	10.17	연구원	정당해산 반대	목적의 위헌성 대응 기초와 방향	
세미나	10.28	연구원	정당해산 반대	진보적 민주주의론에 대한 변론	
세미나	11.06	연구원	정당해산 반대	법무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 반박	
세미나	11.08	연구원	정당해산 반대	각 정당의 강령 비교 분석	
세미나	11.09	연구원	정당해산 반대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의 강령정책 검토	
세미나	11.11	연구원	정당해산 반대	당 위헌성에 대한 세부 검토와 반박	
세미나	11.12	연구원	정당해산 반대	임시정부헌법과 제헌헌법의 진보성	
세미나	11.13	연구원	정당해산 반대	진보적 지방자치활동의 모범 사례	
세미나	11.14	연구원	정당해산 반대	역대 대통령의 민주주권 사용 사례	
세미나	11.15	연구원	정당해산 반대	역대 여당들의 위헌적 발언 사례	
세미나	11.16	연구원	정당해산 반대	역대 여야정당 강령의 진보적 요소들	
세미나	11.21	연구원	정당해산 반대	민주노동당(진보당)의 내부 민주주의	
세미나	11.22	연구원	정당해산 반대	헌법재판 주요 선례연구	
세미나	11.26	연구원	정당해산 반대	목적의 위헌성 종합 의견	
세미나	11.27	연구원	정당해산 반대	보편성을 획득한 연방제 통일방안	
세미나	12.10	연구원	정당해산 반대	강령 및 진보적민주주의 위헌성 검토	
세미나	12.11	연구원	정당해산 반대	주요당직자 발언 및 타당 강령 검토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세미나	12.12	연구원	정당해산 반대	증거인부표에 대한 가부 판단 근거	
세미나	12.13	연구원	정당해산 반대	공작에 의한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해산절차 중단사례 연구	
세미나	12.14	연구원	정당해산 반대	베니스위원회 지침 및 해설 연구	
정책포럼	01.11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2013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전망	
정책포럼	02.15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한국형 토빈세와 박정부의 경제공약	
정책포럼	03.22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한미FTA 1년, 수출입 증감의 본질	
정책포럼	04.12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개성공단중단과 남북경협 의 영향	
정책포럼	05.10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G7 주요선진국의 양적완화와 환율전쟁	
정책포럼	07.11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미국 고용지표와 양적완화 가능성	
정책포럼	08.23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세법개정안, 부자증세 재원마련책 부족	
정책포럼	09.10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리먼사태 5년, 끝나지 않은 위기	
정책포럼	10.11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증세 및 조세개혁 로드맵	
정책포럼	11.15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미친 전월세 폭등과 민생경제 악화	
정책포럼	12.12	연구원	거시경제연구회	재벌그룹 순환출자 변화분석	
정책포럼	01.30	연구원	진보서울연구회	박원순 공동정부 현황과 전망	
정책포럼	02.20	연구원	진보서울연구회	서울 복지와 문화정책 검토	
정책포럼	03.27	연구원	진보서울연구회	반전평화를 위한 서울시당의 과제	
정책포럼	04.27	연구원	진보서울연구회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운동의 현황	
정책포럼	05.28	연구원	진보서울연구회	서울시정과 진보적민주주의 현실	
정책포럼	07.23	연구원	진보서울연구회	현 정세와 서울시당이 나아갈 방향	특강
정책포럼	08.21	연구원	진보서울연구회	서울지역 모범분회(청년) 사례 연구	
정책포럼	10.22	연구원	진보서울연구회	내란음모사건의 진실과 시당의 역할	
정책포럼	11.26	연구원	진보서울연구회	정당해산사건과 통합진보당의 길	
정책포럼	12.17	연구원	진보서울연구회	진보서울 집권전략 1차 검토(구 사례)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여론조사	03.23	외주	ARS여론조사	부산 영도구 재선거 여론조사	
여론조사	03.23	외주	ARS여론조사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여론조사	
여론조사	04.22	외주	ARS여론조사	서울 서대문구(마) 기초의원선거	
정책포럼	02.20	정책연구원 회의실	주간경제동향	세계 및 한국경제 분석	
정책포럼	03.06	정책연구원 회의실	주간경제동향	세계 및 한국경제 분석	
정책포럼	03.21	정책연구원 회의실	주간경제동향	세계 및 한국경제 분석	
정책포럼	04.03	정책연구원 회의실	주간경제동향	세계 및 한국경제 분석	
정책포럼	04.30	정책연구원 회의실	주간경제동향	세계 및 한국경제 분석	
정책포럼	05.15	정책연구원 회의실	주간경제동향	세계 및 한국경제 분석	
정책포럼	05.28	정책연구원 회의실	주간경제동향	세계 및 한국경제 분석	
정책포럼	06.11	정책연구원 회의실	주간경제동향	세계 및 한국경제 분석	
정책포럼	06.25	정책연구원 회의실	주간경제동향	세계 및 한국경제 분석	
정책포럼	07.25	정책연구원 회의실	주간경제동향	세계 및 한국경제 분석	
정책포럼	08.07	정책연구원 회의실	주간경제동향	세계 및 한국경제 분석	
정책포럼	08.28	정책연구원 회의실	주간경제동향	세계 및 한국경제 분석	
정책포럼	09.25	정책연구원 회의실	주간경제동향	세계 및 한국경제 분석	
정책포럼	10.16	정책연구원 회의실	주간경제동향	세계 및 한국경제 분석	
정책포럼	10.29	정책연구원 회의실	주간경제동향	세계 및 한국경제 분석	
정책포럼	12.20	정책연구원 회의실	2014년 경제 전망	세계 및 한국경제의 2014년 전망	

다. 교육·연수활동(26회)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연구원 워크숍	02.15	연구원	당 정책역량 강화방안	
중앙당직자교육	02.22	연구원	정세 및 강령	
지방당직자교육	03.08	충남도당	당 정책 및 실무 방법론	
지방당직자교육	03.15	대전시당	당 정책 및 실무 방법론	
지방당직자교육	03.22	충북도당	당 정책 및 실무 방법론	
지방당직자교육	04.05	전북도당	당 정책 및 실무 방법론	
지방당직자교육	04.12	전남도당	당 정책 및 실무 방법론	
지방당직자교육	04.19	광주시당	당 정책 및 실무 방법론	
지방당직자교육	04.26	울산시당	당 정책 및 실무 방법론	
지방당직자교육	05.03	부산시당	당 정책 및 실무 방법론	
선관위 중앙당직자연수	05.08~09	담양	정세 및 선거법 이해	
강령 강사학교	05.23~24	서울	강령 이해 및 교육 방법론	
대전 간부학교	05.25	대전	정세, 강령, 당활동론 등	
경남 간부학교	05.31~06.01	의령	정세, 강령, 당활동론 등	
대구·경북 간부학교	08.18	경산	정세, 강령, 당활동론 등	
연구원 워크숍	08.23	연구원	하반기 정세 및 정책과제	
전남 간부학교	08.24~25	화순	정세, 강령, 당활동론 등	
중앙당직자교육	08.30	연구원	하반기 정세 및 정책 해설	
서울 간부학교	09.01	서울	정세, 강령, 당활동론 등	
당원협의회교육	09.06	서울 성북	강령 및 주요 정책 해설	
당원협의회교육	09.27	경기 화성	강령 및 주요 정책 해설	
당원협의회교육	10.11	울산 북구	강령 및 주요 정책 해설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당원협의회의교육	10.18	경남 창원	강령 및 주요 정책 해설	
당원협의회의교육	10.25	강원 춘천	강령 및 주요 정책 해설	
당원협의회의교육	12.13	부산 사하	강령 및 주요 정책 해설	
당원협의회의교육	11.08	인천 강화	강령 및 주요 정책 해설	

라. 정책홍보(103회)

일 시 (기 간)	홍보 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01.08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	
01.15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대선패배와 진보정치의 과제	
01.15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	
01.15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3호 발간	
01.16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정책논평] 용돈수준의 기초노령연금 20만원조차 재정부담 운운하는 현실이 걱정스럽다.	
01.22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4호 발간	
01.29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5호 발간	
01.3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	
02.05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6호 발간	
02.06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	
02.18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진보정책연구원 2012년 활동실적보고	
02.19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7호 발간	
02.2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	
02.26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8호 발간	
02.27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	
03.04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보고서]이명박정부 총체적 실정	
03.06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	
03.06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9호 발간	
03.08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정책논평] 남북공멸을 초래할 북한공격 전쟁훈련을 당장 중단하라	
03.12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10호 발간	
03.13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	
03.2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	

일 시 (기 간)	홍보 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03.2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11호 발간	
03.27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12호 발간	
03.28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	
04.01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정책논평] 홈플러스 노동조합 출범을 환영하며	
04.02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13호 발간	
04.02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정책논평] 대통령취임 1달 만에 서민주거 안정보다 시장 활성화에 올인한 박근혜 정부	
04.03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	
04.09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14호 발간	
04.11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	
04.16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15호 발간	
04.17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정책논평] 4.1부동산대책관련 여야정 합의에 대한 입장	
04.17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	
04.23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16호 발간	
04.24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	
04.3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17호 발간	
04.3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	
05.08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18호 발간	
05.1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05.07)	
05.14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	
05.14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19호 발간	
05.21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20호 발간	
05.24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	
05.28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21호 발간	

일 시 (기 간)	홍보 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05.28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	
05.3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번역 소개] 전 CIA 국장 울시의 경고와 조건, 한반도 운명에 미칠 파장은?	
06.05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22호 발간	
06.1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06.04)	
06.12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23호 발간	
06.18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24호 발간	
06.2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	
06.25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25호 발간	
07.01 ~07.27	인터넷	팝업 및 배너광고	정전60년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평화심포지움	
07.03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국제심포지움] 정전60년 한반도평화협정체결을 위한 국제평화심포지움	
07.04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07.02)	
07.09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07.09)	
07.1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26호 발간	
07.16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27호 발간	
07.19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정책논평] 예상했던 '용돈수준' 기초연금 공약파기! '노후생활보장 특별법' 제정이 시급히 요청된다.	
07.19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07.16)	
07.23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07.23)	
07.23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28호 발간	
07.29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자료집] 정전60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평화심포지움	
07.3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29호 발간	
08.06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30호 발간	
08.06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해설서]진보적 민주주의 정강정책 해설서	

일 시 (기 간)	홍보 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08.07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	
08.14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	
08.19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정책논평]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최저생계비! 근본적 개혁을 촉구한다.	
08.2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31호 발간	
08.23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	
08.27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장] 군사주의로 경도된 오바마의 대한반도 정책 - 틈소락	
08.27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32호 발간	
09.06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33호 발간	
09.06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09.03)	
09.13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09.13)	
09.16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34호 발간	
09.25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35호 발간	
09.25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	
09.27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정책논평]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10.01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36호 발간	
10.07 ~10.16	인터넷	팝업 및 배너광고	유신선포41주년 토론회	
10.07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10.01)	
10.08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37호 발간	
10.1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	
10.15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38호 발간	
10.17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	
10.17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토론회] 유신선포 41년 '박근혜 정부와 민주주의'	
10.24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	

일 시 (기 간)	홍보 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10.24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39호 발간	
10.29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40호 발간	
10.3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	
11.08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	
11.21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1119)	
11.29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41호 발간	
12.09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42호 발간	
12.1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43호 발간	
12.18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이슈 44호 발간	
12.2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싱크탱크 광장] "이석기 사건, 종북 아닌 표현의 자유 시각으로 보라"(미셸 초스도브스키 교수 인터뷰)	
12.20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당 배포	주간경제동향(1203)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19건)

발간 일자	종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고
2.15	자료집	이명박 정부 실정·악행 대국민 보고서	자체발간	1000부/당내배포	
5.22	자료집	강령교육 강사단학교	자체발간	100부/당내배포	
5.24	자료집	대전시당 간부정치학교	자체발간	80부/당내배포	
5.30	자료집	경남도당 간부정치학교	자체발간	100부/당내배포	
6.28	자료집	정책당대회 정치토론회 자료집	자체발간	6000부/당내배포	
6.28	자료집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1년 정책보고서	자체발간	6000부/당내배포	
07.25	자료집	정전60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국제평화 화심포지엄	자체발간	500부/당내배포	
08.06	해설서	정강정책 해설서	자체발간	인터넷 발간	
8.17	자료집	대구경북 간부정치학교	자체발간	80부/당내배포	
8.23	자료집	전남도당 간부정치학교	자체발간	200부/당내배포	
8.30	자료집	서울시당 간부정치학교	자체발간	200부/당내배포	
09.13	소책자	UNIFIED PROGRESSIVE PARTY	자체발간	100부/당내배포	
11.08	자료집	법무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 반박	자체발간	인터넷 발간	
11.08	자료집	진보적 민주주의 변론 참고용 자료	자체발간	인터넷 발간	
11.10	자료집	정당해산 청구 사유의 허위 왜곡 비판	자체발간	인터넷 발간	
11.18	자료집	역대 대통령들 '민중' 발언	자체발간	인터넷 발간	
11.18	자료집	역대 여당들의 위헌적(?) 발언	자체발간	인터넷 발간	
11.18	자료집	역대 여야 정당들의 '진보' 정강 정책	자체발간	인터넷 발간	
11.29	자료집	보편성을 획득한 연방제 통일(방안)	자체발간	인터넷 발간	

바. 그 밖의 주요활동(19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07.27	용산	정전60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평화대회	국제평화심포지엄 참가자들의 국제평화대행진 결산	국제컨프런스일환
06.29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전남 파워리더 초청 연찬회	2013정책당대회에 대한 해설 및 정책네트워크 구축	당대회
09.13	프레스센터	이정희대표, 이상규원장 외 신기자간담회	이석기의원 사건의 진실	간담회
09.13	외주	영문번역 협조	The Truth of Lawmaker, Lee Seok-ki case : A Conspiracy for Rebellion or An Attempt to Destroy Democracy by the NIS?	국제연대
09.15	자체	영문번역 협조	[General Meeting personal statement] Personal Statement of Lee Seok-Ki regarding the arrest motion	국제연대
09.15	Global Research	한글번역 협조	Political Firestorm in South Korea By Gregory Elich, Global Research, September 13, 2013	국제연대
09.22	자체	일문번역 협조	統合進歩党に対する国家情報院の内乱陰謀捏造公安弾圧についての解説	국제연대
09.22	외주	일문번역 협조	イ・ジョンヒ代表、統合進歩党全国地域委員長 緊急記者会見 発言内容	국제연대
09.25	외주	영문번역 협조	Key Issues- A rebellion conspiracy, the 'RO' and the paradox of the division system in Korean society and the National Security Law	국제연대
09.25	외주	영문번역 협조	A round-up of the NIS' meddling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국제연대
10.01	외주	영문번역 협조	What was the content of the lawmaker Lee Seok-ki's lecture?	국제연대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10.02	자체	영문번역 협조	Unified Progressive Party Spokesperson Comments on the prosecution's detention warrant	국제연대
10.02	외주	일문번역 협조	李石基 (イ・ソッキ) 議員の講演はどのような内容だったのか?	국제연대
10.07	외주	영문번역 협조	Memorandum of the Joint Legal Counsel on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Interim Report	국제연대
10.08	외주	일문번역 협조	檢察の中間捜査結果発表に対する共同弁護人団の立場	국제연대
10.14	외주	일문번역 협조	内乱陰謀の眞実 Q & A	국제연대
10.23	자체	영문번역 협조	Speech of Lawmaker Lee Seok-ki on his resolution of the crisis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Plenary of the National Assembly	국제연대
10.23	자체	영문번역 협조	Speech of Lawmaker Lee Seok-ki against the Request for Submission of Materials of the 2nd South-North Korea Summit in 2007	국제연대
11.13	자체	영문번역 협조	The Truth behind the Lee Seok-ki Scandal	국제연대

주제_ 2013년 경제 전망

- ▣ 연구기간 : 2013년 01월 01일 ~ 01월 31일(1개월 00일)
- ▣ 연구분야 : 기획재정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4년을 맞아 세계경제 전반을 조망
- 2014년 경제 전망을 통해서 경제정책수립을 지원
- 새 정부의 출범에 즈음한 한국경제 현실을 진단

▶ 연구내용

-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정부지출 확대가 양극화 해소나 고용창출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한국경제는 고환율 정책으로 급격한 성장세 하락은 없으나 소득격차의 증대, 내수 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 3호로 발표

주제_ 경제민주화와 실천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01월 01일 ~ 02월 28일(2개월 00일)
- ▣ 연구분야 : 법제사법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검토
-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현황을 분석
- 경제민주화를 위한 실천적 대안 마련

▶ 연구내용

- 고전적 경제성장론을 극복하고 내수 위주의 발전 전략이 필요
- 자원,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재벌과 기득권층의 저항을 극복해야 함
- 경제민주화는 노동권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함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 3, 5, 8호로 발표

주제_ 부자증세와 부가세, 지하경제 양성화

- ▣ 연구기간 : 2013년 01월 01일 ~ 02월 28일(2개월 00일)
- ▣ 연구분야 : 기획재정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맞물린 조세제도의 주요 논점을 조망
-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

▶ 연구내용

- 외환거래세, 토빈세를 도입해야 함
- 부가세 인상은 경제성장 둔화, 과도한 저소득층의 세부담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낳을 것으로 전망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전면 열람하고 탈세, 지하경제를 다루는 특별 부서를 설치해야 함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 3, 4, 5, 7호로 발표

주제_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

- ▣ 연구기간 : 2013년 01월 01일 ~ 02월 28일(2개월 00일)
- ▣ 연구분야 : 기획재정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의 중소기업, 자영업자 정책을 분석
- 정부의 중소기업, 자영업자 정책의 문제점 파악
-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

▶ 연구내용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
- 유통산업발전법 재개정 논의가 필요
- 카드수수료 인하, 중소기업 중심 지역공동물류체계 확립 등을 추진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 5, 7호로 발표

주제_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 ▣ 연구기간 : 2013년 03월 01일 ~ 05월 30일(3개월 00일)
- ▣ 연구분야 : 국토교통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
-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분석
-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제시

▶ 연구내용

- 전국적으로 전세금 49.7%증가, 월세 증가로 렌트푸어 문제가 심각
- 정부는 투기세력이나 건설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집중
- 거주자 위주의 전월세상한제와 주거비지원제도의 도입이 절실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 13, 19호로 발표

주제_ 정부 및 지자체 재정 연구

- ▣ 연구기간 : 2013년 09월 01일 ~ 10월 31일(2개월 00일)
- ▣ 연구분야 : 기획재정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정부 재정적자의 현황을 파악
 -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 복지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 및 대안 마련
- ▶ 연구내용
 - 정부 재정적자는 규모만이 아니라 빠른 증가속도로 문제로 큼
 - 부자증세를 비롯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보편적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정부-지자체 분담에서 정부 100%원칙이 필요
-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 36, 40호로 발표

주제_ 동양증권 사태와 금산분리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01일 ~ 10월 31일(1개월 00일)
- ▣ 연구분야 : 정무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와 동양증권의 계열사 부실대출로 현실 문제로 된 금산분리를 연구
- 재벌들의 순환출자 문제를 분석하고 금산분리의 현황을 진단하고 과제를 제시

▶ 연구내용

- 동양그룹은 순환출자가 가장 심한 재벌에 속함
- 재벌그룹들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야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음
- 금산분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더 정비해야 함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 38호로 발표

주제_ 코레일 민영화 문제와 해결방안

- ▣ 연구기간 : 2013년 12월 01일 ~ 12월 31일(1개월 00일)
- ▣ 연구분야 : 국토교통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코레일 민영화에 대한 현황을 진단
- 외국의 사례와 비교한 문제점 도출
- 철도산업 발전 방향 모색

▶ 연구내용

- 영국의 경우 민영화는 실제 요금인상으로 연결됨
- 일본의 경우 민영화 과정이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고 이후 대형사고를 낳게 함
- 철도산업이 가지는 공공성에 맞게 민영화가 중단되어야 함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 43호로 발표

주제_ 진보적 조세정책의 원칙과 방도

- ▣ 연구기간 : 2013년 09월 01일 ~ 12월 31일(4개월 00일)
- ▣ 연구분야 : 기획재정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국 조세제도를 통사적, 세부적으로 고찰
- 한국 조세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원칙을 도출
- 한국 조세제도의 진보적 발전을 위한 로드맵과 방도 마련

▶ 연구내용

- 조세부담율과 소득 재부분의 기능이 외국에 비해서 매우 낮음
- 간접세의 비중이 줄고는 있으나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임
- 조세의 누진성 강화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면서 증세를 추진해야 함

▶ 연구성과

- 대안체제 연구로 결속

주제_ 주간경제동향

- ▣ 연구기간 : 2013년 01월 01일 ~ 12월 31일(12개월 00일)
- ▣ 연구분야 : 기획재정위원회
- ▣ 연구방법 : 용역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경제동향을 체계적으로 이해
- 세계경제의 전반 흐름을 거시경제지표로 파악
- 한국경제의 전반 흐름을 거시경제지표로 파악

▶ 연구내용

- 세계경제 주요 거시경제지표분석
- 한국경제 주요 거시경제지표분석
- 주별로 제기된 주요 쟁점 소개

▶ 연구성과

- 주간경제동향 자료를 매주(하반기 2개월은 격주) 발간

주제_ 정치여론조사 탐색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01일 ~ 12월 31일(3개월 00일)
- ▣ 연구분야 : 정무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치여론조사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함
- 정당들의 지지율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상을 추적
- 정당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

▶ 연구내용

-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시간에 따른 정당들의 지지율 분석 - 지역별, 요일별, 연령별 특성에 따른 정당들의 지지율 파악
- 지지율 상승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으로 정당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

▶ 연구성과

- 자체 검토 보고

주제_ 2014년 정치 전망

- ▣ 연구기간 : 2013년 01월 01일 ~ 01월 15일
- ▣ 연구분야 : 정무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3년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적인 연구소의 정세전망 작업의 일환임.
- 2013년 국회, 정당 등 정치정세를 전망함.
- 야당의 정계개편을 전망하고 진보정치의 대응방안을 모색함.

▶ 연구내용

- 문재인과 안철수 중심 정계개편에 진보정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민주당 왼쪽 방, 진보양당 경쟁체제가 아니라 혁신과 단결의 길로 가야 함.
- 지역대결, 이념대결, 세대대결을 정책경쟁으로 전환하는 전향적 정계개편이 필요함.
- 보수야당이 독주하는 야권판도변화를 경계하며, 진보정치를 제3세력으로 재정립해야 함
- 진보대통합을 전제로 한 선택적 야권연대는 현 정치제도에서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
- 자기문제에 발목이 잡힌 진보정치가 아니라 노동자 서민을 위한 진보정치가 필요함.

▶ 연구성과

- 통합진보당의 2013년 활동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함.

주제_ 2013년 정치개혁과제

- ▣ 연구기간 : 2013년 01월 01일 ~ 01월 31일
- ▣ 연구분야 : 정무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의원연금, 쪽지예산 논란 뛰어넘는 근본적인 국회 시스템 개혁을 모색.
- 총선 직후 마다 터져 나오는 의원 특권폐지 논란에 대한 입장 정리.
- 19대 국회의 야권합의 사항인 독일식 정당명부제도 실현 방안을 모색.

▶ 연구내용

- 정당에 대한 지지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개혁은 야권합의 사항임.
- 뉴질랜드식 국민운동만이 진정한 선거제도 개혁을 실현할 수 있어
- 교섭단체 구성의 요건을 완화하여 거대양당 중심의 국회운영을 의석분포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으로 전환해야 함.

▶ 연구성과

- 2013년 통합진보당의 정치개혁 입법과제를 설정하는데 참고함.

주제_ 전관예우 개선방향

- ▣ 연구기간 : 2013년 03월 01일 ~ 03월 31일
- ▣ 연구분야 : 정무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의 회전문 인사와 전관예우 논란에 대한 대안 마련.

▶ 연구내용

-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함.
- 공직자 취업심사를 강화하고 영리활동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함.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해 전직 공직자의 로비를 차단해야 함.
- 공직 후보자에 대하여 정량화된 다양한 기준으로 이해충돌여부를 사전에 비공개적으로 심사해야 함.

▶ 연구성과

-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대안정책 수립에 참고함.

주제_ 사전투표제도 개선방향

- ▣ 연구기간 : 2013년 3월 25일 ~ 4월 20일
- ▣ 연구분야 : 정무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사전투표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함에 따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 연구내용

- 사전투표가 과거 부재자투표보다 훨씬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음.
- 온라인 통합선거인 명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투표의 접근성을 높여야 함.
- 지하철역, 학교, 은행 등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이동 투표소를 운영할 수도 있음.
- 장기적으로는 인터넷투표와 모바일투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통합선거인명부와 전자투표시스템을 인터넷으로 연결한다면 투표기간 중에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음.

▶ 연구성과

-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함.

주제_ 정당공천제 쟁점 검토

- ▣ 연구기간 : 2013년 5월 20일 ~ 7월 10일
- ▣ 연구분야 : 정무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당공천 유지와 폐지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검토함.

▶ 연구내용

- 정당공천 금지에 비해 허용 때 여성의원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할 경우 여성의원 배출에 타격을 줌.
- 정당표방 허용, 탈당강요, 정당지배 존속 등 공천금지의 문제점도 무시못함.
- 정당표방을 허용할 바에 공천제를 유지 개선해야 함.
- 당원들끼리 과다 경쟁하는 정당표방보다는 정당공천의 유지 개선이 타당함.
- 공천과정의 문제점은 공천의 투명성, 민주성을 높여 나갈 때 개선될 수 있으므로 당원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선출이 그 기본방향이 되어야 함.

▶ 연구성과

- 정당공천 폐지 논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데 참고함.

주제_ 민중에게 권력을 주는 제도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01일 ~ 12월 31일
- ▣ 연구분야 : 정부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간접민주주의와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를 모색함.

▶ 연구내용

- 형식적 국민주권의 실질적 국민주권으로의 발전과정을 규명함.
- 실질적 국민주권의 방안으로서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의 등 직접민주주의를 모색함.
- 사회적 합의와 경제계획 참여를 담당하는 국가경제위원회를 헌법상 기구로 설치하고 산하에 산업위원회와 직장위원회를 둬.
- 각종 민관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줌으로써 행정관료의 독단을 견제함.
- 배심제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기소배심을 두어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도록 함.

▶ 연구성과

주제_ 진보적 민주주의의 연혁 연구

-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01일 ~ 11월 31일
- ▣ 연구분야 : 정무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의 연혁을 연구함.

▶ 연구내용

- 진보적 민주주의는 보통명사로서 이념과 무관하게 널리 쓰임.
- 미국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1890년부터 1920년까지 진보시대에 형성되어 2차 대전 직전까지 활발하게 언급되었음.
- 미국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초기에 시민권 확대, 노동자 보호, 대자본 규제 등 자유민주주의 한계를 개선하는 내용이었으나 2차 대전 직전에는 파쇼에 반대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로서 사용됨.
- 해방전후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소련과 자본주의 미국도 동의할 수 있는 반봉건 반파쇼의 부르주아민주주의로서 통일국가의 건국노선으로 제기됨.
- 미소 냉전 이후 남북이 단독정부를 추진함에 따라 진보적 민주주의는 폐기되었으나 통일국가와 민주국가의 상으로서 재야정치세력에 의해 명맥을 유지함.

▶ 연구성과

- 진보적 민주주의의 헌법 위반성에 대한 반박자료로 활용함.

주제_ 민중주권 쟁점 연구

-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15일 ~ 12월 15일
- ▣ 연구분야 : 정무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민중주권과 국민주권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위험성을 살핌.
- 국민, 민중, 인민의 사용례와 민중주권의 연혁을 검토함.

▶ 연구내용

- 국민, 민중, 인민은 모두 역사적으로 사용한 단어이며, 각각의 쓰임새가 달랐음.
- 사람들을 의미하는 인민이 일반적으로 쓰였고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뜻이어서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았음.
- 사회계약설과 천부인권사상에 비추어 국가를 전제로 하는 국민은 기본권의 주체로 적절하지 않고 인민이 적절하나 사회주의에서 주로 사용함에 따라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됨.
- 국민과 인민의 단점을 피하고자 민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특히 사회의 기층과 역사의 주체로서 많이 사용되었음.

▶ 연구성과

- 민중주권의 위험성 논란에 대한 반박자료로 활용함.

주제_ 연방제통일방안의 위헌성 검토

- ▣ 연구기간 : 2013년 12월 1일 ~ 12월 31일
- ▣ 연구분야 : 정무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진보당의 '코리아연방공화국'의 성격과 통일방안으로서 위헌성을 검토함.

▶ 연구내용

-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순수한 통일방안이나, 코리아연방공화국은 국가비전임과 동시에 통일방안임.
- 연방제 통일방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최초로 주장하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강소연방제를 국가형태개혁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이후 통일방안으로서도 인정하였음.
- 6.15공동선언은 연합제와 낮은단계의 연방제를 가능한 통일방안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로써 국가연합제와 연방제는 서로 수렴하여 절대적 구분이 어렵게 됨.
- 따라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헌일 수 없으며, 남북합의에 의해 쌍방의 체제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도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안됨.

▶ 연구성과

- 연방제 통일방안의 위헌성 논란에 참고함.

주제_ 박근혜정부 통일외교분야 전망

- ▣ 연구기간 : 1월 1일 ~ 4월 30일(4개월)
- ▣ 연구분야 : 외교통일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을 전망함
- ▶ 연구내용
 - 신뢰프로세스 평가
- ▶ 연구성과
 - 정부의 통일외교정책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대응계획을 세우는 데 기여함.

주제_ 이명박 정부 5년 통일외교 정책 평가

- ▣ 연구기간 : 1월 1일 ~ 2월 25일 (2개월)
- ▣ 연구분야 : 외교통일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이명박 정부 5년 기간 동안의 통일외교 분야 평
- ▶ 연구내용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 연구성과
 - 이명박 5년의 통일외교정책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당원 교육 자료로 활용됨.

주제_ 정강정책 해설

- ▣ 연구기간 : 5월 1일 ~ 7월 31일(3개월)
- ▣ 연구분야 : 외교통일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통합진보당의 이념과 지향: 진보적 민주주의” 중 정치분야, 남북관계 분야, 대외정책 분야의 정강정책을 제시함

▶ 연구내용

- 나라의 자주권 실현을 위한 과제
-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실현을 위한 과제

▶ 연구성과

- 이후 대안사회체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함
- 당의 강령 해설에 도움을 줌

주제_ 남북관계 현안 진단

- ▣ 연구기간 : 8월 1일 ~ 8월 31일(1개월)
- ▣ 연구분야 : 외교통일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남북관계의 현안을 진단함

▶ 연구내용

- 개성공단 재개, 이산가족 상봉 회담 해당 시기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현안을 설명하고 이후 남북관계를 전망함.

▶ 연구성과

- 개성공단 발전 방향과 이산가족 상봉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과제 도출

주제_ 통일경제 관련 대안사회체제

- ▣ 연구기간 : 9월 1일 ~ 12월 30일 (4개월)
- ▣ 연구분야 : 외교통일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대안사회체제로서 통일경제체제의 상과 실현 방안을 제시함
- ▶ 연구내용
 - 기존 경험 평가
 - 통일경제 체제의 상
 - 통일경제 실현과 경험 활성화 방안
- ▶ 연구성과
 - 당이 제시하는 대안사회체제의 구체적 상을 마련하는 데 기여

주제_ 성소수자 인권

- ▣ 연구기간 : 2월 1일 ~ 2월 5일, 4월 22일 ~ 4월 29일 (13일)
- ▣ 연구분야 : 법제사법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점을 밝힘
- ▶ 연구내용
 -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 광고 방해
 - 민주통합당, 차별금지법 철회와 균형법 개악 움직임
- ▶ 연구성과
 - 당원들의 선전교육용으로 활용

주제_ 이명박 정부 5년 여성정책 평가

- ▣ 연구기간 : 1월 1일 ~ 2월 25일 (2개월)
- ▣ 연구분야 : 여성가족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이명박 정부 5년 기간 동안의 여성정책 평가
- 새로운 과제 도출

▶ 연구내용

- 여성정책 추진체계, 여성노동, 대표성, 여성인권, 보육 등 가족정책 5가지 부문의 이명박 정부 약속에 대한 분석
- 여성정책기본계획 분석
- 각 부문의 현황 분석

▶ 연구성과

- 당원들의 선전교육용으로 활용

주제_ 이명박 정부 5년 환경정책 평가

- ▣ 연구기간 : 1월 1일 ~ 2월 25일(2개월)
-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이명박 정부 5년 기간 동안의 환경정책 평가
 - 새로운 과제 도출
- ▶ 연구내용
 - 환경정책 추진체계 평가
 - 4대강사업 평가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평가
 - 환경 규제완화와 수돗물 상업화 추진 평가
- ▶ 연구성과
 - -당원들의 선전교육용으로 활용

주제_ 정강정책 해설

- ▣ 연구기간 : 6월 1일 ~ 7월 31일(2개월)
- ▣ 연구분야 : 농해수위, 여성가족위, 환경노동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통합진보당의 이념과 지향: 진보적 민주주의”의 기본 골격이 되는 부문별 정강 정책 제시
- 농업, 여성, 환경 부문에 대한 정강 제시

▶ 연구내용

- 식량주권 확보의 의의
- 성/평등 사회 구현의 의의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의 의의

▶ 연구성과

- 이후 연구 과제의 기본적 방향성 수립
- 당의 기본이념 해설에 도움

주제_ 정부 여성정책 평가

- ▣ 연구기간 : 1월 7일 ~ 1월 14일, 8월 10일 ~ 8월 19일 (16일)
- ▣ 연구분야 : 여성가족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정부의 여성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
- ▶ 연구내용
 - 최초의 여성대통령 당선과 그 영향
 - 일본 정부의 유엔여성기구의 기금 참여의 의미
- ▶ 연구성과
 - 당원들의 선전교육용으로 활용

주제_ 여성의 대표성

- ▣ 연구기간 : 1월 15 ~ 1월 21일, 8월1일 ~ 8월 12일 (18일)
- ▣ 연구분야 : 여성가족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여성의 대표성 관련 정책 평가

▶ 연구내용

- 공공부문 여성임원 비율 확대될까.
- 여성정치 진출 가로막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안

▶ 연구성과

- 당원들의 선전교육용으로 활용

주제_ 여성의 노동권

- ▣ 연구기간 : 1월 21일 ~ 1월 28일, 4월 17일 ~ 4월 22일,
5월 1일 ~ 5월 6일, 6월 1일 ~ 6월 6일,
7월 1일 ~ 7월 8일(30일)
- ▣ 연구분야 : 여성가족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여성의 노동권 관련 정책 평가
- ▶ 연구내용
 - 여성의 고용상황 OECD내 최악
 - 여성의 고용 실정을 무시한 엄마가산점
 - 감정노동자, 부당한 요구에 거부할 권리 보장 필요
 - 정부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 최저임금 인상 350원
- ▶ 연구성과
 - 당원들의 선전교육용으로 활용

주제_ 보육/아동 정책

- ▣ 연구기간 : 3월 12일 ~ 3월 19일 , 5월 21일 ~ 5월 27일,
5월 29일 ~ 6월 5일, 6월 5일 ~ 6월 12일,
10월 11일 ~ 10월14일 (30일)
- ▣ 연구분야 : 여성가족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보육/아동 관련 정책 평가
- ▶ 연구내용
 - 할머니 희생으로 보육의 현안을 회피하는 정책
 - 정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 여성정책 전 계층 양육수당 보장
 - 정부,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 임산부의 날 기념
- ▶ 연구성과
 - 당원들의 선전교육용으로 활용

주제_ 성폭력

- ▣ 연구기간 : 3월 20일 ~ 3월 25일, 4월 1일 ~ 4월 8일,
5월 8일 ~ 5월 13일, 6월 17일 ~ 6월 24일 (25일)
- ▣ 연구분야 : 여성가족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성폭력 관련 정책 평가
- ▶ 연구내용
 - 강간죄의 기준이 적극적 저항에서 적극적 동의로 개정 필요
 - 국제기준에 맞는 인신매매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
 - 대법원, 정상적인 결혼관계 상의 부부 강간죄 첫 인정
 - 정부, 성폭력방지종합대책
- ▶ 연구성과
 - 당원들의 선전교육용으로 활용

주제_ 박근혜 정부의 복지 평가

- ▣ 연구기간 : 9월 10일 ~ 9월16일, 9월 27일 ~ 9월 30일 (11일)
- ▣ 연구분야 : 보건복지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의 복지 관련 정책 평가
- ▶ 연구내용
 - 국가미래연구원, 국민행복지수
 - 기초연금축소
- ▶ 연구성과
 - 당원들의 선전교육용으로 활용

주제_ 기후변화 관련 대안사회체제

- ▣ 연구기간 : 9월 1일 ~ 12월 30일 (4개월)
-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칙 제시
- 에너지 관련 새로운 사회체제 제시

▶ 연구내용

- 한반도의 기후변화양상
-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 에너지 주권, 탈핵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실현 방안

▶ 연구성과

- 당의 방향제시 : 미래적 대안 사회 체제 제시
- 당원들의 선전교육용으로 활용

주제_ 이명박 정부 5년 의료/복지정책 평가

- ▣ 연구기간 : 1월 1일 ~ 2월 25일(2개월)
- ▣ 연구분야 : 보건복지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이명박 정부 5년 기간 동안의 의료/복지정책 평가
 - 새로운 과제 도출
- ▶ 연구내용
 - 건강보험 평가
 - 의료공급체계 평가
 - 복지재정 평가
 - 기초생활분야, 노인, 장애, 에너지복지 평가
- ▶ 연구성과
 - 당원들의 선전교육용으로 활용

주제_ 노인복지

- ▣ 연구기간 : 1월 1일 ~ 1월 16일, 1월 17일 ~ 1월 22일,
4월 7일 ~ 4월 16일, 4월 25일 ~ 4월 30일,
7월 3일 ~ 7월 10일 (35일)
- ▣ 연구분야 : 보건복지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의 노인연금복지 비판

▶ 연구내용

- 박근혜 정부의 노인연금정책의 문제점
- 노인빈곤 현황
- 공공성 강화를 핵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 경로당을 노년 거점센터(가칭)로 전환
- 시행 5년 '노인장기요양 보험' 평가

▶ 연구성과

- 입법안 발의
- 당원들의 선전교육용으로 활용

주제_ 빈곤층 해소를 위한 제도

- ▣ 연구기간 : 1월 31일 ~ 2월 5일, 5월 15일 ~ 5월 21일,
8월 10일 ~ 8월 19일 (22일)
- ▣ 연구분야 : 보건복지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빈곤층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발
- ▶ 연구내용
 - 부양 의무제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
 - 최저생계비 개선방안
- ▶ 연구성과
 - 당원들의 선전교육용으로 활용

주제_ 보건의료 정책 평가

- ▣ 연구기간 : 2월 1일 ~ 2월 6일, 3월 1일 ~ 3월 6일, 3월 7일 ~ 3월 12일 (18일)
- ▣ 연구분야 : 보건복지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평가
- ▶ 연구내용
 -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
 - 진주의료원 폐업
 - 보건의료 대개혁을 위한 정책
- ▶ 연구성과
 - 당원들의 선전교육용으로 활용

주제_ 복지 서비스 노동자의 권리

- ▣ 연구기간 : 3월 20일 ~ 3월 27일, 4월 10일 ~ 4월 16일 (13일)
- ▣ 연구분야 : 보건복지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부양의무제 폐지의 필요성과 대안 제시
- ▶ 연구내용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 ▶ 연구성과
 - 당원들의 선전교육용으로 활용

주제_ 정부의 복지 기본 계획,정책

- ▣ 연구기간 : 1월 3일 ~ 1월 14일, 2월10일 ~ 2.19일,
5월 30일 ~ 6월 5일, 7월 1일 ~ 7월 10일,
7월 15일 ~ 7월 22일 (35일)
- ▣ 연구분야 : 보건복지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정부 기본 복지 계획과 정책 평가
- ▶ 연구내용
 - ‘대안사회=복지국가=함께 사는 대한민국’
 - 신정부의 복지정책 추진방향
 - 국민행복연금 골격
 - 복지지출 100조원 돌파
 - 사회서비스 시장화전략
- ▶ 연구성과
 - 당원들의 선전교육용으로 활용

주제_ 정강정책 해설

- ▣ 연구기간 : 6월 1일 ~ 7월 31일(2개월)
- ▣ 연구분야 : 보건복지위원회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통합진보당의 이념과 지향: 진보적 민주주의”의 기본 골격이 되는 부문별 정강 정책 제시
- 복지 부문에 대한 정강 제시

▶ 연구내용

- 민생 5대 과제와 사회적 평등 실현을 위한 정강정책
(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실현, 무상교육 체제 구축
(건강권) 공공의료 중심의 무상의료 실현
(주거권) 집걱정 없는 사회 실현
(노후생활권) 국가 책임 노후생활 보장 사회 건설
(사회보장) 국가 책임 사회보장제도 구축

▶ 연구성과

- 이후 연구 과제의 기본적 방향성 수립
- 당의 기본이념 해설에 도움

2013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서

- 제4장 -

진보정의연구소
(진보정의당)



진보정의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5층			○		

「주」 1. 「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v”표시를 합니다.

나. 인력

연구원수	직원 수	비고
박사급 : 2명	자체고용 : 1명	
석사급 : 5명	외부파견 :	
기 타 : 5명		
합 계 : 12명	합 계 : 1명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613,656,621	201,365,728	79,007,959	894,030,308	807,295,559	86,734,749	

2. 주요 활동실적

가. 연구·개발실적(38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2012.12.20 ~ 2013.01.31	국회운영 위원회	2012년 18대 대선과 한국정치: 진보정당의 새로운 시작과 모색	외부전문가	88p	
2013.03.28 ~ 2013.05.31	환경노동 위원회	사회민주주의의 녹색화 방향과 전략	외부전문가	83p	
2013.04.04 ~ 2013.05.04	교육문화 체육관광 위원회	협동조합 전략사업화를 위한 기획 및 당원용 책자발간	마실지역사회 연구소와 공동	79p	
2013.03.25 ~ 2013.05.20	기획재정 위원회	작은 용역-10문10답으로 본 여섯 가지 분야 쟁점과 비전(경제민주화)	외부전문가	15p	
2013.03.25 ~ 2013.05.20	환경노동 위원회	작은 용역-10문10답으로 본 여섯 가지 분야 쟁점과 비전(노동)	외부전문가	26p	
2013.03.25 ~ 2013.05.20	보건복지 위원회	작은 용역-10문10답으로 본 여섯 가지 분야 쟁점과 비전(복지와 재정)	외부전문가	18p	
2013.03.25 ~ 2013.05.20	국회운영 위원회	작은 용역-10문10답으로 본 여섯 가지 분야 쟁점과 비전(사회민주주의)	외부전문가	23p	
2013.03.25 ~ 2013.05.20	환경노동 위원회	작은 용역-10문10답으로 본 여섯 가지 분야 쟁점과 비전(환경생태)	외부전문가	49p	
2013.04.25 ~ 2013.06.26	외교통일 위원회	작은 용역-10문10답으로 본 여섯 가지 분야 쟁점과 비전(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외부전문가	17p	
2013.10.01 ~ 2013.12.15	국회운영 위원회	외부 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정의당의 진로	외부전문가	110p	
2013.04.01 ~ 2013.04.12	안전행정	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연구	자체	10p	
2013.05.01 ~ 2013.06.25	안전행정	한국형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연구	자체	25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2013.07.05 ~ 2013.09.05	안전행정	정치개혁방안 연구	자체	20p	
2013.11.25 ~ 2013.12.25	안전행정	한국정치와 통치권력 구조 개편의 모색	자체	15p	
2013.6~7월	정무위	19대 국회 경제민주화 1년 평가	자체	29p	
2013.7~8월	기재위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의 과제 - 한국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	외부전문가	35p	
2013.7~8월	정무위	한국경제 금융부문의 현황과 개혁과제	외부전문가	18p	
2013.7~8월	정무위	서민금융의 실태와 정책과제	외부전문가	16p	
2013.7~8월	산통위	한국경제 성장체제의 과거, 현재와 개혁방향	외부전문가	21p	
2013.7~8월	환경노동위	한국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의 과제	외부전문가	29p	
2013.7~8월	기재위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외부전문가	5p	
2013.10~12월	운영위	정의당 당발전전략	자체	30p	
2013.12	환경노동위	스웨덴의 환경정책	자체	6p	
2013.12	산통위	독일의 에너지정책	자체	8p	
2013. 8. 23 ~ 2013. 12. 10	보건복지	한국 복지제도 모델에 대한 비판적 접근 및 대안적 복지전략 마련	자체	60p	
2013. 8. 23 ~ 2013. 12. 10	보건복지	당면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실과 미래 -한국 공적연금제도 개혁 논쟁과 전망을 중심으로-	외부	60p	
2013. 8. 23 ~ 2013. 12. 10	보건복지	경제 - 노동 - 복지가 조화로운 대안적 발전전략	자체	70p	
2013.9.3. ~ 2013.11.25	환경노동위 원회(환경)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대한국가의 방향	자체	60p	파일 형태
2.4.~3.13.	보건복지	정신 장애인 관련 "정신 보건법" 개정안	자체	20p	
2.19.~3.5.	교육문화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 아동 교육권 보장 현황	자체	6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5.6.~6.11.	법제사법	차별금지법과 당의 역할	자체	18p	
6.1.~8.31.	법제사법	범죄피해자 지원방안 개선	자체	73p	
8.12~9.9.	법제사법	형집행정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자체	17p	
10.15.~11.12.	외교통일	UN 북한인권 결의안 검토	자체	12p	
11.1.~12.23.	외교통일	북한 인권실태 현황 - 자유권	자체	27p	
2013.10.14. ~ 2013.12.23	환경노동	한국형 사회민주주의의 과제와 방향	자체	10p	
2013.10. 1 ~ 2013.12. 4	평화-통일	'평화로운 한반도' 달성의 기초와 비전	자체	20p	
2013. 1. 1 ~ 2013.12.31	평화-통일	해당분야 주요 이슈 발생시 당 지도부 및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슈 브 리핑 작성	자체	100p	

나. 토론회 등 개최(49회)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토론회	2013.01.07. 15:00~18:00	국회의원회관 신관 1023-1호	18대 대선, 박근혜 정부5년, 그리고 진보정당	18대 대선평가하고 재집권에 성공한 박근혜 새누리당 정년 5년동안 진보 정당이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토론회	2013.01.25. 10:15~12:30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1세미나실	진보정의당의 정체성 찾기	당이 강한 자존감과 정당성을 확보 하여 유권자들의 지지를 재편성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토론회	2013.02.13. 10:15~12:30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1세미나실	노동정치의 재건을 위한 모색	위기에 직면한 한국 노동정치의 재건을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세미나	2013.02.27. 10:00~12:00	중앙당 회의실	진보의 정당만들기	연구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진보의 정당만들기에 대한 방법을 모색한다.	
토론회	2013.03.11. 16:00~18:00	중앙당 회의실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그리고 진보정당	요즘 붐을 일으키고 있는 협동조합 을 통해 지역과 진보정당의 연계를 모색한다.	
포럼	2013.03.10 14:00~16:00	중앙당 회의실	이그나이트	새로운 소통방법 '이그나이트'를 이용하여 참가자(당원)의 주장을 펼친다.	
간담회	2013.03.21 16:00~18:00	중앙당 회의실	ebs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제작팀 초청 간담회	유럽 복지국가들의 복지사례를 접하고 이를 통해 우리당이 추구 하는 복지에 대해 고민한다.	
세미나	2013.04.04 10:30~13:30	중앙당 회의실	최연혁(스웨덴 쇠데 르턴 정치학교수) 초청 특강	스웨덴 사민당의 성공과 부침의 합의를 통해 한국에서의 사민주의에 대해 모색한다.	
토론회	2013.04.09 16:00~18:00	중앙당 회의실	저자와의 대화	스웨덴에 대해 저술한 작가를 초청 하여 복지정책을 비롯한 사민주의 정책 및 사례에 대해 토론한다.	
토론회	2013.05.20~ 2013.07.05 매주 금요일 19:00~21:00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 만들기	보편적 복지국가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증진 및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모색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강연회	2013.05.22. 14:30~16: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스웨덴 대사 초청 강연회 -유럽을 통해 본 한국 복지사회의 미래	북유럽식 지구가 스웨덴의 사회민 주주의가 복지에 끼친 영향과 전망 에 대한 논의	
강연회	2013.06.04. 15:30~17:00	국회본청 귀빈식당	독일 대사 초청강연회 -유럽을 통해 본 한국 복지사회의 미래	독일식 사회민주주의와 그 과제에 대한 논의	
포럼	2013.05.23. 19:00~21:00	중앙당 회의실	진보정당 청년정치방향	진보정당 청년정치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한 모색	
강연회	2013.06.27. 15:30~17:00	국회본청 귀빈식당	프랑스 대사 초청강연회 -유럽을 통해 본 한국 복지사회의 미래	프랑스 사회당의 정치전략에 대한 논의	
강연회	2013.07.02 14:30~16:00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	독일 에버트 재단 소장 초청강연회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현황과 향후 개혁에 대한 논의	
포럼	2013.07.17. 15:00~17:00	국회의원회관 5층 간담회실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포럼	-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 의 과제와 정책방향. - 19대 국회의 경제민주화 1년 평 가와 과제	
포럼	2013.07.24 15:00~17:00	국회의원회관 5층 간담회실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포럼	- 한국경제 금융부문 현황과 개혁 과제 - 서민금융의 실태와 정책과제	
포럼	2013.08.14. 15:00~17:00	국회의원회관 5층 간담회실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포럼	- 한국경제 성장체제의 과거, 현재와 개혁방향 - 양극화 해소형 성장을 위한 노동 시장 개혁과제	
포럼	2013.08.21. 15:00~17:00	국회의원회관 5층 간담회실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포럼	-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확대 방안 - 한국경제에서 사회적경제의 가능 성과 정책방향	
토론회	2013.08.11. 13:30~16:00	국회 헌정기념관	남북 정상회담 주역들이 말하는 평화비전	-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6.15, 10.4 남북공동선언의 주역들 과 한반도 긴장상태 해결을 위한 대책모색	

개회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강연회	2013.10.01 14:30~16:00	국회본청 귀빈식당	영국대사 초청 강연회 - 유럽을 통해 본 한국 복지사회의 미래	영국, 제3의 길 그 후	
토론회	2013.10.20. 오후 13:00~15:00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창당1주년 정치대 담-진보정치의 재 도전, 길을 묻다.	진보정치 재도전의 길을 모색한다.	
국제포 럼	2013.11.11. 12:00~14:00	국회본청 217호	스웨덴 '민중의 집' 연합회 초청 간담회 & 국제포럼	노동운동, 진보정당 운동, 협동조합 운동을 지역에서 결합하여 진보의 거점으로 기능했던 스웨덴 민중의 집 연합회 대표들을 초청하여 한국의 전략 모색	
포럼	2013.10.07. 12:50~17:00	중앙당 회의실	외부전문가 초청포럼	외부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정의당 의 미래	
포럼	2013.10.10. 15:00~17:00	중앙당 회의실	외부전문가 초청포럼	외부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정의당 의 미래	
포럼	2013.10.17. 15:00~17:00	중앙당 회의실	외부전문가 초청포럼	외부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정의당 의 미래	
포럼	2013.10.21. 15:00~17:00	중앙당 회의실	외부전문가 초청포럼	외부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정의당 의 미래	
포럼	2013.11.21. 15:00~17:00	중앙당 회의실	외부전문가 초청포럼	외부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정의당 의 미래	
강연회	2013.12.05. 19:00~12:30	중앙당 회의실	저자와의 만남 (진중권)	저서 '미학에세이'를 통해 고민해 보는 삶, 그리고 정치	
강연회	2013.12.13. 17:00~21:00	중앙당 회의실	저자와의 만남 (심상정)	저서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을 통해 고민해보는 삶, 그리고 정치	
강연회	2013.12.17. 19:00~21:30	중앙당 회의실	저자와의 만남 (박홍수)	저서 '철도의 눈물'을 통해 고민해 보는 한국철도를 살리는 24가지 이야기	
포럼	2013.08.20.	중앙당 회의실	복지모델	소득주도경제모델 -2000년 이후 정부의 사회정책 성과와 한계 -비판적 고찰	
포럼	2013.09.13.	중앙당 회의실	복지재정과 기초 연금	1. 복지재정 확충전략; 증세와 조 세투명성 확보방안 2. 정부 기초연금안 비판, 한국 공 적연금제도 개혁방안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토론회	2013.10.01.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무상보육	'무상보육 긴급진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갈등 해법 모색' 토론회 개최	
토론회	2013.10.02.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기초연금	기초연금 공약 파기 및 이에 따른 정부정책 문제점 진단	
공청회	2013.10.02.	국회 입법조사 처 대회의실	수화기본법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세미나	2013.06.26.	중앙당	보건의료	공공 보건의료체계 진단 및 의료 공공성 확보방안 모색	
간담회	2013.06.12	이룸센터	수화기본법	수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토론회	2013.06.28 19시~21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복지국가에 대한 주제별토론회 (평화와 복지국가)	평화국가와 함께 가는 복지국가에 대해 토론함.	
토론회	2013.07.05 19시~21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복지국가와 진보정치 (열린좌담회)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진보정치의 과제에 대해 토론함.	
간담회	2013. 11.11	중앙당 회의실	북한인권	동서독 인권문제 해결과정 및 이것의 북한인권 문제 해결 시사점 등	
간담회	2013. 6.21 10:30~12:00	중앙당 회의실	남북대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당시 남북당국회담 무산 등의 상황을 짚고, 남북대화가 무엇을 목표로 어떤 원칙하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한가 등에 대해 특강을 듣고, 주요 주제에 대한 토론을 전개함	
토론회	2013.05.20 19:00~21:00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복지국가에 대한 주제별 토론회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하나?)	한국정치와 진보정당의 어제 오늘 내일에 대해 이야기 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함.	
토론회	2013.05.24 19:00~21:00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복지국가에 대한 주 제별 토론회 (경제민주화)	선제적 복지로서의 경제민주화와 재 벌개혁에 대해 생각해보고 토론함.	
토론회	2013.05.31 19:00~21:00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복지국가에 대한 주 제별 토론회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함.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토론회	2013.06.07 19:00~21:00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복지국가에 대한 주제별 토론회 (복지재정)	세금과 복지국가에 대해 살펴보고 증세논쟁을 중심으로 한 복지재정에 대해 토론함.	
토론회	2013.06.14 19:00~21:00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복지국가에 대한 주제별 토론회 (노동과 복지)	복지국가에서 노동이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토론함.	

다. 교육·연수활동(04회)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고
청년정치캠프	2013.03.15.~ 2013.03.16	도봉구 다락원	진보정의당의 청년, 학생당원들의 진보정치 에 대한 바람직한 활동 상을 제시하며 친목 을 도모한다.	
연구소 및 정책단위 합동 워크숍	2013.07.08~ 2013.07.09	강원도 만해마을	연구소 및 정책단위 구성원들의 정책에 대 한 고민을 공유하고 필요한 연구의제를 확 정, 교류를 활성화 한다.	
연구소 하반기 워크숍	2013.11.28.~ 2013.11.29	관악산 팬션	하반기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2014년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당직자 및 연구소 구성원 교육연수	2013.10.18.~ 2013.10.19	홍천 대명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업에 대해 공유하 고 정의당 당직자 및 연구소 구성원들의 친 목을 도모한다.	중앙 선관위

라. 정책홍보(02회)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2013.02.20	영상	홈페이지 및 각종 sns	진보정의당의 당원(홍희덕)을 찾아 그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홍보하여 당원가입유도 및 당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2013.03.10	영상	홈페이지 및 각종 sns	진보정의당의 당원(노회찬)을 찾아 그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홍보하여 당원가입유도 및 당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04건)

발간일자	종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고
2013.10.14	자료집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 포럼 결과자료집	자체발간	200부. 당내 교육용 자료 및 정책생산용으로 활용	
매주 목요일	웹진	정치현황 및 정책이슈 소개 및 칼럼기재	당원대상 이메일발송	이메일 발송	
2013.06.12	자료집	유럽 복지국가 대사초청 연속 강연록	자체발간	300부. 당내 교육용 자료 및 정책생산용으로 활용	
2013.08.13	자료집	남북정상회담 주역들이 말하는 평화비전 대담집	자체발간	200부. 당내 교육용 자료 및 정책생산용으로 활용	

바. 그 밖의 주요활동(02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고
2013.11.1 ~ 2013.12.31	미래시계 및 홈페이지	월간 분야별 이슈& 정책분석전망 중 '동아시아와 남북관계' 부분 작성	'동아시아와 남북관계'의 주요 이슈 및 정세 분석과 전망, 당의 대응 등 작성	
2013.06.26 ~ 2013.06.30	홈페이지	'이 한권의 도서' 선정	올 여름 당원들에게 권하고 싶은 한권의 책을 추천받아 많은 추천수의 당원에게 책을 증정함.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2012년 18대 대선과 한국정치

- ▣ 연구기간 : 2012년 12월 20일 ~ 2013년 01월 31일(1개월 10일)
-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제2창당을 앞둔 시점에서 진보정의당과 가근 진보정치의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실패하지 않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봄.

▶ 연구내용

- 대한민국의 진보정치, 진보정치가, 그리고 진보정의당이 지금까지 정치의 영역에서 보여준 특징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비판적 대안을 모색. 정치학자와 연구자의 시각에서뿐만 아니라 진보 밖의 일반 유권자에서부터 진보정치에 오랜기간 몸 담았으나 진보정의당 창당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자, 진보정의당에 당적을 둔 지역활동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정의당까지 당내 리어십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활동가, 당 상근자, 18대 대선 선분참여자 등 각기 다른 위치에서 진보정의당을 바로본 7가지 시선을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함.

▶ 연구성과

- '진보정당'의 기존에 대한 잘못된 관행에 대한 비판과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 제시. 관련하여 당의 이념노선에 대한 재정립에 대한 토론을 불러일으킴.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사회민주주의의 녹색화 방향과 전략

- ▣ 연구기간 : 2013년 03월 28일 ~ 2013년 05월 31일(2개월 3일)
-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원회
-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이하 사민주의) 정당인 독일사회민주당(SPD)를 중심으로 서구 사민당의 녹색화 과정을 추적하여 국내 진보정의당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 정치권력 구조와 정부형태 그리고 선거제도 등의 제약으로 진보정당이 제도정치에 진입하고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지만, 점차 현대화된 사민주의를 지향하고 미래지향적 정당을 꿈꾸는 진보정의당이 독일사회민주당의 역사적 경험과 최근 동향을 파악해 어떤 생산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살펴본다.

▶ 연구성과

- 독일사회민주당의 녹색화와 역사적 경험을 검토한 개요를 중심으로 진보정의당에게 필요한 사회민주주의의 녹색화의 핵심논리를 요약한다.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협동조합 전략사업화를 위한 기획 및 당원용 책자발간

- ▣ 연구기간 : 2013년 04월 04일 ~ 2013년 05월 04일(1개월)
- ▣ 연구분야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요즘 대두되고 있는 협동조합 전략사업화를 통해 당의 조직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당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

▶ 연구내용

- 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를 살펴보는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의 해설과 설립 실무 등을 기재함.

▶ 연구성과

-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열악한 지역당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협동조합을 매개로 한 사업 및 모임들이 활성화 됨.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작은 용역-10문10답으로 본 여섯지 분야 쟁점과 비전(경제민주화)

- ▣ 연구기간 : 2013년 03월 25일 ~ 2013년 05월 20일(2개월)
- ▣ 연구분야 : 기획재정위원회
-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2년 총선과 뒤이은 대선국면에서 '시대정신'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경제민주화는 사회적 의제 또는 사회개혁의 화두가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진보정의당 제2창당을 앞두고 당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함.

▶ 연구내용

- 한국에서 사회적 의제로 '경제민주화'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복지담론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봄. 또한 경제민주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또한 이에 대해 왜 의견이 분분한지, 그리고 노동없는 경제민주화는 왜 허구인지 살펴봄.

▶ 연구성과

- 시대정신이라고 일컬을 정도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정책생산에 기여함.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작은용역-10문10답으로 본 여섯지 분야 쟁점과 비전(노동)

- ▣ 연구기간 : 2013년 03월 25일 ~ 2013년 05월 20일(2개월)
-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원회
-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우리시대의 노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본주의체제에서의 노동의 존재약식은 신분적 자유와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이중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임금 노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연구내용

- 2013년 한국사회의 노동은 안녕한지, 또한 비정규직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봄. 그리고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대한 해법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함.

▶ 연구성과

- 인간에게 노동이 가지는 의미와 현 시대에서 노동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노동운동으로 다시 희망을 담보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토론하고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됨.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작은용역-10문10답으로 본 여섯지 분야 쟁점과 비전(복지와 재정)

- ▣ 연구기간 : 2013년 03월 25일 ~ 2013년 05월 20일(2개월)
- ▣ 연구분야 : 보건복지위원회
-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p>▶ 연구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회사에 취직하거나 자영업으로 살아간다. 근래 일자리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골목상권마다 대자본이 침입해 노동자, 영세상인 모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시장 안정화가 시급한 과제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실정. 이에 자본주의에서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관철은 일자리와 적절한 복지가 동시에 확보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 좋은 일자리는 전체 복지수요를 줄여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강한 복지는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줌. 이에 왜 복지가 중요한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함.
<p>▶ 연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제도의 종류와 보편/선별 복지 논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박근혜대통령과 보편복지 세력의 공약을 비교해보고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고민해본다. 이에 수반되는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현주소에 대해 짚어보고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해 본다.
<p>▶ 연구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의 실태와 증세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장기적으로 질 좋은 복지를 늘리는 방안과 이에 수반되는 재정책중에 대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내용에 대해 공유하게 된다.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작은용역-10문10답으로 본 여섯지 분야 쟁점과 비전(사회민주주의)

- ▣ 연구기간 : 2013년 03월 25일 ~ 2013년 05월 20일(2개월)
-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p>▶ 연구목적</p> <p>-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답변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이념으로서, 전략으로서, 정책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p>
<p>▶ 연구내용</p> <p>- 사회민주주의가 중요시하는 기본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또한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정치, 경제의 기본방향 또는 정책은 무엇인지,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복지의 기본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현 지구상에 어떤 나라들이 사회민주주의를 하고 있는지 짚어보고 최종적으로 왜 사회민주주의가 한국사회의 대안인지 살펴보고자 한다.</p>
<p>▶ 연구성과</p> <p>- 한국에서의 사회민주주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이 특히 중시해야 할 기본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p>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작은용역-10문10답으로 본 여섯지 분야 쟁점과 비전(환경생태)

- ▣ 연구기간 : 2013년 03월 25일 ~ 2013년 05월 25일(2개월)
-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원회
-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진보정치와 녹색의 관계(녹색의제가 진보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진보적인 의제로 환경생태에 어떻게 접근가능한지 탐구해보고자 한다.

▶ 연구내용

- 해외 녹색당의 사례를 통해 녹색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 본다. 또한 녹색은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성장'에 반하는 개념인지, 핵발전소는 필요악인지 고민해 본다. 에너지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살펴보고, 생활과 밀접한 환경(예: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 길에 대해 모색해본다.

▶ 연구성과

- 인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환경(녹색환경)에 대해 고민해 보고 진정으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을 생산해 본다.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작은용역-10문10답으로 본 여섯지 분야 쟁점과 비전(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 ▣ 연구기간 : 2013년 04월 25일 ~ 2013년 06월 26일(2개월)
- ▣ 연구분야 : 외교통일위원회
-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진보적 대외 정책과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평화, 인권과 평등,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진보정당이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아 재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통일/외교/국방 분야에서 실력과 비전을 갖추는 것이 과제인 만큼 이에 대해 연구하고 결과를 공유한다.

▶ 연구내용

- 우리 현실에 맞는 자주국방은 무엇인지, 북한과의 관계(친북, 반북, 평화공존)에 대해 고민해 본다. 또한 한반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고 한미 양국 정부의 대북인식과 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 연구성과

- 한국의 진보정당이 채택할 수 있는 비전으로 '스마트 안보'를 고려해 보고 이에 맞는 평화의제에 대해 고민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외부 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정의당의 진로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01일 ~ 2013년 12월 15일(2개월 15일)
-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진보정당의 지지율이 한자리 수를 담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전문가 다수의 의견을 릴레이로 듣고 정의당의 발전전략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연속 좌담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쟁점을 추려내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연구성과

- 당원이나 활동가가 아닌 외부의 시각(국민의 시각)을 빌려 우리당이 국민 곁으로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아울러 당 발전전략에 심분 반영하여 진보진영의 활동가가 규정하는 틀을 벗어나 자유롭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생각하고 모색하는 계기가 됨.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연구

- ▣ 연구기간 : 2013년 4월 1일 ~ 2013년 4월 12일(22일)
-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 연구내용

-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 모두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당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정당공천 폐지는 정당공천 보다 훨씬 많은 문제점을 양산한다고 할 수 있다. OECD 국가 대부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당공천제 논란은 정당정치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그나마 나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지방자치에 위해를 끼칠 것이다.

▶ 연구성과

- 당의 의사 결정과정에 자료로 활용되었다. 연구소 정책소식지를 통해 당원과 공유하였다.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한국형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연구

- ▣ 연구기간 : 2013년 5월 1일 ~ 2014년 6월 25일(1개월 20일)
-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국형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개발한다

▶ 연구내용:

-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들이 다수 존재했다. 특히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한국의 정치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치수단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한국 정치조건에 맞는 제도 디자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검토하고 이를 참고하여 한국형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설계하였다.

▶ 연구성과

- 정당정치의 차원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구체적 안을 제시하였고 향후 정치학 영역에서 선거제도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정치개혁 방안 연구

- ▣ 연구기간 : 2013년 7월 5일 ~ 2013년 9월 5일(2개월)
-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선 공약에 제출된 공약을 검토하고 이를 입법화 및 정치개혁 방안으로 정리한다.

▶ 연구내용

- 정치개혁의 요구는 국민들에게 일상적인 요구였다. 그러나 우리정치에서 양당 기득권 구조는 이를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물이었다.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에서 개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고 정치개혁안을 구체화하였다.

▶ 연구성과

- 의원실과 협의하여 당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한국정치와 통치권력 구조 개편의 모색

-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25일 ~ 2013년 12월 25일(1개월)
-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우리 정치에서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통치권력 구조의 변화 가능성과 대안을 검토한다.

▶ 연구내용

- 대통령중심제, 이원정부제, 내각책임제에 대한 특징을 정리하고 한국정치에서 통치권력 개편의 대안과 방향을 검토한다.

▶ 연구성과

- 개헌에 대한 절차, 방향과 내용을 파악하고 당내외 지도부 및 당원들에게 참고자료로 회람했다.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19대 국회 경제민주화 1년 평가

- ▣ 연구기간 : 2013년 6월 1일 ~ 2013년 7월 10일(1개월 10일)
- ▣ 연구분야 : 정무위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제19대 국회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활동 평가를 통해 경제 민주화 정치가 다시 활성화되어야 함을 제기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제19대 국회의 정치적 특성
-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사회경제 양극화 실상
- 제19대 국회 경제민주화 실현 평가기준
- 제19대 국회 1년의 경제민주화 실적 및 평가

▶ 연구성과

- 제19대 국회 1년 동안 진행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활동과 입법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
- 제19대 국회 경제민주화 입법실적이 부진하고, 재벌개혁 의제에 집중된 한계를 보였으며, 경제민주화 정치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함.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의 과제

- ▣ 연구기간 : 2013년 6월 1일 ~ 2013년 7월 10일(1개월 10일)
- ▣ 연구분야 : 기재위
-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기업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이 야기하고 있는 사회 양극화 심화현상을 규명하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수립

▶ 연구내용

- 한국 경제의 추격형 낙수효과 모델의 실상과 파산선언
- 한국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내,외부의 위험 요인들. 국제 경제 질서의 불안정성, 과다부채, 복지재원 마련과 재정건전성,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
-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공정’과 ‘연대’의 원리

▶ 연구성과

- 대기업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의 문제점과 낙수효과 파산의 실증적 규명
- 내외부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관리방안 도출
-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 전략 방향으로써 ‘공정’과 ‘연대’의 원리 도출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한국경제 금융부문의 개혁과제

- ▣ 연구기간 : 2013년 6월 10일 ~ 2013년 7월 20일(1개월 10일)
- ▣ 연구분야 : 정무위
-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국경제에서 금융부문의 위상변화를 확인하고 금융부문의 개혁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한국경제에서 금융부문의 급속한 발전 현황과 금융권역별 변화 추이
- 내부자본시장에 의한 금융부문 발전 저해, 자본시장 발전 저해 및 금산결합, 중소기업 금융의 저발전 등 금융부문 문제점 도출
- 금융계열사 분리명령제 도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강화, 금융공기업 재편을 통한 선도 투자은행 육성 등 정책과제 도출

▶ 연구성과

- 한국경제 금융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개혁과제를 도출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서민금융 실태와 정책과제

- ▣ 연구기간 : 2013년 6월 10일 ~ 2013년 7월 20일(1개월 10일)
- ▣ 연구분야 : 정무위
-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서민금융제도 및 정부의 박근혜 정부의 서민금융정책 분석을 통해 올바른 서민 금융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제도의 현황과 운영실태
- 박근혜정부의 서민금융정책 개괄 및 쟁점 도출
- 과중채무자 양산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와 서민금융 전담기관 설치, 서민금융기관 재편방안 등 대안적인 서민금융정책 제시

▶ 연구성과

- 박근혜정부의 서민정책금융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안적인 서민금융정책방안을 마련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한국경제 성장체제 개혁방향

- ▣ 연구기간 : 2013년 7월 1일 ~ 2013년 8월 10일(1개월 10일)
- ▣ 연구분야 : 산통위
-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성장체제 변화,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중소기업 상생의 성장체제를 모색해보고자 함.

▶ 연구내용

- 한국경제의 숙련절약적 조립형 산업화 문제점
- 노동배제적, 대기업 주도 성장지향적인 정부의 산업정책 문제점
- 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써 생산자의 경제적 시민권 강화, 대중소기업 상호협력 강화, 기술과 숙련의 결합 모색 등 산업정책방안

▶ 연구성과

-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전환 필요성 도출
- 기술혁신 촉진자로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의미부여와 그것을 위한 경제정책에 대한 공적통제 역할 강조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한국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위한 고용정책 과제

- ▣ 연구기간 : 2013년 7월 1일 ~ 2013년 8월 10일(1개월 10일)
-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
-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 원인과 작동 메커니즘을 해명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한국 노동시장의 4가지 함정
- 부채와 수출 의존적 경제정책, 재벌 대기업의 고용관련 사회무책임 등 고용문제 발생의 작동 메커니즘 규명
-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관계, 사회공공서비스 분야 등 좋은 일자리 창출분야 선정, 노동시장 제도개혁과제 등 제시

▶ 연구성과

-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관계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 ▣ 연구기간 : 2013년 7월 7일 ~ 2013년 8월 17일(1개월 10일)
- ▣ 연구분야 : 기재위
-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국 경제의 대안적 경제성장 체제수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검토

▶ 연구내용

- 경제사적 관점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위치 검토
- 사민주의 경험과 정부의 경제개입 사례 검토
- 현재 한국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과제

▶ 연구성과

-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초검토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정의당 당 발전전략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1일 ~ 2013년 12월 31일(3개월)
- ▣ 연구분야 : 운영위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진보적 대중정당으로서 정의당의 발전전략 수립
- ▶ 연구내용
 - 한국사회 현실에 대한 진단
 - 정의당의 객관적 존재감 진단
 - SWOT분석을 통한 정의당의 실천전략 방향
 - 리더쉽 강화, 민생정당화, 진보정치 혁신 등 당발전전략과제 도출
- ▶ 연구성과
 - 당 발전 실천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스웨덴의 환경정책

-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15일 ~ 2013년 12월 1일(0.5개월)
-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스웨덴의 환경정책 사례 검토를 통해 국내의 정책 시사점 도출
- ▶ 연구내용
 - 녹색 사회민주주의의 논리
 - 스웨덴 '환경비전2020과 3대 실천전략' 소개
 - 최근 스웨덴의 기후정책 소개
 - 스웨덴 사민당의 환경정책
- ▶ 연구성과
 - 스웨덴 환경정책을 통해 국내 도입가능한 환경정책과제 도출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독일의 에너지정책

- ▣ 연구기간 : 2013년 12월 1일 ~ 2013년 12월 15일(0.5개월)
- ▣ 연구분야 : 산통위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독일의 에너지정책 사례 검토를 통해 국내의 정책 시사점 도출
- ▶ 연구내용
 - 생태적 현대화론과 독일 사민당의 에너지정책강령
 - 1998~2005 '적녹연정'의 에너지 정책
 - 독일의 '탈핵선언' 역사 검토
 -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정책 역사와 사례 검토
 - 재생가능에너지법(EEG)2009 소개
- ▶ 연구성과
 - 탈핵 정책, 재생가능 에너지산업 육성 등 독일 에너지정책을 통해 국내 도입 가능한 에너지정책과제 도출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한국 복지제도 모델에 대한 비판적 접근 및 대안적 복지전략 마련

- ▣ 연구기간 : 2013년 08월 23 일 ~ 2013년 12월 10 일(3개월 17일)
-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p>▶ 연구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복지제도 및 복지모델의 한계를 넘어, 정의당의 대안적 복지모델 수립
<p>▶ 연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I. 서론II. 한국사회 진단<ul style="list-style-type: none">1. 격차사회 2. 불안사회 3. 위기사회III. 한국에서의 복지제도 및 복지국가 논의 발전과정<ul style="list-style-type: none">1. 복지제도 및 복지국가 논의 발전과정 2. 한국 복지모델의 한계 및 딜레마IV. 대안복지모델과 정책전략<ul style="list-style-type: none">1. 복지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2. 복지국가 유형별 특징과 유형별 사회서비스모델3. 유럽좌파정당들의 복지국가 쇄신전략4. 대안복지모델 방향과 정책과제<ul style="list-style-type: none">1) 대안복지모델의 방향과 원칙2) 대안복지모델의 세부 정책방향 및 과제3) 복지자원 마련 방안4) 새로운 복지거버넌스 구축 방안
<p>▶ 연구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당 국가비전 수립 및 당 정책에 반영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당면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실과 미래

- 한국 공적연금제도 개혁 논쟁과 전망을 중심으로 -

- ▣ 연구기간 : 2013년 08월 23 일 ~ 2013년 12월 10 일(3개월 17일)
-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 연구방법 : 외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기초연금 등 한국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 모색으로 노후 소득보장방안 마련

▶ 연구내용

I. 서론

II. 한국 노인의 소득과 빈곤

1. 한국 노인의 소득 분포
2. 한국의 노인 빈곤
3. 한국 공적연금의 역할 수준

III. 기초노령연금 개혁의 쟁점과 방향

1. 기초연금 개혁의 방향
2. 2013 정부 기초연금안의 내용과 논쟁 지점
3. 2013 정부 기초연금안의 문제점과 논쟁
4. 2013 기초연금 논쟁 정리

IV. 국민연금 개혁

V. 결론

▶ 연구성과

-토론회 개최, 당 정책결정의 기본자료로 활용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경제-노동-복지가 조화로운 대안적 발전전략

- ▣ 연구기간 : 2013년 08월 23 일 ~ 2013년 12월 10 일(3개월 17일)
-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정의당의 사회경제분야 종합모델 마련
- ▶ 연구내용
 - I. 현황
 - 1.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세계 경제 2. 성장 동력을 상실한 한국 경제
 - II.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 1. 대안적 발전전략의 방향 2. 대안적 발전전략의 동력
 - III. 경제전략
 - 1.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성장 2. 지속가능한 성장 3. 새로운 성장 동력
 - IV. 노동전략
 - 1. 현황 2. 전환 방향 3. 정책방향과 과제
 - V. 복지전략
 - 1. 현황 2. 한국 복지제도의 한계 3. 정책방향과 과제
 - VI. 주거전략7
 - 1. 연구 배경 2. 현황 3. 정책대안 4. 결론
- ▶ 연구성과 - 당 '국가비전' 수립 및 당 정책에 반영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대안국가의 방향

- ▣ 연구기간 : 2013년 9월 3일 ~ 2013년 11월 25일 (2개월 22일)
-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원회(환경)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진보정당이 추구할, 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한 대안국가의 방향 제시
- ▶ 연구내용
 - 과거부터 현재까지 환경 정책의 대강을 분석
 - 전환이 필요한 이유
 -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 세부적인 정책 의제와 실현 방안 제시
- ▶ 연구성과
 - 당의 국가 비전에 반영
 - 당의 정책에 반영
 -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제정, 개정)의 근거로 활용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정신 장애인 관련 “정신 보건법” 개정안

- ▣ 연구기간 : 2013년 2월 4일 ~ 2013년 3월 13일(1개월 6일)
-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신 장애인 인권실태 및 보호방안 마련

▶ 연구내용

-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국가인권위에 진정된 정신장애인 인권 침해 주요 사건의 침해 실태를 비교 검토하여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법 개정안을 마련함

▶ 연구성과

- 당 소속 의원들에게 연구결과를 회람하여,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당 정책 마련에 활용하기로 함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 아동 교육권 보장 현황

- ▣ 연구기간 : 2013년 2월 19일 ~ 2013년 3월 5일(0개월 15일)
- ▣ 연구분야 : 교육문화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이주노동자 아동 교육권 보장 실태 분석을 통해 아동교육권 보장 방안 마련의 기본 방향 도출

▶ 연구내용

- 이주 아동을 포함한 아동 교육권과 관련한 국제인권 규약의 기본 내용을 파악하고, 이주 노동자 아동 교육권 보장실태를 입전학, 학교생활, 상급학교 진학으로 구분하여, 법규 및 관련 실태를 비교 검토함. 이를 바탕으로 쟁점이 되는 4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의 필요성 및 방향을 도출함

▶ 연구성과

- 이주노동자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소속 당 의원 정책토론회 등의 기초자료가 되었으며, 소관 상임위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여, 이주노동자 아동 교육권 보호를 위한 교육당국의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함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차별금지법과 당의 역할

- ▣ 연구기간 : 2013년 5월 6일 ~ 2013년 6월 11일(1월 6일)
- ▣ 연구분야 : 법제사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UN 권고사항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방향과 원칙, 내용 그리고 국내 현황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 3개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에 대한 비교 검토와 함께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아일랜드, 홍콩 등 해외의 입법 사례를 검토함. 이를 근거로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을 3가지로 제시함

▶ 연구성과

- 2014년 지방선거 당 공약으로 '차별금지' 관련 조례제정을 채택하였으며, 국회 차원의 차별금지 법제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됨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범죄피해자 지원방안 개선

- ▣ 연구기간 : 2013년 6월 1일 ~ 2013년 8월 31일(3개월)
- ▣ 연구분야 : 법제사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시행 중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마련

▶ 연구내용

-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필요한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의 원칙, 주요 내용 등을 확인하고,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의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 및 서비스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함

▶ 연구성과

- 당 소속 의원 개정안 준비 중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형집행정지 제도 개선

- ▣ 연구기간 : 2013년 8월 12일 ~ 2013년 9월 9일(1개월)
- ▣ 연구분야 : 법제사법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구금시설 수용자 처우방안인 '형집행정지 제도'의 남용제한 및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연구내용

- 형집행정지 심사 및 처분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개정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현재 발의된 관련 법률 개정안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함

▶ 연구성과

- 당 소속 의원 개정안 준비 중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한국형 사회민주주의의 과제와 방향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14일 ~ 2013년 12월 26일(2개월 12일)
-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그동안 진보정당의 정체성 및 이념노선으로서 논의되어 온 한국형 사회민주주의를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알아봄.
- 한국형 사회민주주의를 정의당이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내용 및 실현 주체 형성, 실현 로드맵에 대해 연구함.

▶ 연구내용

- 사회민주주의의 특성 및 한국형 사회민주주의의 필요성
- 한국형 사회민주주의의 가능성
- 한국형 사회민주주의의 방향
-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복지국가 모델
- 정의당의 과제

▶ 연구성과

- 진보정당의 이념 및 정책으로서 한국형 사회민주주의의 필요성에 대해 기존 연구의 정리
- 정의당이 한국형 사회민주주의의 구체적 정책개발 및 실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향후 한국형 사회민주주의의 주요 과제(정치, 경제, 노동, 복지, 생태, 평화)의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함.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UN 북한인권 결의안 검토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15일 ~ 2013년 11월 12일(27일)
-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UN에서의 북한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검토하여 북한인권 주요 현안 및 이에 대한 UN의 입장을 파악함으로써, 당의 입장 정립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연구내용

- 2003년 59차 UN인권위원회 이후 인권이사회 결의안 9개, 60차 유엔총회 결의안 이후 8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주제별, 인권현안별로 분석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기본입장 및 북한 내 인권 관련 주요 변화와 상관검토함

▶ 연구성과

- 당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2014년 북한인권관련 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함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북한 인권실태 현황 - 자유권

- ▣ 연구기간 : 2013년 11월 1일 ~ 2013년 12월 23일(1월 23일)
-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북한 인권실태 분야 중 자유권 분야의 인권실태 및 법제 등을 검토하여 당의 입장 정립을 위한 기본자료를 구축함

▶ 연구내용

- 북한의 자유권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 및 실태자료를 생명권(사형제, 공개처형 포함),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및 안전(정치범수용소, 구금시설 포함),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 보호,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권과 관련하여 분석함. 이와 함께 북한의 법률 변화 등을 함께 검토함

▶ 연구성과

- 당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2014년 북한인권 관련 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함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평화로운 한반도’ 달성의 기초와 비전

-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1일 ~ 2013년 12월 4일(2개월 4일)
- ▣ 연구분야 : 평화-통일 분야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진보정당의 국가비전 정립의 일환으로서 ‘평화로운 한반도’ 달성을 위한 기초와 비전의 정립에 기여한다.

▶ 연구내용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정립의 후퇴, 동북아의 갈등 고조의 현황 속 기존 해법에 대한 평가와 함께 평화 달성의 원칙 혹은 기초를 재정립하고, 이에 바탕을 둔 주요 과제별 정책을 제시한다.

▶ 연구성과

- 당의 국가비전위 회의에 보고를 함. 동 회의에서의 논의, 평가 등을 참고해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후속 작업의 바탕으로 삼고자 함.

【별첨】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_ 평화-통일 정책 이슈 브리핑

- ▣ 연구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연중 지속)
- ▣ 연구분야 : 평화-통일
-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해당 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상황 및 검토 의견 등을 브리핑해 당 지도부 및 당원 이해의 제고, 논평 등 단기 대응과 대안적 정책 제시 등에 활용.

▶ 연구내용

- 북핵 문제 혹은 한반도비핵화
- 개성공단 문제 등 남북대화
- 북한 동향 분석
- 일본 우경화 등 동아시아 차원 외교-안보 상황 진단과 대안
- 한미동맹: MD, 전작권, 방위비분담금
- 정부의 당해 분야 정책 진단과 비판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한 브리핑.

▶ 연구성과

- 남북관계 및 동아시아 차원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의 제고와 정책적 대응 등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됨.



2013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집

인쇄일 : 2014년 9월 일

발행일 : 2014년 9월 일

발행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경기도 과천시 홍천말로 44
(02) 523-6482~3

편집처 : 빅트리파트너스 (02) 2183-0091

인쇄처 : CM 중앙문화

《비 매 품》

